

Russia·China·India

러시아·중국·인도 삼각협력체제의 전략적 함의와 시사점

백준기
김재관
이남주
박상남



러시아·중국·인도 삼각협력체제의 전략적 함의와 시사점

백준기 · 김재관 · 이남주 · 박상남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문요약

러시아·중국·인도 간의 전략삼각체제 형성은 냉전해체 이후 세계질서의 재편과정에서 최대의 정치적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다. 1993년에 열린 대통령이 당시 탈냉전의 성격을 ‘차가운 평화’로 언급하면서 삼국 간의 전략적 협력의 아이디어를 내비친 이래 1996년 유라시아주의에 친화적인 프리마코프가 외무장관에 임명되어 삼각협력구상이 현실화되었다.

2006년 이래로 러·중·인 삼국은 상호 간에 ‘국가의 해’ 선포를 통해 양자 간 정치 경제적 협력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의 공통성 확보를 위한 문화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앙팡뜨 체제’로 해석될 수 있는 ‘러·중·인 삼각체제’는 ‘정치동맹’ 또는 ‘유사동맹’으로, 견고한 군사동맹체제라기보다는 유연한 형태의 ‘네트워크 동맹’의 성격을 띠고 있다.

중·러 관계에 대한 부분은 세 가지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냉전 이후 최근까지 갈등과 협력의 이중성을 띤 중·러 관계의 간단한 역사를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둘째, 특히 탈냉전기 중·러 관계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쳐왔던 협력요인과 갈등요인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셋째,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해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본고는 중·러 관계의 확대 강화라는 후원 속에 어떻게 러·중·인(RIC)란 새롭게 부상하는 전략적 삼각축이 세력균형을 노린 다극체제를 형성할 수 있는지를 예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탈냉전기 중·러 협력 요인은 가령 중·러 국경분쟁의 해소, 이른바 ‘3대 악’(국제테러리즘, 이슬람근본주의, 민족분리주의세력)의 제거, 전면적인 경제협력, 군사협력과 교류증진, 반미·반패권주의를 향한 다

극화 추구, 지역다자협력체제(SCO, RIC, BRICs, 6자회담 등)의 건설과 추진 등이다. 반면에 양국의 성숙한 관계발전을 가로막는 갈등요인은 첫째, 미국의 개입요인과 G2체제의 형성, 둘째, 중국의 부상과 중국위협론, 셋째, SCO와 중앙아시아 역내 주도권 다툼 등이다.

최근 중·러 간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는 협력과 경쟁이 공존하는 성격을 띠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아는 한, RIC란 전략적 삼각협력체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러 양국은 상해협력기구 정식회원국들 가운데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익상관자이자 핵심적인 행위자들이다. 양국 관계는 전략적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갈등요인보다 협력요인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구동존이’(求同存异)에 근거한 접근방식을 이용하여 가능한 갈등을 최소화시키면서 가운데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2011년에 아시아 지역 내 미국의 ‘재관여’ 및 ‘재균형’ 정책, 즉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전 전략’(Pivot to Asia)에도 불구하고, RIC 체제의 형성 및 발전을 위해서는 장차 중·러 양국이 서로 갈등요인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처리하느냐가 관건이다.

러시아와 인도 관계는 협력요인과 갈등요인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협력요인은 군사 및 과학기술협력의 경제 안보적 요인과 지역분쟁 및 영토문제에 대한 공동협력 요인으로 대별된다. 인도가 육군의 군사장비의 약 60%, 해군 전함의 70%, 공군의 전투기 8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양국 간의 군사협력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러시아와 인도는 지역분쟁과 영토문제에서 공통의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다. 러시아에는 체첸의 분리독립문제와 중앙아시아 지역분쟁이 러시아의 국

가 및 영토통합성 유지와 구 소비에트 공간의 안정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인도에는 카슈미르 문제 등 파키스탄과의 영토분쟁과 이슬람분리주의 운동 등이 국가통합에 중대한 위협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러시아와 인도 간의 갈등요인으로는 ‘미국’과 ‘중국’을 들 수 있다. 러시아는 미국과 인도가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으나, 이로 인해 러시아가 역사적으로 아시아에서 향유하던 전략적 이익을 훼손당하는 것은 원치 않을 것이다. 군사분야에서 미국과 인도 간의 협력증진은 중앙아시아 등 아시아 지역에서 장기적으로 러시아의 전략적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인도와 중국 간의 갈등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영토분쟁과 에너지 및 자원문제, 그리고 남아시아에서의 세력권 설정문제, 그리고 전략적 가치에 대한 상호 ‘비대칭적 인식’ 문제이다. 러시아를 ‘전략적 접촉제’로 하여, 중·인 관계는 협력관계로 전환되어 국경문제 등 양국 간의 갈등요인을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 있으나, 중·인 간의 갈등요소가 구조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러·인 관계는 균열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러·중·인 삼각체제 형성에서 중·러 관계를 ‘강한 고리’, 중·인 관계를 ‘약한 고리’라 표현한다면, 러·인 관계는 ‘고리의 시작점’으로 비유할 수 있다. 삼각체제가 시도되는 시점에서 보면, 중·러 관계에 비해 러·인 관계는 전략적 측면에서 사활적인 이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러시아와 인도 간의 전략적 협력관계가 복원되지 않았다면 삼각체제는 형성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삼각체제의 형성과정에서 중·인 관계를 보완하고 있는 러·인 관계는 삼각체제의 구조적 진화에 촉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강대국 지위의 회복과 세력권 방어를 시도하는 러시아나, 지역 및 세계 강국으로 부상하려는 인도

는 ‘일극체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다극체제’의 형성에 동의하였다. ‘아시아로의 전환’이나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 등 미국의 아시아 정책이 강화되고 중국에 대한 전략적 포위가 심화되는 한, 중국은 러시아, 인도와의 전략적 유대관계를 강화할 것이다.

인도와의 전략적 유대강화가 러시아를 더 강한 글로벌 행위자로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인도 역시 러시아와의 전략적 유대를 통해 글로벌 이슈에 대한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 인도는 이를 통해 중국에 대한 안보적 우려를 해소하고 중국이 아시아의 유일한 헤게모니 국가로 부상하는 것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러·인 관계를 한 변으로 하여 구성되고 있는 ‘러·중·인 대륙삼각체제’와 미국 주도의 ‘미·일·호주 해양삼각동맹체제’ 간의 경쟁과 갈등은 한국으로 하여금 전략적 선택의 딜레마에 빠지게 할 수 있다. 러·중·인 삼각체제는 동북아에서 북·중·러 간의 양자 간 우호친선조약을 통해 ‘북방 소삼각체제’와 연결되어 있다. 한·미동맹을 통해 ‘해양삼각동맹체제’에 연계되어 있는 한국은 이러한 갈등구조에 ‘연루’되는 것을 피하고—‘동맹 딜레마’의 최소화—, 한반도와 역내에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절실하다.

‘동아시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헬싱키 프로세스’는 한국에서 유력한 대안 모델 중 하나로 평가 받고 있다. 유럽의 ‘헬싱키 프로세스’가 국경과 영토에 대한 ‘현상(status quo)’ 인정을 통해 유럽에서의 안전과 평화를 제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 점을 감안하면, ‘동아시아 버전 헬싱키 프로세스’가 영토분쟁의 해결과 국경선의 ‘현상’ 인정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아시아의 영토분쟁에 러·중·인 삼국은 이해당사자로서 깊이 개입되어 있다. 최근 들어 고조되고 있는 동아시아 영토분쟁에 미국이 군사적 시

위를 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향후 러·중·인 삼각체제가 동아시아 영토분쟁에서 적극적으로 작동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것이 한국의 독도문제에 미칠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중·인 관계는 러·중·인 삼각협력 관계 중에서 가장 약한 고리이다. 러·인 관계는 삼각협력체제의 형성과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고, 러·중 관계는 삼각협력체제의 발전의 주된 동력이 되어왔다. 그런데 중국과 인도는 지금까지 양국 사이에 존재하는 전략적 불신을 해소하지 못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갈등과 경쟁을 벌이고 있어 삼각협력체제의 발전을 제약하고 있다.

이는 1962년 중인국경분쟁이 현대사에서 중·인 관계의 중요한 전환점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중·인 관계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인도는 2005년 정상회담에서 평화와 번영을 지향하는 ‘전략협력동반자(strategic and cooperative partnership)관계’를 건설한다고 합의했지만 양국 사이에 존재하는 여러 갈등요인이 주기적으로 양국관계에 영향을 미치면서 명실상부한 전략적 협력관계를 발전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중·인 관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경우 삼각협력체제도 새로운 발전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한다.

중·인 관계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협력요인과 갈등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협력요인으로는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외부환경이 필요하다는 것, 티베트와 내부 반란세력 문제 등 내부의 정치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상대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 다자무역협상 및 기후협약 등과 관련해 국제무대에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 외교자산을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갈등요인으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국경문제, 양국 내에서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는 민족주의, 양국

의 영향력이 증척되는 지역에서의 주도권 경쟁, 무역마찰 등을 들 수 있다.

중·인 관계의 미래는 협력요인과 갈등요인 사이의 상호작용에 따라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출현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중·인 관계에서 전략적 협력관계, 우호적 협력관계, 경쟁적 협력관계, 전략적 대립관계 등 네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과 인도의 전략적 경쟁과 국경분쟁 등을 고려하면 양국관계가 명실상부한 전략적 협력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은 낮다. 그렇다고 양국이 다시 냉전시기의 전략적 대립관계로 돌아가는 것도 정치적, 경제적 비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양국관계는 당분간 우호적 협력이나 경쟁적 협력 사이에서 동요할 가능성이 높다. 대체로 정부 차원에서는 우호적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하나 민간 차원에서는 상호불신이 더 증가하는 추세이다.

중·인 사이에 경쟁적 협력관계가 출현할 경우에는 삼각협력체제의 발전도 순조롭게 진행되기 어렵다.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경제적 교류도 활발하지 않은 러시아와 인도 사이의 협력이나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만으로는 삼각협력체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반면 중·인 관계가 우호적 협력관계로 발전된다면 삼각협력체제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초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삼각협력체제는 협력의 영역(경제, 사회, 문화, 정치 등)이나 수준(정부, 민간 등) 모두 비교적 성공적인 다자협력체제와 비교할 때 격차가 크다. 그러나 중국과 인도의 인구규모나 향후 성장잠재력을 고려하면 중·인협력은 전략적 의미를 갖는 수준으로 삼각협력체제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삼각협력체제가 러·중·인 사이의 전략적 대화를 위한 통로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삼국 사이의 다양한 협력을 촉진하는 기구로 발전되어간다면

이는 한국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도전적 요소는 국제질서의 다원화가 촉진되는 것에 대응할 수 있는 외교적 유연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 중국과 인도의 부상이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위협하고 에너지 수급상황을 불안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은 것 등을 들 수 있다. 기회적 요소로는 중국의 부상을 다자협력의 틀에서 관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중국과 인도의 경제성장이 한국에 새로운 시장과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있다.

SCO를 통한 삼각체제와 중앙아시아국가들과의 협력은 여러 갈등요인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는 물론 유라시아대륙 차원에서도 삼각체제와 SCO의 위상을 격상시켰다. 뿐만 아니라 2000년대 부시 집권 이후 더욱 강화되었던 미국의 일방주의와 동진정책을 차단하면서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우월적 지위유지’, ‘중국-실리속의 점진적 세력 확장’, ‘인도-단기 간 효율적 진출과 존재감 부각’이라는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 중앙아시아에서 지속적인 정치, 군사, 경제적 개입을 시도했던 미국은 상대적으로 지위 약화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무력함이 확인된 2008년 그루지야 전쟁 이후 군사, 안보적 차원에서 러시아의 입지는 강화된 반면 미국의 지위는 후퇴하는 현상이 확인해졌다. 또한 그루지야 전쟁은 SCO 또는 삼각체제 차원이 아닌 러시아 단독으로 감행한 군사행동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확고한 군사·안보적 의지와 힘을 보여줌으로써 중앙아시아, SCO, 삼각체제 내에서 러시아의 확고한 위치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냉전붕괴 이후 지속된 미국의 일방적 우위가 중앙아시아에서는 별다른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SCO를 기반으로 한·중·러 연대 또는 삼각체제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중앙아시아 신생국들의 입장에서 미국은 여전히 중요한 역외세력이며 세계 전역에 힘을 투사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다. 또한 중앙

아시아 국가들의 독립유지, 외교·안보적 자율성 확대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미국의 역할은 중요하다. 중앙아시아를 둘러싼 러시아와 중국의 과도한 경쟁과 팽창주의를 견제하기 위해서도 중앙아시아 신생국들은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SCO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삼각체제 또는 러·중 연대와의 관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국과도 협력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SCO 내에서 삼각체제와의 협력은 대외정책에 대한 경험이 전무했던 중앙아시아 신생국들에 독자적인 대외정책을 수립, 실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SCO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중국, 러시아, 인도 등 강대국을 상대로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한 다양한 외교적 옵션을 구사해 볼 수 있는 실험무대였으며, 특정한 강대국의 영향력이 과도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세력균형의 역할도 담당하였다. 또한 상호 대등한 수평적 관계에서 삼각체제와의 다자 협력은 신생국들에 보다 안정된 대외환경 속에서 국가건설과정과 체제이행을 수행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따라서 SCO 내에서 삼각체제와의 관계는 신생국들에 독립국가로서의 위상 정립, 주권 존중, 공동안보, 외교적 자율성 확대, 경제성장, 역내분쟁 또는 갈등의 조정 등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SCO 내에서 중앙아시아국가들과 삼각체제의 관계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먼저 주변강대국이 참여하는 다자협력체는 약소국가들에 군사·안보적 불확실성을 현저히 감소시킨다는 점이다. 중앙아시아의 경험은 강대국과 약소국가 관계에서는 물론이고 역내 약소국가 간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갈등을 조정·관리하는 데도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SCO의 활동이 본격화되었던 2000년 이후 회원국 간의 영토분쟁이나

충돌이 억제된 점이 있다. 물론 색깔혁명, 안디잔 사태 등의 정치변동이 있었으나, 이는 개별 국가의 국내정치 차원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지 국가 간 갈등은 아니었다. 따라서 SCO 내에서 중앙아시아국가들과 삼각체제의 관계는 6자회담, 남북한 긴장완화, 동아시아 영토분쟁, 역사문제 등 다양한 갈등요소에 직면하고 있는 동아시아와 한국에 매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 국문요약	3
■ 제1장 서론	17
■ 제2장 중·러 관계	27
1. 중·러 관계의 역사적 변천	32
2. 중·러 관계의 협력요인과 갈등요인	52
3. 중·러 관계가 삼각체제에 미치는 영향	71
4. 한국에 주는 시사점 및 소결	79
■ 제3장 러·인 관계	83
1. 러·인 관계의 역사적 변천	84
2. 러·인 관계의 협력요인과 갈등요인	101
3. 러·인 관계가 삼각체제에 미치는 영향	125
4. 한국에 주는 시사점 및 소결	139
■ 제4장 중·인 관계	151
1. 중·인 관계의 역사적 변천	155
2. 중·인 관계의 협력요인과 갈등요인	169
3. 중·인 관계의 전망과 삼각협력체제에 미치는 영향	186
4. 한국에 주는 시사점 및 소결	200
■ 제5장 중앙아시아와 삼각체제의 관계: SCO를 중심으로	205
1. 삼각체제·중앙아시아 관계의 역사적 변천	206

2. 양자 관계의 협력요인과 갈등요인	214
3. 삼각체제 · 중앙아시아 협력이 대미관계, 역내 안보 구도에 미친 영향 ·	240
4. 한국에 주는 시사점 및 소결	245
Ⅰ 제6장 결론	253
Ⅰ 참고문헌	263
Ⅰ Executive Summary	277

표 차례

표 4-1. 중국·인도 간 정상급 정치교류(1988년 이후)	166
표 4-2. 러시아·중국·인도의 인구 및 경제 규모	199
표 4-3. 중·인 협력과 삼각협력체제 진전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203
표 6-1. RIC 체제 내 협력요인과 갈등요인의 분류	257

그림 차례

그림 2-1. 러시아의 대중국 무역추이(2000~10년)	54
그림 5-1. 상하이 협력기구(SCO) 회원국 및 옵서버 현황	211
그림 5-2. 중앙아시아를 둘러싼 러시아와 서구의 에너지 수송로 건설 경쟁 현황	224
그림 5-3. 2003~08년 중국의 대중아시아 직접 투자(액) 추이	232
그림 5-4. Proposed TAPI Gas Pipeline	238
그림 5-5. 인도·중앙아시아 간 무역 규모	240

제1장 서론



러시아·중국·인도의 삼각협력체제 형성은 냉전해체 이후 세계질서의 재편과정에서 최대의 정치적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 1993년에 엘친 대통령이 당시 탈냉전의 성격을 ‘차가운 평화(cold peace)’로 언급하면서 삼국의 전략적 협력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비친 이래 1996년 유라시아주의 노선에 친화적인 프리마코프가 외무장관에 임명되어 삼각협력구상이 현실화되었다. 1997년 프리마코프는 “러시아·중국·인도는 국제문제에서 자율성과 국가이익의 확보를 위해 다극세계 건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는데,¹⁾ 이러한 다극체제의 실현은 러·중·인 삼각체제의 구축을 전제로 하였다. 1996년 3월 취임 후 첫 외국방문으로 인도를 선택했던 프리마코프 외무장관은 1998년 12월 뉴델리를 방문하여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러시아, 중국, 인도의 전략적 삼각관계구축(프리마코프 구상)을 공식 제안하였다.

2001년 9월, 모스크바에서 삼국의 ‘21세기의 러시아·인도·중국’이라는 연구 프로젝트를 위한 민간부문(Track II)의 회의가 개최되면서 처음으로 삼국의 교류 틀이 형성되어 삼국 외무장관회담 등 정부 교류(Track I)로 이어졌다. 2002년 12월 4일 푸틴 대통령은 인도 언론 *Press Trust of India*와 인터뷰에서 러·중·인 삼국을 ‘전략적 삼각관계(Strategic Triangle)’로 표현하였다. 그는 ‘삼각체제’에 속한 당사국들이 러시아와 인도, 인도와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 간의 적극적인 발전에 관심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같은 해, 후진타오 주석 또한, 중국의 새로운 세대의 지도부는 이러한 전략적 연대와 함께 전진할 것임을 피력하였다.²⁾

1) Nivedita Das Kundu(2012), p. 5.

2) *Ibid.*, p. 10.

2004년까지 삼국 외무장관들은 유엔 등 국제기구나 국제회의라는 틀을 활용하여 세 차례 회동하였다. 2005년 6월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된 러시아, 중국, 인도 3개국 외무장관회담은 분석가에 따라서는 ‘국제적인 사건’으로 기록하기도 한다. 블라디보스토크 회담은 삼국 외무장관이 다른 국제회의의 틀을 경유하지 않고 최초로 단독회담을 성사시켜 정례화함으로써 삼국의 전략협력에서 고위수준의 제도화를 이루었다는데 의의가 있었다. 삼국은 에너지, 수송, 하이테크, 농업 등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어젠다 설정에 동의하였으며, 2006년부터 삼국이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2006년 7월, 페테르부르크에서 러·중·인 삼국의 정상회담이 최초로 개최되어 ‘전략적 삼각관계’를 공식 확인하였다.

2009년 5월 12일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승인한 ‘국가안보전략 2020’에서는 러시아가 전략적으로 중시해야 할 다자안보포럼으로서 ‘RIC (Russia-India-China)’를 ‘G8’과 같은 그룹으로 분류하였고, ‘SCO((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상하이협력기구)’를 단일 항목(#15)으로 배치하여 별도로 설명하였다. 러시아가 ‘프리마코프 트라이앵글’로 명명되는 ‘러·인·중 삼각협력관계’를 ‘RIC’라는 제도적 개념으로 명명하면서 하나의 ‘제도화된 포럼’으로 격상시켰다는 것, RIC나 SCO 모두 러시아와 중국이 주도하는, 양국관계를 상징하는 핵심 지역기구·협력 틀이라는 점에서 대중국관계가 러시아의 국가안보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격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08년 7월12일 승인된 ‘대외정책개념’에서도 삼국관계를 ‘트로이카’로 규정하고 G8, BRICs와 더불어 세계문제의 관리능력 제고를 위해 중요한 다자적 틀로 설정하였다. 더 나아가 메드베데프 정부는 ‘대외정책개념’을 통해 러·중 관계가 인도와의 관계와 더불어 아

시아 정책에서 러시아의 중요한 트랙임을 시사하였고 특히, 중국과는 ‘세계정치의 핵심이슈에 대한 공동의 근본적인 접근이라는 기반 위에서 전 분야에 걸친 동반자관계를 구축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지역수준의 협력을 넘어 세계전략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표명하였다.³⁾ 2008년 12월 뉴델리에서 성사된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싱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싱 총리는 러시아를 인도외교의 ‘생명의 닻(vital anchor)’이라 표현하였고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인도와의 유대관계를 러시아에 ‘극도의 중요성(utmost importance)’이라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중·인 관계 또한, 2005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수립, 2006년 ‘공동선언’을 통해 ‘질적으로 새로운 수준’으로 도약, 2008년 ‘21세기 공동비전’ 선포 등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냈다.

‘러·인 우호협력조약(1993)’과 ‘중·러 우호친선조약(2001)’, ‘중·인 전략 및 협력동반자관계(2005)’를 제도적 기반으로 한 전략적 삼각체제는 ‘국가의 해’라는 양자관계의 전면적 교류확대를 통해 삼각관계의 인식적 지평을 확대하였다. 중국과 러시아 정부는 2006년을 중국에서 ‘러시아의 해’, 2007년은 러시아에서 ‘중국의 해’로 각각 ‘국가년’을 선포한 데 이어, 2009년은 ‘러시아어의 해’, 2010년은 ‘중국어의 해’로 각각 선포하였다. 러시아와 인도 정부 또한, 2008년은 러시아에서 ‘인도의 해’로 2009년은 인도에서 ‘러시아의 해’로 각각 선포하였다. 이러한 ‘국가년’ 선포를 통해 러·중·인 삼국은 궁극적으로 양자관계의 협력뿐 아니라 ‘전략적 삼각체제’의 제도적 안정성을 위해 근본적인 토대인 사회적 가치

3) 이 부분은, 백준기(2011), 『러시아의 중국정책: 동맹 또는 라이벌?』, 『중국과 러시아의 현재: 체제전환, 대외정책, 엘리트 비교연구』; 백준기(2009), 『러시아의 중국정책의 재정립과 이행기적 특성: 과정과 요인』, 『중소연구』 제33권 제3호, p. 158 발췌 재인용.

의 공통성 확보를 위한 문화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리·중·인 삼각체제’는 아직 고유한 의미의 군사동맹체제로 정의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중단기적으로 군사동맹 단계로 진입하는 것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장기적으로 이러한 발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지금까지의 협력추세로 보면 삼각관계의 전략적 협력—군사 및 외교 협력—이 심화되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오바마 정부가 ‘미국은 가장 성공적인 글로벌 동맹체제를 수립한 유일한 국가’라고 자부하는 현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 인도 등 차상위 강대국들이 ‘세력 불균형과 비대칭성’에 대한 공동 대응전략을 다극체제의 구축을 통해 현실화한다면 전략삼각체제의 효용성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중·인·러 삼각체제’는 고유한 의미에서 군사동맹체제는 아니지만, ‘동맹의 경향성’ 이상을 지닌 삼각체제에 대한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을 구성하는 데 동맹이론은 유용하다. 스나이더(Glenn H. Snyder)에 따르면, ‘동맹은 동맹 참가국들의 공동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자신의 자원을 협조(concert)하는 협력시도(cooperative endeavor)’이다.⁴⁾ 이러한 협력시도는 ‘동맹의 위협대상(outside party)’과 ‘외부의 위협’을 전제로 한다. 스나이더는 울퍼스(Arnold Wolfers)의 동맹개념에 따라 ‘동맹’을 군사적 동맹으로 제한한다.⁵⁾ 스나이더가 말하는 ‘동맹의 위협대상’은 주로 ‘군사적 적국’을 의미하지만, 월트(Stephen M. Walt)는 ‘군사적 공격 위협’뿐 아니라, 상대국가의 ‘총력(aggregate power), 지리적 인접

4) Glenn H. Snyder(1997), *Alliance Politics*, p. 1.

5) A. 울퍼스는 동맹을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주권국가 간의 군사적 지원에 대한 약속’으로 규정하였다. Arnold Wolfers(1968), p. 268.

성, 공격능력, 침략의도' 등으로 '외부의 위협'을 세분화하였다. 이것은 동맹의 동기가 '군사적 위협'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따라서 '삼각체제' 구성국의 참여 동기가 특정 국가의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은 아닐지라도, 일극체제나 일방주의, MD, 군사동맹체제강화 등에 대한 전략적 우려가 참여 동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삼각체제'를 분석할 때 '어떻게 동맹을 범주할 것인가' 하는 문제 또한 중요하다. 스나이더는 '동맹'과 '제휴(alignment)'를 구분하고, '제휴'를 '동맹'의 외연으로 보고 있으나 '동맹'을 군사적 측면으로 국한함으로써 '동맹'과 '제휴'를 구분하였다. 그에 따르면, "동맹은 적의 규정, 군사적 지원 등 '제휴'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특수성, 법적 및 도덕적 의무, 상부상조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휴'와 구분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영·불' 간의 '앙탕트 코르디알(Entente Cordiale, 1904)'이나, '영·불·러' 간의 '삼국협상(Triple Entente, 1907)'을 동맹의 범주에 넣지 않고 '제휴'의 범주에 포함시킨다.⁶⁾

이에 비해, 윌트는 '동맹'과 '제휴'를 상호 호환적인 것으로 해석한다. 그에 따르면, 동맹은 주권국가들 간의 안보협력을 위한 '공식적, 비공식적 합의(arrangement)'로 규정한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현대 국가들이 동맹상대국과 공식 조약을 체결하는 것을 주저한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조약을 통한 관계의 특징이 그들이 보여주려는 사실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공식적 동맹의 사례는 냉전시기에 미국과 이스라엘, 소련과 이집트의 관계에서 잘 드러난다. 소련과 이집트는 1971년까지 공식적으로 동맹조약을 체결한 바가 없으나 당시 양국이 동맹관계—

6) G. Snyder(1997), *op. cit.*, pp. 6-8.

비록 이집트가 공식적으로 비동맹을 주도하고 있었을지라도—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었고,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를 동맹수준으로 보는 데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맹의 의미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공식적 비공식적 유형에 따라 사례별로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이 월트의 견해이다. 특히, 냉전 해체 이후 미국의 초강대국 지위, 동맹 딜레마 등의 고려 측면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견지에 입각하면 ‘앙탕트 체제’ 등 스나이더가 동맹이 아닌 ‘제휴’의 범주에 포함한 협력 형태도 동맹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며, ‘러·중·인 삼각체제’ 또한 이러한 범주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⁷⁾ 다시 말하면, 삼각체제는 비록 군사적 적국을 상정하지 않고 군사동맹조약이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제휴’의 범주 내에서 ‘비공식적 동맹’, ‘앙탕트’ 성격의 동맹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스나이더가 동맹의 ‘동기’—‘보장하기(guarantee)’와 ‘보장받기(get help)’—를 유지하고 동맹이익을 입증하는 주요 수단으로 합동군사훈련, 제3국과 갈등 시 동맹국에 대한 정치 외교적 지원 등을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삼각체제’가 동맹적 속성이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동맹의 기원 측면에서 보면, 동맹은 복수의 국가들이 ‘외부의 위협’을 해소하기 위하여 ‘균형’ 또는 ‘편승(bandwagoning)’을 추구할 때 형성된다. 월트는 ‘균형’을 ‘세력균형’과 ‘위협균형’으로 나누었는데, 어느 것이든 국제질서의 무정부성에 근거한 안보적 불안정성에 근거한다. ‘균형’은 두 가지 형태로 대별된다. 하나는 ‘위협에 대처하는 것’, 구체적으로는 ‘군사적 수단의 일환으로서의 균형’을 의미한다. 강대국은 특정 강대국의

7) Stephen M. Walt(1987), pp. 12-13.

위협에 군사적으로 대응하고 그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해 동맹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미지 형성 및 강화를 통한 균형’, 즉 ‘정치적 수단으로써의 동맹’을 의미한다. 지역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동맹국들을 매료시키려는 시도로 군사력 확대 등 군사적 차원의 지원이 아닌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시도를 의미한다.⁸⁾

동맹의 선호경향에서 다른 유형은 ‘편승’인데, 경험적으로 약소국 또는 ‘상대적’ 약소국이 주로 취하는 동맹방식이다. 이러한 국가는 ‘외부의 압력에 취약하고, 국가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위협이 되는 강대국에 ‘편승’하는 전략을 선택한다.⁹⁾ 외부의 위협에 대한 특정 국가의 동맹적 반응은 차상위 국가들 간의 동맹보다는 위협요인인 최강대국에 대한 협력을 통한 위협요인 해소로 나타날 수도 있다. G2 질서의 도래—이에 대한 입장은 매우 분절적이고 상이하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삼각체제 구성국 중에서 인도가 이러한 선택(미국과의 협력)을 하여 외부적 불안정을 해소하거나 중화시키려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인도의 중국·러시아에 대한 상대적 약세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강대국으로 구분되며 역사적 경험으로도 강대국(차상위 강대국 포함)은 ‘편승’보다는 ‘균형’을 선호한 사실을 감안하면 인도는 최강대국—현재의 미국—에 ‘편승’하기보다는 ‘균형’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기반하여, ‘러·중·인 삼각체제’를 ‘앙탕트 체제’로 해석하고 ‘정치동맹’ 또는 ‘유사동맹(quasi-alliance)’으로, 견고한 군사동맹체제라기보다는 유연한 형태의 ‘네트워크 동맹’으로 설정하고자

8) *Ibid.*, pp. 148-149.

9) *Ibid.*, pp. 172-174.

한다. ‘앙탕트 체제’는 유사시 군사적 지원에 대한 확고한 약속을 명시하지 않고 방어적 성격을 지니지만, 군사협력을 완전히 배제하지도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앙탕트 체제는, 칸(Robert Kann)의 견해에 따르면, ‘유연성’을 특징으로 하며, 불가침조약이나 단순한 ‘협의 관계(consultation pact)’보다는 전략적으로 강한 개념이다.¹⁰⁾ ‘러·중·인 삼각체제’에서 ‘앙탕트’ 개념은 평시의 군사훈련뿐 아니라 유사시 군사적 협의를 포함한 개념으로 확장될 수 있다. 20세기 초 ‘삼국협상’이 견고한 군사동맹은 아니지만 세력권 인정 및 재구성, 그리고 영토문제에 대한 합의를 기반으로 독일 중심의 기존 동맹체제에 대항하기 위해 맺어진 전략적 협력이라는 점에서 ‘러·중·인 삼각체제’와 유사하다. 영·불·러의 ‘삼국협상’체제가 이후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독일 주도의 ‘삼국동맹(Mittelmächte)’에 대항하는 군사동맹으로 발전한 것을 감안하면, 중·인·러 삼각체제 또한 미래적 시점에서 미국 주도의 ‘아·태 동맹’에 대항하는 군사동맹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10) Robert A. Kann(1976), pp. 611-615.

제2장 중 · 러 관계

1. 중 · 러 관계의 역사적 변천
2. 중 · 러 관계의 협력요인과 갈등요인
3. 중 · 러 관계가 삼각체제에 미치는 영향
4. 한국에 주는 시사점 및 소결



2012년 3월 5일 그 어느 나라보다 푸틴 대통령의 당선을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반겼던 국가는 중국이었다. 중국은 주요 언론매체들을 통해 푸틴의 3선 재집권의 의미와 중요성을 크게 선전하였다. 왜 중국은 그토록 푸틴의 귀환을 주목한 것인가? 그 까닭은 무엇보다 푸틴 집권기(2000~07, 2008~12: 대통령, 총리 재직)에 중·러 관계가 동맹 수준에 버금가는 전방위적인 발전을 이룩했기 때문이었다. 대외적으로 미국의 패권주의와 일방주의를 견제하기 위해, 대내적으로 경제성장과 사회안정을 추진하기 위해 일관된 친중정책을 펼쳤던 푸틴 대통령은 중국의 전략적 이익과도 부합하는 입장을 줄곧 견지해왔다. 그래서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푸틴 총리에게 보낸 당선 축하 메시지에서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노력해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중·러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새 경지로 끌어올리기를 희망한다”고 밝히면서 양국 관계의 발전을 시사했다. 이런 중국의 친러 입장을 배려하기도 하듯 푸틴 대통령 역시 2012년 6월 5일 대통령 취임 후 해외 방문지로 미국보다 중국을 먼저 선택했다.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두 국가가 전면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자고 합의했다. 기실 푸틴 집권기에 중·러 관계는 협력이 크게 증진되었다. 양국은 1996년에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선언한 뒤 2001년에는 ‘선린우호협력조약’을 맺었고, 이어 2011년 6월에는 ‘전면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를 한층 더 격상시켰다. 양국 모두 강대국 부상이란 공동의 국가목표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협력은 서로에 win-win의 공동이익을 가져다주었다. 외교안보적 차원에서는 미국의 패권주의와 개입주의 견제, 테러리즘 반대, 종교적 근본주의와 민족분리주의의 반대와 같은 공동목표를 위해 서로에 안보 파트

너십이 더 없이 절실했는바, 군사안보부문의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 심지어 합동군사훈련의 추진으로까지 이어졌다. 지역안보 및 경제협력 차원에서 양국은 ‘상해협력기구’(SCO)를 근간으로 에너지, 자원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다자협력체제 형성을 주도함으로써 역내 안정과 평화에 기여해온 것이 사실이다.

유라시아를 아우르는 러시아의 지정학적 성격에서 비롯된 측면이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볼 때 러시아는 친서방 외교노선과 친중국 외교노선 가운데 어느 하나를 택하는 일변도 외교야말로 국익에 부합할 수 없기 때문에 ‘동서 평형외교’라 할 수 있는 ‘다방향외교’ 혹은 ‘전방위외교(multi-vector diplomacy)’를 적극적으로 펼칠 수밖에 없었다.¹¹⁾

러시아의 전방위외교에서 중·러 관계를 강화하게 된 촉진요인은 무엇인가? 가령 구조적 현실주의 관점을 견지하는 왈츠(K. Waltz)는 탈냉전기 중·러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단극 패권과 일방주의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으며, 특히 NATO의 동진확장과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인권비판은 중·러 양국의 협력을 한층 더 촉진한다고 보기도 했다.¹²⁾

마찬가지로 중국 역시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었는데, 중국의 입장에서 중·러 관계의 위상과 비중은 어떠한가? 그리고 중국은 어떤 대외전략의 기초 위에서 중·러 관계를 확대 발전시켜왔던 것인가?

11) 중·러 관계의 복원과 푸틴 정부의 다방향 외교에 관한 국내 주요 연구로, 백준기(2011), pp. 154~194 참고.

12) Kenneth N. Waltz(2002), p. 46, pp. 63-64.

탈냉전 이후 20여 년 동안 양국이 서로의 필요에 따라 전면적인 협력 이 확대되고 있지만, 사실상의 동맹은 아니기에 전면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는 양국 관계의 독특한 성격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갈등요인이 상존한다. 그럼 양국 협력은 새로운 형태의 전략적 협력모델인가?¹³⁾ 다시말해 양국 관계는 협력 요인뿐만 아니라 갈등 요인도 동시에 안고 있기에 전략적 협력모델의 성격은 대단히 중요하다. 비록 러시아는 경제적 동기가, 중국은 안보적 동기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작용하여 협력이 증대되어 왔지만 동시에 ‘동상이몽’의 전략적 계산도 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이 급부상함에 따라 이른바 ‘G-2’ 시대에 국제적으로 ‘책임 있는 이익상관자(a responsible stakeholder)’로서 미중협력체제가 가동됨으로써 러시아가 가진 국제무대의 위상과 주도권이 약화되어 상대적으로 ‘주니어 파트너(junior partner)’로 전략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하는 측면도 있다. 따라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함으로써 국익증대를 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갈등과 협력이 공존하는 미·중·러 삼국 관계의 비대칭적 이해관계와 전략적 이해의 불일치는 다자협력체제(ARF, 6자회담, G20, APEC 등)의 원활한 작동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중·러 양국 외에 패권국가인 미국을 상수로 두고 미·중·러 삼국 사이에서 ‘전략적 실용주의’

13) Brian Carlson(2009); Bobo Lo(2008); Thomas S. Wilkins(2008); Arkady Moshes & Matti Nojonen(eds.)(2011) 등 참고. 李静杰(2009), 『新世纪的中俄关系』, 关贵海 主编 『中俄关系的历史与现实』, 北京: 社会科学出版社, pp. 17~37. 특히 중국 내 중·러 관계 분야 전문가인 자오화성(赵华胜)은 중·러 관계의 가능한 모델을 다섯 가지로 나눠 중·러 관계의 특징을 분석했다. 赵华胜(2009), 『中俄关系的模式』, 关贵海 主编 『中俄关系的历史与现实』, 北京: 社会科学出版社, pp. 38~54. 국내의 글 가운데 중·러 관계의 전개과정에 대한 비교적 상세한 검토는 주재우(2011), pp. 195~22; 최근 중러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동향분석으로 이재영 외(2012. 7. 13) 참고.

에 기초한 ‘전위방위 외교’를 펼치는 인도의 부상과 그 역할도 배제할 수 없다.¹⁴⁾ 미·일·호 삼각동맹 체제를 견제할 수 있는 중·러·인(RIC) 삼각협력체제의 가동은 아시아 지역의 새로운 ‘세력균형’과 ‘이익균형’ 체제의 부상을 야기할 것이고, 이는 명실상부하게 중견국가로 부상한 한국에 새로운 아시아 외교전략의 수립 및 대응 전략의 모색을 촉발하고 있다.

특히 오바마 집권 이후 ‘아시아 귀환’(Pivot to Asia)을 선언한 미국이 아시아 역내 재참여(re-engagement)와 더불어 양자동맹 및 다자협력체제를 통한 영향력 증대는 중·러 협력을 한층 더 촉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한다고 보인다.¹⁵⁾

이 글은 냉전 이후 최근까지 중·러 관계의 역사를 간략히 검토한 다음, 특히 탈냉전기 중러관계의 주요 협력요인과 갈등요인들을 중점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그런 다음 이 중·러 협력 증대가 이미 상수화된 미국요인(American factor)의 압력 속에서 중·러·인(RIC) 전략적 삼각협력체제(strategic triangle)의 형성과 전개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시론적 검토를 해볼 것이다. 끝으로 21세기 지역강대국의 새로운 세력연합

14) 국제정치에서 실용주의 외교란 ‘실질적인 결과의 이익’을 강조하는 ‘결과의 논리(logic of consequence)’에 기반한 외교이다. 제도와 체제가 다른 국가들과도 평화공존 교류 협력할 수 있다는 외교이념이다. 예컨대 이런 관점을 아시아에 적용해보면, 중국의 덩샤오핑이 주도한 미중수교(1978년 12월)를 통한 개혁개방외교, 2차대전 후 미·일 동맹 내에서 ‘정경분리의 외교’를 강조했던 ‘요시다 독트린’이든가, 미국과 중국의 동시 구애를 이용함으로써 안보와 경제발전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던 인도의 만모한 싱(Manmohan Singh) 정부의 대외정책은 모두 전략적 실용주의로 파악될 수 있다. 박건영(2008), p. 95.

15) ‘Pivot to Asia’는 미국 외교안보정책의 중심축을 아시아로 이전한다는 의미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2011년 외교잡지인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에 “America’s Pacific Century”라는 글을 통해 피력했다.
http://www.foreignpolicy.com/articles/2011/10/11/americas_pacific_century.

의 등장이 중견 국가인 한국의 외교전략에 주는 시사점과 전망은 무엇인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1. 중·러 관계의 역사적 변천

제2차 대전 이후 세계사에서 중국과 러시아(냉전시기 소련)만큼 협력과 충돌이란 과란만장한 부침의 역사를 거듭해온 나라도 드물 것이다. 냉전 초기 동맹국가로서 사회주의체제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두 국가는 급기야 사회주의체제 내부에 이데올로기 정체성의 혼란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적 충돌은 물론이고 적성국과 수교(미중수교)도 서슴지 않는 이른바 ‘현실주의’ 국제관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던 장본인들이었다. 양국은 냉전시기 동맹결성의 밀월기(1949~58)에서 동맹결렬과 분쟁의 시기(1959~82)를 보낸 뒤 덩샤오핑의 개혁개방기와 고르바초프 페레스트로이카 시기의 정상화 모색기(1982~91)를 거쳐 탈냉전기에는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복원되는 협력과 갈등으로 점철되는 부침의 역사를 거쳐왔다. 다시 말해 혈맹적 동지에서 적으로 또 다시 전략적 동반자로 복귀해온 양국 관계는 취약한 사회주의 이념과 강고한 국가 실리가 어떻게 갈등을 빚고 재차 관계정상화를 이루는지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다.

가. 냉전기 중·소 동맹의 결렬과 정상화 과정

1949년 신중국 건설 이후 중국지도부는 ‘친소일변도(亲苏一边倒)’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1950년 한국전쟁 직전에 중소우호동맹조약을 체결하

였다. 중국은 피폐화된 경제를 회복하고 국가건설의 기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소련의 원조와 더불어 스탈린식 발전모델, 즉 중공업우선발전전략을 들여와 신속하게 사회주의 공업화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소련의 모델에 따라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53~57)을 성공적으로 달성하였으나, 불균형 발전의 문제점 등이 노정되면서 스탈린식 발전전략에 대한 회의감이 분출되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중·소 관계는 원만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50년대 초반 밀월기를 보내던 중소관계에 먹구름이 드리우게 된 결정적 계기는 바로 1953년 스탈린 사망 이후 1956년에 개최된 소련공산당 제20차 전당대회에서 흐루시초프가 스탈린 격하운동과 함께 대미 평화공존과 수정주의 노선을 주도한 일이었다. 이 사건은 전체 사회주의 진영 내부에 큰 혼란을 조성하였다.

먼저 스탈린 개인숭배 비판과 관련하여 소련은 스탈린 격하운동의 전개에 관해 사전에 중국과 충분히 상의하지 않은 점이 중국지도부의 원성을 사게 되었다. 당시만 해도 스탈린은 일개 국가의 지도자라기보다는 전체 사회주의 진영의 대표적인 지도자였다는 점에서 그 파장과 여파는 대단하였다. 게다가 스탈린 격하운동이 곧 중국 내에서 자신의 격하운동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고 우려한 마오쩌둥은 이 사전의 추이에 비상한 관심을 가졌으며, 일방적으로 스탈린을 매도하기보다는 스탈린의 과오와 공적을 동시에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리하여 제20차 전당대회에서 행한 흐루시초프의 비밀연설 직후에 중국지도부는 중앙정치국 확대회의를 개최하고 『인민일보』(1956년 04/05)에 게재된 「무산계급 독재의 역사경험」이란 장문의 사설에서 스탈린의 과오로 적과 동지 간의 모순

과 인민내부의 모순을 구분하지 못한 점, 군중노선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 집단지도체제와 군중노선의 수립을 강조하였다.¹⁶⁾ 그러나 동시에 스탈린의 과오는 30%에 불과하고 공적이 70%를 차지한다고 보면서(三七开), 스탈린이야말로 프롤레타리아 독재 체제를 확립하여 사회주의 진영을 공고히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당시 중·소 지도부의 견해 차이는 컸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흐루시초프의 평화공존과 수정주의로의 외교노선 전환은 중소관계를 결렬시키는 데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흐루시초프는 더 이상 핵무기 시대에는 전쟁을 통한 분쟁해결이 공멸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대안이 될 수 없으며, 평화적 방법으로 국제분쟁을 풀 수 있다는 대미 유화적인 태도를 견지하였다. 변화된 국제질서에서 더 이상 “핵무기는 계급투쟁 노선을 따르지 않는다(the atomic bomb does not adhere to the class principle)”는 흐루시초프의 입장, 즉 ‘전쟁의 비필연성’ 논리는 계급투쟁 노선과 세계혁명 노선을 견결히 수호하는 것이 마르크스레닌주의 정신을 견지하는 것으로 본 마오쩌둥에게는 사회주의 노선으로부터의 이탈행위로 비취질 수밖에 없었다. 대미 평화공존 노선으로 요약되는 흐루시초프의 노선 전환은 미국과 소련의 긴장해소라는 긍정적 기여도 했지만 반면 중소 갈등의 도화선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1950년대 후반 소련이 폴란드에 무력으로 개입한 처사는 중국지도부로 하여금 소련이 세계 사회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연대정신, 민족국가들의 주권을 훼손하면서 대국 패권주의와 소비니즘으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적 관점을

16) 서진영(2006), p. 197.

견지하도록 했다.

이러한 흐루시초프의 대미 유화적 노선전환과 스탈린식 불균형적 중공업우선 발전전략은 중국으로 하여금 독자적인 중국식 경제발전 노선, 즉 ‘대약진 운동’을 1958년부터 추진하게 했다. 이것 역시 중소지도부의 갈등을 촉발하는 사안이 되었다. 1959년에 이르러 흐루시초프는 마오의 대약진운동을 마르크스레닌주의 경제발전의 객관적 법칙과 역사발전의 법칙을 무시한 주관주의적 작풍이라고 매도했으며, 마오를 경제발전의 ABC도 모르는 지도자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한편 중소갈등을 증폭시킨 몇 가지 사건을 더 열거하자면 1958년 8월 대만해협 위기(중국의 금문도, 마조도 포격) 시 소련이 중국의 무력사용을 자제하도록 압박한 점, 중·인도 국경분쟁(1959년 8월, 1962년 10월~11월)에서도 소련이 중국 대신 인도를 지지한 점 역시 중소갈등을 일파만파 확대시켰다. 또한 1959년 흐루시초프가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 길에 베이징에서 마련된 양국 정상회담에서 중소공동의 극동함대를 구성하여 군 작전지휘권을 소련이 행사하겠다는 제안 역시 마오로 하여금 중국의 주권을 무시한 처사로 이해되어 즉석에서 반 푼어치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함으로써 양국 정상 간 감정싸움을 빚기도 했다. 또한 1959년 6월에 소련이 중국에 대해 핵무기 개발지원을 중단한 점 역시 양국 관계를 악화시켰다. 급기야 1960년 7월에 소련은 중국에서 대규모 프로젝트 공사 및 기술원조를 진행하던 소련의 과학자 및 기술자들을 중국에서 전격 철수시키고, 소련에 유학 중이던 중국 학생들도 본국으로 돌려보냄에 따라 양국 관계는 한층 더 경색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어 1962년과 1963년 양국의 국경분쟁은 일촉즉발의 위기국면으로 몰고 갔다. 그리하

여 1950년대 초반까지 이어졌던 밀월기는 끝나고 말았다.¹⁷⁾

1964년 마침내 흐루시초프가 내정 및 대외 정책의 실패로 실각한 뒤 새로 등장한 브레즈네프 서기장 역시 중소관계 해소에 기여하지 못했다.

1960년대 중후반 중국 대외전략의 기본틀은 ‘반미반소’의 이른바 ‘이중적대정책(dual adversary policy)’과 제3세계와 연대를 기반으로 한 세계혁명론으로 집약된다.¹⁸⁾ 반면 소련은 ‘브레즈네프 독트린’을 통해 사회주의 진영을 힘으로 관리하려고 했다. 소련의 이 입장은 중국의 눈에는 이른바 반마르크스주의 ‘사회-제국주의’의 모습으로 각인되어 폄하될 수밖에 없었다. 1960년대 후반 중소분열의 정점은 이른바 ‘전바오다오(珍宝島)’에서 무력충돌이었다. 이 사건 이후 중국은 미국보다 소련을 더욱 경계해야 할 위협세력으로 간주하였고, 이는 1970년대 중국 외교노선의 전환, 즉 ‘연미반소(聯美反苏)’ — ‘일조선(一条线)’ · ‘일대편(一大片)’ 정책으로 나아가게 만들었다. 요컨대 미·중 관계와 중·일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소련을 견제해야 한다는 외교정책의 대조정이 시작된다.¹⁹⁾ 그리하여 1970년대 초 미국과 중국 평풍외교의 결실로 닉슨의 역사적인 중국방문(1972년 2월)이 이뤄졌고, 이는 결국 1979년 1월 1일 미·중 국교 정상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해빙기를 타고 중·일 국교 수교(1972)가 미·중 수교보다 조기에 실현되었다.

반면 이 같은 미·중 협력을 견제하기 위한 소련의 대미 대중국 세력 균형 전략은 러·인 관계의 공고화 외에도 1979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17) 존 M. 톰슨 지음, 김남섭 옮김(2004), pp. 517~520.

18) 해리 하딩 지음, 안인혜 옮김(1995), p. 70.

19) 丛鹏, 张颖(2011), pp. 26~27.

침공과 더불어 소련과 베트남의 우호동맹조약의 결성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소련의 맞대응은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중국봉쇄정책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덩샤오핑 집권 이후 대대적으로 추진된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의 성공과 더불어 중소관계도 점차 해빙의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관계회복의 첫 계기가 브레즈네프 사망(1982)이라면, 관계회복의 급물살을 타게 된 근본적 전환점은 1985년 고르바초프 집권 이후의 신사고 외교였다. 고르바초프의 신사고 외교는 1986년 블라디보스토크 연설, 1988년 9월의 크라스노야르스크 연설에서 소련은 긴장완화와 경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리하여 중소관계의 정상화를 향한 양국의 노력은 그동안 관계악화의 세 가지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였는데, 요컨대 1987년 이후 중소 간 단계적인 국경교섭을 통해 중·소 국경선에 배치된 소련 병력의 철수, 1989년 아프가니스탄 주둔 소련군의 완전 철수, 1989년 친중 국가였던 캄보디아로부터 베트남군의 철수가 단행됨으로써 양국 관계 정상화의 전제조건들이 해소되었다. 이러한 양국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실로 1989년 5월에 고르바초프의 역사적인 중국 방문이 이뤄졌고, 마침내 국교정상화가 실현될 수 있었다.

나. 탈냉전기 중러관계의 확대발전

1) 1991년부터 2001년 9·11테러 전까지 양국 관계의 발전

1989년 중소관계의 정상화란 결실에도 불구하고 1991년 동구사회주의와 구소련의 멸망은 바야흐로 미국이 주도하는 단극체제의 부상이라는

새로운 탈냉전 시대의 개막을 가져왔다. 당시 소련뿐만 아니라 중국 역시 1989년 6·4 천안문 사태로 말미암아 국제적으로 고립된 채 대외관계가 악화되어 있었고, 국내적으로도 경제불황의 늪에서 허덕이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양국 모두 1992년 초까지만 해도 심각한 내부 문제로 말미암아 새로운 중러관계 수립에 집중할 수 없는 여건이었다. 하지만 1992년 덩샤오핑의 ‘남순강화’ 이후 중국은 제2차 개혁개방 드라이브를 추진하면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전격적으로 단행하였다. 러시아 연방도 옐친 지도부가 새로 등장하면서 탈냉전 시대 중러관계의 서막을 열게 되었다.

1992년 말 중·러 정상회담에서 서명한 「중·러 상호관계기본에 관한 연합성명」에서 양국은 ‘우호국가’로서 평화공존 5개항원칙에 따라 ‘선린우호(睦邻友好)’와 상호이익의 협력관계를 발전시켜나갈 것임을 선언했다.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양국은 변경지역 상호군사력 감축과 군사분야 신뢰조치의 강화에 서명했으며, 특히 옐친 대통령은 ‘대만은 중국영토로서 분리될 수 없는 일부분(台湾是中国领土不可分割的一部分)’이라는 ‘하나의 중국정책’을 지지했다. 아울러 분쟁은 평화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며, 상대방을 공격대상으로 삼는 군사정치동맹에 참가하지 않으며, 유사시 대만문제로 중국이 공격받을 때 러시아는 제삼국과 연대하여 중국을 공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다.²⁰⁾ 1994년 1월 양국정상회담에서 ‘21세기 건설적인 동반자 관계’를 맺었으며, 상대국가에 핵무기를 선제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NFU(No First Use) 정책을 상호확인했으며, 1996년 정상회담에서는 ‘21세기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게 되었다. 특히 1996년 대만문제로 미·중 관계가 악화된 이후에도 여전히 전략적 관계

20) 丛鹏, 张颖(2011), pp. 134~135.

를 확대발전시킬 것임을 확인하였다. 1990년대 전반기에 친서방 성향의 코지레프(Kozyrev) 외무장관이 미·러 관계를 중시하며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에 주력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중도성향의 프리마코프(Primakov) 외무장관의 친중노선 전환은 중러관계의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런 정책전환은 위에서 언급한 1996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선언으로 귀결되었다. 1996년 양국관계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외교적 성과는 바로 ‘상하이 5개국’(Shanghai Five)협정을 공동발기하여 지역안보기구를 확립한 것이다. 이것은 향후 2001년 ‘상해협력기구’(SCO)의 전신이 되어 동북아 중앙아를 아우르는 지역다자협력기구로서 적극적인 기능을 하게 된다.²¹⁾

1997년부터 1999년까지는 러시아에 국내적으로 많은 일이 일어난 시기였다. 우선 경제위기가 한층 더 심화되었다. 국내적으로 1998년 금융위기에 따른 국가부도(moratorium) 사태는 본래 매우 취약했던 경제상황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다. 게다가 국내정치 상황 역시 불안정했으며, 설상가상으로 엘친의 건강상태도 계속 악화되었다. 대외적으로 러시아를 혹독하게 압박했던 요인은 무엇보다 NATO의 동진(东进)확대 정책이었다. 미국을 핵심으로 한 서방세력은 러시아의 반대에도 정식으로 러시아의 원래 동맹국가였던 폴란드, 헝가리, 체코를 NATO에 가입시켰다. 그리하여 NATO는 원래 자신의 관할 세력범위 이외의 지역으로 확대하는 ‘신전략’을 통과시켰다. 이제 미국은 원조의 중점을 러시아가 아니라 독립국가연합(CIS) 여러 국가에 집중했다. 그리하여 러시아를 독립국가연합과 분리하려는 시도들이 강화되었다. 특히 1999년 3~6월 사이 미국을 핵심으로

21) SCO에 관한 중국의 대표적인 종합적 연구는 赵华胜(2012) 참고.

한 NATO는 유고슬라비아에 무려 78일간의 공습을 단행함으로써 발칸 지역에서 러시아의 이익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대국지위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이것은 러시아 내 반미 기운을 촉발시켰다. 1997년부터 1999년까지 러시아의 국내외적인 위기가 심화되었음에도 중·러 관계는 오히려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1996년 맺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기반하여 1997년 4월에 양국은 제4차 정상회담을 열어 쌍방이 ‘세계 다극화와 신국제질서 연합성명(Joint Declaration on a Multipolar World and the formation of a New World Order)’을 발표했으며 동시에 ‘중러 우호·평화·발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 위원회의 설립취지는 중·러 양국이 선린우호·평등신뢰·상호이익협력과 공동발전을 적극 촉진하여 향후 21세기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할 수 있는 기반을 닦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양국정상은 쌍방이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 각국의 독립과 주권, 민족존엄을 유지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며, 특히 탈냉전기 미국의 단극 패권주의에 맞서 세계 다극화를 추동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신국제질서를 확립하자고 다짐했다.²²⁾

신세기 중러협력의 새로운 단계로의 진입은 2000년 푸틴 대통령의 당선과 더불어 한층 강화되었다. 비록 푸틴 정부는 집권 초기에 자국의 경제위기 극복과 유럽·미국과의 경색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친서방 외교를 펼치기는 했지만, 중국과 맺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중요성을 결코 간과하지 않았다.

러시아의 지정학적·지전략적 관점이나 구체적으로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볼 때 러시아는 옐친 정부 초기 친서방 노선에서 탈피하여 ‘동서

22) 『人民日报』(1997); 丛鹏, 张颖(2011), pp. 146~148.

평형외교'라 할 수 있는 '전방위외교(multi-vector diplomacy)'를 적극적으로 펼쳐왔다. 이 외교노선은 중앙아시아의 독립국가연합(CIS) 국가들이나 인도가 펼치는 외교전략인데, 푸틴 집권기의 러시아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사실 미국·러시아, 유럽·러시아 사이의 구조적인 모순이 쉽게 해소될 수 없기 때문에 푸틴은 신속하게 동서평형외교를 추진했던 것이다. 푸틴은 미·러 관계뿐만 아니라 유럽·러시아 관계를 조정 및 개선 발전시키는 동시에 중·러 우호 관계 역시 동일한 비중으로 중시하였다.

2001년에 중·러 양국정상은 역사적인 '선린우호협력조약'을 체결하여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합의를 달성했다. 주목할 만한 주요 내용을 보면 평화공존(제1조), 양자가 무력을 사용하거나 무력으로 위협하지 않는다(제2조), 내정불간섭(제3조), 국가통일과 영토 통합성의 옹호(제4조), 하나의 중국원칙 견지(제5조), 국제법을 엄격히 준수(제11조) 등등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제2조에서는 서로 상대방에게 핵무기를 선제 사용하지 않으며(NFU), 전략핵 미사일로 상대방을 겨누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변경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한다(제6조)는 내용과 변경 지역 군사적 상호신뢰와 감군 추진 그리고 군사협력은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제7조) 내용 역시 지역 안정에 필수적인 내용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양국의 평화와 안보가 위협을 받으면 긴급협상을 진행한다고 밝힌 제9조 내용은 다분히 군사협력의 가능성을 염두해 둔 '방어조약'의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준동맹적 의미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 글로벌 차원에서도 양국이 국제적인 전략균형과 안정을 유지(제12조)하겠다고 밝혀 공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국제적 지위와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 할 것이

다. 또한 지역 및 자국 국내 안정을 위하여 이른바 ‘3대 악’, 즉 테러리즘·분열주의·이슬람근본주의에 대한 공동 타격(제20조) 방안도 담고 있다. 이 밖에 각종 군사, 과학기술, 경제협력, 법제, 환경, 교육 관련 조항 역시 포함되어 실질적으로 양국의 전방위적인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들을 확정하였다.²³⁾

2001년은 양국 관계에서 이룬 큰 진전뿐만 아니라 동북아 중앙아시아 지역차원에서 다자협력기구인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를 건설(2001년 6월 15일)함으로써 지역안정과 협력을 증진시키는 외교적 성과를 이룩했다는 점에서도 의미있는 해였다. 다자협력기구로서 이 조직건설의 의의와 중요성을 지적해보면, 우선 역내 안정적인 협력기제를 건설했다는 점, 둘째, 안보영역에서 협력의 틀을 마련함으로써 역내의 전체적인 안정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점, 셋째, 호혜·상호이익·윈윈(win-win) 원칙 아래 성원국 간의 긴밀한 경제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게 된 점, 넷째, 민간교류협력도 부단히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된 점, 마지막으로 성원국 간 상호신뢰·상호이익·평등·협상·문명의 다양성에 대한 상호존중, 공동발전의 추구를 담은 ‘상하이정신’을 토대로 공동번영의 틀이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안보차원에서 SCO를 보면, 우선 SCO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는 이른바 ‘3대 위협요소(3대 악)’인 국제테러리즘, 민족분리주의, 종교적 극단주의를 제거하기 위해 공동노력을 경주해왔다는 점이다. 이러한 세 가지 핵심적 위협 외에도 초국경 범죄, 무기거래, 마약밀매, 불법 이민등과 같은 이슈에 대해서도 공동협력을 진행시켜왔다. 둘째, 중·러 양국은 특

23) 조약의 세부적 내용과 함의에 대해서는 丛鹏, 张颖(2011), pp. 155~157.

히 중앙아시아 지역 내에서 점증하는 미국의 영향력과 헤게모니 확대에 대해 우려해왔다.²⁴⁾ 이런 우려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으로 SCO를 통해 군사안보 차원에서 중·러를 중심으로 미·일에 대항할 수 있는 군사협력을 강화하고자 한 점이 주목된다.

2) 9·11 테러 이후 양국 협력

2001년 9·11 테러의 발발은 중·러 협력에서 다소 불협화음과 딜레마가 노정되기도 했다. 예컨대 9·11 직후 푸틴 대통령이 미국에 중앙아시아 군사기지 설치를 허용한 점이라든가 2001년 말 미국의 ABM 조약 탈퇴에 대해 미온적인 반대입장을 취한 점도 중국의 불만을 야기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9·11 테러 이후 중·러 양국의 협력이 약화된 이유는 러시아의 친미노선 강화, 유럽과 융합강화, 중국과 거리 유지 전략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전통적인 러시아의 대외정책전략인 ‘서방주의’, 유라시아주의, 슬라브주의로의 노선전환이 중러관계를 냉담하게 만든 주요 요인이었다. 이런 냉담기는 9·11테러 이후부터 2004년까지 유지되었다. 그러나 중국은 러시아의 이런 태도전환을 우선 테러와의 전쟁(체첸과의 전쟁 등)에서 미국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했다는 점, 그리고 NATO의 확장문제에서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는 시도에서 연유한 점, 미·러 관계를 강화하는데 장애물이라 할 수 있는 중·러 관계 강화가 대미 협상력에서 레버리지를 상실할 수 있다는 전략적 계산 때문에 중국과 일정 정도 의도적인 거리두기를 택했다는 쪽으로 그 원인을 분석하고, 오히려 러시아의 친미

24) SCO를 통한 대미 견제 시도에 대한 미국의 인식과 정책대응, 그리고 SCO와 미국 관계에 대한 국내 주요 연구로는 정은숙(2008) 참고.

정책을 이해하는 입장을 취했다.²⁵⁾ 중국의 이런 역지사지적인 태도는 러시아가 다른 어떤 국가보다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중·러 관계가 다소 냉담한 관계에서 급속히 복원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계기는 바로 미국이 감행한 2003년 이라크 침공과 아프가니스탄과의 전쟁, 2004년 NATO의 제2차 동진확대라고 볼 수 있다. ‘부시 독트린’으로 분출되던 미국의 패권주의와 일방주의를 견제할 필요성이 양국 모두 공통된 인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양국 관계는 한층 강화되었다. 2004년 10월 푸틴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양국 관계의 회복을 다시금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이 정상회담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는 ‘중·러 선린우호 협력조약의 실천요강(中俄睦邻友好合作条约实施纲要)’(2005~08)의 비준이었다. 이 요강을 통해 양국은 향후 4년 동안 집중해야 할 주요 협력 분야를 설정했다. 나아가 양국은 서로를 ‘시장경제지위(MES)’를 가진 국가로 인정했으며, 양국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중·러 투자보호협정’의 체결과 양국 정부가 주관하는 ‘중·러 투자촉진회’를 이미 2004년에 가동하였다.

또한 양국은 2004년 10월에 ‘중·러 국경동쪽지역 보충협정(中俄国界东段补充协定)’에 서명함으로써 역사적으로 미해결 유산으로 남아 있던 국경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양국은 군사안보협력 차원에서도 2005년 이래 2012년 최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합동군사훈련을 정례화해서 전개해왔다. 중국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아울러 중·일 간 센카쿠(다오위다오) 영토분쟁에서도 유

25) 주재우(2011), pp. 217~218.

리한 전략적 입지를 확보하겠다는 의지의 발현으로 보인다.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공통의 안보목표 외에도 경제무역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어왔다.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양국무역량의 연평균 성장률은 무려 29%에 달했다. 교역액이 2006년에 333억 달러였는데, 2007년에는 481억 달러로 급증해 전년 대비 44.3%의 폭발적인 증가율을 보이기도 했다.²⁶⁾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증가세가 주춤하다가 2011년 교역액은 800억 달러를 기록했다. 향후 양국 교역액은 2020년 2,00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러시아는 중국에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을 수출하고 중국은 러시아에 소비재를 공급하면서 양국 교역 규모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양국은 2009년 향후 30년간 매년 러시아의 천연가스 700억m³를 중국에 수출하는 기본 합의문에도 서명했다.

한편 글로벌 차원에서도 양국 협력은 가일층 강화되었다. 1997년 양국 정상은 국제문제와 관련하여 「세계의 다극화와 신국제질서 건설을 위한 중러 양국 연합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2005년 7월에도 후진타오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21세기 국제질서에 관한 연합성명」을 다시 발표했다. 양국은 유엔의 권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제문제에 관한 공통 인식과 이해 속에서 공동협력을 한층 강화하였다. 그리고 이처럼 양국 협력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었다.

안보협력과 관련하여 양국 협력의 기초는 최근 주요 이슈인 시리아 유혈사태나 이란의 핵문제, 그리고 중앙아시아와 동아시아 영유권 분쟁지역,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서도 유지되는 상황이다.

26) 李静杰, 「新世纪的中俄关系」, 关贵海 主编 『中俄关系的历史与现实』(北京: 社会科学出版社, 2009). pp. 19-20.

3) 21세기 중국 외교정책의 기조와 중러관계의 전략적 중요성

이상과 같은 중·러 협력의 확대 강화 추세는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결정적으로 중요한 두 가지 외교정책 목표에 기반하여 전개되었다. 첫 번째 중국의 외교정책 목표는 중국이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지속해나갈 수 있는 지역 차원의 안정적인 국제환경의 조성이다. 이는 중국이 2049년 완결을 목표로 하는 ‘전면적인 소강사회의 건설’을 지향하고 있다. 두 번째 외교정책목표는 중국이 ‘평화적 부상(和平崛起)’ 혹은 ‘평화발전(和平发展)’을 글로벌 차원에서 달성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자국의 부상을 꺼리는 미국을 비롯한 현존하는 주요 국가들과 충돌을 기피하려고 한다. 다시 말해 중국의 지도부 입장에서 볼 때, 슈퍼파워인 미국이 중·러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축시키려고 기도함에도 미국과 관계에 몰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²⁷⁾ 전반적으로 중국의 대러시아 외교 노선과 정책은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목표에 종속된다고 평가된다. 중·러 관계의 발전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래 적시된 바와 같이 좀 더 구체적으로 중국외교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세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은 2004년 ‘평화발전’ 노선으로 전환한 이후 2005년에 접어들면서 외교이념이 한층 더 풍부해지기 시작하는데, 이른바 ‘조화로운 세계(和諧世界, harmonious world)’란 새로운 외교이념이 제시되었다. 중국은 이 개념을 통해 자국의 평화추구적 이미지를 한층 더 대외적으로 강화시켰다. ‘조화세계’란 용어는 2005년 9월 후진타오 주석이 유

27) Arkady Moshes & Matti Nojonen eds(2011), p. 25.

엔창립 60주년 기념회의에서 처음으로 정식 제기한 외교개념이다. 후진타오 주석의 연설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조화세계’의 기본 특징은 ‘지속적인 평화와 공동번영(持久和平, 共同繁荣)’이며, 그 주요 내용은 몇 가지로 나뉘볼 수 있다. 우선 안보 차원에서는 다자주의를 견지하면서 공동안보를 실현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각국이 냉전적 사고를 버리고 ‘상호신뢰, 상호이익, 평등, 협력의 신안보관’을 수립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본다. 경제 차원에서는 상호이익에 기반한 협력을 추진하여 공동번영의 21세기를 달성하는 것이다. 문명차원에서 보면, 톨레랑스 포용정신을 발휘하여 ‘조화로운 세계(和谐世界)’를 건설하는 것으로 요약된다.²⁸⁾ 요컨대 후진타오 시기 중국 책임대국외교의 특징은 평화와 조화를 우선시하는 ‘이화위선(以和为先)’의 和平崛起, 和平发展, 和谐世界 혹은 ‘화자(和字)’ 외교노선, 즉 평화와 조화 외교노선으로 집약할 수 있다.

이처럼 ‘평화발전’과 ‘조화세계’라는 두 외교이념을 중국의 주변국 외교(특히 중·러 관계나 중국·중앙아시아 관계)에 적용해보면 평화, 합작(협력), 비대항, 세력범위 확대의 비추구로 그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²⁹⁾ 2006년 6월에 후진타오 주석은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의 연설에서 ‘지속적인 평화와 공동번영의 조화지역(持久和平、共同繁荣的和谐地区)’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최초로 SCO 지역을 ‘조화지역(和谐地区)’이란 개념을 사용해 적용하기도 했다. 이처럼 중국은 중앙아시아 지역에 처음으로 ‘상하이 정신(互信、互利、平等、协商、尊重多样文明、谋求共同

28) 胡锦涛, 努力建设持久和平, 共同繁荣的和谐世界- 在联合国成立60周年首脑会议上的讲话, 新华社, http://news.xinhuanet.com/world/2005-09/16/content_3496858.htm.

29) 赵华胜(2008), pp. 124~125.

发展)’을 구현하려 시도하였고, 이 지역에 또한 처음으로 제3국과 ‘공동 안보, 비동맹, 비대항, 비적대시(共同安全、不结盟、不对抗、不针对)’한다는 신형 안보관을 제기했다(赵华胜 2008). 이 밖에도 중국의 주변 국가 외교정책의 핵심사상은 이웃 국가와의 선린(与邻为善)、동반자 관계(以邻为伴)、화목한 관계(睦邻)、안정된 관계(安邻)、공동부유한 관계(富邻)를 추구하는 것으로 집약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관계(睦邻)、안보관계(安邻)、경제관계(富邻)는 대국책임외교의 심리상태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런 일련의 외교개념은 기존의 ‘원교근공(远交近攻)’과 구분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 평가할 수 있다. ‘원교근공’은 과거 이웃 국가와의 관계를 처리하는 개념으로, 주변국가들을 적수 혹은 위협으로 간주하고 외부국가와 연합하여 이웃 국가를 견제하는 전략구상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중국 주변 외교정책 사상은 이와 다르며, 국제사회에 새로운 규범적 기준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한편 중국의 외교정책은 최근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한층 대국 책임외교 노선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국제적 지위와 영향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중국 내 외교정책을 둘러싼 전략적 사고의 구도는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즉 전통주의적 지정학과 그룹(Traditional Geopolitics School), 발전도상국 견지론 그룹(Developing Country School), 신흥강대국 추진론 그룹(Rising Great Power School)이다.³⁰⁾ 우선 전통주의자 그룹은 전통적 지정학론에 기반하여 민족주의와 애국심을 동력으로 삼는 세력으로서 중국 주변 지역의

30) 중국의 대미전략 인식과 사고에 대한 분류(전통적 지정학론, 발전도상국 외교론, 신흥대국 외교론)와 복합성 문제는 Heungkyu Kim(2010), pp. 59~63을 참고할 것.

안정이 유지되기를 희망하며, 한미동맹이나 미일동맹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의 국방현대화를 강조한다. 이 세력은 중국 군부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둘째, 발전도상국 견지론은 중국 외교의 주류 입장을 반영하는바 대체로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안정적 대미관계 유지 및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체제 건설에 외교 역점을 두고 있다. 이 관점은 기본적으로 중국의 국제적 지위는 지역강대국 수준에 머물러야 하며 미국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글로벌 대국을 지향하지 않고, 온건하고 신중한 외교정책을 중시한다. 이 입장은 2010년 12월 6일 다이빙귀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중국 외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평화적 발전노선을 견지하자(堅持走和平發展道路)」라는 긴 글에서도 확인된다.³¹⁾ 요컨대 다이빙귀 국무위원은 중국이 30여 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대화의 많은 문제점(지역간 도농간 계층간 양극화, 산업구조의 불합리성 등)을 안고 있는 개발도상국가이기 때문에 서방과 패권경쟁을 추구하지 않으며 평화발전의 길로 매진할 것이라 밝혔다. 이런 관점은 덩샤오핑의 기본외교노선을 계승한 ‘도광양晦(韜光養晦: 빛을 감추고 힘을 기르며 기다린다)’적 관점인바, ‘개발도상국 외교론’을 반영한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최근 들어 부쩍 ‘핵심이익(core interest)’이니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과 같은 핵심적인 국가이익(주권, 안보, 발전)을 거론하며 공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핵심이익을 집약하면 첫째, 중국의 정치적 안정(공산당의 영도와 사회주의체제의 안정), 둘째, 주권안보, 영토통합, 국가통일, 셋째, 중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적 사회적 발전과 같은 것들이다. 이런 핵심이익을 침해받으면 결연히 대처하겠다는 입장도 동시에 천명하였다.³²⁾ 말하자면 ‘도

31) 戴秉國(2010).

광양회'적 입장을 취하면서도 동시에 국가의 핵심이익을 침해받으면 언제든지 응징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동시에 피력하였다. 최근 몇년 사이 센카쿠(다오위다오) 영토분쟁에서 보듯 미국과 일본을 겨냥한 공세적인 태도와 발언에서 일정 정도 중국 지도부의 인식변화가 감지된다. 특히 천안함, 연평도 사건 이후 한미 양국이 미국 항공모함을 이끌고 중국 근해에서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두고 중국은 극도의 경계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른바 이 사건 이후 강화된 한미일 공조는 중국 봉쇄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중국 측의 우려를 낳기도 했다. 이런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에 맞대응이라도 하듯이 중·러 양국은 2012년 4월 최초로 중국의 항공모함(바라크호)을 포함한 대규모 해군합동훈련을 서해상에서 전개함으로써 동아시아의 신냉전 패권쟁탈전 구도를 시험하였다. 이런 시도들은 '도광양회'와 같이 '전략적 모호성'을 띤 입장에서 크게 벗어난 적극적인 대응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중국이 국방현대화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분야인 '반접근/지역배제(Anti-Access/Area Denial: A2/AD)' 전략은 한미일 모두에 군사적 도전과 위협으로 인식되었다.³²⁾

2012년 3월 후진타오 주석의 핵심 외교책사인 베이징 대학교 국제관계학원 원장인 왕지스(王輯思)의 논문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일고 있음을 감지하게 된다. 왕지스는 「미중 간 전략적 불신에 대한 해명(Addressing U.S.-China Strategic Distrust)」이라는 논문에서 미국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당시 노출된 것처럼 이제 더 이상 놀라운 국가가 아니라고 미국

32) Jisi, Wang(2011), pp. 68~79.

33) Abraham M. Denmark and Zachary M. Hosford(2010); Patric M. Cronin, Daniel M. Kliman and Abraham M. Denmark(2010), pp. 20-23). 중국의 '반접근/지역배제' 전략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자료로는 Roger Cliff, Mark Burles, Michael S. Chase, Derek Eaton, Kevin L. Pollpeter(2007), 김재관(2010b) 참고.

을 평가절하하면서 이제 중국지도부는 2008년 이래로 글로벌 최고급 파워국가(a first class power in the world)로 부상한 중국의 국력에 맞게 더 이상 과거에 중국이 미국에 대해 취했던 ‘도광양회’ 정책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중국의 지도부는 미국의 슈퍼파워 지위는 심각하게 도전받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만큼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³⁴⁾ 이런 다소 모순된 지도부의 인식은 중국의 강대국화와 세력 전이의 경향에 따른 하나의 현상이다.

셋째, 신흥강대국 추진론 그룹은 중국의 강대국화를 선호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미국에 대한 태도에서 전통주의자들과 다소 유사하다. 하지만 이들은 미국에 대한 안정적 관계도 중요하지만 갈등 국면에서는 단호히 대처할 필요성도 있다고 역설한다.³⁵⁾ 바로 위에서 왕지스의 발언에 적시된 바와 같이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이 제고됨에 따라 이 입장은 크게 각광받고 있다. 중국은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아세안+3’를 주도하거나, 아시아 전역에 걸쳐 SCO를 확대 강화함으로써 역내 국가들로 하여금 미국의 패권적 영향권에서 차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다자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대체로 위 세 그룹은 혼재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중국이 글로벌 대국으로 점차 부상할 것이라는 세 번째 관점이 점차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중·러 협력이야말로 중국이 신흥강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유력한 전략적 보루이자 선택이다. 중국이 이러한 외교노선에 입각하여 명실상부한 강대국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와 협력요소들은 가능한 한

34) Kenneth Lieberthal and Wang Jisi(2012).

35) 김홍규, 신중호(2010), 『천안함 사태 이후 미·중 관계』.

극대화하되 갈등요인들은 최소화할 때 그 협력의 시너지 효과는 크게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

2. 중·러 관계의 협력요인과 갈등요인

가. 주요 협력요인

이미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대체로 탈냉전 초기에 중·러 양국의 협력을 촉진했던 요인은 크게 세가지로 집약된다. 즉 양국은 국제테러리즘, 이슬람근본주의, 그리고 민족분리주의세력을 척결해야 한다는 공동목적과 요인 때문에 그동안 협력이 이뤄져왔고, 이후 협력의 차원과 영역은 전면적으로 확대되었다. 이를 위해 협력 파트너 차원에서도 중·러 양자협력 뿐만 아니라 SCO 사례에서 보듯 다자협력레짐도 전방위적으로 확대 발전되었다. 그리고 협력범위 역시 양국 차원, 지역 차원을 넘어 글로벌차원으로 확대되었다. 그리하여 중·러 양국의 공고한 협력레짐은 미국의 패권주의와 일방주의를 일정 정도 억제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미국은 글로벌 어젠다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러의 협조와 협력은 필수 요건이 되었다. 본 장에서는 중·러의 협력요인과 갈등요인을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미 앞에서도 적시했다시피, 중·러의 협력을 촉진시켜온 요인들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가령 중·러 국경문제해결, 이른바 ‘3대 위협세력’ 혹은 ‘3대 악’(국제테러리즘, 이슬람근본주의, 민족분리주의세력)의 제거라는 공동목표의 추구, 경제협력, 군사협력, 반미 반패권주의를 향한 다극화 추구, 지역다자협력체제(SCO, RIC, BRICs, 6자회담 등)의

건설과 추진 등이었다. 이러한 여러 협력요인들 가운데 이미 해결된 요인들도 있어 최근 들어 단연 두드러진 협력촉진 요인이자 분야는 역시 경제협력과 군사안보 분야의 협력일 것이다. 협력의 촉진요인을 이 두 가지 문제에 우선 집중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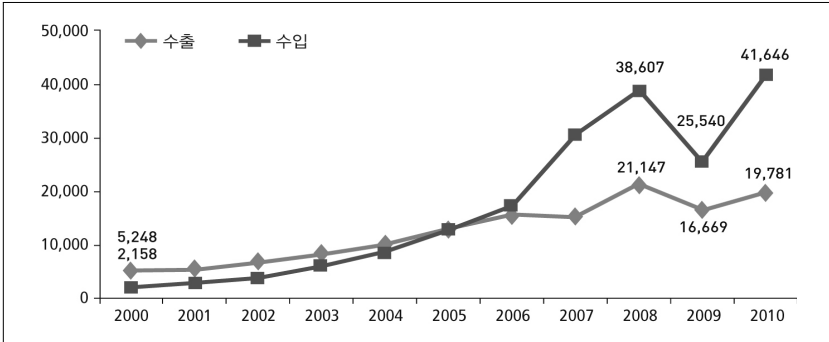
1) 경제협력

2012년 세 번째로 연이어 권력의 정상에 오른 푸틴 대통령이 취임한 후 미국 주도의 G8 정상회담에 참석을 거부하고 6월 5일부터 7일까지 SCO 정상회담이 열리는 중국을 먼저 방문한 것은 러시아 경제발전이 시급한 상황에서 중국을 가장 믿을 만한 전략적 파트너이자 조력자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양국은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향후 각종 국제 현안에서도 상호협력이 절실하다는 정세판단에서 이런 만남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중·러 협력 가운데 경제협력만큼 두드러진 분야도 없을 정도로 경험은 전례없는 급속한 성장세를 보여주었다. 특히 2000년 이후의 신장세가 두드러지는데, 2000년에 약 74억 달러였던 교역액은 2010년에 약 614억 달러, 2011년에는 전년 대비 35.9% 증가한 835억 달러를 기록했다. [그림 2-1]은 10년 사이 양국 교류의 증가폭을 보여준다.

이런 양국 경제교류의 폭발적 증가를 반영하듯, 2011년 중·러 우호협력 조약 체결 10주년이 되는 해에 두 정상은 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전면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으며, 양국의 교역액도 2015년까지 1,000억 달러, 2020년까지 2,000억 달러로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경제협력 분야도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 석탄, 전력, 신에너지 등의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중국 동북지역(특히 헤이룽장성)과 러시아 극동·시베리아 지구 협력

그림 2-1. 러시아의 대중국 무역추이(2000~10년)

(단위: 백만 달러)



자료: 이재영 외(2012).

계획'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양국의 주목할 만한 경제협력 내용과 특징 및 의미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중·러 양국은 경제협력에서 분야별, 지역별로 확대 및 다양화를 추진하였다. 대표적이고 구체적인 사례로 2009년 9월에 양국이 체결한 「2009~18년 러시아연방 극동 및 동시베리아 지역과 중화인민공화국 동북지역 간의 협력계획」을 꼽을 수 있다.³⁶⁾ 이 후속작업으로 중국 헤이룽장성과 러시아 동시베리아를 연계 발전시키는 100억 달러 규모의 경협을 추진하게 된 점이다.

둘째, 영토분쟁의 해결을 경협확대의 계기로 삼았다는 점이다. 2008년 양국의 장기간 미해결 문제였던 영토분쟁 지역인 헤이룽장성 헤이샤쯔섬을 ‘중·러 우호와 화해의 섬’으로 개발하고 무비자 통행지역으로 지정해 관광과 무역, 생태보호 기지로 가꿔나갈 계획을 밝힘으로써 상호신뢰와 경제협력을 증진시킨 점이다.³⁷⁾ 중국 정부는 헤이룽장성을 러시아 경제

36) 구체적인 내용은 이재영 외(2010) 참고.

협력 핵심지역으로 삼아 국가개발은행을 통해 헤이룽장성의 헤이사쯔 삼각주 자유무역지구, 러시아 접경지역 개방벨트, 러시아와 경협구역 건설 등의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예산을 전폭 지원하기로 하는 등 러시아와의 교역 확대에 힘쓰고 있다. 2011년 헤이룽장성에서의 양국 교역규모는 전년 대비 150% 증가한 약 19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 지역 전체 교역액의 23.96%를 차지했다고 한다.³⁸⁾ 헤이룽장성을 창구로 시베리아의 원유, 천연가스 등 자원 수입을 확대해 동북지역 자원난을 해소하고 러시아와 경제협력도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셋째, 양국은 경제협력 분야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2011년 양국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금융, 투자,³⁹⁾ 에너지, 인프라 건설, 관광 등을 비롯하여 컴퓨터 공학, 항공기 제조, 우주 탐사, 바이오, 나노, 친환경 산업에 이르기까지 협력의 분야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넷째, 교역규모와 영역에 비추어보았을 때, 중·러 경제협력이 에너지 의존형 교류협력에 지나치게 편중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0년 러시아의 대중국 수출에서 석유, 가스를 포함한 원자재 수출 비중은 60% 이상인 반면, 기계류 및 운송기기 수출은 약 1%에 불과했

37) 헤이사쯔섬은 중국 헤이룽 강과 러시아 우수리 강이 만나는 지역에 있으며 1929년 이래 줄곧 러시아가 점유해왔다. 중국은 1964년부터 러시아와 영토 반환협상을 벌여오다 2008년 10월 국경선을 재확정하며 섬의 절반을 돌려받았다. 현재 한 섬에 두 나라 영토가 공존하는 상태인 헤이사쯔 섬의 총면적은 약 300km²이며 이 가운데 중국 영토는 절반이 조금 넘는 174km²다. “中, 러시아와 동북지역 경제 협력 강화,” *CHIEF EXECUTIVE* 2011년 7월호(<http://chiefexecutive.kmac.co.kr/detail.asp?gcode=020107&seqno=3302>) 참고.

38) 이재영 외(2012), p. 6.

39) 2012년 4월 러시아 직접투자펀드(RDIF)와 중국투자회사(CIC)는 양국 투자펀드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2011년 러·중 투자액은 전년 대비 630% 증가한 38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2012년 양국의 상호투자액은 10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 관련 상세한 내용은 이재영(2012), pp. 7~9 참고.

다. 이런 불균형은 2011년에는 더욱 심화되어 원자재 수출비중은 무려 75%를 초과했다고 한다.⁴⁰⁾ 중·러 양국은 석유, 가스 외에도 러시아 극동 지역 전력을 중국 동북 지역으로 송전하는 문제도 협의하였다. 최근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썬샤뎬을 운영하는 중국의 차이나양쯔전력과 러시아의 알류미늄 재벌인 올레그 데리파스카가 소유한 유로십에네르코가 약 46억 달러를 들여 동부 시베리아 지역에 수력발전소 2개, 화력발전소 1개를 건설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 발전소들은 동부 시베리아 최대 도시인 이르쿠츠크의 북동부 지역에 건설해 시베리아는 물론 중국 북동부 및 수도 베이징 부근 지역까지 전기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섯째 러시아는 낙후한 극동지역 개발 및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러 협력을 꾀하는 한편 아태경제권에서 러시아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도 중·러협력에 전략적 의미를 부여하였다. 2012년 집권에 성공한 푸틴정부는 같은 해 5월에 ‘극동개발부’를 신설하여 시베리아 극동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여기서 중국의 협력을 가장 중요하게 간주하고 있다.

이처럼 향후 중·러 에너지 협력 확대는 여러 전략적 함의와 중요성을 띤다. 즉 G2 국가로 부상한 중국은 탈냉전기에 미국의 패권주의와 일방주의를 억제하기 위해 러시아와 경협을 확대하여 상호신뢰를 증진하여 명실상부한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하고 있다.

40) 이재영(2012), p. 6.

2) 군사안보협력

탈냉전기 중·러의 군사안보협력은 여러 차원에서 진행되어왔는데, 가령 러시아제 무기수입, 러시아 방산기술의 중국 이전, 합동군사훈련 등의 영역에서 상호협력이 두드러진다. 중·러 군사협력은 기실 중국의 국방현대화 사업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보인다.

군사안보문제와 관련하여 2000년대 중·러 양국의 협력은 대체로 이라크전, 중동평화, 이란 핵, 6자 회담 틀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MD) 반대, 체첸, 대만, 티베트의 분리 및 민주주의 확산 반대, SCO를 통한 다극화 추진 등으로 이어져 전반적으로 미국의 일방주의와 패권주의를 견제하려는 공동목적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양국에 또 하나 중요한 협력요인인 군사안보협력의 동인과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양국 군사협력의 동인은 역사적, 지정학적, 전략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으나, 탈냉전기 중·러 군사협력의 가장 중요한 동인은 우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의 봉쇄 및 압박 정책에 대한 공동대응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한다.⁴¹⁾ 러시아의 입장에서 볼 때, NATO의 동진 그리고 기존에 러시아의 영향권이었던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 영향력이 확대되자 러시아는 중국과 군사협력의 필요성을 절감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따라서 러시아는 SCO를 아예 군사동맹의 성격으로 확대하는 것에 큰 이해관계를 두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국은 SCO를 경제공동체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고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중·러 군사협력

41) 정은숙(2007) 참고.

의 필요성은 우선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일 동맹을 통한 미국의 대중국 봉쇄정책에 맞설 수 있는 유리한 전략적 선택이 바로 중·러 군사협력이기 때문이다. 2005년 이래 양국이 합동군사훈련을 단행해온 것은 이런 대미 견제정책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군사협력을 통한 경제적 상업적 상호이익의 확보이다. 러시아의 입장에서 볼 때 대중국 무기수출은 러시아에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고 있다. 세계 2위 무기수출국인 러시아는 무기수출액이 2011년에 120억 달러에서 2012년에는 140억~15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머지않아 세계 1위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중국은 러시아 무기판매의 최대 고객으로 러시아 무기수출의 10%를 상회한다.⁴²⁾ 최근 들어 중국은 ‘후발자의 이익’ 효과를 발휘해 러시아의 핵심 군사기술을 도입, 국산화하여 현재는 러시아 수준에 근접하거나 추월하여 일부 무기(FJ-17 전투기, 잠수함)를 해외에 역으로 수출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다.⁴³⁾

셋째, 양국 군사협력은 중국의 국방현대화 추진의 실질적인 전략적 기회, 자산, 그리고 담보로 작동하고 있다. 러시아가 첨단기술을 내재한 완성품 혹은 제조기술을 중국에 수출함으로써 중국은 국방현대화를 한층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었고, 미국과 기술 격차를 줄이는 데도 러시아의 선진기술의 도움을 받았다. 특히 최근 들어 중국이 국방현대화 사업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분야인 ‘반접근/지역배제(Anti-Access / Area Denial: A2/AD)’ 전략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러시아 선진기술은 결정적인 기여를

42) IICT 센터; 유철중(2011).

43) 장학만(2012).

하였다.

이상과 같은 협력의 동인은 구체적으로 중·러 군사안보협력을 가져왔는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국경지역의 안정화이다. 이를 위해 국경선 확정과 국경지대 군축을 단행하였다.

둘째, 군사적 신뢰조치 단행을 들 수 있다. 이미 앞에서 군사적 신뢰조치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언급했다.

셋째, 중·러 합동군사훈련의 정례화를 꼽을 수 있다. 군사안보협력 차원에서 양국은 2005년 이래 2007년, 2009년, 2010년, 2012년에 걸쳐 합동군사훈련을 정례화해서 전개해왔다. 특히 2005년 8월 양국은 40년 만에 처음으로 중·러 양국이 ‘평화의 사명(Peace mission)’이란 구호를 내걸고 육·해·공군 약 1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산둥반도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감행하여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우려를 낳기도 했다. 양국은 군사훈련의 목적이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이른바 ‘3대 위협세력’을 제압하기 위해 양국 군의 작전능력을 제고하고, 미래 불특정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군사훈련이라고 강변했지만, 기실 작전훈련에서 핵전력을 제외한 전략폭격기나 잠수함 등이 투입되어 순수한 반테러리즘 목적이 아님을 유추할 수 있었다. 즉 대만해협 및 동중국해 위기 시 공동대응 의도도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이는 미국 주도의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에 맞서기 위한 일종의 군사적 대응조치이다. 확대 해석하면 동북아 지역에서 신냉전 구도가 가시화되는 것이기도 하다.⁴⁴⁾ 이런 동북아 신냉전 구도의 가시화는 한·미·일 삼각군사협력의 강화추세에 맞

44) 김재관(2010a); 정은숙(2007) 참고.

선 중·러의 군사협력 확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2012년 4월 중·러 최초로 중국의 항공모함(바라크호)을 포함한 대규모 해군합동훈련이 서해 상에서 벌어짐으로써 아태 패권경쟁을 방불케 하고 있다. 중국은 서해뿐만 아니라 동중국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아울러 중일의 센카쿠(다위다오) 영토분쟁에서도 유리한 전략적 입지를 확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분출시켜왔다.

넷째, 러시아의 첨단 선진무기 도입과 제조기술의 국산화이다. 2000년 이래 두 자릿수의 국방비 증가율을 기록한 중국은 이미 세계 제2위 국방비를 지출하는 국가로서 발돋움했고, 바야흐로 군사대국으로 성장했다.⁴⁵⁾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방현대화를 추진하는 중국이 각별히 러시아의 도움을 얻어 역점을 두어왔던 사업으로는 예컨대 연안해군에서 원양해군으로 전환, 공군력 증강, C4ISR⁴⁶⁾ 능력증강, 전략무기 Triad(ICBM, SLBM 그리고 제4세대 장거리 전략폭격기) 증강 등으로 이어지며, 이른바 군사분야혁신(RMA) 작업을 광범위하게 추진하였다.⁴⁷⁾ 구체적으로 보면 중국은

45) 2000년 이래 중국의 국방비 증가율은 13.4%씩 증가하여 2012년 중국정부의 공식발표액은 1,063억 달러에 달했다. 각종 방위비 지출 분야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키고 있기 때문에 미 국방부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중국의 방위비 지출은 정부의 공식발표액보다 두세 배 정도 높게 산정할 수 있다고 보며, Military Balance를 매년 발간해온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도 중국의 실제 국방비는 공식발표보다 30~50% 많은 것으로 추산해왔다. 2011년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 역시 중국의 2011년 국방예산이 공식 발표액인 899억 달러를 크게 웃도는 1422억 달러에 달한다고 추정하기도 했고, 미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발표에 따르면, 중국이 2011년에 첨단무기 연구 & 개발(R&D)에만 258억 달러를 지출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중앙일보』(2012), 『중국 국방비 11년 새 4배로... 아시아 5개국의 40%』, (10월 24일), http://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0188749; 『1000억 달러 넘어선 중국 국방비』,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06539

46) 정보전과 전투관리(Battle Management)에 필수적인 지휘(command), 통제(control), 통신(communications), 컴퓨터(computers), 정보(intelligence), 감시(surveillance), 정찰(reconnaissance) 기능 등을 가리킴.

국방현대화에서 특히 미국의 MD 정책에 맞선 전략무기 개발과 대응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의 MD 정책은 현재의 핵 균형 체제를 깨뜨리는 조치이기 때문에 중국은 미국의 MD 정책에 맞서 제2차 보복공격능력을 제고하는 쪽으로 응수하고 있다.⁴⁸⁾ 그리고 중국의 부상을 현실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준이 중국 원양 해군력의 증강으로 미국 항공모함을 공격할 수 있는 Sunburn 대함크루즈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소브레메니(Sovremenny)급 ‘항저우’(杭州)호 구축함이라든가,⁴⁹⁾宋급·元급 잠수함 등 미국이 위협을 느끼는 신형무기들을 갖추기 시작했다.⁵⁰⁾ 이상의 군사분야혁신(RMA) 사업 가운데서도 러시아 기술을 도입하여 군사분야혁신을 이루는 데 가장 역점을 두었던 것은 이미 위에서도 언급했던 바로 ‘반접근/지역배제(Anti- Access/Area Denial: A2/AD)’ 전

47) David Shambaugh(2002), *Modernizing China's Military: Progress, Problem, and Prospect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Evan Medeiros, Roser Cliff, Keith Crane and James Mulvenon(2005), *A New Direction for China's Defense Industry*, Rand Corporation. (December)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2010),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Power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0*, U.S. Department of Defense.

48) David M. Finkelstein(2003), "National Missile Defense and China's Current Security Perceptions", in Alan D. Romberg & Michael McDevitt (ed.), *China and Missile Defense: Managing U.S.-PRC Strategic Relations*, The Henry L. Stimson Center Medeiros(2005), pp. 51-108; 김재관(2004), 『미국의 미사일방어정책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대응전략』, 『국가전략』, 제10권 1호 참고.

49) 구축함 ‘杭州’ 호는 러시아 주력 구축함인 소브레멘니급으로 만재 배수량 7900톤, 길이 156m, 주요 무장 Sunburn 대함크루즈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다. Sunburn 미사일은 수면 20m 위로 마하 2~3의 고속으로 저공비행해 150~250km 떨어진 적의 항공모함을 격침시킬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미국이 크게 두려워하는 무기이다.

50) 송(宋)급과 위안(元)급 잠수함은 소리를 흡수할 수 있는 타일로 코팅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핵잠수함을 포함한 정찰망도 탐지할 수 없을 정도로 정숙하며 엔진도 초정속 7날 스크류를 장착하고 있다. 게다가 수중에서 30일간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고성능의 잠수함이라 미국이 우려하는 무기이다.

략의 추진이었다. 러시아의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달성한 구체적인 전력증강 내용을 보면 중국은 CSS-6, CSS-7 미사일을 대만해협에 집중배치했고, 약 100기 이상의 미사일을 이곳에 집중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많은 수의 고도정밀 크루즈미사일을 구입해왔는데, 국내에서 생산된 지상발사 DH-10 크루즈미사일(LACM), 러시아제 8,000톤급 ‘소브레멘니급’(최신급)I, II 구축함(杭州 1999년, 福州 2001년, 泰州 2005년 취역)에 장착할 수 있는 러시아제 SS-N-22/SUNBURN 함대함 미사일(ASCM), SS-N-27B/ Sizzler 초음속 ASCM, 국내에서 건조되어 장거리 ASCM과 SAM 시스템을 장착할 수 있는 LUYANG(旅洋) I급인 广州, 武汉호와 / 旅洋 II급인 兰州, 海口호 구축함(DDGs) 등이 있는데, 여기서 뤼양 II급은 스텔스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미국을 위협할 만한 무기다. ‘반접근’ 전략용의 일환으로 쓰일 수 있는 대함사일(ASBM)은 대체로 CSS-5 중거리 미사일(MRBM)을 변용해 만든 것으로 지금 개발 중이다.⁵¹⁾ 이상과 같은 일련의 무기체계는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A2/AD 전략의 적용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나. 주요 갈등요인

1) 미국의 아시아 재개입과 G2체제의 형성

구조현실주의(structural realism)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국제체제 내 중·러 양국은 미국의 헤게모니를 견제하기 위해 세력균형과 다극화를 향해 상호 협력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동인이 있다. 그러나 현재 국제관

51) 김재관(2010), pp. 37~38 참고.

계에 대한 전망은 현실주의자들이 예측하듯이 냉전 시기와 같이 확실한 반미 정치군사적 동맹을 결성하지 못한 상태로 유지될 것이라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세력균형을 나타내는 두 가지 지표, 즉 글로벌 세력균형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방위비 지출의 실질적인 증가와 새로운 동맹체제의 건설을 거론할 수 있다. 여기서 전자인 방위비의 실질적 증가는 앞에서 언급했던 중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위협적인 수준임은 사실이다. 하지만 당장 양질적 차원과 수준에서 미국을 직접 위협하기에 아직은 미흡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평가이다. 게다가 새로운 동맹체제의 수립은 개혁개방 이래 중국이 일관되게 비동맹 외교를 견지해왔기 때문에 중·러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따라 군사협력을 확대해왔다 하더라도 과연 이것이 동맹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론의 여지가 남아 있다. 게다가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주요 강대국인 인도가 서로 양자 혹은 삼자동맹을 결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미 세력균형을 이루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실질적인 세력균형체제의 등장은 곧 미국과 대치 혹은 전면적인 갈등을 전제할 수밖에 없는데, 정작 현재 중국을 비롯하여 러시아, 인도는 미국과 교류를 통한 국익 확보라는 차원에서 미국과 대립을 원치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즉 이 주요 3개국은 세력균형보다 이익균형에 더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다. 중국과 러시아 양국 모두 미국 주도의 단극질서와 패권주의를 견제하기 위한 다극화 노선을 지지할지라도 미국을 적대국가로 상정하지 않으며 ‘전략적 실용주의’ 관점에서 대미외교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 모두 자국의 현대화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미국과 협력은 필수이기 때문에 양국 모두 상당한 정도로 대미 편승효과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중·러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상호이익을 공유 할지라도 구조현실주의자들이 전망하듯이 세력균형에만 매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⁵²⁾ 이런 맥락에서 현재 미국과 중국이 명실상부한 G-2체제의 일원이자 ‘책임 있는 이익상관자’로서 ‘전략 및 경제대화(S & ED)’를 진행하는 것은 중국의 강대국 부상에 따라 변한 국제적 역학관계와 이익균형을 반영한다. 이러한 전략적 실용주의에 기반한 G-2체제의 부상과 그 영향력 확대는 러시아로 하여금 자국을 무시 혹은 배제(Passing Russia) 할지도 모르며, 중국이 상대적으로 중·러 관계 보다 미·중 관계를 더욱 중시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러시아의 우려를 반영하듯 2012년 6월에 개최된 SCO 정상회담에서 러시아는 줄곧 SCO의 위상과 방향설정을 둘러싸고 군사동맹체 성격을 강조한 반면 중국은 경제공동체 성격에 비중을 두었다. 이러한 중·러의 ‘동상이몽’ 현상은 러시아 입장에서든 마찬가지이다. 예컨대 1990년대 전반기에 러시아 대외정책의 중심노선을 둘러싸고 친서방 노선의 코지레프와 친중 노선의 프리마코프가 벌인 노선투쟁에서 보듯이 미국요인이야말로 중러관계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핵심 갈등요소이다. 따라서 언제든지 자국실리에 따라 상대방을 서로 배제할 수 있는 이른바 ‘중국 때리기(China-bashing)’나 ‘러시아 때리기(Russia-bashing)’는 출현할 수 있다. 이는 양국이 동맹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모두 외교적 딜레마에 처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러한 중·러 관계의 동상이몽을 이용하여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대중국 ‘분리-지배(divide and rule)’ 전략을 펼치고 있다. 미국은 중국 주도의 중·러 관계에 과열구를 내기 위해 2011년에 대러시아 정책을 조정하였다. 즉 미국

52) Brian Carlson(2009), p. 170.

은 러시아를 동아시아에서 ‘잠재적인 동반자’ 혹은 ‘아시아 동반자’로 보기 시작했다.⁵³⁾ 이처럼 미국 요인은 향후 중러관계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이다.

2) 중국의 부상과 중국위협론

19세기 러시아 무정부주의자 바쿠닌(1814~76)이 황화론(黃禍論: Theory of the Yellow Peril)으로 중국위협론을 처음 제기한 것처럼, 중·러 관계는 역사적, 지정학적 요인에 따라 이미 오래전부터 갈등과 불신을 보여왔다.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성공함으로써 강대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중러관계는 전례없을 정도로 협력이 증가되었지만 동시에 갈등도 드러나고 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협력과 갈등이 공존하는 중러관계는 탈냉전기에 접어들면서 갈등보다 협력이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갈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을 러시아 정부입장에서 볼 때 이미 앞의 경제협력 부분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러시아에 많은 경제적 혜택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위협론보다는 ‘중국기회론’의 입장에서 환영하는 태도가 지배적이다. 이런 태도를 반영하듯 푸틴은 “러시아는 번영하고 안정적인 중국이 필요하고, 중국도 강하고 성공적인 러시아를 필요로 한다”라고 밝힘으로써 대중국

53) Stephen Blank, “Russo-Chinese relations at a crossroads: An American view,” in Arkady Moshes & Matti Nojonen(eds.), *Russia-China relations: Current state, alternative futures, and implications for the West*, FIIA REPORT 30, 2011, pp. 89-90; Thomas Graham, Michael G. Mullen, *The National Militar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Redefining America's Military Leadership*, Washington, D.C., 2011, p. 13; “New US National Military Strategy: The United States Sees Russia As an Asian Partner,” RIA Novosti, February 10, 2011.

정책에서 실용주의 노선을 피력했다.⁵⁴⁾ 중국위협론을 불식시키기라도 하듯이 중·러 협력관계를 강조하는 이런 푸틴의 공식적인 발언 이면에 다른 한편으로 중국의 전방위적인 지나친 영향력 확대, 특히 러시아의 앞마당이기도 한 전통적 영향력 권역인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중국의 진출과 영향력 증대는 러시아로 하여금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이런 우려에 대한 대응조치로 취임 전인 2012년 초부터 벨라루스·카자흐스탄과 함께 삼국 관세동맹(단일 경제 공동체, CES)을 출범시켰다. 이는 옛 소련권을 아우르는 거대한 경제공동체인 ‘유라시아 연합(EAU)’을 건설하겠다는 그랜드 디자인을 그리는 것이다. 푸틴의 이러한 원대한 꿈은 결국 중국의 부상에 따른 영향력 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다.

중국위협론은 비단 경제위협론에 국한되지 않는다. 최근 중국이 국방현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국방력을 증강하자 주변 국가들 사이에서 군사위협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인도와 베트남 등 전통적인 우호국가들에 대량의 첨단무기를 판매함으로써 경제이득도 챙기고 중국 견제도 하는 ‘일거양득’의 방식 혹은 ‘이이제이’적 방식으로 중국의 국방력 증강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⁵⁵⁾

54) Moscow News(2012), “Russia and the changing world,” (2월 27일). 재인용: 이재영 외(2012), p. 3.

55) 최근 러시아의 세계무기거래분석센터는 10월 25일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 동안 인도와 베트남에 각각 143억 달러와 24억 달러의 무기를 수출하기로 했다고 밝힘. 『중앙일보』(2012), 『무기 팔고 중국 견제……러시아 작전 관촬네.』 (10월 26일)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9703778&ctg=1304 (검색일: 2012년 11월 30일). 또한 2012년 12월 24일에 푸틴과 만모한 싱 총리는 양국 정상회담에서 29억 달러 규모의 무기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중국 측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인도는 향후 10년간 1,000억 달러 규모로 무기를 구매할

그러나 이런 일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볼 때, SCO의 큰 틀에서 중·러의 군사안보협력이 이뤄지고 있다. 최근 중·러군사협력이 더욱 증시되는 배경은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회귀외교(Pivot to Asia)’의 등장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외교정책은 특히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견제 전략의 일환으로 제안되었다는 평가이다. 이런 미국의 아시아 중시외교는 미국이 결국 중국을 봉쇄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라는 중국 측의 우려를 촉발했으며,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을 부추긴다는 지역적 우려를 고조시켰다는 분석도 나왔다.⁵⁶⁾ 이는 또한 동아시아의 안보 딜레마를 촉발하는 조치이기도 하다. 기본적으로 미국이 미일동맹과 NATO를 기본축으로 하여 아태지역과 중동, 동구, 그리고 중앙아시아 지역에 패권을 추구하는 한 중·러의 군사협력은 필수이며 러시아도 당분간은 중국의 국방현대화 사업을 지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3) SCO와 중앙아시아 역내 주도권 다툼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최근 미국의 아시아 중시정책이 본격화하면서 중·러 협력은 한층 더 고조되는 분위기이다. 이를 반영하듯 2012년 6월 초 베이징에서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번에 개최된 SCO 회의는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맞설 수 있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다.

우선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기구의 확대이다. 기존의 여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의 『환구시보(环球时报)』는 인도의 무기 구매에 대해 중국 견제용 의미가 크다는 경계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경향신문』(2012), 「중, 러시아 인도 무기거래 계약에 촉각」, (2월 26일).

56) Bonnie S. Glaser(2012), pp. 22-24.

섯 개 정식 회원국에다 인도·파키스탄·이란·몽골 등 기존 옵서버(observer) 국가에 아프가니스탄이 새로 합류했고, 벨라루스와 스리랑카에 이어 터키가 대화 파트너(Dialogue Partners)로 영입되었다. 회원국의 확대를 둘러싸고 뉴욕 학술원 회원인 겐나디 추프린(Gennady Chufirin) 박사는 “SCO는 아프가니스탄을 옵서버로 받아들이고, 이슬람 세계의 강국이자 NATO 회원국인 터키를 대화 파트너로 수용함으로써 한층 더 권위 있는 지역 공동체이자 미래의 국제기구가 되었다”라고 적극적으로 평가했다.⁵⁷⁾

이 회의에서 원래 SCO 설립 취지인 지역안보를 위한 ‘3대 위협세력’ 즉 테러리즘·극단주의·분리주의 척결에 적극 대응하고, 회원국의 평화와 안전 및 안정이 위협받을 경우 공동 대처하기로 합의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SCO는 역내 에너지 안전 확보, 운송 인프라 개발, 국제 운송통로 확보 등 SCO 경제 프로젝트를 실현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초기의 ‘3대 위협세력의 제거’뿐만 아니라 나아가 NATO의 동진 그리고 미국의 중앙아시아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려는 SCO의 위상확대는 전반적으로 다극화 세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SCO 회원국 내부, 그리고 중앙아시아, 중동, 서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중·러 양국의 주도권 다툼과 내부모순은 향후 중요한 갈등 요인으로 부상할지도 모른다.⁵⁸⁾

기실 SCO 내부 관계에 대해서는 중·러 쌍방이 서로 다른 전략을 가

57) 『시사 IN』(2012).

58) 중앙아시아 지역 내 중러관계의 협력과 갈등 그리고 한계에 대해서는 Brian Carlson pp. 172-176 참고.

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컷(Martha Brill Olcott)에 따르면, 중국이 SCO 회원국 간에 국가 대 국가 차원에서 군사협력을 확대하는 쪽으로 전략을 설정해왔다면, 오히려 러시아는 독립국가연합(CIS)를 강화하는 쪽으로 그리고 SCO 내부에 하나의 블록으로서 CIS 회원국들이 활동하기를 더 선호한다고 보았다.⁵⁹⁾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최근 들어 중국은 군사협력도 중요하지만 중국이 압도적 우위를 점하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SCO 국가들과 경제협력과 지원을 통해 자신의 영향력을 증대하려는 전략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러시아와 비교했을 때 중국의 경제력 우위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러시아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는 유력한 자원이다.

한편 SCO 내부 주도권을 둘러싸고 상호 견제하려는 움직임도 갈등요인이다. 이미 2005년 7월 SCO 정상회담에서도 나타났는데, 당시 러시아는 인도를 옵서버 국가로 초대하자는 제안을 했을 때, 중국은 즉각 파키스탄을 옵서버 국가로 참여시키자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것은 이 기구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러시아의 바람을 적시하는 것이었고, 이에 중국은 러시아의 움직임에 대해 파키스탄 카드로 경계하는 대응조치를 강구했던 것이다.⁶⁰⁾ 중·러의 이런 상호견제와 불협화음은 이번 2012년 SCO 총회에서도 노출되었다. 정식회원국 수용에서 이견이 노출되었는데, 인도·파키스탄·이란이 정식회원국 신청을 했지만, 인도 가입은 중국이 반대했고 파키스탄은 러시아가 반대했다. 옵서버 국가와 대화 파트너 국가들이 늘었다 할지라도 이번 회의에서 상호 전략적 이해관계의 차이로 정식회원국을 추가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향후 SCO의 발전 전망을 불투

59) Martha Brill Olcott(2005), p. 198; Carlson(2009), p. 175.

60) Brian Carlson(2009), p. 175.

명하게 한다. 그리고 양국은 SCO의 향후 발전방향을 설정할 때부터 이견을 보였다. 모스크바는 군사동맹체 성격을 강조한 반면 베이징은 경제공동체 성격에 비중을 두었다고 한다.⁶¹⁾ 이처럼 위에서 추프린과 같은 학자들이 지역공동체로서 SCO 발전에 대해 상당히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지만, 일부 유관 전문가는 SCO 내부의 입장 차이 때문에 정식회원국 확대를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를 근거로 오히려 SCO가 동방의 NATO로 발전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라는 부정적 평가와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⁶²⁾

또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중·러의 주도권 경쟁은 자국의 주권을 수호하려는 역내 당사국인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의해서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측면도 존재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카자흐스탄의 이른바 ‘다방향 외교정책(multi-vectored foreign policy)’을 들 수 있다. 이런 정책에 따라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전략적 실용주의적 맥락에서 중·러뿐만 아니라 미국요인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

2014년 미국과 NATO가 아프가니스탄과 중앙아시아에서 철수하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로 하여금 중앙아시아는 물론이고 남아시아 및 서남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이 지역의 영향력 확대를 둘러싸고 양국의 갈등이 초래될 수 있는 조짐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요인은 양국의 협력을 동시에 촉진하는 변수이므로 결국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협력과 경쟁이 공존하는 측면이 있다. 양국 관계는 전략적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갈등요인

61) 『시사 IN』(2012).

62) Richard Weitz(2012).

보다 협력요인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구동존이’의 접근방식으로 가능한 갈등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확대시키는 쪽으로 나아가 갈 것으로 전망된다.

3. 중·러 관계가 삼각체제에 미치는 영향

가. 전략적 삼각관계로서 RIC 형성의 전략적 함의

과거 냉전시기에 갈등과 충돌로 이어졌던 중·러·인 삼국이 탈냉전기에 접어들면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1996년 삼국협력회의가 개최된 이래 2012년에는 제11차 외무장관 회담이 개최되기도 했다. 1993년에 열린 대통령, 그리고 1996년 프리마코프 총리가 이 삼자협력 구상을 주창한 이래, RIC은 이미 11차례의 삼국회의를 개최해왔고, 2012년 4월에도 모스크바에서 제11차 삼국외무장관회담을 열었다. 협력과 동반자 관계를 중시하는 탈냉전 시대에 RIC은 어떤 협력모델을 만들어 갈 것인가? 과연 이 RIC이란 삼자협력은 현재의 지역정치에 ‘수사적인 유대(rhetorical bonding)’에 불과한가 아니면 ‘전략적 실재(strategic reality)’를 가진 다자협력체인가?⁶³⁾ 그리고 푸틴이 얘기했던 실질적인 ‘전략적 삼각관계(Strategic Triangle)’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⁶⁴⁾ 이 전략적 삼각관계의 출현은 장차 세력전이(power shift)를 대표하는 레짐의 형성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이 삼자협력에서 촉진요인과 장애요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63) Jagannath P. Panda(2012).

64) Nivedita Das Kundu(2004), p. 10.

무엇보다 중·러 협력은 과연 삼자협력에 어떤 지위를 갖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일련의 물음은 글로벌 질서의 변화 속에서 이 삼각관계의 등장이 갖는 전략적 의미의 중요성을 나타낸다.

주지하다시피 중·러·인 3개국은 ‘3대 악(테러리즘, 분열주의, 극단주의)’에 대한 공동 대처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탈냉전시대, 특히 21세기 세계질서의 다극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의 전략적 이해와 촉진요인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RIC 삼국은 국제관계에서 미국의 패권주의와 일방주의(unilateralism)를 반대하면서 이를 견제하기 위한 삼자협력(trilateral cooperation)을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었다. 이 삼국은 공통적으로 미국 주도의 단극질서는 국제관계의 불안정을 확대시킬 것이기 때문에 작금에 세력균형이 필요하다고 직시하고 그 대응전략의 일환으로 RIC 체제의 구축을 중시하였다. RIC의 주요 어젠다는 크게 보면 일방주의를 반대하고, 다원주의적인 민주적 국제질서의 증진에 있다. 특히 이번 2012년 RIC 11차 외무장관회의에서는 주요 논점이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의 부상에 반대하는 서방 측의 압박, 그리고 미국의 아시아 회귀전략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주요 쟁점이었다. RIC 회담에서는 민감한 글로벌 이슈인 이란, 테러리즘, 그리고 북한 문제 등이 논의되었다고 한다. 향후 이 삼국협력은 유엔, G-20, BRICs, SCO, 그리고 동아시아정상회담(EAS)의 틀 속에서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 삼국은 국제적인 위기를 해소하는 방식도 유엔을 우선으로 삼으면서, 주권국가들의 내부분쟁에 불개입주의(non-intervention)의 원칙을 지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반적으로 볼 때, RIC 형성, 즉 전략적 삼각축의 부상이 갖는 전략적

중요성과 함의는 우선 다극화와 다자주의 협력레짐을 통한 미국 중심의 단극질서를 해체하려는 집단적 노력이라는 점에서 향후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심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다. 다극적 세계 체제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리고 미국과 같은 아시아 역외 국가의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중·러·인 삼각축의 수립과 공조는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⁶⁵⁾

다음으로 중요한 전략적 함의는 지정학적으로나 지경학적으로 삼국이자국의 경제발전은 물론 세계평화와 공동번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이다. 삼국은 비동맹과 비적대노선을 견지하기에 지역 평화는 물론이고 세계 평화에도 일조할 수 있는 중요한 파트너이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는 대단히 크다. 협력 분야에서 에너지, 기술과학, 원료, 문화, 공중보건, 농업, 기후변화, '3대 악' 척결 등 다양하지만 특히 에너지 협력은 삼국협력의 가장 주요한 분야이다. 이러한 협력 요소들은 삼국협력을 한층 확대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다.

셋째로 RIC은 군사중심의 협력체가 아니지만, 오히려 세력중심의 정치적 전망을 지닌 협력체로서 남남협력을 형성하여 글로벌 정치에서 영향

65) Nivedita Das Kundu(2012).

<http://thesantosrepublic.com/2012/04/russia-india-china-ric-trilateral-the-balance-of-power-changing-in-favor-of-world-peace/> ; Nivedita Das Kundu, "RIC: trilateral set to scale new heights," (April 24, 2012)

http://indrus.in/articles/2012/04/24/ric_trilateral_set_to_scale_new_heights_15568.html; Jagannath P. Panda, "The import of Russia-India-China: still a valid entity?," (April 16, 2012)

http://indrus.in/articles/2012/04/16/the_import_of_russia-india-china_still_a_valid_entity_15484.html.

력을 행사하고자 한다. 특히 아시아 권력정치에서 RIC의 위상과 역할은 대단히 중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RIC과 SCO의 결합은 아시아 지역의 역학구도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전략적 삼각협력은 미국의 아태지역에 대한 지배와 영향력 행사에 상당한 압박을 가할 것이므로 RIC과 미국의 갈등은 불가피하다고 보인다.

그러나 RIC의 지속성과 안정성 여부는 삼국 사이의 정치적 야망과 전략적 모순들 때문에 RIC이 하나의 형용모순(oxymoron)에 그칠지도 모른다는 소극적 평가도 있다.⁶⁶⁾ 그리고 무엇보다 특히 미국 요인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변화 가능성도 없지 않다.

나. 삼각체제 형성과 미국요인

미국이 아태지역에서 자신의 힘을 유지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나 수단은 아시아의 조화외교에 있지 않고 오히려 아시아 주요 세력국가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특히 러시아, 인도, 중국과 같은 주요 국가들과 관계설정 및 전략적 삼각관계에 대한 과열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예컨대 미국은 중국, 러시아, 인도 삼국과 각각 미·중, 미·러, 미·인도 양자관계의 틀을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어서 RIC 체제수립과 그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있다.

미국은 무엇보다 중국의 부상에 따른 세력전이를 억제하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아태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유지와 영향력 지속을 위해 우선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바로 중·러 관계와 중·인 관계에 과열구를 내는

66) Jagannath P. Panda(2012).

것이라고 보는 것 같다. 2011년 미국이 외교의 중심축을 아시아로 이동(Pivot to Asia)하고 나선 것은 바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정치의 미래는 아시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는 미국은 중국의 국방현대화와 군사력 증강에 맞서기 위해 해군력의 60%를 아태지역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했으며,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 및 우방 국가들과 관계를 한층 더 강화 증진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⁶⁷⁾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2011년에 대러시아 정책을 조정하였다. 미국은 러시아를 동아시아에서 ‘잠재적인 동반자’ 혹은 ‘아시아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다.⁶⁸⁾

뿐만 아니라 미국은 중·인 관계에 파열구를 내기 위해 미·인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왔다. 미국은 무엇보다 인도를 아시아의 NATO로 변화시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에 여러 특혜를 베풀어왔을 뿐만 아니라 2005년에는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2005년 6월에 인도와 ‘인·미 국방협정(The Indo-US Defence Framework Agreement)’을 맺고 바로 7월에 부시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하여 ‘인·미 정상 공동협정(the Joint Statement of President Bush and Prime Minister Manmohan Singh)’과 ‘인도·미국 핵협정(Indo-US Nuclear Deal)’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를 맺게 되는데, 결국 미국은 인도에 구애전략을 펼침으로써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고자 했던 것이다. 미국이 북한과 이란의 핵개발을 강력하게 저지하면서도 인도에는 유독 이런 예외적인 특혜

67) HILLARY CLINTON(2011).

68) Stephen Blank(2011), pp. 89-90.

를 베풀었던 그 이면에는 인도를 아시아의 NATO로 격상시키려는 전략적 의도가 깊이 관여했다고 평가된다. 인도는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을 보장받는 대가로 자국의 민간, 군사용 핵 시설과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분리하고 민간 핵시설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 아래에 두기로 했다. 그리하여 인도는 명실상부한 핵보유 국가로 등극할 수 있었다. 당시 인도에 대한 미국의 우대조치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과학기술협정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Agreement)’을 체결하고 ‘미·인 최첨단 기술협력그룹(US India High Technology Cooperation Group)’, 국방정책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해군안보협력체(US India Maritime Security Cooperation Framework)’를 만들기도 했다. 급기야 2005년 11월에 양국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합동군사훈련을 일본, 호주, 싱가포르도 참가시킨 가운데 뱅골 만에서 실시하였다. 각종 첨단무기들을 동원한 이 훈련의 목적은 말라카 해협(Malacca Straits)을 통치하는 것이었다. 미국은 인도를 아시아의 나토(NATO)군으로 키우기 위해 2006년 9월 미군과 NATO군이 알래스카에서 벌이는 대규모 군사훈련에 인도를 참가시켰다. 이런 일련의 훈련들이 중국에 엄청난 위협으로 작용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인도 만만한 싱 정부가 추진하는 외교정책의 특징이 이른바 ‘다방향 외교’와 ‘전략적 실용주의’를 견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미 일변도 외교를 펼치지 않았다. 한편으로 미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인도는 2005년에 중국과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어 균형외교를 펼쳤던 것이다. 중·인 관계가 전략적 관계에 접어들면서 인도와 중국은 2007년에 처음으로 중국에서 군사훈련을 했고

2008년에도 합동군사훈련을 했지만 이후 미국의 반대로 인도가 훈련에 참가하지 않아 중단되었다가 2012년 9월에 양국 국방장관이 4년 만에 다시 합동군사훈련을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이러한 인도의 친중적 정책 전환을 두고 인도가 미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폐기하고 독자적인 길을 모색하고 있다는 이른 진단을 하는 사람도 일부 있다.⁶⁹⁾ 하지만 제2기 오바마 정부는 인도와 관계를 한층 더 확대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였다.⁷⁰⁾ 이번 중·인 군사훈련 재개의 의미를 확대 해석해서 미·인도의 관계단절이라고 진단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 아닌가 싶다.

중국 역시 ‘G-2’ 시대에 미·중 양국의 ‘건설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및 ‘책임 있는 이익상관자’로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대미 갈등관리의 외교를 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RIC 체제의 대미 영향력 행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아시아 지역 내 미국과 RIC 간의 ‘그레이트 게임(Great Game)’이 시현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RIC이란 전략적 삼각관계의 내실화와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 여부는 미국의 RIC 삼국에 대한 견제외교를 삼국이 어떻게 극복하고 연대를 확대해 나갈 것인가 혹은 ‘전략적 실용주의’를 견지하면서도 삼국협력을 극대화 나갈 수 있는냐에 달려있다고 보인다.

다. 중·러 관계가 삼각체제 형성에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

RIC이란 전략적 삼각 축의 형성과 지속적인 발전에서 결정적인 영향력과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국가는 역시 중·러 양국이다. 이미 앞에서

69) 이병진(2012).

70) Sanjeev Kumar Shrivastav(2012).

도 보았다시피 중·러 양국은 RIC뿐만 아니라 SCO의 발전에도 가장 중요한 행위자라는 점에서 양국 협력이야말로 결정적인 변수이다. 중·러 관계, 중·인 관계, 러·인 관계가 비록 동맹관계는 아닐지라도 모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면서 양자 및 삼자 관계를 구성하고 있다. 삼국 모두 일정 정도 전략적 실용주의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이익을 둘러싸고 갈등과 협력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그러나 삼국이 모두 개발도상국으로서 경제발전에 우선 매진해야 하는 선결요구가 존재한다는 점, 이른바 ‘3대 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점, 남·남협력을 통해 불평등한 남·북 관계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 미국의 일방주의와 패권주의에 맞서 다극화 외교를 추진해야 한다는 점, 평화롭고 평등하며 민주적인 국제사회를 수립해야 한다는 공통의 이해관계와 촉진요인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RIC 체제의 형성은 국제질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주요 변수라 할 것이다.

특히 중·러 협력은 RIC, SCO, BRICs 체제를 안정적으로 꾸려나가는 데 핵심 변수이다. 러시아의 비교우위(에너지, 자원, 첨단 군사력 등)와 중국의 비교우위(세계의 공장, 경제대국, 세계최대소비시장)가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함으로써 윈윈의 전략적 삼각체제(RIC)를 촉진한다면 이는 국제사회의 심대한 변화를 몰고올 것이 자명하다. 양국이 RIC 체제의 발전을 위해 어떻게 갈등을 최소화하고 협력을 극대화하느냐가 관건이다.

한편 RIC 체제에서 인도는 아직 SCO 정식회원국이 아닌데다 미국의 분리배전전략과 개입전략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파키스탄을 지지하는 중국의 전략적 모호성이 있기에, 인도가 ‘전략적 실용주의’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균형외교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최근

인도정부가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중단되었던 중·인 합동군사훈련을 2012년에 재개하기로 합의한 것을 보면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감지하게 된다. 역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점차 약화되는 조짐도 없지 않다.

그러나 구조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RIC 체제는 미국에 맞선 세력균형체제를 의미하기에 미국의 견제는 불가피하다고 보인다. 특히 미국의 ‘Pivot to Asia’ 전략은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하여 전개된다는 점에서 우려할 만한 사안이 아닐 수 없고, 아시아 지역의 패권경쟁과 합종연횡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직 RIC 체제는 맹아적인 전략적 삼각체제요, 불안정한 다자협력체제라는 한계가 있다. 문제는 삼국이 어떻게 ‘구동존이’적 태도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협력을 극대화하면서 새로운 레짐을 형성해나갈 것인가가 중요하다.

4. 한국에 주는 시사점 및 소결

이상 본문에서 냉전기, 탈냉전기 중·러 관계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간략히 검토한 다음 21세기 중·러 협력의 협력요인과 갈등요인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그리고 이러한 중·러 협력 증대가 이미 상수화된 미국요인(American factor)과 개입의 압력 속에서 어떻게 중·러·인 전략적 삼각협력체제를 과연 안정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을 것인지를 시론적으로 검토해보았다.

우선 중·러 협력의 촉진요인들은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왔다. 가령 중·러 국경분쟁, 이른바 ‘3대 악(국제테러리즘, 이슬람근본주의, 민족분

리주의세력)의 제거, 전면적인 경제협력, 군사협력과 교류증진, 반미·반패권주의를 향한 다극화 추구, 지역다자협력체제(SCO, RIC, BRICs, 6자 회담 등)의 건설과 추진 등이었다. 이러한 여러 협력요인들 가운데 미국이 가장 우려할 만한 요소는 역시 RIC이나 SCO를 들 수 있다. 특히 RIC이라는 전략적 삼각 축의 구축은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유지를 위협할 수 있는 가장 우려할 만한 사안이다. 따라서 미국의 개입과 견제전략은 불가피하다고 보인다.

다음으로 중·러 간의 갈등요인을 집약해보면 첫째, 미국의 개입요인과 G2 체제의 형성, 둘째, 중국의 부상과 중국위협론, 셋째, SCO와 중앙아시아 역내 주도권 다툼 등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중·러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협력과 경쟁이 공존하는 측면이 있다. 양국 관계는 전략적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갈등요인보다 협력요인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구동존이’의 접근방식으로 가능한 갈등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중·러·인 전략적 삼각협력체 수립에서 중·러 협력이 갖는 중요성과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중·러가 주도하는 다자협력체제인 RIC, SCO, BRICs 체제는 향후 국제질서의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는 주요한 틀이다. 여기서 중국과 러시아는 자국이 가진 비교우위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때 불안정한 전략적 삼각체제(RIC)의 내실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중·러 양국이 미국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RIC 체제의 발전을 위해 어떻게 갈등을 최소화하고 협력을 극대화하느냐가 관건일 것이다.

MB 정부는 집권과 더불어 신아시아 외교, 자원의외교를 전방위적으로

펼쳐왔다. 중국, 러시아, 인도야말로 한국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발전을 위해, 나아가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지역 강대국이다.

우선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 파트너이자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이다. 더욱이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에도 불구하고 북·중 경협을 확대함으로써 북한체제의 안정과 유지에 결정적인 기여를 해왔다. 따라서 중국이야말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현상유지에 핵심적인 기여자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한·중 협력은 더욱 절실하다. 또한 변화된 국제질서, 곧 ‘G-2 시대’에 한국은 전략적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대미 편중외교에서 벗어나 ‘연미협중’의 등거리 외교를 펼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러시아 역시 6자회담 파트너로서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당사국이다. 동시에 자원부국인 러시아와 경제협력은 한국의 자원외교에서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고, 특히 북한체제의 연착륙과 개혁개방의 유도에 러시아 역할은 더 없이 중요하다. 특히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다자경제협력 및 안보협력 체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은 더 없이 중요하기에 차기 한국정부는 한·미, 한·중 관계에 지나치게 편중될 것이 아니라 한·러 관계를 전략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한·인 관계 역시 2010년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기로 합의한 데서 보듯이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국가이다. 신흥 개발도상국으로서 급속한 경제성장에다 소비대국으로 부상하고 있기에 한국의 경제발전에 인도는 더 없이 중요한 파트너이다. 2010년 1월 발효된 한·인도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는 양국의 교역·

투자 증가에 크게 일조해 2011년에는 한·인도 교역량이 205억 달러에 육박했다. 향후 인도를 포함한 BRICs가 국제사회의 중심국가로 등장할 것이기에 인도와 전략적 협력은 계속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중·러 관계를 군사안보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동북아 지역 내 신냉전 구도가 출현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즉 북·중·러를 한 축으로 하고, 한·미·일을 또 한 축으로 한 대립국면을 완화 개선하는 것이 신정부의 과제가 아닐까 싶다. ‘천안함 사건’ 이후 서해 지역에서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에 맞서기라도 하듯이 2012년 중·러가 합동군사훈련을 전개한 사례에서 보듯,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가 흔들리고 있다. 최근 중·일 간 ‘센카쿠’ 분쟁에서 보듯, 향후 국가이익을 둘러싼 분쟁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게다가 미국의 ‘Pivot to Asia’ 정책과 ‘중국의 국방현대화’ 증대가 서로 대립하는 형국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안보환경 속에서 차기 한국정부는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공동번영 그리고 평화를 촉진하는 ‘가교국가’로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그 시발점은 역시 남북관계의 개선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제3장 러 · 인 관계

1. 러 · 인 관계의 역사적 변천
2. 러 · 인 관계의 협력요인과 갈등요인
3. 러 · 인 관계가 삼각체제에 미치는 영향
4. 한국에 주는 시사점 및 소결



1. 러·인 관계의 역사적 변천

1971년 소련과 인도의 ‘평화우호협력조약’은 소련에는 미·중 관계에 대한 견제이자 아시아 비동맹국들에 대한 영향력 확대의 토대를 마련해 준 것이었다면 인도에는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과 파키스탄의 군사적 연계에 대한 전략적 기반을 제공하는 동시에 서남아시아에서의 인도의 전략적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기회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시기에 소련과 인도는 첫 번째 관계 전환을 맞는다. 1986년 고르바초프는 ‘블라디보스토크 선언’을 발표하며 기존 아시아 정책의 변경을 시사하였다. ‘선언’을 통해 소련은 기존의 ‘중국포위정책’을 종식하고 새로운 대중국정책(China First priority) 시행을 표명하였다. 중·소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소련은 중국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병력 철수, 중·소 국경에서의 군비축소,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베트남이 철수하는 것에 대해 압력을 가해줄 것 등에 대해 동의하였다. 중·소의 관계전환은 중국과 대립관계였던 인도는 소련과의 관계에서 중대한 변화를 의미하였다. 소련은 아시아 정책에서 인도 우선 정책을 수정하여 중국우선정책으로 선회하였다.⁷¹⁾

가.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와 제1의 전환⁷²⁾

라지브 간디(Rajiv Gandhi) 총리는 1985년 5월 취임 후 첫 공식 방문

71) John R. Faust, Judith F. Kornberg(1995), pp. 4-5; Subhash Kapila(2000), p. 7.

72) 중·인·러 삼각관계의 세차레의 전환에 관한 내용은 다음의 글을 수정, 발전시킨 것임. 『아세아 연구』(2007), 제50권 4호, pp. 112~122.

으로 러시아를 선택함으로써 러시아에 대한 인도의 정책적 선호를 표현하였다. 같은 해 3월, 소련 공산당 신임 서기장으로 취임한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대외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재평가와 전략 수정을 전면적으로 고려하고 있었음에도 러시아에 대한 인도의 전략적 가치는 여전히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지도부의 세대교체－고르바초프는 ‘호루시초프 개혁 세대’, 라지브 간디는 ‘탈식민세대’－가 이루어지고 국가전략에 대해 전반적 재평가를 모색하는 등 양국의 중대한 변화 시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인도는 정상회담에서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확인하였다. 고르바초프는 양국관계를 새로운 수준으로 질적 발전시킬 것을 제안하였고, 양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주요 국제문제들에 양국이 공동의 이해관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고르바초프는 인도가 ‘아시아와 세계의 존경을 받는 위상의 강대국’으로서 ‘아시아 안보문제의 건설적인 해결’을 위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전 아시아 포럼’을 결성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양국의 신임 지도부는 당시 서구 및 중국과 관계 개선을 계획하였는데 어떠한 제3국과의 관계개선도 러·인 관계의 희생이라는 전략적 대가를 치르면서 시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예를 들어, 1985년 11월에 예정된 고르바초프와 레이건의 제네바 정상회담에 대해 인도는 환영의 의사를 표명하였고, 고르바초프와 정상회담 직후에 추진한 라지브 간디의 미국방문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미국보다는 소련을 선호하였다. 인도는 미국에 대해 넘기 어려운 전략적 인식의 갭을 여전히 느끼고 있었다. 인도는 무엇보다도 미국이 파키스탄에 첨단무기를 이전해줌으로써 남아시아에서 군비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에 우려하고 있었다.

소련의 새로운 아시아 정책 수립과 러·인 관계의 질적 발전에서 중요한 전환적 기반은 1986년에 개최된 소련공산당 제27차 당 대회를 통해 마련되었다. 제27차 당 대회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점증하는 중요성에 대해 주목하였다. 아시아 태평양 전역에서 내륙 아시아를 향해 소련을 압박하는 미국의 아시아 안보전략은 소련 지도부에 막대한 전략적 비용을 강요하였다. 아시아 지역에서의 이러한 전략적 비용과 손실을 회피하고 우호적인 국제환경을 구축하려는 고르바초프의 소련이 선택해야 할 국가는 인도와 중국이었다.

1986년 7월 28일, 고르바초프는 ‘블라디보스토크 선언’을 통해 아시아 태평양 정책에 대한 새로운 구상을 밝혔다. 고르바초프의 구상은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아시아 태평양 평화체제를 형성하는 중심 축 중의 하나로 상정하였다는 점에서 이전의 브레즈네프 구상과 차별성을 지닌다. 고르바초프의 구상에서 인도는 중요하게 언급되었다. 그는 ‘위대한 인도는 비동맹운동의 리더이며, 러·인 관계는 세계적 규모의 안정요인(stabilizing factor)’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인도의 전략적 비중을 강조하였다. 그는 ‘선언’에서 인도양을 ‘평화지대’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할 것을 선언하였으며 이러한 제안은 인도에 호의적인 반향을 일으켰다.

1986년 11월, 고르바초프는 정상회담을 위해 뉴델리를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이 1973년 브레즈네프의 방문 이후 13년 만의 소련 최고지도자의 인도방문이자 서기장 취임 후 첫 아시아 정상회담이라는 점에서, 아시아에서 소련이 상정하는 인도의 정책적 비중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블라디보스토크 선언’이 시사하듯이 당시 고르바초프의 소련이 의도하는 바

는 중국과 관계를 개선하여 중국과 인도를 아시아 정책의 양대 축으로 삼는 것이었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인도에 대한 전략적 비중의 조정이 불가피한 것이었다. 따라서 소련은 중국과의 관계개선에 대해 인도의 양해를 구할 필요가 있었고 인도는 이를 수용해야 했다. 고르바초프는 소련의 중국에 대한 관계개선이 인도와 관계를 희생하는 대가로 얻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인도의 외무장관 티와리(Narayan Dutt Tiwari)를 접견한 자리에서 소련 지도부는 인도의 실질적 이해를 침해할 수 있는 일에 대해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1987~88년은 고르바초프의 소련과 라지브 간디의 인도 사이에 우호관계가 정점에 올랐던 시기이자 인도에 대한 전략적 평가를 재고하기 시작하는 조정의 시기이기도 했다. 1987년은 러시아에는 10월 혁명 70주년, 인도에는 독립 40주년이라는, 20세기 세계사를 뒤흔든 두 가지 이념과 이상—사회주의와 민족해방운동—을 상징하는 역사적 사건의 경축년이었다. 양국은 1987~88년까지 대규모의 다양한 축하행사들을 기획하고 교류하였다.

그러나 1988년 9월 ‘크라스노야르스크 선언’을 통해 중국의 중요성이 재확인되면서 인도정부는 인도에 대한 소련의 전략적 비중에 대해 의구심을 품게 되었다. 소련·인도 관계가 ‘국제적으로 막중한 중요성을 지닌 항구적이고 건설적인 요인’이라는 점 등이 강조되었음에도 소련 외교정책의 우선순위가 조정되는 가운데 인도에 대한 전략적 우선순위가 하락하고 있다는 견해가 등장하였다. 이러한 연유로 크라스노야르스크 선언 후 약 두 달 만인 11월에 성사된 델리 정상회담에서 고르바초프는 양국 관계에 대한 여러 부정적인 평가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소련의 대인도정책은 변함이 없다는 점 등을 확인해줄 필요가 있었다. 소련이 비록 인도

에 대한 정책을 변경하려는 의도는 없었을지라도 전략적 관심의 다른 곳으로의 이동은 인도에 대한 전략 가치를 상대적으로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고 여기에 바로 인도의 고민이 있었다.

고르바초프의 등장으로 조정국면에 들어갔던 양국 관계는 상호 전략적 이해와 전통적 유대 관계에 대한 반복적인 확인에도 불구하고 소련의 급격한 정치변동과 세계질서의 전면적 전환 등의 상승작용에 따라 근본적인 문제에 봉착하였다. 무엇보다도, 소련의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양국의 경제협력 메커니즘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동하였다. 국제정치문제에서 걸프전(1990~91)은 소련과 우호협력관계의 지속성에 대한 인도의 확신에 균열이 가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라크의 쿠웨이트 점령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이라크 제재 결의안이 소련의 동의로 통과된 것에 대해 인도는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 전통적으로 인도는 제3세계 비동맹운동의 리더였고, 중동 지역의 아랍민족주의에 대해 호의적이었기 때문에 이라크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선호하지 않았다.

소련의 체제내적 지각변동은 실물경제와 안보 분야에도 직접 영향을 끼쳤다. 소련으로부터 원유, 원자재, 설비부품, 핵심 군수물자와 부품 등의 공급에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인도의 경제적 안보적 불안정성이 가중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1월 인도 외무장관 마다하브싱(Madhav Singh)이 모스크바를 방문하였으나 별다른 구체적인 성과 없이 일정을 축소하여 하루 만에 귀국하였다. 1991년 ‘8월 쿠데타’ 이후, 당시 소련을 실질적으로 대표하던 러시아 정부가 옐친의 서구순방(G-7 참석, 독일방문 등) 일정으로 분주한 가운데 인도 외무장관의 모스크바 방문은 예전과 다르게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련

방의 해체는 양국관계의 전면적인 재조정을 예고하였다.

나. 옐친의 ‘대서양주의’ 노선과 제2의 전환

소련을 법적으로 계승한 러시아의 대외정책은 페레스트로이카 후반 소련의 친서방정책의 맥락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구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친서방국가인 일본, 한국 등과 관계를 긴밀히 하는 친서구주의적 경향을 토대로 수립되었다. 이에 연동하여 인도에 대한 러시아의 전략적 비중의 하락은 대략 세 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 먼저, 체제이행문제이다. 당시 러시아는 체제전반에 걸쳐 ‘사회주의로부터의 이행(transition from socialism)’이 진행 중이었는데 ‘서구주의적 재근대화’, 시장경제로의 급격한 이행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구와 일본의 자본, 기술 지원은 러시아에 절실했다. 다음으로, 소연방 해체의 지정학적 영향 또한 인도에 대한 러시아의 전략적 관심을 약화시킨 것이 사실이다. 소연방의 해체로 중앙아시아에서 독립국가들이 형성됨으로써 인도와 국경거리는 그만큼 멀어졌고 중앙아시아가 반러시아적 성향을 보이지 않는 한 중앙아시아는 지정학적으로 완충지대의 역할을 할 수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제3세계에 대한 관심 하락이다. 소련의 해체 후 러시아의 서구주의적 체제이행정책으로 러시아는 제3세계에서 전면적인 철수를 단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인도의 전략적 위상 또한 동반하락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인도에 대한 정치, 경제적 선호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었고, 양국 관계의 복원은 새로운 세계질서 형성과정에서 새로운 모멘텀이 형성되기까지 지체되었다. 냉전시기 양국의 ‘특수관계’는 종식되었고 이제 양국 관계는 불확실성에 처하게 되었다.

인도 또한 소련/러시아 지향적 대외정책의 전환을 시도하였다. 1991년 외환위기, 임금체불위기 등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했던 인도는 경제정책에서 기존의 중앙계획적인 요소를 축소하고 시장의 자유주의적 요소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1991년 6월 출범한 나라시마 라오(P.V. Narashima Rao) 정부는 인도의 혼합경제를 자유시장경제로 전환하는 ‘뉴델리 컨센서스’를 시행하였다. 라오 정부는 외환차입과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IMF와 세계은행의 시장기준과 개방조건을 받아들였다. 라오 정부의 시장자유화 조치로 인해 뭄바이 증시가 40% 폭등을 기록하면서 인도 경제는 지표상으로 호전되기 시작하였다. 러시아는 생필품 등 전통적으로 인도에서 수입하던 품목에 대한 수입선을 다변화하기 시작하였고, 인도 또한 러시아로 수출하던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중단하였다.⁷³⁾ 소련이 인도의 제2위 무역 상대국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양국 경제협력관계의 악화가 초래하는 영향이 적지 않음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소비재 수출의 80%를 소련시장이 흡수하였고, 매년 소련산 원유 400만 톤을 루피화 결제로 도입하던 인도로서는 경화결제 등 무역조건의 급변과 수출시장의 다변화 압박 등으로 외환위기와 경제침체가 가중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1991년 1월 인도 외무장관 디시트(J. N. Dixit)가 모스크바를 방문하였으나 협상은 무위로 끝났다. 100억 루블에 달하는 인도의 대소련 채무의 변제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루블화에 대한 평가절하와 경화결제 유예 등 인도의 요청이 경제위기에 처한 러시아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방적인 제안으로 해석되었다. 1992년 5월 4일 러시아 제1부총리 부르불리스(Gennady Burbulis)의 인도방문으로 양

73) Eugene Bazhanov and Natasha Bazhanov(1993), pp. 98-99.

국 정부가 5년간의 경제무역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양국의 경제협력관계에 정상화의 기틀이 마련되었다.⁷⁴⁾ 그러나 이러한 기본관계 유지는 경제관계에 치중된 것으로 옐친 정부는 인도와의 관계에서 안보문제 등, 상위정치(high politics)보다는 무역과 과학기술협력 등 하위정치(low politics) 영역을 강조하는 실용주의적 접근을 선호하였다.

1993년 1월 옐친의 첫 인도방문은 양국의 전통적인 ‘특수관계’를 복원하는 첫걸음이자 ‘새로운 관계의 확인’이라는 이중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었다.⁷⁵⁾ 옐친의 인도방문에 대해 러시아 언론들은 ‘새로운 관계의 토대 마련’, ‘뉴델리 시절의 도래’ 등으로 표현하면서 관계복원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였다. 러시아 사절단에는 코지레프 외무장관, 그라초프 국방장관, 슈메이코(Vladimir Shmeiko) 부총리, 바라니코프(Viktor Baranikov) 국가안보장관, 글라지예프(Sergey Glaziev) 대외경제장관 등 안보, 대외정책 관련 최고정책결정자들이 망라되었으며, 이들 대부분은 이번 인도방문이 첫 번째였다. 이것은 앞으로 인도가 소련이 아닌 러시아라는 ‘새로운 국가의 새로운 팀’을 상대해야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74) 양국은 1992년 2월22일, 루피화 결제를 위한 무역의정서에 서명하였고, 1994년 옐친의 측근이던 부르블리스의 인도방문을 통해 최혜국 대우(MFN) 등을 포함한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등 경제관계에서 기본관계를 유지해나갔다. 러시아는 인도에 오일, 무기류 등 군수품 수출을 재개하였고, 인도는 러시아의 인도 소비재 수입을 위해 25억 루피의 신용거래를 러시아에 제공하였다.

75) 코디카라는 신조약에 대해 관계전환의 확인 또는 새로운 관계의 진입이라는 양국관계가 전통적인 특수관계에서 후퇴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그는 1992년 러시아 측으로부터 기존의 ‘평화우호협력조약’의 수정-안보관련조항(제9항)의 삭제-을 요구 받았을 때, 러·인 관계는 근본적인 조정기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Shelton U. Kodikara, *South Asian Security Dilemmas in Post-Cold War World*, Stephen P. Cohen, ed., *South Asia After the Cold War: International Perspectives: ACDIS Papers*, 1995, pp. 149-150.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냉전시기에 체결된 기존의 ‘평화우호협력조약’을 새로운 우호협력조약으로 대체하였다. 새로운 조약의 명칭에는 ‘평화’라는 용어가 삭제된 점, 소·인 조약에 포함되었던 안보 관련 조항—제9항: 전쟁 등의 위협 시에 즉각 상호 협의 등—이 제외된 점 등은 새로운 조약에서 안보적 측면이 약화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것은 무엇보다 소련 해체 초기 탈냉전, 탈이념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엘친이 정상회담과정에서 밝혔듯이 국제정치에서 ‘동맹정치’, ‘블록정치’의 해체라는 러시아의 대외정책 방침과 관련되어 있었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도 포함된 것이었으며, 인도 역시 비동맹 원칙의 연장선에서 새로운 조약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⁷⁶⁾

1994년 6월 인도의 라오 총리가 러시아를 답방하여 양국은 ‘이익보호 선언(Declaration on the protection of interests of the pluralistic states)’을 발표하면서 탈냉전기 양국 사이에 새로운 관계 근거를 마련하였다.⁷⁷⁾ 러시아로서는 인도가 중국 및 파키스탄과 여전히 적대관계인 상황에서 인도와 군사적 측면의 ‘우호협력조약’의 유지가 비현실적이라는 판단이 있었으며 이러한 전략적 판단은 북한에도 적용되었다. 라오 총리와 엘친의 모스크바 정상회담은 ‘새로운 관계로의 전환’이라는 측면과 더불어 전통적인 소련·인도 관계로의 근접이라는 의미 또한 지니고 있다. 이타르 타스(ITAR TASS)의 보도에 의하면, 정상회담에서 엘친이 양국 사이에 ‘어떠한 차이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회담결과가 ‘소비에트 해체 이전에 향유했던 밀접한 관계의 복원을 촉진’할 것이라고 평가한 점 등은 이제

76) Anita I. Singh(1994), p. 70.

77) Erich Reiter, Peter Hazdra ed.(2004), p. 116.

러시아와 인도가 소비에트 해체와 더불어 초래된 양국 관계의 불확실성에서 탈피하였다는 것과 변화된 현실에서 관계의 재설정 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⁷⁸⁾

모스크바 정상회담이 러·인 관계의 전략적 의미라는 측면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모스크바 선언(Moscow Declara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Interests of Pluralistic States)’으로 호칭되는, 탈냉전기 세계질서의 공동 가치와 주요 국제문제에 대한 개념공유를 공식적으로 천명했다는 점이다. 양국은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법에 의한 통치와 민주주의적 표준’을 준수하고 ‘동등한 권리와 의무에 입각한 세계시장으로의 통합’ 등 서구적 가치와 탈냉전 세계질서에 대한 동의와 공동의 이해를 표명하는 한편, 탈냉전 질서형성과정에서 출현하는 새로운 도전들, 예를 들어 ‘호전적 민족주의와 종교적 광신주의’ 등에 대한 경계와 공동대응을 주장하였다. 라오 총리는 정상회담에 대해, ‘양국 관계의 진정한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기여했으며 “소련 해체 이후의 어려운 단계를 통과해나오고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양국은 정상회담에서 도출한 광범위한 합의를 구체화하고 실행을 위한 수단과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러·인 합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장관급 교환방문을 추진하기로 동의하였다.

엘친 정부가 인도와 관계를 복원하도록 정책 이동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하나는 국내적 요인으로, 1993년 10월에 발생한 ‘벨르이 돔 사태(의사당포격사건)’로 상징되는 의회권력과 대통령 권력 간의 정면충돌에서부터 12월의 신헌법 국민투표와 총선에

78) Debidatta Aurobinda Mahapatra, *India-Russia Partnership: Kashmir, Chechnya and Issues of Convergence*(New Delhi: New Century Publications, 2006), p. 61.

이르는 소비에트연방 해체 이후 최초의 전면적인 권력 갈등과 재편이 그것이다. 선거결과, 엘친 정부의 주류 세력이던 신자유주의 급진개혁파는 소수 세력으로 밀려나고, 소연방 해체와 더불어 사실상 와해되던 공산당이 제1당으로 부활하는 등 이념적으로는 소비에트 이념, 민족주의 등을 대표하는 보수주의적 정향, 문화 지리적 측면으로는 러시아의 문명적·지정학적 특수성을 강조하는 유라시아적 정향이 의회를 압도하게 되었다.

다음으로는 지역적 요인으로, 근외 지역과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전략적 재평가이다. 민족주의와 유라시아주의가 의회 내 주류 정향으로 등장하면서 구 소비에트 공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제고되어 세력권 재설정 시도로 귀결되었다. 1993년의 ‘대외정책개념’에 이미 명시된 바와 같이 CIS지역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제1순위에 설정되어 있으며, 용어가 시사하는 것처럼 외국이라기보다는 ‘세력권’의 의미가 강하게 투영된 ‘근외 지역(near abroad)’으로 정의되었다. 이것은 영향력을 회복해야 할 구 소비에트 공간이자 제정러시아의 영역을 의미했다. 1993년 2월 엘친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CIS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특별한 지위’를 인정할 것을 요구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⁷⁹⁾ CIS에 참여하지 않던 구 소련 구성 공화국들 중 발틱 3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1993년 말까지 CIS에 가입하였고 참가국들 간에 CIS 집단안보조약(CSTO)이 체결되었다.

마지막으로, 인도와의 관계복원 배경에는 ‘나토 확대’라는 국제적 요인이 자리하고 있다. 나토의 확대 결정은 러·인 관계 강화의 결정적인 동기이자 러시아 대외정책 수정의 전환점이 되었다.

1996~98년은 러·인 관계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양국 관계의 결

79) Hannes Adomeit(1995), p. 36.

정적인 전환을 야기한 러시아의 정치경제적 배경에는 국내적으로는 이행기 경제위기의 심화에 따른 정치적 유동성의 증가, 대외적으로는 무엇보다도 '나토의 동진(東進)'이라는 요인이 자리하고 있었다. 1992~94년 동안의 초인플레이션(hyper inflation) - 인플레이션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1992~93년 최고치 2,000% 기록 - 과 -9~15%에 이르는 GDP 성장률의 급락 등 신자유주의 개혁의 총체적 실패가 명확해지고, 1995년 가을, 나토의 동쪽으로의 확대가 기정 사실화되면서 옐친 정부는 대내외적인 위기에 봉착하였다. 1995년 12월에 실시된 총선에서 체르노미르딘이 주도한 실질적인 여당 '우리 집 러시아'가 10% 미만의 지지(총 450석 중 45석)를 얻어 참패하고 주가노프(Gennady Zhuganov)가 당수인 공산당이 158석(지지율 22.3%)를 획득하여 두마(Duma, 하원)의 제1당이 되어 옐친 정부는 반대세력의 정치적 영향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대내외 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옐친 정부는 기존의 서구주의/대서양주의 노선을 지향하던 코지레프 장관을 경질하여 1996년 1월 9일 유라시아주의자로 분류되는 프리마코프(Yevgeny Primakov)를 외무장관으로 임명하였다. 프리마코프 외교팀의 출범은 서구주의의 실패, 또는 서구주의 외교노선에 대한 최종 수정을 의미하였고 동시에 서방외교에서의 약속을 보완하기 위한 동방외교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외교적 시그널이었다.

프리마코프는 전임자의 외교 정향이 서구 특히, 미국에 편중된 외교적 오류였음을 인정하였고 아시아 국가들과 관계강화를 시도하였으며 인도에 대한 관계는, 당연한 결과로서, 격상되었다.⁸⁰⁾ 프리마코프는 취임식

80) Zafa Imam & N. V. Romanovsky(2002), p. 187.

연설에서 서방과의 관계가 더욱 평등하게 조정되어야 하고 나토의 동진이 러시아의 지정학적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동방과 서방 간의 정책적 불균형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1996년 3월, 엘친은 프리마코프에게 국가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장관 중의 장관(super foreign minister)’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다. 프리마코프의 취임에 대해 인도는 낙관적이었고 나토는 러시아가 다시 ‘집중(concentration)’ 하고 있다는 ‘심각한 신호’로 받아들였다.⁸¹⁾

프리마코프가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첫 방문지를 인도로 선택한 것은 매우 상징적인 조치였다. 프리마코프의 뉴델리 방문은 소련 당시 1980년 그로미코 외무장관의 방문 이후로 16년 만의 방문이었다. 외무장관 회담에서 주요 초점은 분리주의와 테러리즘 문제 등 지역 안보문제와 나토확대 등 글로벌한 차원의 지정학적 쟁점들에 집중되었다. 러시아는 양국에 불편한 쟁점이던 NPT, CTBT 등 핵문제를 어젠다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인도 정부를 배려하였다. 특히, 나토 확대문제와 관련하여 프리마코프는 뉴델리 회담에서 나토 동진에 대한 인도정부의 반대 입장을 확인함으로써 외교적 성과를 이루었으며, 인도를 ‘글로벌 파워’이자 러시아의 ‘우선적 파트너(priority partner)’로 표현하였다. 1996년 4월 엘친의 중국방문에서 나토 동진에 대한 러시아의 반대를 중국이 지지함으로써 나토 문제를 중심으로 러시아가 의도한 러·중·인 3국의 전략적 협조를 위한 기반이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81) Jyotsna Bakshi(1999), pp. 250-251.

다. ‘테러와의 전쟁’ 및 ‘단극체제’ 형성과 제3의 전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러시아·인도’, ‘중국·러시아’, ‘중국·인도’ 간의 양자 관계는 ‘중국·인도·러시아’ 삼자의 관계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러·중·인 삼각관계 형성에 주목할 만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9·11 사태와 ‘고유가’,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 형성과 ‘일방주의’ 비판 등에 기인한 바가 크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지역질서 재편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미군의 군사시설 사용과 작전허용 등이 러시아의 지원 아래 이루어졌고 중국의 암묵적인 동의가 수반되었다. 미국의 강력한 외교적 압력에 처한 파키스탄은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여 ‘테러와의 전쟁’에서 미국의 전략적 요구사항에 동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중국을 해당지역에서 인도에 대한 상쇄력으로 활용하던 기존의 전략을 수정하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나 9·11 당시만 해도 3각 관계의 형성이 가까운 장래에는 실현되기 어려운 것으로 예상되었다. 무엇보다 미국과 러시아, 미국과 중국 간에 심각한 대립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었고 미국과 인도 관계는 안정되고 진전된 관계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인도에는 3각협력관계 형성에서 ‘중국요인(the China Factor)’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다. 중국이 서남아시아에서 파키스탄이라는 전략적 공간을 포기할 수 있는지, 중국이 서남아시아에서 인도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중국이 미국에 대한 레버리지이자 인도의 전략공간을 협소하게 하기 위한 시도로서 추진 중인 파키스탄에 대한 핵 및 미사일 지원계획을 포기하고 서남아시아에서 퇴각할 수 있는지 등이 중국에 대한 인도의 전략적 관심사였다.

그럼에도 3국간에는 테러와 분리주의 문제에 대한 공통된 이해관계가 있었다. 2002년 11월, 인도가 러·인·중이 고립적인 3각 축을 형성하는 것을 부인하고 3자 회담이 미국이나 특정 국가를 겨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대외적으로 환기시키면서도 전략적 3각 관계 구축에 일정한 관심을 보이는 것은 러시아, 중국과 이해관계의 공유에 기인한 것이다.

중국의 신장과 파키스탄 북부의 파슈툰 등지에 근거하는 ‘이슬람 분리주의’ 세력과 아프간의 탈레반 잔여세력이 국제적으로 결합하여 이들의 영향력이 중앙아시아 일대로 확대되면 중국과 인도, 러시아에 중대한 위협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인도와 중국은 아프간 전쟁에 대한 미국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탈레반 세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활동 중인 테러조직을 미국이 소탕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실망하여 ‘공통의 적’에 대한 상호 전략적 이해관심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2000년 10월에 이어 2002년 12월 푸틴의 인도방문으로 성사된 러·인 정상회담은 3각 관계가 전략적 형태로 발전하는데 중요한 자양분이 되었다. ‘벨리 선언’을 통해 양국은 ‘우호협력조약’의 회복과 ‘질적으로 새롭고 높은 수준’의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를 선언하였으며 테러 문제 해결에 공동대응할 것을 표명하였다. 이 시점에서 미국의 이라크전쟁에 대해 러시아가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중국과 인도가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과 러·중·인의 접근 간에는 유사점이 존재한다. 이를 계기로 삼국 간에는 ‘새로운 기하학적 관계(a new geometry)’가 형성되었고 러시아는 이러한 관계에서 전략적 ‘조정자(mediator)’ 역할을 자임하였다.⁸²⁾

이러한 3국의 접근이 향후 전략적 축(strategic trilateral axis)으로 발전

82) “Russia-China-India: a new geometry,” *Pravda*, 02/12/2002.

하는 과정에서 상하이 협력기구(SCO)는 유용한 틀이 될 수 있다. SCO는 유라시아 중심부로 미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테러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 경제적 협력 등을 목적으로 한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6개국의 포럼형태의 국제레짐이다. 이라크 전쟁을 계기로 재확인된 미국의 일방주의는 SCO와 3국 간의 전략관계형성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인도에 SCO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테러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도구일 뿐 아니라 참가국 간의 경제협력을 통한 자국의 경제발전에 유용한 수단이기도 하다. SCO에 대한 인도의 참여문제에는 중국의 동의가 결정적인데 러시아와 중국 간에는 SCO에 인도를 참여시키는 문제에 대해 이미 긍정적인 논의가 진행 중이다.

2004~05년에 들어오면서 3국의 협력관계 구축이 대외적으로 급진전되었다. 표면적으로 ‘비동맹, 비대결(non-alliance, non-confrontation)’을 표방하고 있으나 3국 관계가 기존의 ‘양자 관계의 합’에서 ‘3자 관계’로 질적인 발전을 하였다는 점은 분명하다. 2004년 12월 푸틴은 인도를 세 번째로 방문하여 러·중·인 3각 관계형성을 역설하였다. 조지아의 이른바 ‘벨벳 혁명’에 이어 2004~05년 우크라이나의 ‘오렌지 혁명’, 키르기스스탄의 ‘튤립 혁명’ 등 중앙아시아와 인근 지역에서 연이은 정치변동이 발생하고 미국이 이를 지원한다고 인식한 러시아는 삼각관계구축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중국 또한 대만 문제와 최근 중·일간 외교적 마찰이 가열되고 중앙아시아에서 격화되고 있는 ‘민주화’에 대한 일련의 정치적 사태가 신장과 위구르 등 분리주의(인종/종교)문제로 불안정한 서부 지역으로 파급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으로서는 러시아가 파이프

라인 결정문제, ABM 조약 폐기문제 등에서 중국의 기대를 종종 저버리고 있음에도 자국의 아시아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라는 차원에서 러시아의 전략적 삼각관계 형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분석된다.⁸³⁾

2005년 봄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는 인도를 방문하면서 공식적으로 전략적 삼각관계에 대해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였다. 중국, 러시아, 인도를 ‘영향력 있는 3국(three influential countries)’으로 표현하면서 이 3개국의 협력이 세계의 평화와 안정과 ‘국제관계의 민주화(다극체제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2005년 6월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된 러시아, 중국, 인도 3개국 외무장관회담은 분석가들에 따라서는 ‘국제적인 사건’으로 기록하기도 한다. 이 회담에서 3국은 에너지, 수송, 하이테크, 농업 등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어젠다 설정에 동의하였다. 또한, 유엔 개혁문제—인도의 상임이사국 진출문제와 연관된—와 중동 및 중앙아시아에서의 발전문제—가스 및 오일개발, 테러리즘, 사회갈등문제 등—을 토의하였다.

군사전략적 차원에서도, 2005년 8월 러시아와 중국은 사상 처음으로 합동군사훈련을 수행한 데 이어 10월 중순에는 러시아와 인도가 ‘인드로(Indro) 2005’라는 군사훈련을 실시하였으며 2006년에 러시아, 인도, 중국이 모두 참여하는 ‘3국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기로 3국이 동의했다. 삼국의 합동군사훈련은 매년 정례화되는 듯하며, 특히 2012년 4월 동해상에서 수행된 러시아와 인도의 합동군사훈련은 인도 함대로서는 사상처음 극동지역에서 군작전을 수행했다는 의미와 삼국의 이해관계가 남아시아/동아시아 등 특정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시아 전체를 포괄하는 것

83) Stephen Blank(2005).

이라는 전략적 메시지로 해석된다. 특히 러시아는 삼국과 중앙아시아 지역을 연계하는 군사력 투사능력의 제고에 관심이 지대한데 이를 목적으로 CSTO(집단안전보장기구) 등을 동원한 합동군사훈련 ‘Rubezh-2004’ (Frontier 2004)와 ‘Rubezh-2005’ 등이 실시되었다. 2007년 8월, 인도, 이란 등이 옵서버로 참여한 가운데 SCO 가입국의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이 진행됐다. 대외적으로 대테러작전을 위한 ‘평화의 사명-2007’로 명명된 이번 훈련은, 처음으로 회원국 모두가 병력을 파견하여 4,000여 명이 넘는 규모로 9일 동안에 걸쳐 치러졌다. 특히 이번 SCO 정상회담이 회원국 간의 합동군사훈련과 병행하여 개최되었다는 점에서 대내외적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평화의 사명’ 훈련과 SCO 정상회담의 의미는 러시아의 유력 일간지 『이스베스티야』의 기사 제목 「반나토, 에너지 클럽 결성할 것」에 압축적으로 드러난다. 경제적 수단을 통한 정치군사적 목표달성 또는 양자의 연계이다. 카자흐스탄의 나자르바예프 대통령도 ‘아시아 에너지 전략’ 프로젝트로 이에 화답했다. 이러한 협력 프로그램 등을 통해 그동안 옵서버로 참여하는 인도, 이란, 파키스탄, 몽골이 정식 회원국이 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질 전망이다.

2. 러·인 관계의 협력요인과 갈등요인

가. 러·인 관계의 협력요인

1) 군사 및 과학기술 협력의 경제 안보적 요인

1971년 우호협력조약을 체결한 이래 소련과 인도는 대외정책 면에서

공동보조를 취해왔는데 군사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예를 들어, 1985년 5월 라지브 간디 총리와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공동성명이 미국 주도의 군비경쟁에 대한 조속한 중단을 제안한 사실은 대표적인 협조사례 중의 하나이다. 공동성명은 ‘텔리 선언(1985년 1월)’이 지향하는 목적, 즉 핵무기 등 전략무기의 경쟁중단에 대한 ‘6개국 그룹(아르헨티나, 그리스, 인도, 멕시코, 탄자니아, 스웨덴)’의 제안에 대해 전적인 공감을 표명하였다.⁸⁴⁾ 당시 소련은 미국 레이건 정부의 군비증강계획에 대해 고심하고 있었다. 1982년 6월, 영국 하원에서 한 연설에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소련을 지칭한 ‘전체주의’ 비판, 그리고 다음해 3월의 ‘악의 제국(evil empire)’ 발언은 소련에 대항하는 장기적인 재군비의 본격적인 신호탄으로 해석되었다. 1979년 체결된 ‘전략무기제한협정(SALT II)’은 미국 의회에서 인준되지 않은 채 보류되었고, 1983년 3월 레이건 행정부가 이른바 ‘스타워즈 계획’으로 알려진 ‘전략방위구상(SDI)’을 발표하자 소련은 미국이 본격적인 전략무기경쟁에 돌입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더욱이 1979년 수교 이후, 1982년 8월 ‘제2상하이 성명’을 통해 ‘하나의 중국’, ‘대만문제’ 등에서 상호의 협력입장을 재차 확인하는 등, 미국의 소련봉쇄정책에 긴밀히 연계되어 있던 미·중 관계는 전략무기경쟁과 더불어 소련의 전략적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소련의 전략적 고립감을 탈피하고 미국의 군비경쟁을 견제하기 위해 소련 지도부는 인도를 중요한 파트너로 판단하였다.

양국은 1985년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 무역, 과학 기술 협력의 기본방

84) Sergei Rogov(1989), p. 71; Darshan Singh(1986), p. 127.

향에 대한 협약(2000년까지)’과 ‘인도에 대한 새로운 프로젝트 수립협약’ 등 장기 전망에 기반한 전반적인 협력의 확대를 결정하였다. 소련이 체제 개혁에 소요되는 막대한 국내투자의 필요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기계제작 산업, 에너지산업 등 중요한 프로젝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110억 루블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은 양국 관계의 발전에 대한 상징적인 조치로 해석되었다. 당시 인도는 러시아의 아시아 최대 무역 상대국이었고 1985~92년까지 양국의 무역 규모는 2.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⁸⁵⁾

1985년 7월 30일, ‘핵실험 중단(moratorium on nuclear testing)’이라는 러시아의 일방적인 선언은 인도와 관계를 더욱 긴밀히 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러시아는 1986년 1월까지 핵실험을 일시 중단하되 미국이 이에 응하여 핵실험을 중단하면 정해진 기한을 넘어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실제로 소련은 핵실험 금지문제에 대한 협약을 이끌어내기 위해 미국의 계속된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핵실험 중단 조치를 몇 차례 연장하였다. 라지브 간디는 이러한 소련의 평화 프로세스를 지원하기 위해 그 해 10월, 5개국 순방과 유엔 연설을 마친 후 귀국 길에 모스크바를 비공식 방문하였다. 고르바초프와 회동에서 라지브 간디는 아프간에서의 소련군 주둔 종식문제 등 레이건과의 회담 결과를 전했다. 미·러의 제네바 정상회담을 20여 일 앞둔 시점에서 이루어진 모스크바 회동은 소련의 어젠다 설정과 미국의 의향에 대한 대응준비에 중요한 참고가 되었다.⁸⁶⁾ 소련은 남아시아, 동남아시아에서 인도의 적극적인 역할이 소련의 지정학적 이해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소련은 인도에 200억 루블의 신규차

85) Peter Shearman(1987), pp. 1097-1098.

86) Jyotsna Bakhshi(1999), *op. cit.*, pp. 171-173.

관을 약속하였다. 미국이 1987년 파키스탄에 40억 달러에 이르는 경제 및 군사 원조-첨단군사장비 포함-를 단행한 사실을 감안하면 인도에 소련의 경제군사협력이 차지하는 의미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고르바초프 집권 시기 소련과 인도의 협력관계는 경제 및 에너지, 군사 분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국의 무역 총액은 1985년 기준 약 29억 루블/440억 루피에서 1988년 약 35억 루블/520억 루피로 증가하였고, 1989년에는 약 47억 루블/700억 루피로 예상되었다. 당시 지속적인 경기 후퇴를 겪고 있던 소련 경제를 감안할 때 양국의 꾸준한 무역 증가는 우호협력의 성공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1988년 11월 뉴델리 정상회담에서 소련은 인도에 36억 루블/540억 루피에 달하는 신규차관-인도에 대한 소련의 차관 중 최대 규모-을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 이것은 타밀 나두(Tamil Nadu) 지역의 원자력 발전소를 포함하여 여섯 개의 에너지 발전부문 프로젝트 등 다수의 대형 프로젝트 건설을 위해 소요될 예정이었다. 군사 분야의 교류협력은 무기 및 군수무역에서 두드러졌다. 인도 국방장관 판트(K. C. Pant)는 1988년 2월에 모스크바를, 소련 국방장관 야조프(Dmitri Yazov)는 고위급 대표단을 대동하고 같은 해 9월 뉴델리를 각각 방문하였다. 회담결과 양국의 국방장관은 군사교류 및 무기이전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당시 소련은 인도의 군수물자 최대 무역 상대국이었다. 1987년부터 1991년까지 인도의 무기구매 총액 17억 6,000만 달러 중 소련에서 수입하는 비중은 79%에 달하였다.⁸⁷⁾

군사 및 과학기술 분야와 경제 분야에서의 양국의 제도화된 협력 관계는 소련의 급격한 체제변동과 세계질서의 전면적 전환 등 상승작용으로

87) Bakhshi(1999), *Ibid.*, pp. 187-188.

근본적인 문제에 봉착하면서 양국 해당 분야의 협력관계는 재조정이 불가피하였다. 소련의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양국의 경제협력 메커니즘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동하였다. 소련이 해체되기 직전인 1990~91년간 소련에 대한 인도의 무역초과액은 약 15억 달러(수출초과)에 달했는데, 소련은 당시 계획경제의 만성적 비효율성과 관료주의적 경직성에서 비롯된 경제 위기로 외환보유고가 급속히 고갈되어 인도에 대한 수입물품대금에 필요한 루피화 또한 부족한 실정이었다. 인도 정부는 약 180억 루피의 ‘신용거래(technical credit)’를 소련에 제공하였는데, 당시 인도 또한 경제적 침체에 있었으므로 소련에 대한 차관은 인도 정부에는 예산부족과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싱 정부는 인도의 무역을 다변화하고 소련과 무역을 조정하는 등 소련과 경제협력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설정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소련에 대한 경제정책을 근본적으로 변경하게 된 것은 예산이나 인플레이션 등 단기적인 재정 및 경제지표의 악화에서 연유한 것이라기보다는 양국 경제협력관계 패턴의 근본적인 변환과 관계의 역전—소련으로부터 무역 및 경제적 혜택(차관 등)의 상실—에 대한 인도 정부의 불안감과 손익계산, 그리고 새롭게 형성되던 전환기적 세계경제질서(글로벌라이제이션)에 대한 적응시도에 기인한 것이었다. 인도 상무부는 무역에서 소련의 루블화보다는 다른 외환에 선호도를 두도록 수출진흥위원회에 권고하였고, 소련으로의 수출이 수입의 30%를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정밀조사를 받도록 조치했다. 루피화 결제를 기반으로 한 수출 장려제도는 축소되었고, 소련에 대한 수출은 매년 금액을 설정하여 엄격히 제한되었다.⁸⁸⁾

88) Ramesh Thakur and Carlyle Thayer, ed.(1993), pp. 164-166.

엘친 정부 초기 양국 군사 및 과학기술 협력에서 정책혼선의 대표적인 사례는 인도에 대한 러시아의 ‘극저온액체연료 추진기관(cryogenic rocket engine)’의 기술이전과 관련한 문제였다. ‘액체연료추진기관’ 도입 문제는 1991년 초 소련과 인도의 합의사항이었다. 1992년 2월 초 유엔 안보리 회의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한 엘친 대통령은 라오 총리와 비공식 회동에서 러시아는 소련의 대외정책노선을 계승하며 인도에 대한 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언급한 것처럼 러시아 정부는 과거 소련이 인도와 맺은 협정은 준수할 것이라는 것을 인도정부에 확인시켰다. 1992년 5월 러시아 국무장관 부르블리스가 인도를 방문하여,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액체연료추진기관’이전을 포함하여 과거 소련의 협정들을 모두 이행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미 국무부는 러시아 우주산업체인 글라브코스모스(Glavkosmos)와 인도의 우주연구기구(ISRO: Indian Space Research Organization)에 액체추진로켓 이전거래를 취소하도록 압박하였다. 1992년 2월, 모스크바를 방문한 베이커 국무장관은 코지레프 외무장관과 회담에서 인도와 로켓엔진을 거래하면 미국과 러시아의 우주 협력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것이고, 러·인의 거래가 성사되면 러시아에 대한 무역제재가 실시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결과적으로 미 상무부는 글라브코스모스와 ISRO에 대한 무역제재를 강행하여 2년간 수출 면허발급을 중단하고 미국으로의 수입을 금지했다. 동시에 미 국무부는 두 기구를 제재하기 위해 회원국들의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따른 해당조치를 취해주도록 촉구하였다.⁸⁹⁾ 미 상원

89) 그러나 5월 13일 미 국무부가 글라브코스모스에 대한 무역제재가 러시아산 첨단 핵추진 엔진(topaz rocket engine)의 미국도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발표했는데, 이러한 국무부의 논평은, 정작 미국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관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국제관계위원회는 바이든(Joseph R. Biden)이 발의한 ‘핵확산방지수정안’을 채택하여 러시아에 대한 경제원조를 로켓엔진기술이전 포기에 연계시켰다. 마침내 옐친은 인도와 합의한 사항에 대해 러시아의 이행중지 의사를 밝힘으로써 액체연료추진기관 이전문제가 일단락되었으나 러시아가 미국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옐친 정부에 큰 정치적 부담이 되었다.

이에 반발한 러시아 의회는 ‘액체연료추진기관’ 기술이전협약을 포함하여 소련/러시아가 체결한 모든 협정을 이행하도록 정부를 압박하였고 그것이 러시아의 국익이자, 러·인도 이해관계의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1992년 9월 6일 인도의 국방장관 파와르(Sharad Pawar)⁹⁰⁾를 모스크바로 초청한 그라초프 국방장관(Pavel Grachev)은 파와르와 회담에서 과거 소련·인도의 군사 분야 협력수준을 향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군사기술영역에서의 연계를 복원하는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였다. 러시아 정부는 MIG-29 신형전투기 30대를 포함하여 전투기 및 훈련기 60대에 대한 인도의 구입 의사에 동의하였고, 1993년 1월로 예정된 옐친의 인도 방문에 맞춰 항공기, 선박/전함, 탱크 등의 생산 프로젝트—고르바초프 시기 소련과 인도 간에 체결한 협정에 근거—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러시아 정부가 인도 정부에 8억 3,000만 달러의 크레디트를 제공하기로 하였다.⁹¹⁾

것으로 무역제재에 대한 미국의 자의적 기준의 대표적 사례로 인도와 러시아 여론의 비난대상이 되었다.

90) 9월 8일로 예정돼 있던 파와르의 옐친 면담 일정이 옐친의 일본방문 준비 때문에 바쁘다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취소된 것에서 친서구주의 외교팀의 인도에 대한 정책인식이 잘 드러나 있다.

91) Debidatta Aurobinda Mahapatra(2006), pp. 37-42.

1993년 엘친의 인도 방문에서 설정된 어젠다 중, 인도의 소련 채무 변제문제와 루블-루피화 환율조정문제는 양국 관계의 복원에 선결과제였고 이 두 문제는 서로 연동되어 있었다. 1992년 충격요법에 의한 급격한 민영화 정책 등 이행기 시장경제정책의 파행으로 루블화가 폭락(1993년 1월 기준 환율: 1달러당 약 570루블)하여 소련의 대인도 채권액은 당시 환율로 재평가하면, 약 1/100로 대폭 축소(150억 달러에서 1억 2,500만 달러)될 상황에 처해 있었다.⁹²⁾ 이렇듯 양국의 환율조정문제는 정상적인 무역 재개뿐 아니라 국가의 채무문제에 직접 연관되어 있었다.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소련 채권액의 63%를 향후 12년간 1루블당 19.90루피의 환율로(이자율 2.4%), 나머지 37%는 45년간 1루블당 31.57루피 환율로 인도 정부가 상환하기로 합의하였다. 상환방식은 1년에 163억 6,000만 루피에 상응하는 소비재 물품을 러시아에 제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는데, 이러한 소비재 상환방식은 이행기 러시아 생활경제의 파탄을 반영하며, 인도 관련 산업의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인도의 주요 관심사인 무기류 등 군수물자의 안정적인 수입문제 또한 상호 합의에 이르러 방위장비의 부품 등의 원활한 공급과 수리, 군 현대화 등에 관한 포괄적 협정이 체결되었다. 양국은 1994년까지 무역 규모를 두 배(35억 달러)–1992년 15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1994년 양국은 모스크바 정상회담에서 양자의 관계발전 및 협력과 관련하여 우주개발, 과학기술, 방위산업 협력 등 아홉 개에 이르는 협정에 서명하였으며, 이를 위해 루피화 펀드를 활용–대러시아 루블화 채무의 변제방식으로–하는 다수의 조인트 벤처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주요

92) Thakur and Thayer(1993), *op. cit.*, pp. 168-169.

사업으로는 흑해의 주요 항구인 노보로시스크(Novorossiysk) 항의 근대화 사업이 있는데 인도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노보로시스크 항은 세바스토폴(Sevastopol) 항을 대체하여 러시아 흑해 함대의 사령부가 이전(2012년까지)하기로 되어 있고, 카스피 해의 텐기즈 유전(Tengiz Field)의 원유 파이프라인의 터미널이자 흑해 최대의 원유 수출항으로서 흑해의 떠오르는 러시아 군사 무역항이다.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을 보면 인도 남부의 정보기술중심도시 하이데라바드에 금속과 신소재 연구를 위한 과학연구센터를 공동설립(50:50의 투자)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 장기 협력 프로그램(80개 프로젝트, 2,000건의 교환방문 등)은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가 체결한 양자 협력 프로그램 중 최선의 협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군사 분야에서의 협력 중 군사항공 공동사업은 특기할 만하다. 양국은 ‘인도·러시아 항공사(Indo-Russian Aviation Pvt. Ltd.)’를 설립(4억 달러 공동출자)하여 제3세계에서 운용 중인 모든 유형의 러시아제 전투기에 대한 정비 및 수리를 담당할 예정이었는데, 인도 정부는 이 사업이 과거 러시아와 인도의 국방 관련 관계인 ‘판매자·구매자’ 관계에서 ‘참여와 상호작용’으로 새로운 관계유형을 창출한 사례로 평가하였다.⁹³⁾

군사 분야의 협력 또한 지속적인 진전이 있었다. 정상회담 직전인 1994년 5월 러시아 국영 방산물자 수출업체(Roosvooruzheniye)의 대표인 사모일로프(Viktor Samoilov)가 인도를 방문하여 15억 달러를 상회하는 새로운 수출품목—전함, 전투기, 헬리콥터,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탱크 등—을 제시하였다. 사모일로프는 파키스탄에 대한 무기판매 논란과

93) Bakhshi(1999), pp. 238-239.

관련하여 러시아는 인도와 협의 없이 파키스탄에 무기를 판매할 가능성은 없다고 언급하였다.

엘친 정부는 1998년 12월, 프리마코프의 인도 방문을 계기로 경제, 금융, 무역, 방위, 과학기술, 문화 등 다방면에서의 협력에 동의하였다. 소련 해체 이후 시장경제로의 이행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석유 산업의 전반적으로 부진하자 러시아는 경제건설을 위한 재원마련이 시급했으며 무기 수출이나 원자로설비 수출을 통해 상황을 호전시키려는 경제적 의도가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아시아 지역에서 무기를 현금으로 대량구매할 수 있는 여력을 지닌 국가는 일본, 한국, 대만, 싱가포르, 중국, 인도 정도였고 그중에서 대외관계 및 전략적 측면에서 러시아제 무기체계에 관심이 있는 국가는 중국과 인도였다. 러·인도 간에 2010년까지의 군사기술협정에 따라 약 150억 달러에 이르는 러시아산 무기체계공급이 예상되었고, 중국은 1996~97년 동안 70억 달러에 이르는 선진무기체계를 러시아로부터 이미 구입하였고, 2000~04년의 약 5년 동안에 200억 달러에 이르는 공군 및 해군의 하이테크 시스템을 러시아에서 구입하기로 예정되었던 점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 해준다.⁹⁴⁾

2) 지역분쟁 및 영토문제에 대한 체제통합적 요인

러시아와 인도는 지역분쟁과 영토문제에서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것은 양국의 협력을 추동하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러시아에는 체첸의 분리독립문제와 중앙아시아 지역 분쟁이 체제통합성

94) Subhash Kapila, pp. 9-11.

과 구 소비에트 공간의 안정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인도에는 카슈미르 문제 등 파키스탄과의 영토분쟁과 이슬람분리주의 운동 등이 체제통합에 중대한 위협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양국은 분리주의 운동과 테러와의 전쟁에서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다.

냉전시기인 1980년대 초반 라지브 간디의 인도 정부는 소련 지도부가 인도의 안보 우려-미국의 파키스탄 군비지원, 파키스탄의 핵 프로그램, 인도양에서의 미국 해군력, 소련의 아프간 주둔, 아프간 내전 등-에 대해 공감한다고 판단하였고, 그 또한 아프가니스탄 문제에서 소련의 입장에 대해 이해를 표명하였다. 소련은 아프간 문제에서, 탈레반 세력을 비롯한 반정부군에 대한 서구의 지원에 특히 우려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 중단을 요구하였다. 1988년 4월에는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대한 이정표적 합의가 제네바에서 미·소 양국의 보증 아래 이루어졌다. 제네바 합의에 따라 소련은 1989년 5월 15까지 아프간으로부터 완전 철군-1989년 2월 15일에 조기철군 완료함-하는 데 동의하였고,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은 상호 내부문제에 개입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소련의 아프간 철군은 베트남의 캄보디아 철군(1989년 9월)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등 남아시아 및 인도차이나 지역의 분쟁해결과 안정기반 구축에 기여하였으며, 이러한 성과물은 지정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인도차이나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인도의 전략적 이해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1988년 뉴델리 정상회담의 공동선언에서 고르바초프와 라지브 간디는 INF 협정 체결, 아프간 문제에 대한 제네바 합의 등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고 남아시아와 인도차이나 지역의 분쟁해결에 대한 양국의 일치된 견해를 피력하였다. 지역 안정에 대한 모색의 일환으로 소련과 인도는 인도

양을 평화지역으로 전환하는 방안, 즉 인도양에 있는 모든 외국군사기지의 폐쇄, 비핵지대화 등을 제안하였다.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한 남아시아 지역에서 당시 인도와 소련의 전략적 이해는 상호 부합하였다. 예를 들어 소련 지도부는 아프가니스탄 분쟁과 캄보디아 위기-베트남의 군사개입과 내전-에서 보여준 인도의 역할을 중요하게 평가하였다. 제네바 합의 후에도 아프간에서는 나지불라 정권과 무자헤딘 반군 사이의 교전이 계속되었는데, 서방과 파키스탄의 지원을 받던 반군은 소련의 철군과 더불어 카불 정권이 붕괴하기를 고대하는 상황이었다. 소련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사회주의정권이 수립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기보다, 카불에 반소비에트적인 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우려하였다. 더 나아가 아프가니스탄에 ‘이슬람 근본주의’ 정권이 수립되면 소련의 전략적 급소 중의 하나인 중앙아시아의 이슬람 공화국들에 ‘이슬람 근본주의’의 영향이 넘어올 것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었다. 따라서 소련은 철군 후에도 나지불라 정권에 대해 원조를 계속하였고, 인도 또한 동일한 이해관계에서 제네바 합의 이후 카불 정권에 대한 정치 외교적 지원을 확대하였다. 인도의 판단으로는 파키스탄이 펀자브에서 아프간 반군과 분리주의자/테러리스트들에 대한 군사훈련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인도 북서부 지역에 대한 위협뿐 아니라 남아시아 지역 전체의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1989년 아프간에 주둔한 병력이 철수한 이후에도 나지불라 정부를 정치 경제적으로 지원하던 고르바초프의 소련이 1991년 후반, 파키스탄과 접촉하고 외교적 지원을 시작한 이래로 러시아 엘친 정부는 나지불라 정부에 대한 정치 경제적 지원을 중단하였다. 1991년 12월, 소련/러시아 지

도부는 파키스탄의 지원을 받던 헤즈볼 무자헤딘(Hezbul-Mujahideen) 아프간 반군 대표단의 모스크바 방문을 허용하여 ‘이슬람 과도정부’ 수립을 합의한데 이어, 1992년 엘친 정부는 1월 1일부로 아프간행 군용수송에 대한 연료지급중단을 비롯하여 모든 군사 관련 지원과 공급을 중단하였다. 러시아의 지원이 중단된 지 4개월 만인 1992년 4월, 무자헤딘이 카불을 장악하여 아프간에는 이슬람정권이 수립되었다.

아프간에서 러시아의 철수는 남아시아 지역분쟁에서의 철수와 파키스탄과 관계회복을 의미했다. 미·소의 화해, 소련군의 아프간 철수 등과 더불어 남아시아에서 파키스탄이 지닌 지정학적 이점이 약화되면서, 냉전시기 남아시아 지역에서 소련·인도 관계를 견제하고 인도양에서 중앙아시아로의 영향력 투사를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던 미국의 우방—특히 1989년 아프간 전쟁에서 미국의 맹방—인 파키스탄에 대해 부시 행정부는 1990년부터 무기이전을 비롯한 군수물자 공급을 중단하고 경제적 제재를 모색하였다. 파키스탄의 핵 프로그램 강행에 대한 우려가 미국의 표면적인 이유였다. 이에 따라 파키스탄의 소련/러시아에 대한 전략적 이해는 재차 상승하였고, 아프간 문제를 가까스로 봉합한 모스크바 또한 파키스탄의 접근에 긍정적으로 부응하였다. 1991년 11월, 소련이 파키스탄이 주도한 결의안을 유엔에서 처음으로 지지한 것과, 12월 러시아연방부통령이자 아프간 전쟁영웅인 루츠크이(Alexandre Rutskoi)가 이슬라마바드를 전격 방문한 것 등은 파키스탄과의 관계개선에 대한 상징적인 조치들로 해석되었다. 당시 파키스탄이 중앙아시아 신생국가들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아프간에 접경해 있다는 사실—중앙아시아에 대한 종교/문명적 친화성과 아프간에 대한 정치적 견제의 가능성을 동시에 보유—과, 파

키스탄·이란·터키에 이르는 근동 국가들과 ‘이슬람 라인’ 형성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이 경우에 중앙아시아로 ‘이슬람 라인’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파키스탄을 ‘핵심적인 이슬람 국가들’ 중의 하나로서 인도보다 전략적 우선순위를 높게 평가하는 견해들⁹⁵⁾이 제기되었다.

1991년 후반 러시아연방이 독자적인 외교행보를 시작한 이래로 남아시아 정책의 주요 방향은 인도와 파키스탄의 균형에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1992년을 경과하면서 러시아의 정책 균형추는 인도로 움직이고 있었다. 당시 중앙아시아에서는 타지키스탄 내전(1992~97) 등 이슬람 분리주의 운동이 본격화되고 있었다. 이 지역의 분리주의 운동이 중앙아시아 지역 내의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파키스탄, 아프간 반군, 알카에다 등과 국제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 특히 파키스탄이 분리주의 세력의 근거지를 제공하며 중앙아시아에서 이슬람 블록 형성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 러시아 정보당국의 분석이었다. 1993년 양국 정상회담에서 옐친은 카슈미르 문제 등 남아시아 지역의 인도의 핵심 관심사에 대한 러시아의 전통적인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옐친은 카슈미르 문제와 관련하여 ‘진실은 인도의 편’이라는 수사를 통해 지역문제에서 인도에 대한 지지를 웅변적으로 표현했다. 이처럼 확고한 지지표명은 흐루시초프의 ‘스리나가르를(Srinagar) 연설’ 이후 처음이라는 것이 인도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1992년 5월,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의 분리주의 운동으로 촉발된 타지키스탄 내전에서 분리주의 운동은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과 연계되어 있었다.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분리주의 운동이 중앙아시아와 러시아로 확산되는 것에 공동의 우려를 나타냈

95) Leszek Buszynski(1992~1993), p. 490.

고 이로 인해 1992년 8월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은 아프가니스탄과 접경한 타지키스탄 국경을 보호하기 위해 ‘러·중앙아시아 평화유지군’을 창설하기로 합의하였다. 인도 또한 파키스탄과 남아시아에서의 전략적 경쟁, 카슈미르 분쟁으로 상징되는 이슬람 세력의 확장에 대한 전략적 우려 때문에 역사적으로 깊은 연관관계를 지닌 중앙아시아 지역에 이슬람 근본주의가 확산되는 것, 더 나아가 페르시아 지역에서 중앙아시아에 이르는 범무슬림 벨트의 형성을 우려하였다. 이미 이란은 타지키스탄의 이슬람부흥당(IRP)을 지원하였고, 파키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들 내부의 근본주의 무슬림에 대한 교육과 무장을 본격화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러시아와 인도는 타지크 내전에 대처하면서 상호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였고, 러시아는 유엔이 지원한 타지크 평화협상에 인도가 참여하는 것을 적극 지지하였다. 무엇보다도 러시아는 1993년 분리독립을 선언한 체첸 문제, 인도는 카슈미르 분쟁이 이슬람 분리주의와 직접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양국은 공동의 이해관계에 있었다.

러시아는 초기에 파키스탄에 대한 전략적 평가를 재고하여 SU 27 전투기를 비롯한 무기판매 허용을 포함하는 관계강화를 모색하였으나 체첸 반군에 대한 파키스탄의 연계문제, 아프간 내전에서의 개입과 타지크 내전에서의 분리주의 세력지원 등은 오히려 정부로 하여금 파키스탄에 대한 전략적 선택을 주저하게 한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인도·파키스탄의 대립이라는 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세력경쟁 요인이었다. 파키스탄에 대한 전략적 선택은 인도에 대한 관계를 고려해야 했다. 탈냉전기 러시아에 파키스탄은 새로운 협력자로서 외교적 가능성은 있었으나 남아시아뿐 아니라 중앙아시아 지역의 국제질서를 변경하려는 수정주의

적 의도를 지니고 있는데 비해 인도는 전통적으로 현상유지(status quo) 세력이라는 것이 러시아의 판단이었다.

1994년 모스크바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다인종 국가’로서 세계 공동체에 대한 책임성뿐 아니라 ‘영토적 통합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 상호 지지할 것을 합의하였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러시아는 카슈미르 문제에 대해 인도를, 인도는 체첸 문제에 대해 러시아를 각각 지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1994년 12월로 예정되었던 파키스탄 부토 총리(Benazir Bhutto)의 모스크바 방문과 엘친과의 회담이 ‘바쁜 일정’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연기된 사실은 파키스탄에 대한 엘친 정부의 전략적 유보를 시사하는 것이었다.

인도와 러시아는 ‘대중아시아’ 남부에 테러 및 교전벨트가 확장되어 인도의 펀자브와 잠무카슈미르 지역, 그리고 러시아의 캅카스 지역으로 넘어오는 것을 우려하였다. 양국은 이미 ‘9·11’ 이전에 테러리즘과 분리주의의 연계성, 테러리즘과 종교적 근본주의에 대한 세계 공동체의 공동 대응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테러와의 전쟁’보다 선견지명이 있었다는 후일의 평가도 있다.⁹⁶⁾ 1994년 8월 인도의 외무장관 스리니바산(K. Srinivasan)이 제49차 유엔총회 관련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모스크바를 방문하였다. 카슈미르 문제를 ‘국제화’하려는 파키스탄의 외교적 시도에 대해 인도는 ‘양자 해결’을 주장하였고 러시아는 인도의 입장에 대해 유엔에서 지지의사를 표명하기로 약속하였다.

1996년 인도 방문에서 프리마코프는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범중아시아 지역에서의 이슬람 근본주의, 분리주의 운동의

96) Mahaparta(2006), p. 62.

심각성에 대해 언급하고 이슬람 근본주의로부터 중앙아시아를 보호하기 위해 러시아군의 주둔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양국 외무장관 회담에서 서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의 분리주의 운동, 체첸과 카슈미르 문제에서 양국의 이해가 일치한다는 입장, 즉 ‘영토적 통합성’ 문제가 양국의 최우선적인 이해라는 입장이 확인되었으며, 테러리즘 문제가 다민족, 다인종 국가로서 인도와 러시아의 문제임과 동시에 국제안보를 위협하는 세계 문제임이 강조되었다. 또한 탈레반을 지원하는 파키스탄에 대한 미국의 후원 문제, 그해 후반에 계획된 우즈베키스탄과 미국의 합동군사훈련, 그리고 러시아의 지원을 받던 타지키스탄 라흐모노프(Emomali Rahmonov) 정부에 대한 미국의 압박 등 중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 증대 문제 등에 대한 의견들이 교환되었다. 9·11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테러와의 전쟁, 분리주의 운동저지 등에서 러시아와 인도의 전략적 협력은 견고히 유지되고 있다.

나. 러·인 관계의 갈등요인

1) 미국요인(US factor)

냉전시기, 소련과 인도의 전략적 협력관계 수립이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의 수정(닉슨 독트린과 미·중 화해)에 기인하였듯이 탈냉전기 러시아와 인도 관계 또한 미국의 전략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탈냉전 초기, 러시아와 인도의 전략적 제휴관계가 일시적으로 약화 및 해체되는 국면에서 다시 복원되는 과정으로 선회한 배경에는 무엇보다 양국에 전통적으로 존재하던 정치, 경제, 군사적인 상호관계의 경로의존성의 재작동으로 볼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NATO

확대, 민주주의 확산 전략 등 미국 주도의 일극체제 형성에 대한 러시아의 반발과 인도의 우려가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러시아와 인도는 양국 관계가 미국과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으나 상대방이 미국과 일방적인 관계에 돌입하는 것 또한 경계하였다. 특히, 러시아로서는 미국과 인도가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으나, 러시아가 인도와 전략적 협력 아래 역사적으로 아시아에서 누리던 전략적 이익을 훼손당하는 것은 원치 않을 것이다.

현재 미국, 러시아, 인도의 삼자 관계에서 전략적으로 가장 유리한 위치를 점한 국가는 인도이다. 러시아가 인도에 대한 관계 복원을 시도한 이유는 앞서 언급한 대로 미국요인이 자리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견제, 그리고 인도는 ‘아시아 전환(Asia shift)’ 정책에서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로 평가되었다. 중국과 협력적 파트너 관계의 유지를 통해 소련을 견제하던 냉전시기와는 달리, 미국은 인도에 접근하여 러시아·중국 간의 ‘대륙(준)동맹’ 체제와 특히 중국에 대한 견제를 시도하고 있다.

인도가 기존 계획중심의 혼합경제정책을 수정하여 탈냉전 초기에 경제개혁을 통한 성장정책으로 전환한 것, 그리고 미국이 우선순위가 낮은 ‘전략적 벽지(strategic backwater)’에서 ‘천연의 동반자(natural partner)’로, 더 나아가 ‘불가결한 동반자(indispensible partner)’이자 초기 단계의 강대국으로 인도에 대한 전략적 인식을 변화한 것⁹⁷⁾ 등은 미국과 인도 관계의 재설정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1998년 인도의 핵실험으로 미국과 인도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냉각되었으나 미국은 인도에 대

97) K. Alan Kronstadt(2010), p. 1.

한 접근을 계속 추진하였다.

양국 관계가 협력 관계로 전환되었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은 2000년 클린턴 대통령의 뉴델리 방문이었다. 양국 정상은 회담 결과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키기 위한 공동성명에 서명하였다. 2001년 11월 부시 대통령과 바지파이(Vajpayee) 총리는 ‘정례적인 고위급 정책대화에 기반한 방위 동반자 관계’ 수립에 동의한 데 이어 2004년에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2005년에 만모한 싱 총리는 워싱턴을 방문하여 부시 대통령과 ‘글로벌 동반자’로 격상시켜나갈 것을 합의하였고, 부시 대통령은 인도에 ‘민간 핵협력’을 약속하였으며, 양국 정부가 ‘10개년 신방위협력틀’에 서명하였다. 2006년 뉴델리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은 ‘인도가 21세기 주요한 세계강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미국이 지원할 것’이라고 천명하였다.⁹⁸⁾

인도와 미국의 군사협력은 1992년부터 시행된 ‘말라바르 합동해상훈련(Malabar naval exercise)’에 연원을 두고 있으나 양국의 긴밀한 협력은 21세기 들어와 본격화되었다. 양국 합동군사훈련은 1998년 인도의 핵실험 강행으로 중단되었다가 ‘테러와의 전쟁’을 계기로 인도에 대한 전략적 우선순위가 강조되면서 2002년에 재개되었다. 이후 ‘말라바르 훈련’이 2007년 일본과 호주, 싱가포르 등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주요 동맹국들과의 해상합동군사훈련으로 확대되는 등 미국과 인도의 군사협력은 미국의 주도로 계속되고 있다.

2002년부터 활성화된 미국 군사장비 등 주요 군수물자에 대한 인도의 구매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인도는 2002년 총 1억 9,000만 달러의

98) K. Alan Kronstadt(2006), p. 5.

‘파이어 파인더(Firefinder)’ 레이더 구입을 시작으로 2006년에는 상륙함 USS Trenton(INS Jalashwa), 2008년에는 군수공기 허큘리스(C-130J Hercules) 여섯 대, 2009년에는 약 20억 달러 상당의 해상 감시기(P-8I maritime surveillance aircraft) 여덟 대를 구매하는 계약에 각각 서명하였다. 이외에도 무엇보다 미국에 매력적인 무기판매는 인도가 요청한 중범위 다목적 전투기(MMCA: multi-role combat aircraft) 판매인데 126대로 총 110억 달러에 이르는 액수이다.⁹⁹⁾

이러한 인도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은 공식적으로는 ‘테러와의 전쟁’을 배경으로 한 것이지만 러시아가 인도와 중국과 전략적 삼각관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던 시기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대륙의 전략적 삼각체제’의 형성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국과 인도의 협력관계가 러시아와 인도 관계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하기 어려우나 미국의 인도에 대한 관계강화 정책이 내용적으로 중국에 대한 견제 강화가 목적이라는 점에서 ‘전략적 삼각체제’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또한 미국과 인도 관계의 전략적 심화는 러시아와 인도의 전통적인 관계를 약화시킬 가능성도 동시에 존재한다. 예를 들어 2004년 미국과 인도의 뉴델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공동성명에 인도의 요청으로 러시아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삽입된 것은 미국과 인도 관계가 인도와 러시아 관계에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반증이다. 공동성명에는 ‘인도는 러시아를 국제사회의 주요하고 매우 주동적인 성원으로 그리고 지구적 관심사에 대해 주목할 만한 주장을 할 수 있는 국가로 간주하고, 인도는 러시아의

99) K. Alan Kronstadt(2010), p.55.

WTO 조기가입을 지지하며, 이러한 것을 미국과 인도는 러시아와 인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표시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애써 강조되었다. 이것은 미국과의 관계강화가 러시아에 대한 관계악화를 초래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인도의 전략적 고려가 작용한 것이지만, 양국 공동성명에 제3국인 러시아에 대한 관계가 전략적인 관계로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며, 미국과 인도의 관계 강화가 인도와 러시아의 관계 악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예방대책이라 할 수도 있다.

군사 분야에서 미국과 인도의 협력증진은 중앙아시아 등 아시아 지역에서 러시아에 장기적으로 전략적 악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데, 특히, 군사장비판매와 핵기술협력은 중장기적으로 러시아에 경제적 측면에서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과 인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케도에 올랐던 2005년, 인도 정부는 이에 대한 러시아 푸틴 정부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같은 해 11월 인도의 국방장관 무헤르지(Pranab Mukherjee)는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러시아 정부에 미국과 인도의 군사협력을 설명하면서 “인도는 러시아 군사장비의 최대 수입국이며, 향후에도 이러한 협력관계가 악화될 위험은 없다”고 강조하였다. 그럼에도 2008년 10월, 부시 대통령과 싱 총리가 양국에 ‘민간 핵기술 협력을 위한 법적 제약의 제거’를 선언하였을 때 러시아의 우려는 점증하였다. 미국의 이라크전 강행과 ‘일방주의 정책’에 비판적이던 러시아는 2005년에서 2008년에 이르는 기간에 나토의 3차 확대와 동유럽 MD 문제 등을 놓고 미국과 첨예하게 갈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과 인도의 관계 강화에 대한 러시아의 우려는 대략 세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인도가 미국의 MD 계획에 협력할 의사가 있다는 점, 다음

으로 인도가 미국, 일본, 호주와 더불어 4개국 합동군사훈련을 정례화하고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이러한 미국과 인도의 전략적 협력강화가 러시아의 아시아 정책에서 인도의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¹⁰⁰⁾ 실제로 인도 정부는 미국과 BMD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2002년 5월과 6월에 전문가팀을 미국에 파견하였다. 이러한 우려에도 현재까지 러시아와 인도의 전략적 협력관계는 정상회담을 통해 공식적으로 굳건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미국과 인도 관계의 진전과 비교할 때, 러시아와 인도 관계가 정치적 리더십의 유대에 비해 경제적 상호협력이 지체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양국 관계의 발전이 군사안보적 측면에 치우쳐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미국과 인도의 전략적 관계의 진전에 따라 중요한 변화가 초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중국요인(China factor)

러시아와 인도 관계의 한계가 정치 군사적 협력과 경제협력 간의 비대칭성, 다시 말하면 정치 및 군사 분야의 협력에 비해 경제 분야의 협력이 냉전시기와 비교할 때 저발전된 것이 사실이나, 러시아와 인도의 전략적 협력관계에서 주요갈등요인으로 잠재하고 있는 것은 ‘중국요인’이다. 21세기에 들어와 ‘다극체제’ 구축, 테러와의 전쟁, 분리주의 대처 등에 대한 공동보조를 기반으로 강대국 지위의 회복, 지역 또는 글로벌 강국으로의 부상이라는 국제질서 재편의 전략적 목표를 지향하는 삼각체제의 구축에서 ‘중국요인’은 현재까지 순기능으로 작용한다. 그럼에도 ‘중국요인’은

100) Vidya Nadkarni(2010), p. 94-95.

미·중 관계와 중·인 관계의 메커니즘 변화에 따라 장기적으로 러시아와 인도 관계, 더 나아가 러·중·인 삼각체제에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냉전시기에 러시아와 인도가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한 직접적인 배경이 ‘중국요인’이었음을 상기해보면, 러·인 관계에 작용하는 ‘중국요인’의 결정성을 이해할 수 있다. 소련과 중국의 이념갈등이 표면화 되던 1959년과 1962년에 발생한 중국과 인도의 국경충돌에서 소련이 사회주의 동맹국인 중국이 아니라 인도를 지지함에 따라 인도는 대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 제휴의 대상으로서 소련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1966년 소련이 인도·파키스탄 분쟁을 조정하는 타슈켄트 협정체결이 성공하였고, 1969년 중국과 국경충돌로 중소분쟁이 격화되자 이러한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 소련과 인도의 전략적 협력관계가 공식화된 것은 1971년 3월 닉슨의 중국방문이 가시화되고 미·중관계의 정상화가 기정사실화되면서 양국의 우호조약이 체결되면서부터이다. 이후 냉전이 해체될 때까지 소련·인도와 미국·중국 간의 전략적 대립 구조가 유지되었다.

냉전이 해체되어 소련과 인도의 전략적 제휴의 구조적 요인이 사라지면서 일시적으로 러시아와 인도의 관계가 약화되었으나 NATO 확대 등 미·러의 전략적 갈등이 재연되면서 러·인 관계가 복원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중국요인’은 냉전시기와는 다르게 러·인 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미·중의 전략적 갈등이라는 새로운 구조적 요인이 자리하고 있다. 러시아를 ‘전략적 접착제’로 하여 중·인 관계는 협력 관계로 전환되어 국경문제 등 양국의 갈등요인을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 있으나 중·인 간의 갈등요소가 구조적으로 해결되

지 않는다면 러·인 관계는 균열될 가능성이 있다. 냉전시기에는 중·인 갈등이 소련과 인도 관계에 ‘유인요인(pull factor)’으로 작용하였으나 현재는 중·인 갈등이 러·인 관계에 ‘배출요인(push factor)’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탈냉전기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는 구조적 전환을 통해 전략적으로 ‘특권적 지위’를 상호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갈등 시나리오’의 측면에서 볼 때, 인도와 중국의 갈등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토와 에너지 및 자원 문제, 그리고 남아시아에서의 세력권 설정 문제, 그리고 전략적 가치 등에 대한 상호 ‘비대칭적 인식’ 문제이다. 영토 문제와 관련하여 양국 사이에는 여전히 인식적 편차가 존재하고 양국의 경제 급성장에 따른 에너지 수요 증가와 수송로 확보에 따른 양국의 긴장 가능성 또한 간과할 수 없는 긴장요인이다. 국경 문제가 중국과 인도의 갈등과 관계조정에서 직접적인 현안이라면, 서남아시아에서의 세력권 설정 문제는 양국이 해결해야 할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들과 더불어 역사적으로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경제적 의미를 넘어선 국제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는 수자원 문제 또한 갈등 요인으로 항존한다. 정치적 의미를 지닌 안보문제로서 브라마푸트라 강(Brahmaputra) 등 수자원 이용문제는 미래 시점에 양국의 갈등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양국의 갈등요인적 전망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상술하기로 한다.

3. 러·인 관계가 삼각체제에 미치는 영향

가. 과거로부터의 전망: ‘제1차 삼각체제’에 대한 회고

러·중·인 삼각체제(ST: Strategic Triangle) 형성에서 중·러 관계를 ‘강한 고리’, 중·인 관계를 ‘약한 고리’라 표현한다면 러·인 관계는 ‘고리의 시작점’에 비유할 수 있다. 삼각체제가 시작될 시점에서 중·러 관계에 비해 러인관계는 전략적 이해관계 면에서 사활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러시아와 인도의 전략적 협력관계가 복원되지 않았다면 삼자의 관계는 형성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서론에서 보았듯이, 1996년 3월 취임 첫 외국 방문으로 인도를 선택했던 프리마코프 외무장관은 1998년 12월 뉴델리를 방문하여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러시아, 중국, 인도의 전략적 삼각관계구축(프리마코프 구상)을 공식 제안하였다. 인도에 전략적 삼각체제를 제안한 지 약 3개월 후에 ‘프리마코프 구상’은 1999년 미국의 코소보 공습에 대한 러시아의 저항에 대해 인도와 중국이 동참하면서 가시화되었다. 1999년 3월 26일, NATO의 유고 공습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공습중단에 대한 러시아의 제안에 대해 미국 등 12개 이사국들(비상임이사국 포함)이 반대하였을 때 중국이 러시아의 제안에 찬성하였고, 인도는 러시아의 제안을 공동 입안하였다. 인도의 유엔 상임대표는 안보리 표결 직후에 ‘코소보 공습을 국제사회가 지지한다는 NATO의 견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인구만으로도 세계인구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중국, 인도, 러시아 등 3국은 공습을 반대’¹⁰¹⁾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

101) 지일우(1999).

다. 물론 인도가 공식적으로 프리마코프의 구상을 전제로 러시아의 주장에 동조한 것은 아니지만 내용적으로 프리마코프 구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소련 해체 이후 중요 국제 문제에서 삼국간의 전략적 공조의 최초 사례로 기록되었다. 이렇게 복원된 삼국의 전략적 관계는 현재 진화단계이며, 냉전기 미완의 관계로 끝난 좌절된 삼각관계에 기원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제2차 대전 이후 중·인 국경분쟁과 중·소 분쟁이 시작되기 전 1950년대까지 약 10여 년간의 밀월관계가 러·중·인의 제1차 협력관계였다고 가정하면 탈냉전기에 삼국의 협력 관계는 제2차 협력관계의 형성으로 평가할 수 있다. 1947년 네루는 인도의 독립과정에서 일찍이 소련과 중국에 대한 방문을 희망하였다. 네루 총리의 소련에 대한 협력적 인식은 식민지 독립운동에 대한 소련의 지원과 더불어 소련의 사회 경제 개혁의 성공과 사회주의 경제모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 기인하였다. 중국과의 협력인식에서도 네루가 설정한 인도 외교의 반제국주의적 과제는 일정한 동기를 부여한 것이 사실이다. 네루에게 중국과의 협력은 식민지 해방 이후 아시아에 대한 서방 강대국의 도구화를 예방하고 새로운 아시아를 건설하는 데 중요한 전략수단으로 평가되었다. 물론 ‘강력한 중국’이 인도에 전략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었으나 인도의 북방 국경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인도 정부는 중국공산혁명 성공에 신속하게 반응하여 1949년 12월 30일 중화인민공화국을 비공산주의 국가로는 두 번째—첫 번째 승인국가는 버마—로 승인하여 양국 관계가 아시아의 평화 구축에 본질임을 인정하였다. 인도는 중국의 유엔 가입을 지지하였고 한국 문제를 다룬 제네바 협정에서 중국, 소련과 공조

를 취하였다.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러·중·인 삼국의 외교적 협력이 본격화되었다. 1954년 4월 29일 중국과 인도가 티베트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데 이어 1954년 10월, 네루가 베이징을 방문하여 양국 관계의 평화적 발전에 대해 피력하였다. 네루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아시아의 평화구축뿐 아니라 인도의 전략적 지위의 상승에도 기여했다고 판단하였다. 중국 방문에 이어 네루는 1955년 6월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중·인 관계의 발전을 논의하였다. 당시 소련의 불가닌 총리는 소련·중국·인도, 삼국의 친선관계를 강조하였고 인도를 여섯 번째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초청할 것을 제안하였다.

1955년 12월, 흐루시초프 소련 공산당 제1서기와 불가닌 총리가 인도를 방문하여 당시 인도 최대의 현안이던 카슈미르 문제에 관하여 토의한 후, 소련은 미국과 다르게 파키스탄과 대립 중인 인도를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소련과 인도 양국은 국제적 공조관계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당시 불가닌 총리는 러시아, 중국, 인도 삼국을 ‘아시아의 3강’으로 표현하면서 삼국이 세계평화를 위해 공조하고 있다고 강조하였고 흐루시초프는 스리나가르에서 한 연설에서 카슈미르가 인도의 영토임을 주장함으로써 인도를 지지하였다.¹⁰²⁾ 러·중·인 관계에 대한 ‘아시아의 3 강’이라는 용어는 50여 년 후, 2005년 봄 원자바오 총리가 뉴델리를 방문하여 중국·인도·러시아 관계를 ‘영향력 있는 삼국’으로 표현하면서 ‘제2의 삼각체제’ 형성과정이 부활하였다.

독립 직후인 1949년, 곤경에 처한 인도의 경제문제 등과 국가발전에

102) Gilles Boquerat(2004), pp. 2-8.

대한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네루 총리가 시도한 첫 미국 방문에서 트루먼 대통령이 네루의 요청을 사실상 거절함으로써 인도와 미국 관계는 독립 초기부터 소원해진 데 이어, 아이젠하워 정부의 덜레스(John Foster Dulles) 국무장관이 ‘미국에 협력하지 않는 국가는 미국에 대항하는 것’이라는 발언을 하면서 양국 관계는 더욱 균열되었다. 인도는 당시 냉전 군사동맹체제의 고착화를 반대하면서 ‘비동맹운동’을 시작하는 한편, 중국과 관계 재조정을 통해 동맹체제에 대항하려 했다.

중국에 대한 네루의 협력적 인식은 이미 1920년대 식민지 독립운동과정에서 발원한 것으로, 중국의 혁명과 항일운동에 감명을 받은 그는 전후 아시아의 국제질서 재편하는 과정에서 아시아의 대국인 중국과 인도 양국이 상호 협력하여 아시아의 평화를 구축하려는 외교구상을 하고 있었다. 물론 독립 직후부터 양국에는 국경문제가 갈등 현안으로 등장하였으나, 1954년 티베트 문제에 대한 중·인 조약을 체결하여 양국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평화공존 5원칙’에 서명하면서 양국은 우호협력관계를 구축하였다. 1956년 중국의 저우언라이 총리가 인도를 방문했을 때, ‘인도와 중국은 형제(hindi chini bhai bhai)’라는 찬가가 울려 퍼질 만큼 양국 관계는 정점에 달하였다.¹⁰³⁾ 이 과정에서 소련과 인도 또한 우호 관계를 수립하여 중·소의 동맹관계(1950)와 더불어 1950년대 삼국 간에는 대륙아시아의 삼각 협력관계—비록 길지 않은 기간이었지만—가 성립되어 아시아의 국제 정치지형에 주요한 전략적 가능성으로 등장하였다. 냉전기의 삼국 협력관계가 전략적인 측면에서 ‘발아상태의 비구조적 관계’였다면, 탈냉전기에 등장한 삼국의 ‘전략적 협력체제’는 좀 더 ‘진화된 형태의 구조

103) Eric Reiter and Peter Hazdra eds.(2004), pp. 103-104.

적 관계'이다.

나. 현재적 의미와 전망: '제2차 삼각체제'로의 진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과 인도의 갈등요인이 존재하는 것은 러·인·중 삼각협력체제의 전망에 부정적인 평가를 유도할 수 있다. 먼저 영토 및 국경 문제를 살펴보면, 2005년 4월 원자바오 총리와 만모한 싱 총리 간의 뉴델리 회담에서 1962년 국경 충돌 이후 획정된 '실질통제선(LAC: Line of Actual Control)'에서 군사적 신뢰구축을 포함한 국경문제 해결을 위한 두 개의 문서¹⁰⁴⁾ 채택에 도달하였으나 영토 문제와 관련하여 양국 사이에는 여전히 인식적 편차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2005~06년 사이 인도의 의회 질의에 있어서 상하 양원은 국경 문제에 대한 우려와 협상과정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였다. 인도 의회의 우려는 티베트에서 중국의 사회 및 군사 인프라의 확장에서부터 LAC에 중국 군사시설 건설, 불법점령, 그리고 양국 국경을 가로지르는 강들에 대한 중국의 댐 건설, '아루나찰 프라데시(Arunachal Pradesh) 주(州)'에 대한 중국의 영토권 요구 등에 이르기까지 영토와 자원 문제 등을 포괄하였다. 2006년 11월 후진타오 주석이 인도를 방문하기 직전에 인도 주재 중국대사인 쑨 위시(Sun Yuxi)가 '아루나찰 프라데시는 중국의 영토'라고 주장¹⁰⁵⁾함으로써 영토 문제에 관련한 인도 국민의 감정을 자극하여 양국에 내재된 갈등요

104) 뉴델리 회담에서 '중인국경지역 LAC상의 군사기지에서 신뢰구축조치 실행을 위한 양식(8개항의 프로토콜)'을 담고 있는 『2005 신뢰구축을 위한 프로토콜』, 그리고 '중·인 국경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적 조건과 가이드 원칙(11개 항)'을 다루는 『2005 국경문제에 관한 합의』가 채택되었다.

105) Lisa Curtis and John J. Tkacik, Jr.(2102).

소의 분출 가능성을 드러냈다. 당시 중국의 싱크탱크들—CIIS(China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은 양국의 민족주의적 감정에 비추어 국경문제의 평화적이고 만족할 만한 해결을 위한 조건과 분위기가 성숙되지 않았다고 분석하였다. 그들 중 일부는 인도의 국경문제 인식에 대해 ‘영국 식민지적 사고방식’이라 혹평하였고, 인도양에 대한 군사력 확장을 통해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려는 인도의 ‘전략 목표’에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였다.¹⁰⁶⁾

국경문제 협의를 위한 중요한 모멘텀이 될 만만한 싱 총리의 베이징 방문(2008년 1월)을 앞둔 2007년 10월, 전 주인도 중국대사 조우 강이 “중국은 맥마혼라인(McMahon Line)을 인정할 수 없고 인도는 동북부 국경에 대한 근본적인 재조정을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데 이어, 11월 중국 국경수비대가 중인 접경지역에 있던 인도의 군사병커를 임의로 파괴하자 인도 정부는 강하게 항의하였다. 2008년 5월 인도 외무장관 프라납 무헤르지(Pranab Mukherjee)가 베이징을 방문하여 양국의 군사협력 확대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직후에도 같은 해 6월 중국 국경수비대가 인도 시킴(Sikkim) 주 북동부 최전방 국경 내 1km 이상 진입하여 인도의 국경 석축 구조물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었다. 2008년 11월 인도 외무장관 무헤르지가 ‘아루나찰 프라데시는 인도의 통합영토’라고 주장한 데 대해 중국 외무부는 이러한 인도의 주장을 일축하였다.¹⁰⁷⁾

양국의 경제 급성장에 따른 에너지 수요 증가와 수송로 확보에 따른

106) Vidya Nadkarni(2010), p. 132.

107)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USA)(2009).

양국의 긴장 가능성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요인이다. 인도 정부의 예측에 따르면 2025년경, 인도의 하루 에너지 수요량은 740만 배럴, 중국은 1,500만 배럴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로 인해 양국에는 에너지 안보가 주요 이슈로 등장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양국의 경쟁은 아프리카와 중동, 중앙아시아 등 제3국에 대한 에너지 자원 접근뿐 아니라 에너지 수송로의 안보문제에서 치열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에너지 확보경쟁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카자흐스탄의 3위 석유회사(Canadian Company Petroleum Kazakhstan) 인수전에서 벌어진 양국 정부의 갈등을 들 수 있다. 2005년 인도의 석유천연가스공사(ONGC)가 카자흐스탄과 기업인수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 중국의 석유공사(CNPC)가 인도의 제안액(3억 9,000만 달러)보다 많은 액수(41억 8,000만 달러)를 제시하면서 ‘페트로 카자흐’의 인도 인수가 좌절된 바 있다.

중국의 현대국제관계연구소(CICIR)의 장쉐강(Zhang Xegang)은 중국이 오일 수송의 80%를 말라카 해협에 의존하는 상황에 주목하여 수송로 확보의 전략적 결정성과 이를 위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긴밀한 상호관계 유지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중국은 미국이 일본과 인도의 협력 아래 말라카 해협을 지배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미국의 주도로 호주, 일본 등이 진행하는 ‘말라바르’ 합동해상훈련의 주요 목표 중 하나가 말라카 해협에 대한 안보문제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인도가 이 훈련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현실은 중국에 ‘전략적 불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무헤르지 외무장관이 지적한 것처럼 인도 정부는 에너지 안보를 ‘인도 해상전략적 지상명령’으로 해석한다. 인도 정부는 인도 해군력이 인도양을 관통하는 에너지 수송 흐름에서 주요 안정력

(stabilising force)으로 규정하였다.¹⁰⁸⁾

2009년 중국은 원유 수송로 확보와 말라카 해협에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미얀마에서 원난성에 이르는 원유와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에 착공하였으며, 벵골 만에 위치한 미얀마의 ‘코코 섬(Coco Island)’에 레이더 시설과 군항을 포함한 군사기지를 구축하였다. 중국은 미얀마에서 군사기지를 확보하여 인도양으로의 출로를 확보함으로써 원유수송로의 안보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인도양과 말라카 해협 주변에서 미국의 해상력에 대한 견제효과를 시도하였다. 인도의 동해에 해당되는 벵골 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진출은 인도양에서의 세력권 확보가 지역 강국으로의 부상뿐 아니라 자국 안보의 핵심적 이해라고 판단하는 인도에 심각한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미얀마가 19세기 초반까지 인도의 북동부 지역 일부를 점령한 사실은 인도와 미얀마의 전략적 긴장관계를 역사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다. 또한 미얀마가 중국과의 분쟁지역인 아루나찰 프라데시와 인접한 지정학적 조건에 미루어 중국의 미얀마 군사기지 건설은 인도에 중장기적으로 또 다른 안보불안요인의 출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중국의 벵골 만 군사진출은 앞서 언급했듯이, 인도양에서 인도 해군력의 ‘전략적 안정 역할’과 상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수자원 이용문제 등이 미래 시점에 양국의 갈등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있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수자원 문제는 경제적 의미를 넘어서 국제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는 정치적 의미를 지닌 안보문제이다. 냉전체 이후 중앙아시아에서의 수자원 분쟁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인도 북부의 주요 수로는 갠지스 강을 제외하고 모두 중국 영역인 티베트 고원

108) Vidya Nadkarni(2010), *op. cit.*, p. 134.

에서 발원한다. 해당 지역에서 중국이 현재 진행 중인 댐 건설 계획은 인도의 수자원 활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티베트의 알룽창포 강에 모두 다섯 개의 댐을 건설하는 메가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전체 발전용량이 기존의싼샤(三峽) 댐의 발전용량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마 첼란시(Brahma Chellancy)와 같은 인도의 전문가들은, 중국의 티베트 댐 건설을 중국과 인도 북동부, 방글라데시를 가로질러 벵골 만에 이르는 브라마푸트라 강(Brahmaputra)의 흐름을 중국 쪽으로 우회시키려는 계획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이 메가프로젝트가 중국과 인도의 분쟁뿐 아니라 강 하류 유역을 공유하는 방글라데시와 인도 간의 수자원 전쟁을 야기할 것이라 경고하였다. 댐 건설로 인도로 유입되는 브라마푸트라 강의 수량에 급격한 변동이 생기면, 하류의 홍수조절 문제나 생태계의 파괴는 물론이고 아루나찰 프라데시와 아삼 유역 등의 석탄 및 천연가스 개발이나 차 재배 등에 치명적인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 왕 웨일루오(Wang Weiluo)와 같은 중국 전문가들 또한 중국과 인도의 수자원 분쟁이 양국의 동반자 관계 수립에도 불구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이 문제가 영토 문제와도 연결된 복합적인 문제라고 평가하였다.¹⁰⁹⁾

이외에도, 이상의 현실주의적 시각뿐 아니라, 구성주의적 접근도, 양국의 ‘관계 정체성’과 ‘상호인식’ 문제가 갈등요인으로 존재한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인도와 중국 간에는 상호인식 면에서 비대칭성이 존재하는데, 인도는 중국을 ‘정치 및 경제적 측면에서 라이벌 국가이자 안보 위협 국가’로 경계하고 중국은 인도가 희망하는 만큼의 전략적인 주목과 가치를

109) *Ibid.*, pp. 135-136.

인도에 부여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양국의 이러한 인식적 비대칭성이 양국 관계의 전략적 상호의존성이나 삼각체제의 구조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¹¹⁰⁾

이상에서 살펴본 중국과 인도의 갈등이 표면화되어 장기적으로 분출된다면 러·인 관계는 물론이고 러·중·인 삼각체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중국과 인도의 갈등이 심화되면 인도는 미국과 관계강화를 시도하고 러시아에 협조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인도가 미국에게 전략적으로 경사되면 미국과 전략적으로 경쟁관계인 중국을 자극할 것이고, 이럴 경우에 현재 실질적으로 중국을 아시아 최고의 전략적 동반자로 설정한 러시아가 인도와 중국 사이에서 ‘중립적으로’ 중재하기란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냉전시기와 같이 중국과 인도의 갈등이 러시아에 전략적 기회를 제공해줄 수도 있으나, 냉전시기와는 달리 미국과 인도가 협력관계인 현실적 조건은 러시아에 전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로서는 중국과 인도가 순기능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높은 단계의 협력관계로 진화해나가는 과정에 참여하여 조율하면서 러·인 관계의 안정적 유지와 삼각체제의 완성을 시도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시나리오에도 불구하고 러·인 관계는 물론이고 중국과 인도의 전략적 협력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부정적 시나리오에서 예측하듯이 미국이 중국을 전략적으로 견제 또는 봉쇄하기 위해 인도를 ‘천연의 동맹(natural ally)’으로 끌어안는다면 러·인 관계가 약화되고 중·인 관계가 적대적인 관계로 전환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다.

110) S. L. Shirk(2004), p. 75.

삼각체제가 가시화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중·인 양국은 갈등조정 과정에서 충돌보다는 위협회피 전략을 선호하며, 러시아는 삼각체제의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4년 인도가 미국과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수립하고 미국의 협력하에 과거에 중국이 반발했던 핵 전략을 심화하는 과정에서도 중·인 관계가 적대적인 관계로 귀결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 인도가 추구하는 ‘전략적 헤지(strategic hedge)’는 한편으로는 전략적 관여와 통합기제를 강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안보협력적 균형을 포함한 것이다. 중국과의 전략적 관여와 통합은 인도로 하여금 파키스탄 문제에서 벗어나 남아시아에서 전략적 구속을 피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또한 중국과 인도의 협력관계는 인도가 추진하는 ‘동방정책(Look East)’—ASEAN, 일본, 호주 등과 긴밀한 협력관계 체결—에 중요한 조건이다. 더 나아가 인도는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이 자국을 주요 세계강국의 지위로 격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2006년 11월 인도 외무장관 샤란(Shyam Sharan)이 중국을 방문하여 한 연설에서 인도의 ‘아시아에 대한 열망’이 잘 드러나 있다. 샤란은 이 연설에서 인도가 차지하는 아시아에서의 ‘독특한 지정학적 지위’를 역설하였다. 그에 따르면, 인도는 ‘남아시아를 넘어서 아시아의 상이한 하부지역(동아시아, 서아시아,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등) 간에 걸쳐진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중국과 인도는 결코 상호 봉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샤란은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를 전제로 중국과 함께 협력하여 ‘아시아 안보 및 경제 공동체’를 건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중국에도 인도에 대한 전략적 관여와 통합은 타이완 문제, 티베트와 신장 위구르 분리주의 문제에

대한 협력에 중요한 조건으로 상정되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은 미국이 일본·호주와 아태 지역의 해양삼각동맹체제를 구축하고 전통적인 양자동맹관계를 강화하는 ‘아시아 전환(Asia Shift)’,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Pivot to Asia)’ 전략을 통해 ‘중국 포위전략’을 추진한다고 판단하여 인도와 전략적 협력관계를 통해 포위전략의 약화 또는 중화를 추구하였다.¹¹¹⁾

중·인 관계를 보완하는 러·인 관계는 양국 최고 정책결정자들의 상호인식에 상징적으로 드러나 있다. 2007년 1월의 인도 방문을 앞두고 한 기자회견에서 푸틴 대통령은 양국의 외교관계 수립 60주년을 축하하고 양국 관계를 ‘천연의 동맹(natural allies)’으로 규정하면서, ‘세기를 관통하여, 양국이 상호 우호와 이익을 공유하였고 협력을 추구’하였으며, ‘시간의 시험을 견디어 유래 없는 안정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2007년 11월 모스크바 방문에서 인도의 싱 총리 또한 ‘세계의 주요한 변동에도 불구하고 양국 관계는 깊은 이해와 신뢰의 상호 유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양국 관계의 깊은 우호적 성격을 강조하였다.

양국은 상호간에 ‘국가년’ 선포에 합의하여 2008년은 러시아에서 ‘인도의 해’로 2009년은 인도에서 ‘러시아의 해’로 각각 선포하였다. 국가년 행사를 통해 양국은 정치, 경제, 안보뿐 아니라 문화 및 과학기술 분야를 포괄하는 정부 및 민간 교류행사를 진행하였다. 삼각체제가 형성되기 시작한 이래의 성과들과 국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지원한 교류행사를 통해 양국 국민은 상대방에 대한 인식의 우호적 증진을 경험하였다. 예를 들어, 2008년에 ‘러시아 여론재단(public Opinion Foundation)’에서 실시

111) Vidya Nadkarni(2010), *op. cit.*, pp. 124-125.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한 러시아인의 약 83%가 인도를 우호적인 국가로 지목하였고 불과 4%만이 부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이와 더불어 이전에 실시된 세 차례(1997, 1999, 2001)의 여론조사—러시아의 위협국가에 관한 질문—에서도 인도는 단 한 차례도 위협국가의 목록에 오르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정치 엘리트뿐 아니라 러시아인 일반이 인도를 관계인식 면에서 매우 호의적이며 우호국가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인도인의 러시아에 대한 평가 또한 이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러·인의 우호적인 상호 인식의 측면에도 불구하고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의 삼각체제의 진화에서 한계는 양국의 ‘문화적 정향(cultural orientation)’과 ‘문화적 준거’상의 비정합성에 있다. 러시아인은 인도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적 문화지향보다는 문화인류학적으로 유럽적 지향이 강하다. ‘전 러시아 여론조사센터(VTsIOM)’가 2005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8%가 문화적 정향 면에서 유럽국가들과 밀접한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인도와 중국에 대한 문화적 동질감은 13%에 불과했다.¹¹²⁾ 정치엘리트 또한 아시아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강조에도 불구하고 유럽적 정향이 여전한 것이 사실이다.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동맹관계가 이념 및 정치체제적, 그리고 문화적 동질성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견고하고 내구적인 동맹관계에 위 요인들이 순기능적으로 작용하였음을 상기할 때 러·인 관계를 비롯한 삼각관계의 장기적 발전에서 체제 정체성 및 문화적 정향과 인식적 동질성의 상호수렴은 매우 유의미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주목하여 러시아, 인도, 중국 정부는 2008년 이래로 각각 ‘국가의 해’를 선포하여 삼국 관계의 구

112) *Ibid.*, pp. 108-109.

조직 발전과 제도적 진화를 시도하였다.

러·인 관계의 전략적 상호의존성은 글로벌, 지역적, 국가간 수준으로 대별할 수 있다. 글로벌 수준에서 양국의 전략적 의존성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요인, 다시 말하면 NATO의 동진과 ‘일극체제’의 형성 등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 재편과 관련되어 있다. 강대국 지위의 회복과 세력권 방어를 시도하는 러시아나 지역 및 세계 강국으로 부상하려는 인도 모두 ‘일극체제’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그 해결책과 협력의 가능성을 ‘다극체제’의 형성에서 발견하였다. ‘아시아로의 전환’이나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 등 미국의 아시아 정책이 강화되는 한 중국은 러·인 관계에 대한 전략적 수렴이 지속될 것이다.

지역적 수준에서 볼 때, 러시아는 아시아의 거인들인 중국과 인도와 전략적 협력을 통해 아시아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러시아는 문화적 정향으로는 유럽과 친화성이 강하지만, 유라시아에 걸쳐 있는 지리적 위치의 문화적 소산인 ‘유라시아 정향’이라는 독특한 문화적 특성을 바탕으로 지정학적으로는 ‘동방정책’을 지향한다. 러시아는 경제적으로도 떠오르는 경제대국인 인도와 협력이 중요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러시아와 인도는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캅카스에서의 이슬람 분리주의 세력에 대해 대응해야 하는 공동 목적을 지니고 있다. 또한 인도는 러시아가 파키스탄과 아프간 등지에서 인도의 입장을 미국보다 견고하게 지지한다는 사실이 협력의 심화와 지속성에 중요한 판단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러시아로서도 인도의 전략적 협력이 인도양으로의 간접적인 진출 가능성을 부여해주고 미국이 통제하는 전략적으로 결정적인 인도양의 수송로에서 해상합동군사훈련의 기회

를 포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일 수 있다. 해당 지역에서의 러·인 관계의 발전은 중국도 인도양에서 수송로 확보에 일정한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2003년 이래로 삼국 사이에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해상합동군사훈련 ‘인드라(INDARA)’가 기존의 동해상이나 황해에서 인도양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국가 간 수준에서 볼 때, 양국 관계는 강대국 지위 추구에 순기능적이다. 러시아 싱크탱크 ‘국가전략회의’의 디스킨(Iosif Diskin)이 평가하였듯이, 인도와의 전략적 유대가 ‘러시아를 더 강한 글로벌 행위자로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인도 역시 러시아와 전략적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글로벌 이슈에 대한 참여와 입지를 강화할 수 있으며, 중국에 대한 안보적 우려를 해소하고 중국이 아시아의 유일한 헤게모니 국가로 부상하는 것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또한 미국의 ‘중국포위론’이 약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대국으로의 굴기(屈起)에 따르는 아태 지역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러시아, 인도와 전략적 유대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한국에 주는 시사점 및 소결

현재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는 전략적 대변동이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다. 연구에 따라서는, 이미 탈냉전기는 끝났고, ‘탈 탈냉전기’에 들어섰다는 분석도 있다. 몇년 전에는 유럽 MD를 둘러싼 미·러의 ‘신냉전’이 운위되기도 하였다. 물론 2008년 이후 세계적 금융위기로 미, 중, 러 등 G8은 물론이고 G20 국가들 사이에 광범위한 협력 컨센서스를 모색하는

것은 사실이나, 동아시아를 비롯한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MD 계획—동아시아 MD는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중요한 장애임—등이 여전히 진행 및 강화—2012년 9월 미일 간에 MD용 레이더 추가설치에 합의함— 중인 점을 감안하면 해당 지역의 전략적 경쟁과 갈등 가능성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러·인 관계를 한 축으로 구성 중인 러·중·인 삼각체제와 미국 주도의 미·일·호 삼각체제 간의 경쟁은 한국으로 하여금 전략적 선택의 딜레마에 빠지게 할 수 있다. 미국은 미·일동맹의 확대 강화를 기본 축으로 호주를 인입시켜 미·일·호 삼각동맹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러시아가 구상 중인 러·중·인 삼각협력체제와 더불어 두 개의 ‘거대한 삼각체제(Grand Triangle)’가 형성 중이다. 전자는 후자를 견제하고 아태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과 호주가 2007년 3월 ‘안전보장협력 선언’을 통해 준동맹관계를 맺고 이어 2012년 5월 17일에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여 양자동맹의 길로 들어섬으로써, 기존의 미·일 동맹, 미·호주 동맹과 더불어 아태 지역에 ‘대삼각동맹체제’가 형성되었다. 이들 3개국은 기존 미·일의 “2+2(외무/국방)” 전략대화를 3개국 “2+2+2” 전략대화체제로 전환하여 동맹관계의 제도화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태평양 지역에서 정기적인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미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기존의 쌍무동맹을 한·미·일 삼각동맹¹¹³⁾으로 전환

113) 2012년 여름 정부와 국회에서 뜨거운 쟁점이 되었던 한일 간의 ‘군사정보협정’ 체결문제는 한미일 삼각동맹체제를 형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1950년대 아이젠하워 정부 이래로 한일 국교정상화와 동맹체결문제를 아태지역에서 미국 안보문제의 안정화와 (양자)동맹전략의 완성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식민지

하여 ‘해양대삼각동맹’과 연계하는 트랜스퍼시픽 동맹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구상을 실행하고 있다. 이러한 해양삼각동맹체제의 결성은 중국에 대한 포위전략으로 간주되어 중국의 반발을 유발하고 있다.¹¹⁴⁾

미 국방부는 2012년 1월 5일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유지방안: 21세기 미국 방위의 우선순위들(Sustaining US Global Leadership: Priorities for 21st Century Defense)’이라는 국방전략지침을 발표하였다. 이 국방전략지침은 ‘미군의 전력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집중’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아시아로의 전략전환(Asia shift)’를 선언하였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중국이 표적이라는 것에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은 없다. 이에 앞서 일본 정부도 『방위계획대강 2010』을 통해 ‘국방예산을 증액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패권적 지위를 굳혀가는 중국의 기습 침투 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곧 ‘중국의 해양진출에 대응하기 위해 『미·일 방위협력을 위한 지침(US-Japan Defense Cooperation Guidelines (1997))』을 새롭게 개정할 예정’이다.¹¹⁵⁾ 2012년 4월 30일에 개최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미래를 향한 공동 비전’이 지목하는 ‘아·태 지역에 놓인 다양한 도전들’ 중에 중국요인이 핵심으로 해석될 수 있다.

2011년 11월 *Foreign Policy*에 기고한 『미국의 태평양 세기』라는 글에서 힐러리 국무장관 또한 ‘정치적 미래는 아프간이나 이라크가 아니라 아시아에서 결정될 것이며, 미국은 행동의 중심에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

과거사 문제 등과 독도 문제 등 한국과 일본의 미해결 쟁점과 식민지에 대한 한국민의 ‘잔혹한 기억’ 등으로 한일동맹문제는 한국사회의 컨센서스가 현재로서는 난망한 상태이며 전망 또한 매우 불투명한 상태이다.

114) ‘대삼각체제(grand triangle)’와 관련된 내용은 백준기(2007), p. 124 요약인용.

115) 김현기(2012).

면서 ‘아시아 시프트’를 주장하였다. 그는 ‘아시아가 미국의 미래에 결정적이듯 ‘미국의 관여(engaged America)’ 또한 아시아의 미래에 필수적’이라고 역설하였다. 실제로 힐러리 장관은 그동안의 전통을 깨고 취임 후 첫 해외순방을 아시아로 결정한 바 있다. 그가 주장하듯이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강한 양자동맹 네트워크를 보유한 유일한 국가로서 이 동맹 네트워크를 통해 해당 지역에서 21세기 미국의 리더십을 공고히 하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¹¹⁶⁾ 이것은 미·일·호주의 우호협력조약으로 결성된 ‘대삼각동맹체제(Grand Strategic Triangle)’를 토대로 한미동맹 등 양자동맹을 운용한다는 취지이다. 2011년 12월 4일 힐러리 국무장관이 미국 국무장관으로서는 57년 만에 처음으로 미얀마를 방문한 데 이어, 오바마 정부는 대사 파견, 투자제한 완화, 야당 지도자 아웅산 수치 초청, 군사협력 등, 정치·경제·군사적 관여를 확대해왔다.

2011년 11월 호주를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이 호주에 미군이 상시 주둔(2012년부터)하는 양국의 군사협력 강화방안을 발표한 것은 이러한 구상의 한 사례이다. 당시 오바마는 이러한 조치의 배경에 ‘중국에 대한 우려’가 자리하고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또한 2012년 11월 18일, 대선이 끝나자마자 오바마 대통령은 인도차이나 순방(타이, 미얀마, 캄보디아 등)에 올라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pivot to Asia)’ 전략을 가시화하였다. 백악관은 오바마의 이번 순방이 ‘아시아 지역 내의 재균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대변동 상황에서 러·중·인 삼각체제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몇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먼저 한미

116) Hillary Clinton, "America's Pacific Century", *Foreign Policy*, November 2011, http://www.foreignpolicy.com/articles/2011/10/11/americas_pacific_century(검색일 2012-05-01).

동맹에 미치는 영향이다. 전통적으로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아시아 시프트’ 그리고 ‘아시아로의 중심 축 이동’ 등 동맹 네트워크 강화정책이 안보 측면에서 신뢰할 만한 정책일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아시아 전략이 초래하는 중국의 강한 반발을 감안하면 안보의 군사기술적인 유용성에만 안주할 상황은 아니다. 경제적 이해관계의 측면에서, 중국이 한국의 제1의 무역 상대국이자 경제 파트너라는 점을 논외로 하더라도, 미·중의 안보경쟁과 리더십 경쟁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다.¹¹⁷⁾ 더욱이 공식적으로는 중·러 관계가 유래 없는 견고한 전략적 협력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러·중·인 삼각 체제가 공고화되고 미·중의 전략경쟁이 갈등화되면 대륙 아시아의 삼각체제와 해양삼각체제 간의 경쟁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은 전략적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정적인 전망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국은 한반도 및 동아시아 평화에 대한 제도적인 관리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갈등구조에 ‘연루(entrapment)’되는 것을 피하고—‘동맹 딜레마’를 최소화하는—한반도와 역내에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절실하다.

다음으로 한반도 차원,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이다. 2012년 오바마의 인도차이나 3개국 순방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내용은 미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미얀마를 방문하여 미국 국제개발처(USAID)를 통해 미얀마에 2년간 1억 7,0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요구는 미얀마가 북한과 무기거래, 북핵문제와 관련된 교류를

117) 이장에서 언급한 ‘아시아 시프트’ 등과 관련한 내용은 백준기(2012) 요약인용.

단절하라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요구는 공식적으로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라는 북한에 대한 경고인 동시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미얀마처럼 경제지원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중국에 대한 견제가 자리하고 있다. 미얀마는 미국 언론들이 평가하는 것처럼 ‘오바마 대통령이 1년 전부터 강조해온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 전략을 보여주는 데 더없이 좋은 나라’이다. 미얀마는 1992년부터 약 20년간 서방국가의 경제제재를 받아왔는데, 중국이 거의 유일한 경제·외교적인 후견국 구실을 해왔으며, 미얀마의 코코 섬에 중국 군사기지 건설, 중·미얀마 가스 원유 파이프라인 건설 등의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중국이 인도양으로 진출하는 데 필요한 교두보와 풍부한 천연자원 확보 처로도 주목받아왔다. 따라서 오바마의 ‘미얀마 포용’을 중국은 ‘충격’으로 받아들일 것이라 분석하였다.¹¹⁸⁾

벤 로즈(Ben Rhodes)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미얀마 방문 성과에 대해 ‘핵 비확산과 관련해 미얀마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받는 동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를 준수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는 북한과 군사 관계 단절을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미얀마에 대한 지원사례처럼, 북한 지도부가 핵무기 프로그램을 검증받고 폐기한다면 미국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¹¹⁹⁾ 오바마의 이번 순방이 의미하는 것은, 지정학적으로 중국의 동쪽 국경과 남쪽 국경에 인접한 동아시아의 양대 우방국을 미국이 동시에 전략적으로

118) *Washington Post*, 18일자; *New York Times* 18일자 보도내용. 박현(2012), “오바마, 미얀마 방문……아시아로 중심 축이동 큰 걸음”, 『한겨레 신문』 11월 18일자 재인용.

119)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2112005553881244&nvr=Y>
(검색일 2012년 11월 26일).

체크했다는 점이다. 미국의 미얀마에 대한 ‘전략적 포용’이 ‘미·일·호 삼각체제’의 공고화를 위한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의 일환이고, 또한 이를 통해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은 북한 문제에 ‘미·일·호 삼각체제’가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또한 미국의 ‘미얀마 포용’의 궁극적인 목적이 ‘미·일·호 삼각체제’의 공고화를 기반으로 한 중국 견제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으로서도 이를 견제하기 위해 ‘러·중·인’ 삼각체제의 전략적 효용성을 중시할 것이다.

냉전시기에 러시아와 중국, 인도는 한국전쟁 과정에서 그리고 한국문제를 다루기 위해 소집된 제네바 회담(1954)에서 긴밀한 외교 군사적 공조를 통해 한반도 문제에 깊숙이 관여한 경험이 있다. 현재, 러·중·인 삼각체제는 동북아에서 북·중·리의 삼자는 우호조약을 통해 북방 소삼각체제와 연결되어 있다. 북·중은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1961)’을 통해 제3국의 무력공격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군사적으로 상호원조하는 군사동맹 관계이고 중·러, 북·러 간에 각각 체결 또는 개정된 ‘선린우호협력조약(2001/2000)’은 비록 유사시 군사적 상호원조를 명시한 조항은 없으나, 침입 위협이 있다면 ‘상호 긴밀히 협의(consultation)’한다는 조항을 고려하면 유사시 군사협력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19세기 유럽의 동맹조약들 중에서 조약 상대국에 대한 제3국의 군사공격이 발생하면 ‘상호 긴밀히 협의(consultation)’하는 수준의 내용을 포함한 사례가 적지 않음을 감안하면 북·중·러 삼국은 사실상 (준)동맹관계라고 평가할 수 있다. 대륙삼각체제와 해양삼각체제의 갈등은 한반도의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해양삼각동맹체의 첨단에 연결된 한미동맹이 군사적으로 강화될수록 북중동맹 또한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2011

년 7월 북·중 우호협력조약 50주년을 맞아, 중국 전문가들은 이 조약이 중국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파오젠이 중국 사회과학원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연구원은 “북·중우호조약을 폐기하면 중국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할 것이고 한·미가 오판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미군이 북·중 국경에 도착한다면, 중국에 군사압력이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 동북 지역에 큰 영향을 줄 것이므로 한미에 대한 일종의 경고 차원에서도 이 조약은 폐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강화해야 한다”는 파오젠의 주장은 해양삼각체제에 대한 견제를 위한 북중동맹강화론의 대표적인 견해이다.¹²⁰⁾

셋째, 동아시아 등 ‘중 범위 지역’ 전략에의 함의이다. 러·중·인 삼각체제는 그 거대한 삼각형 안에 중앙아시아 지역을 포함하고 해당 지역을 전략적 피벗(pivot)으로 활용함으로써 내륙아시아 전역에 걸쳐 영향력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중앙아시아 지역은 러시아, 중국, 인도에게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전략적 급소(strategical underbelly)’ 또는 완충지대로 기능해왔으며 탈냉전 이후 에너지 자원이라는 지정학적 요인이 중첩되어 이 지역은 삼국의 전략적 협력의 핵심 목표가 되었다. 삼각체제는 탈냉전기 중앙아시아에서 재현되는 새로운 ‘거대한 게임(Great Game)’과 전략적으로 밀접히 결부되어 있다. 대륙의 전략삼각체제와 중앙아시아의 관계는 내륙아시아에 걸친 러시아, 중국, 인도의 양탕트 체제가 중앙아시아를 외연적으로 포괄하는 동시에 중앙아시아가 전략삼각체제의 내부중심연계의 역할의 하는 이중적 기능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 양자는 견고한 ‘동맹 네트워크’라기보다는 유연한 ‘네트워크 동맹’을 지향

120) 박민희(2012).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¹²¹⁾

중양아시아는 중국이 주도하는 SCO를 통해 동아시아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으며 더 나아가 중국의 전략적 인식에는 중양아시아가 사실상 동아시아 범주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이 희망하는 동아시아 범주(한·중·일, 또는 한·미·중·일)에 중국을 가둬두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중국은 동아시아, 서아시아, 남아시아, 드물게는 ‘북아시아’와 모두 접하고 있어서 협소한 동아시아론에 몰입하기 어렵다. 물론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위해 한국 및 일본과 경제협력이 절실하던 시기 동아시아론에 대한 도구적 필요성이 존재했던 것은 사실이나, 글로벌 문제를 다룰 수 있는 G2의 위치에 오른 현재 이러한 도구적 인식이 여전히 유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다. 중국의 쑨거¹²²⁾와 같은 지식인은 동아시아론보다는 중국과 러시아, 인도 삼국의 대화가 더 현실적으로 긴박하다고 본다. 그는 이러한 현실적 요구를 반영하여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외연확장을 주장한다. 예를 들어 북한과 몽골을 포함하여 SCO의 중양아시아를 동아시아 범주에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그럴 경우, 중국은 기존의 협소한 동아시아 지역 범주에서 벗어날 수 있다. 중국이 동의하지 않는 동아시아는 비현실적임을 고려할 때 한국 또한 이에 맞는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외연확장이 필요하다. 동아시아의 외연확장은 예를 들어, 기존의 동아시아 지역 범주에 몽골과 중양아시아를 포함한 ‘광역 동아시아’¹²³⁾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동아시아의 외연확장은 중양아시아 에너지

121) 백준기(2007), pp. 122~123.

122) 쑨거 등 중국 지식인들의 입장이 중국 정부의 인식과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들이 중국의 사회과학원 소속임을 감안하면 이들 지식인들과 정책결정자들이 인식론적 불연속선상에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쑨거(2010), pp. 33~34, pp. 67~68.

자원에 대한 제도적이고 평화적인 접근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한국은 동아시아 전략의 현실적 긴박성뿐 아니라, 중앙아시아 에너지 자원에 대한 안정적인 접근과 시장의 안정적인 확보 등 경제적 측면에서도 러·중·인 삼각체제에 대한 전략대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김대중 정부 이래로 제기되는 ‘동아시아 평화체제’ 구축과의 연관성 문제이다. 최근 몇년 사이, 북핵문제 등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동아시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헬싱키 프로세스’를 동아시아/동북아에 적용하는 문제(동아시아 버전 OSCE 수립)가 학계와 시민사회 영역에서 제기되었으며 정부 또한 이러한 논의에 주목한 바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두 가지인데, 먼저 1970년대에 수행된 헬싱키 프로세스가 미·소의 데탕트를 배경으로 가능했다는 점, 다음으로 애초에 헬싱키 프로세스는 유럽에서 당시의 국경과 영토에 대한 현상(status quo) 인정을 통해 유럽의 안전과 평화의 제도화를 목표로 한 것이라는 점이다. 재언하자면, ‘국경과 영토에 대한 현상(status quo) 인정’이 유럽의 평화 프로세스의 출발점이었다는 것이다. 미·소의 데탕트를 기반으로, 소련과 서독 간에는 ‘상호무력 포기 및 유럽의 현행 국경선의 인정’을 골자로 하는 ‘모스크바 조약(1970)’이 체결되었으며, 오데르·나이세 선을 폴란드의 서부 국경선으로 인정-서독의 쟁점영토 영구 포기를 의미함-하는 독일·폴란드 불가침조약(1970), 그리고 ‘베를린의 지위에 관한 4대국 협정(1971)’ 등이 체결되었다. 이러한 시도들을 통해 2차 대전 이후 동서 간에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던 유럽의 주요한 영토 문제가 ‘1차 해결’-냉전해체와 함께 동유럽에서 ‘제2차 영토 문제 해결’

123) ‘광역 동아시아’에 대한 개념 및 범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백준기(2012) 참고.

이 시도됨— 되었다. 동서독 통합 입구로 진입을 의미하는 브란트의 ‘동방정책’은 물론이고 헬싱키 프로세스 또한 이러한 시도를 통해 가동될 수 있었다.

이러한 유럽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헬싱키 프로세스를 동아시아에 적용하는 문제 또한 국경선과 영토에 대한 ‘현상유지’ 및 조정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동아시아의 헬싱키 프로세스가 불가피하게 현재의 ‘국경선과 영토에 대한 현상’ 인정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면 러·중·인 삼각체제에 대한 전략적 고려가 필요하며 전략삼각체제가 (동)아시아의 영토 문제에 주는 함의는 분명하다. 먼저 냉전체제 이후 러시아와 중국은 1960년대 이래의 국경 및 영토 분쟁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완전히 해결하였으며 중국과 인도 간에는 몇 가지 불협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LAC 및 분쟁영토에 대한 조정이 진행 중이다. 러·중·인 간에 완결 또는 조정 중인 분쟁해결에는 전략삼각체제가 긍정적으로 작동한 결과이며, 이러한 경험을 (동)아시아의 영토 및 국경선 분쟁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동)아시아의 영토분쟁에 러·중·인 삼국이 당사자이자 깊이 개입 되어 있으며, 한국의 영토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은 인도와의 영토쟁점을 제외하면, 남사군도와 서사군도에서 한국의 이어도 문제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 전역에 걸쳐 영토 문제에 연계되어 있는데, 최근 고조되는 영토분쟁에 미국이 군사적 시위를 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향후 러·중·인 삼각체제가 동아시아 영토분쟁에서 적극 작동할 가능성과 이것이 한국의 독도 문제에 미칠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최근에 천평권(陳峰君)¹²⁴⁾ 베이징 대학교 교수

124) 천평권(陳峰君)(2012).

는 한·중·리가 연합하여 일본의 극우세력에 대항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독도와 다오위다오, 쿠릴 열도 문제 등에서 일본에 대해 삼국이 공조하자는 것이다. 이 제안은 중국과 한국에서 현실 타당성 측면에서 약간의 논란을 일으킨 것은 사실이지만 그동안 잠재되었던 이러한 논의가 수면위로 떠올랐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러한 사실들을 감안할 때 전략삼각체제는 동아시아 평화체제 수립문제와 영토분쟁 문제 등의 측면에서 한국의 진지한 전략적 연구 대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제4장 중 · 인 관계

1. 중 · 인 관계의 역사적 변천
2. 중 · 인 관계의 협력요인과 갈등요인
3. 중 · 인 관계의 전망과 삼각협력체제에 미치는 영향
4. 한국에 주는 시사점 및 소결



중·인 관계는 중·러·인 삼각협력관계 중에서 가장 약한 고리이다. 러·인 관계는 삼각협력체제의 형성과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고, 중·러 관계는 삼각협력체제 발전의 주된 동력이 되었다. 그런데 중국과 인도는 지금까지 양국 사이에 존재하는 전략적 불신을 해소하지 못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갈등과 경쟁을 벌이고 있어 삼각협력체제의 진전을 제약하고 있다.

이는 1962년 중인국경분쟁이 현대사에서 중·인 관계의 중요한 전환점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중·인 관계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중·러 관계와 러·인 관계에서도 경쟁 혹은 갈등 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들 사이에는 국경 문제와 같이 상대국을 자신의 안보에 대한 주요 위협으로 보게 만드는 요인이 존재하지 않거나 최근 비교적 성공적으로 해결되었다. 예를 들어 중국과 러시아는 국경분쟁으로 1969년 전쟁을 치렀으나 2008년에 국경협정을 완전히 마무리했다. 반면 중국과 인도는 2005년 정상회담에서 평화와 번영을 지향하는 ‘전략 협력 동반자(strategic and cooperative partnership) 관계’를 건설한다고 합의했지만 양국 사이에 존재하는 여러 갈등요인이 주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명실상부한 전략적 협력관계로 발전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중·인 관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한다면 삼각협력체제도 새로운 발전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한다. 중국과 인도의 인구규모나 앞으로의 잠재력을 고려하면 중·인 협력의 증진은 삼각협력체제를 아시아 혹은 유라시아 질서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변수로 등장시킬 수도 있다. 현재는 미·중 관계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라고 하지만, 중·인 관계는 20년 후에 국제질서에 가장 큰 영

향을 미칠 양자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중인관계의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다음 세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국가 차원이다. 중국과 인도가 앞으로 어떤 국가목표를 추구할 것이고 내부의 정치상황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중국과 인도가 앞으로도 계속 최근 20~30년과 같이 국가전략에서 경제 및 사회 발전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면 중인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공격적 민족주의가 강화되거나 군사력 증강 등을 통한 전통적 안보의 강화가 다시 주요한 국가목표로 부상한다면 중인관계는 대립 관계로 변할 것이다. 특히 양국이 앞으로 핵심이익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며 이러한 핵심이익이 양립할 수 있을지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양자 관계의 차원이다. 양국 사이에는 역사가 남겨 놓은 문제와 이로 인해 누적된 상호불신이 양국 관계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21세기 들어서는 중국의 빠른 부상이 인도의 고민은 더 깊게 만들고 있다. 적어도 20년 동안은 종합적 국력에서 중국에 뒤지는 상황을 피하기 어렵고 양국 사이의 주요 현안에 대한 중국의 압박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최근 경제, 사회, 정치적 교류도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국경 문제와 상호불신 등 양국 사이에 존재하는 문제가 교류와 협력의 증진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역사가 남겨 놓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힘의 균형의 변화가 새로운 갈등요인을 출현시킬지에 있다.

셋째, 국제적 차원이다. 냉전체제의 해체 이후 미국의 단극체제는 점차 약화되고 국제질서는 대전환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특히 중국의 부상이 국제질서 변화의 주요 동력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 인도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가 양

국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국과 미국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중국과 인도가 미래의 국제질서에 대해 공동 비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아니면 인도가 중국에 대한 견제에 더 많은 비중을 둘 것인지에 따라 양국이 협력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을지가 결정될 것이다.

현재 이 세 차원에서 기회요인과 불안요인이 모두 존재한다. 이에 따라 중국과 인도에서도 양국 관계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공식매체에서는 중인관계의 우호적 발전을 강조하는 입장들이 주류를 이루지만 인터넷 등의 비전통매체에서는 인도에 대한 강경한 정책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¹²⁵⁾ 반면 인도 내에서는 대중국 정책을 둘러싼 입장의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집권당인 국민회의당과 야당인 BJP(Bharatiyu Jauapa Party: 인도국민당) 사이에 입장의 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싱크탱크와 지식인 집단 내에서도 중국과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과 중국에 대한 견제와 봉쇄를 강조하는 입장이 나뉘어 있다.¹²⁶⁾ 이러한 여러 입장들은 각각 자유주의, 현실주의 혹은 구성주의 이론에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할 수 있는 논리와 근거를 찾고 있다. 그러나 양국 관계의 복잡성은 한두 가지의 이론이나 변수로 설명하기 힘들다. 그보다 먼저 양국 관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추출하고 그 사이의 연관관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이 없이 양국 관계에 선부른 프레임을 적용하거

125) 중국의 주류적 입장은 吳永年(2010, pp. 227~233)을, 중국 내 인터넷에서의 인도 문제를 둘러싼 논의 상황에 대해서는 Shen(2011)을 각각 참고.

126) 말릭(Mohan Malik)은 인도 내의 중국에 대한 인식을 균형적 개입을 주장하는 실용주의자(pragmatist), 봉쇄와 포위를 주장하는 강경현실주의(hyperrealist), 친중국적인 타협주의 appeaser) 등의 세 가지 경향으로 나누었다. 이 중 인도공산당 등의 좌파 정당과 좌파 지식인들을 타협주의자들의 예로 들었다(Malik 2011, pp. 51-62).

나 그 미래를 예단한다면 양국 관계에 대한 이해를 과도한 희망과 과도한 비관 사이에서 동요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현실은 낙관적 희망을 배반할 가능성이 높고, 역사는 과도한 비관이 초래할 재앙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 어느 것도 중인관계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거나 양국관계에 대해 발전적인 제안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양국관계의 변화,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 그리고 이러한 분석에 기초한 양국 관계의 미래와 양국 관계가 삼각협력체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중인관계의 미래에 놓인 가능성과 도전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1. 중·인 관계의 역사적 변천

중·인 관계도 냉전체제가 해제된 이후 다른 대국 관계와 마찬가지로 큰 변화를 겪었다. 중국과 인도는 국경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여러 영역에서 협력과 교류를 확대해왔다. 뿐만 아니라 중인관계가 처음부터 대립적 관계로 시작된 것은 아니었다. 1950년대 중반까지 식민주의에서 벗어난 신생국(인도는 1947년 8월 15일 영국으로부터 독립했고, 중국은 1949년 10월 1일 건국했음)이자 유구한 문화적 전통을 가진 아시아 국가라는 공통성으로 중국과 인도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1962년 국경 충돌을 계기로 양국 관계는 극도로 악화되기 시작했다. 악화된 양국 관계는 1980년에 들어서야 다시 회복단계로 들어섰고 냉전체제의 해체 이후 본격적으로 발전되기 시작했다. 이처럼 그동안 중인관계는 우호관계의 발전·갈등과

대립·우호관계의 회복과 발전 등 세 단계의 변화를 거쳤다.

가. 우호관계의 발전과 한계: 1949~60년

이 시기 중국과 인도가 우호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에는 인도 총리 네루(Jawaharal Nehru)의 역할이 컸다. 중국공산당은 내전 시기와 건국 초기 소련 및 중국 등 사회주의 세력의 확대를 봉쇄하려는 미국 주도의 국제연대에 참여한다는 이유로 인도의 네루를 비판했다.¹²⁷⁾ 그러나 인도가 새로 건국한 중국에 대해 우호적 태도를 취하자 양국 관계는 빠르게 진전되었다. 인도는 1950년 4월 1일 비사회주의국가로서는 처음으로 중국공산당이 세운 중화인민공화국을 외교적으로 승인했다. 뿐만 아니라 국제무대에서도 중국의 입장을 적극 지원했다. 예를 들어 타이완으로 밀려난 중화민국 대신에 인도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에 되어야 한다는 미국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중화민국이 아니라 중화인민공화국이 대표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도는 자신이 주도적 역할을 하던 비동맹회의에서도 중국과 저우언라이(周恩來)가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談玉妮 2006, pp. 37~38; Garver 2010, pp. 87~89). 중국도 이에 호응해서 인도와의 관계를 중시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1954년 6월 저우언라이가 인도를 방문한 데 이어 1954년 10월 네루 총리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네루는 마오쩌둥(毛澤東)과 네 차례의 회담을 하는 등 용

127) 이 시기 티베트 문제도 중국공산당과 인도 사이의 주요 갈등요인이었다. 인도는 티베트를 중국과 인도 사이의 완충지역으로 유지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중공군의 티베트 진출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 중국공산당은 이를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이라고 분명 반대의 입장을 취했고 인도는 곧 티베트에 대한 중국의 주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Maxwell 2000, p. 8).

승한 대접을 받았다.

인도 내에서 ‘형제관계(Hindi-Chini bhai-bhai)’라고도 불렸던 이 시기 중·인 협력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건설한 기초 위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주로 지도자 사이의 정치적 협력에 따라 추동된 것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이 시기 양국 관계의 발전은 지도자들의 정책과 전략에 긴밀하게 연결되었던 것이다(Wang 2011, p. 101). 특히 인도의 네루는 신생 국가 인도가 서구의 식민주의에서 벗어나 자주적 국가로 발전하고 인구 및 영토 규모에 걸맞은 국제적 지위를 차지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비동맹외교를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노선으로 채택했다. 그는 신생국으로서 처지가 같을 뿐만 아니라 역시 광대한 인구와 영토를 가진 중국과 우호적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인도의 국제적 지위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¹²⁸⁾ 당시 신생국 중국이 처한 외부 환경은 인도보다 더 열악했다. 인도도 종교적 이유로 파키스탄이 분리하는 등 주권과 영토 문제와 관련해 여러 불안요인이 존재했지만 국가로서의 생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은 없었다. 반면 중국은 타이완 장제스(蔣介石)와 내전이 완전히 종식되었다고 보기 어려웠고, 동북아에 주둔하는 미군으로부터도 군사적 위협을 받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의 외교적 지원은 중국의 국제적 지위와 주권을 공공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중국이 군사적 자원을 동부 지역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중국에

128) 국경분쟁 등으로 중·인 관계가 악화된 이후 인도에서는 이 시기 네루의 중국 정책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증가했다. 특히 영국과 인도가 티베트에서 보유하던 특권을 조건 없이 포기한 것이 지나치게 순진한 결정이었다는 평가가 많다(샤시 타루르 2009, pp. 246~250). 다시 말하면 티베트 문제를 지렛대로 삼아 국경 확정에서 중국의 양보를 받았어야 한다는 것이다. 네루도 1962년 중국군이 인도군에 대해 대대적으로 반격하고 인도를 궁지에 몬 것에 대해 배신감을 토로했다고 한다.

매우 절실하였다.

그러나 정치지도자들의 전략적 판단에 의존해 추동된 양국의 협력 관계는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협력의 진전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국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곧 한계를 노정했다. 당시 중국과 인도는 4,000km가 넘는 국경선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중국은 국경협상을 통해 확정지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인도는 영국이 인도를 통치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인도와 티베트 사이의 구분선으로 양국의 국경이 이미 결정되었다는 입장을 견지해 국경협상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양국의 국경선은 ① 미얀마 접경 지역에서 부탄 접경 지역까지 이어지는 동부구간 ② 네팔 접경에서 서부구간의 동단까지 이어지는 중부 구간, ③ 인도의 라다크(Ladakh), 히마찰 프라데시(Himachal Pradesh)와 중국의 티베트(西藏)가 만나는 지역에서 시작되어 아프카니스탄 접경 지역까지 이어지는 서부 구간 등의 세 구간으로 구분된다. 이 세 구간 모두에서 양국의 입장이 충돌하는 지역이 존재했지만 첨예한 대립은 동부 구간과 서부 구간에서 발생했다.

인도는 동부 구간에서 영국, 티베트, 중국 대표가 티베트의 지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동한 1914년 심라회의(Simla Conference)에서 영국과 티베트 대표 사이에 조인된 맥마흔라인을 양국 사이의 국경선으로 주장했다. 서부 지역에서는 1865년 영국인 관료가 제시한 ‘존슨라인(Johnson line)’ 등을 국경선 확정의 기준으로 삼고자 했다.¹²⁹⁾ 인도는 이 선이 자연적 경계에도 부합한다고 보았다. 반면 중국은 인도의 주장에 대해 심라 회의에서 영국의 압력으로 중국 대표가 가조인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중국

129) 맥마흔라인은 중국이 통치권을 주장하는 장난(藏南) 지역을 인도의 통치지역으로, 존슨라인은 중국이 통치권을 주장하는 악사이친(Aksai Chin)을 인도 카슈미르 지역으로 편입시킨 것이 특징이다.

중앙정부가 이에 반대해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경협정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존슨라인 등은 중국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그어진 선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동부 구간에서는 티베트와 인도 사이의 전통적 경계선(티베트가 전통적으로 행정관리를 해온 지역이며 맥마흔라인의 남쪽에 있음), 서부 구간에서는 카라코람 산맥을 경계로 하는 전통적 경계선을 국경 확정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그 결과 동부 지역에서는 90,000km²에 달하는 지역에 대해 서부지역에서는 38,000km²에 달하는 지역에 대한 영유권 분쟁이 출현했다. 1950년대 중반까지의 상황을 보면 동부 구간에서는 인도가 맥마흔라인 남쪽 지역(NEFA: North-East Frontier Agency)에 대해, 서부 구간에서는 중국이 존슨라인 남쪽의 악사이친 지역에 대해 각각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왔다. 국경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중국과 인도가 실질적으로 통치권을 행사하는 경계선(LAC: Line of Actual Control)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양자의 주장에 큰 차이가 있었지만 국경협정이 타결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맥마흔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동부 구간 국경을 확정할 때 맥마흔라인이 기준이 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대신 중국은 서부 구간에서는 중국의 기득권(악사이친 지역에 대한 통치권)을 인도가 받아들일도록 요구하였다.¹³⁰⁾ 인도는 이러한 제안에 반대하고 중국에 맥마흔 라인의 인정을 국경협상을 위한 전제조

130) 중국은 이러한 가능성을 암시해왔고, 국경분쟁이 고조되던 중 중국과 인도가 마지막 협상을 시도하던 1960년 저우언라이가 비공식적이지만 진지하게 이와 같은 제안을 했다고 알려졌다(Ganguly 2010, p. 90). 중국은 당시 공식적으로는 LAC에서의 현상유지를 통해 국경갈등이 군사충돌로 비하되는 것을 방지하는 입장을 제시했다(Wang 2011, pp. 197~210).

건으로 내세웠다. 그렇지만 네루도 양국의 긴장이 높아지던 시점에 국회에 출석해 서부 구간에서는 국경선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하는 등 협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었다.¹³¹⁾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협상은 진행되지 못했고 195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국경문제로 갈등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1950년대 후반 국경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된 데에는 인도가 모르는 사이에 중국이 1957년 10월 악사이친을 통과해 신장과 티베트를 연결하는 도로(新藏公路)를 개통시킨 것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자신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지역에서 도로가 건설되었다는 소식을 중국의 언론보도를 통해 접한 인도 정부는 1958년 7월 이 지역에 순찰조를 파견했고 이들 중 일부가 중국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경에서 긴장이 고조되자 인도의 네루 총리와 중국의 저우언라이 총리는 1958년 12월부터 1959년 9월 사이에 서신을 교환하며 이견을 좁히고자 했으나 양측은 그 과정에 원칙적인 입장을 주장하면서 견해 차이만 더 분명해졌다. 그 와중에 1959년 3월 티베트에서 봉기가 발생하고 이후 달라이라마의 인도 망명과 인도 내 반중 활동을 위한 망명정부의 수립으로 이어지는 등의 사태가 연이어 발생한 것이 사태를 악화시켜 대화가 난관에 봉착했다. 1959년 8월에는 인도가 맥마흔라인의 북쪽 지역 롱주(Longju, 郎久)에 군사초소 건설을 시도하는 와중에 소규모 군사충돌이 발생하고¹³²⁾, 10월에는 서부 구간의

131) 중·인 국경분쟁이 고조되던 1959년 8월 네루는 의회에 출석해 “비록 100여 년 전에 영국 관리들이 그곳에 가서 선을 그었지만 누구도 그 구간의 상황에 대해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 그리고 중국은 그 라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발언했다(Hongwei 2011, p. 174)

132) 롱주는 동부 구간의 중간에 위치한 지역으로 맥마흔라인이 히말라야 산맥의 분수령을 기준으로 그어지다가 이 지역에서 남쪽으로 이탈했다가 다시 분수령으로 이어진다. 이

콩카패스(Kongka Pass)에서 다시 군사충돌이 일어났다. 1960년 4월 인도를 방문한 저우언라이와 네루 사이에 마지막 협상이 시도되었으나 성과가 없이 끝났고, 같은 해 12월까지 양국 관리들 사이에 진행된 협상에서도 입장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

나. 갈등과 대립: 1961~78년

1961년에 들어서는 군사충돌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중국과 인도는 상대방이 자신의 영토에 침범한다는 주장이 반복되면서 긴장은 계속 고조되었다.¹³³⁾ 중국과 인도의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특히 인도에서 중국의 영토침략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던 1961년 11월 인도정부는 분쟁 지역에서 중국이 점령하지 못한 지역과 더불어 이미 중국이 점령한 지역으로도 순찰과 초소건설을 확대해 분쟁지역에 대한 실효적 지배의 강화에 나섰다. 이는 ‘진진정책(forward policy)’이라고 지칭되었는데 중국과 인도의 군사충돌 가능성을 크게 증가시켰다(Kissinger 2011, pp. 187~188).

는 맥마흔이 라인을 그을 때 분수령 남쪽에 티베트인들의 성지가 있어 티베트인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맥마흔라인을 남쪽으로 우회했기 때문이다. 인도는 이것이 자연적 경계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롱주는 인도의 영토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부탄 접경에 가까운 지역(맥마흔라인의 서단)에서도 맥마흔라인은 히말라야 산맥의 분수령을 따르지 않고 그 남쪽에 직선으로 그어진 것도 논란의 소지를 제공했다. 이는 맥마흔이 실측이 아니라 지도 위에 선을 그은 것에서 발생한 문제이다. 이 지역에서 인도는 자연적 경계선을 따라 맥마흔라인보다 북쪽에 위치한 타그라산맥이 국경선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것이 1962년 국경충돌의 직접 원인이 되었다(Arpi 2012).

133) 1961년 들어 인도 정부가 인도에 망명한 티베트인들의 반중 활동을 용인하고, 티베트와 인도 사이의 무역을 통제하고, 뉴델리의 신화사 지사를 폐쇄한 것 등이 당시 양국 사이의 정치적 대립을 보여주는 주요 사례들이다(Hongyi 2011, p. 214). 뿐만 아니라 1959년 이후 인도가 티베트의 반란세력을 지원하는 미국 CIA의 활동을 묵인한 것도 이 시기 중국의 인도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다(Ganguly 2010, p. 93).

전쟁의 직접 발단은 동부 구간의 서측에서 인도군이 맥마혼라인을 넘어 초소건설 등에 나선 것이었다. 인도군의 움직임이 알게 된 중국 정부는 이에 항의하고 1959년 11월 당시 LAC로부터 20km 떨어진 지역으로 병력을 각각 철수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인도는 전진정책을 계속 추진했다. 이에 마오쩌둥은 군사력을 동원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1962년 10월 20일 인도에 대해 전면적이고 기습적인 공격을 개시했다.¹³⁴⁾ 서부 지역에서는 인도군이 새로 세운 초소를 파괴했고, 동부 지역에서는 중국군이 맥마혼라인을 넘어 자신이 주장하는 전통적 경계선까지 남하해 인도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중국이 실질적 분쟁지역을 넘어 군사작전을 전개했기 때문이다. 인도에서는 중국군이 인도 내륙까지 진출할 것이라는 소문도 돌았으나 11월 22일 중국은 일방적 휴전을 선언하고 군대를 맥마혼라인 북쪽으로 철수하며 군사충돌은 종료되었다.

위기에서 벗어난 인도 정부는 암묵적으로 휴전을 받아들였지만 1962년 9월 현재의 상황을 회복하는 것(전진정책으로 확보한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요구하며 중국과 협상에 직접 나서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1962년 전쟁 이후 중국과 인도는 분쟁지역 내에서 군사행동을 자제했다. 1962년 전쟁의 직접적인 피해는 크지 않았으나 중·인 관계에 미친 영향은 심대했다. 특히 인도인에게는 이 전쟁의 패배

134) 인도에서는 중국에 침략을 당했다는 규탄의 목소리가 높았고 국제사회의 여론도 인도에 대해 동정적이었으나 1970년대 이후에는 인도의 판단착오와 모험주의적 군사행동이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연구도 등장했다. 대표적인 것으로 맥스웰(Neville Maxwell)의 연구가 있다(Maxwell 2000). 반면 인도 측에서 원인을 찾기보다는 대약진운동의 실패로 정치적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마오쩌둥의 시도를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는 연구도 있다(MacFarquhar 1997). 물론 이 두 요인 모두 작용했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Arli 2012).

가 국가적 치욕으로 기억되면서 인도 내에서 중국위협론이 주기적으로 부상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었다. 특히 건국 초기부터 중·인 협력에 많은 힘을 쏟았던 네루 총리 본인이 중국에 배신당했다는 좌절감을 토로하고 전쟁 패배로 네루의 정치적 명망이 하락한 것도 중인관계의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후 중국과 인도 사이에 대규모 군사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중국과 인도는 각각 상대국 내의 반란세력이나 분리주의 운동을 지지하는 등 정치관계는 계속 악화되었다. 중·인 사이의 경쟁과 대결은 국제관계에도 큰 파장을 미쳤다. 인도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비동맹원칙에서 벗어나 미국, 소련 등 대국과 관계강화를 모색했다. 먼저 1962년 중·인 전쟁 시기와 그 직후에는 미국과 군사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했다. 그러나 인도와 미국 사이에는 다른 영역(베트남 전쟁, 파키스탄 등에 대한 정책)에서 입장 차이가 컸기 때문에 협력은 지속되지 않았다. 반면 인도와 소련의 관계는 인도에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로 발전했다. 소련은 이미 중·인 전쟁 중에도 같은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중국을 지지하지 않고 인도를 지지하는 입장으로 기울어졌다.¹³⁵⁾ 이후 중·소 분쟁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소련은 인도와 관계를 강화해 중국을 압박하려고 시도했다. 인도와 소련의 관계는 1971년 ‘평화우호협력조약(Pact on Peace, Friendship and Cooperation)’을 체결하며 절정에 달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중국은 인도의 라이벌인 파키스탄과 소련의 라

135) 소련은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중국의 협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중국을 지지하는 입장을 발표했으나 이 위기가 마무리된 이후 인도의 입장을 지지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소련이 사회주의와 비사회주의의 분쟁에서 비사회주의 국가를 지지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고 중·소 갈등이 확대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Kissinger 2011).

이별인 미국과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카슈미르 지역을 둘러싼 분쟁으로 1947년, 1965년, 1971년 세 차례 전쟁을 치렀다. 인도와 라이벌인 파키스탄은 1950년대 초반부터 미국과 동맹 관계를 강화하며 인도와 소련을 견제했다. 그런데 1962년 중·인 전쟁은 중국과 파키스탄의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인도견제에 이해관계가 일치한 중국과 파키스탄은 1963년 국경협정을 체결한 이후 본격적으로 정치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기 시작했고 중국은 인도·파키스탄 분쟁에서 파키스탄의 입장을 지지했다. 파키스탄은 중·미 관계정상화를 위한 대화를 중재하기도 했다. 즉 이 시기 중국과 인도 사이에 적대적 관계가 재생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무대에서 미국·파키스탄·중국과 소련·인도 사이의 대결구도도 형성되었다.

1962년 국경전쟁으로 양국은 대립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중국과 인도 모두 큰 부담이었다. 중국은 인도와 대립하는 것이 티베트 지역의 정치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고원지대에 위치한 이 지역을 방어하기 위한 군사적 부담도 컸다. 인도도 중국과의 대결에 따른 직접적인 부담 이외에, 군사자원을 분산시킴으로써 파키스탄과의 분쟁에 힘을 집중시키기 어렵게 만들고 안보를 소련에 지나치게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1976년 중·인 전쟁의 결정자인 마오쩌둥의 사망 이후 양국은 관계 복원에 나서기 시작했다.

다. 우호관계의 회복과 발전: 1979년~현재

중국과 인도는 1976년 대사교환을 계기로 정부 대화를 재개했다. 1979년 2월에는 인도 외교장관 바지파이(Atal Bihari Vajpayee)가 중국을 방

문해 덩샤오핑(鄧小平)과 회담했다. 이 자리에서 덩샤오핑은 국경문제는 저우언라이 등의 구상처럼 중국과 인도가 동쪽과 서쪽에서 조금씩 양보하는 팩키지딜로 해결하자는 제안과 함께 국경문제가 다른 영역에서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바지파이가 영토문제에 대해 기존 원칙(양국 관계에서 국경 문제의 우선적 해결과 국경 문제에서는 동측 지역의 우선합의)을 고수하였기 때문에 양국 관계의 발전과 관련한 새로운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그렇지만 1981년 중국 외교부장 황화(黃華)가 인도를 방문했을 때 인도는 국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외교부 관원 사이의 대화(China-India Border Talks)를 시작하기로 합의한 것은 물론이고(1981년 11월부터 1987년 11월까지 여덟 차례의 회담이 진행되었음), 국경 문제에 대한 협상과 함께 다른 영역에서 교류와 협력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黃華 2007, 294~295). 1988년 12월 인도 총리 라지브 간디(Rajiv Gadhi)가 34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했을 때 인도와 중국은 국경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도 경제, 문화, 과학기술 영역에서 협력을 증진하자는 원칙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부장관급이 참여해 국경 문제를 논의하는 공동작업소조(Joint Working Group on the India-China Boundary Question)를 조직하기로 합의했다. 라지브 간디의 중국 방문은 1962년 이후 중·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고 이후 중·인 관계의 복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다음 세 영역에서 확인된다.

첫째, 정치영역에서 양국 정부 지도자들 사이의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정상급 교류만을 정리하면 [표 4-1]과 같다. 이 과정에서 양국 사이의 정치적 신뢰가 강화되었다. 예를 들어 2003년 공동선언에서 인도는

표 4-1. 중국·인도 간 정상급 정치교류(1988년 이후)

일시	상대국 방문자	주요 성과
1988.12.19~23	인도 총리 라지브 간디	
1991.12.11~16	중국 총리 리펑	'영사협정', '변경무역 재개에 대한 양해서',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과학기술협력에 대한 양해서' 등
1993.9.6~9	인도 총리 나라심하 라오	'LAC 지역의 평화 및 안전 유지에 관한 합의'
1996.11.28	중국 국가주석, 중국공산당 총서기 장쩌민	'LAC 지역의 군사영역 신뢰구축조치에 관한 협정', '해상교통에 대한 합의' 등
1999.6.14~15	인도 총리 자스완트 싱	-
2000.5.28~6.3	인도 대통령 나라야난	-
2002.1.12~18	중국 총리 주룽지	관광, 우주의 평화적 이용, 과학기술 등 영역의 협력에 대한 합의. 베이징-뉴델리 직항로
2003.7.22~23	인도 총리 바지파이	'중·인관계원칙과 전면합작에 관한 선언'
2005.4.9~12	중국 총리 원자바오	'중·인 공동선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건설), '중·인 변경문제해결을 위한 정치지도원칙에 관한 협정', '경제, 무역에서 전면협력을 위한 5개년 계획' 등
2006.11.20~22	중국 국가주석, 중국공산당 총서기 후진타오	'중·인공동선언'(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의 증진을 위한 '10개전략')
2008.1.13~16	인도 총리 만모한 싱	'중·인 21세기공동비전'
2010.12.15~17	중국 총리 원자바오	'공동선언'
2011.3.12~15	인도 총리 만모한 싱	중국 하이난성에서 열린 BRICs 정상회담에 참석
2012.3.28~30	중국 국가주석 후진타오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BRICs 정상회담 참석

주: 위의 상호방문 이외에 G8회의, 상하이협력기구, 동아시아정상회의 등의 국제회의에서 이루어진 양국 정상회담은 제외했음.

자료: 필자 정리.

처음으로 티베트 자치구가 중국의 일부라는 것을 공식성명에 포함시켰다. 인도의 시킴(Sikkim) 병합을 인정하지 않았던 중국도 시킴을 인도의 일부 분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중·인 변경무역에 관한 양해서를 체결했다. 2005년 중국 원자바오 총리가 인도를 방문했을 때 발표된 '중·인 공동선언'에서는 양국 관계를 '전략 협력 동반자'로 발전시킨다는 합의를 했고, 2005년 후진타오·만모한 싱 공동선언에서는 이를 위한 '10개 전략'에 합의했다.

둘째, 국경 문제에서는 1993년 인도 총리 바지파이가 중국을 방문해 체결한 ‘LAC 지역의 평화 및 안전 유지에 관한 합의’로 양국은 최종해결 이전에는 LAC를 준수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이 합의에는 양측이 지정한 지역에서 군사훈련을 금지하는 조치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1996년 11월 장쩌민(江澤民)이 인도를 방문하여 체결한 ‘LAC 지역의 군사영역 신뢰구축조치에 관한 협정’에는 군사력 감축, 1만 5,000명 이상의 병력이 참여하는 군사훈련 금지, LAC 10km 이내에서 전투기 비행금지 등 신뢰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2003년부터는 더 높은 수준에서 국경 문제에 대해 협의하는 특별대표대화(SR-level talks)가 새로 시작되어 2012년 1월까지 15차례 회담이 진행되었다.¹³⁶⁾ 이러한 노력은 분쟁지역에서 군사충돌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 교류와 협력이 국경 문제의 영향을 받지 않고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했다.

셋째, 경제, 문화, 과학기술 영역에서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교역규모의 빠른 증가이다. 중국과 인도는 1984년부터 상대국에 최혜국대우(MFN)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1992년 이중과세금지와 관련해 합의했다. 양국의 교역규모는 1988년 약 2억 5,000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2000년에는 29억 달러로 증가했다. 21세기 들어 양국 교역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해 2003년 80억 달러, 2004년에는

136) 이 회담에는 현재 중국에서는 국무위원 다이빙궈(戴秉國)가 인도에서는 국가안전보좌관 시브 샹카르 메논(Shiv Shankar Menon)이 참여하고 있다. 다이빙궈는 2003년 회담이 시작된 이후 계속 중국 대표를 맡아왔고, 인도의 메논은 네 번째 대표이다. 2003~05년 사이에 열린 다섯 차례의 회담에서는 국경문제해결을 위한 정치적 원칙에 합의를 만들어내었고, 2005년 9월 6차 회담부터는 국경분쟁의 해결을 위한 합의(agreed framework)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여기서 핵심 내용은 LAC를 확정하는 것이다.

130억 달러로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에 고무되어 2005년 정상회담에서는 2012년까지 300억 달러로, 2006년 정상회담에서는 2010년까지 400억 달러로, 2010년 정상회담에서는 2015년까지 1,000억 달러로 교역규모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실제 교역규모는 이러한 목표를 훨씬 뛰어넘어 2008년 519억 달러, 2010년 617억 달러, 2011년에는 739억 달러로 각각 증가했으며, 중국은 2009년 이후 인도의 최대 교역상대국이 되었다.

물론 이 시기에 중인관계에 긍정적인 변화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1998년 새로 집권한 인도국민당이 중국의 위협을 이유로 들며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중인관계가 일시적으로 악화되었다. 21세기 들어 양국 관계는 다시 회복되고 2005년까지 비교적 순탄하게 발전하였으나 2006년 들어 다시 갈등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인도 내에서는 중국의 부상에 대한 경계심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인도는 중국 견제를 목표로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것이 인도에 대한 중국의 경계심을 증가시켰다. 둘째, 중국은 특별대표대화에서 국경 확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이후 아루나찰 프라데시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된 마찰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특히 맥마흔라인 남쪽의 타왕(Tawang)이 티베트의 일부라는 주장을 강하게 해오는 것으로 알려졌다(Malik 2011, p.146). 이는 중국 측의 입장이 동부에서는 맥마흔라인을 기준으로 국경선을 정하고 그 대신 서부에서는 인도가 악사이천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을 인정한다는 기존입장보다 강경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증가는 양국 내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빠르게 증가시켰다. 물론 중국과 인도가 이러한 갈등요인 때문에 협력을 확대해가는 추세를 중단하지는 않

고 있다. 그렇지만 중인관계에 불확실성이 높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 주었다.

2. 중·인 관계의 협력요인과 갈등요인¹³⁷⁾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1980년대 이후, 특히 냉전체제의 해체 이후 중인관계는 협력관계를 복원해왔으나 그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다. 국경문제, 상대방에 대한 불신 등으로 양국 관계에는 갈등과 회복이라는 작은 사이클이 반복되었다. 첫번째 위기는 1980년대 중반 동부 LAC 근처의 슈도롱추 계곡(Sumdorong Chu valley)에서 양국이 군대를 전진배치하며 출현했다. 이 위기는 1988년 라지브 간디의 중국 방문으로 완전히 해소되었다. 두 번째 위기는 1998년 5월 11일과 13일 인도가 다섯 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고조되었다. 핵실험을 진행하기 직전인 5월 30일 인도 국방장관 페르난데스(Goerge Fernandes)가 공개적으로 중국이 인도의 가장 큰 잠재적 위협(potential threat number 1)이라고 발언했고, 핵실험을 진행하면서 인도 총리 바지파이가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에게 보낸 서신에서 중국의 핵위협을 핵실험이 필요한 이유로 제시해 중국을 자각했기 때문이다.¹³⁸⁾ 이러한 이유로 악화된 양국 관계는 2003년이 되어서야 완전히 회복되었다. 세 번째 위기는 2006년 이후 양국 사이에 새로운 전략적 갈등요인(인도양과 동남아시아에서의 경쟁, 미·인 관계의 발전 등)이

137) 이와 관련된 논의는 박병광(2007)과 吳永年(2010, pp. 216~233) 등을 참고.

138) 이 편지의 내용은 『뉴욕 타임스(The New York Times)』 1998년 5월 13일자에 보도되며 공개되었다.

발생하면서 출현했고 이 문제들이 양국 관계를 즉각 과탄으로 내몰지는 않았지만 완전히 해소된 것도 아니다.

이는 중·인 관계가 양국이 목표로 하는 ‘전략 협력 동반자’로 발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 그렇다고 양국 관계가 1960년대와 1970년대의 갈등과 대립으로 후퇴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 경제, 외교, 안보 등 여러 영역에서 양국의 공동이익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양국 사이에 협력 관계가 발전하더라도 발전과 일시적 후퇴를 반복하는 나선형의 발전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다. 그에 대한 전망을 위해 아래에서는 먼저 양국 관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협력요인과 갈등요인을 살펴볼 것이다.

가. 중·인 관계의 협력요인

1)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외부환경 조성

중국과 인도는 모두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민생 문제 해결을 핵심 국가 목표로 삼고 있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을 시작한 이후, 인도는 1991년 경제자유화 정책을 실시한 이후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해 2000년대 초반 10년 동안 중국 9%, 인도는 6~7%의 연평균 GDP 성장률을 기록했다. 한 장기전망에 따르면 2027년 중국은 미국을 추월해 세계 1위의 경제대국으로, 인도는 일본을 추월해 세계 3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한다(O'Neill 2009, p. 23). 중국과 인도는 모두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찬란한 문명과 인구대국에 어울리는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건국 이후 서구국가들의 정치경제적 개입으로부터 주권의 독립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자주외교와 자립경제 노선은 신생국의

주권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대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데는 명확한 한계를 보였다. 이에 대한 반성에 기초해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을, 인도는 이보다 늦은 1991년 경제자유화정책을 각각 시작하며 시장화 개혁과 서구국가의 자본과 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한 대외개방을 추진했다. 그 결과 중국과 인도는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해 21세기 전반에는 세계질서의 변화를 주도하는 정치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문제는 중국과 인도의 경제성장이 빠르게 진행되지만 이들의 종합적인 국력은 여전히 낮은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이다. IMF 통계에 따르면 2011년 중국의 1인당 GDP는 5,414달러로 48,387달러를 기록한 미국의 8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내부적으로 지역간, 계층간 소득격차가 확대되어 사회갈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인도는 중국보다도 문제가 더 많다. 1인당 GDP는 1,389달러로 중국의 약 4분의 1에 불과한데 소득격차가 이미 중국과 마찬가지로 빠르게 벌어지고 있다. 부실한 기초교육, 높은 문맹률, 아동들의 영양실조 등도 인도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양국이 명실상부한 경제대국으로 발전하고 이를 기초로 정치대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내부의 경제사회적 문제가 아직 많다.¹³⁹⁾ 따라서 앞으로 상당 기간 국가자원을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내부의 정치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

139) 흥미로운 점은 현재 중국과 인도의 경제발전과 사회발전 수준의 큰 격차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인도의 발전잠재력을 더 높이 평가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Wolf 2011, p. xix). 인도의 민주주의 제도, 활발한 민영기업, 사법제도, 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높게 유지될 수 있는 인구구조 등이 중국에 비해 우위에 있는 요소로 지적된다.

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다른 국가들, 특히 대국 및 주변 국가들과 갈등을 피하며 평화적인 외부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Malik 2011, p.47).

이에 따라 중국은 개혁개방을 시작한 이후 과거 군사충돌이 발생했던 러시아, 한국, 인도, 베트남 등과 관계정상화를 꾸준히 추구해왔다. 인도도 과거 불편한 관계였던 미국, 중국 등 대국들은 물론이고 주변 국가들과 관계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과 인도가 경제발전을 국가의 핵심전략으로 삼는 한 앞으로도 이러한 흐름은 어떤 세력이 정권을 차지하는가와 관계없이 지속될 것이다. 이것이 중국과 인도가 상대방의 의도에 대한 불신이 적지 않은 상태에서도 협력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다.

2) 내부의 정치적 안정

약 4,000km의 국경을 맞댄 양국 사이에 갈등이 격화되면 국경 방어를 위한 군사적, 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할 뿐만 아니라 내부의 정치안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중국은 티베트 문제가 인도와의 관계에 큰 영향을 받는다. 인도와 티베트는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오랜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교류의 역사가 있다. 현재 인도가 티베트는 중국의 일부라는 중국의 주장을 수용하고 있지만 달라이라마나 티베트 망명정부와의 관계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티베트 문제는 2008년 유혈사태가 발생한 이후 최근까지 분신자살이 연이어 발생하는 등 더욱 악화되고 있다. 실제로 인도에서는 중국과 관계에서 티베트 카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티베트 문제가 악화될수록 더 증

가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들 중에서는 인도가 티베트를 중국의 일부분이라고 인정한 것에 더 이상 구속될 필요가 없고 장기적으로 티베트를 중국과 인도의 완충지역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Malik 2011, pp. 135~137). 따라서 중·인 관계가 악화되면 인도는 지리적 인접성과 인적 연대 등을 활용해 티베트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 인도는 카슈미르 지역 및 농촌 지역에서 정부의 통치에 저항하는 세력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중국 변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냉전 시기 카슈미르 문제와 관련해 파키스탄과 마찬가지로 카슈미르 주민들의 결정권을 지지하는 입장을 견지한 바 있다. 카슈미르 지역 중에서 인도가 통치하는 자무 카슈미르 지역은 지금도 이슬람계와 힌두계의 충돌이 끊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파키스탄이 통치하는 카슈미르 지역 내의 조직과 연계된 테러 조직들의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2001년 12월 인도 뉴델리의 국회의사당에 대한 테러는 큰 충격을 주었다. 2006년 이후 테러와 각종 무장충돌에 따른 사망자 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카슈미르 문제는 여전히 휘발성이 매우 높은 문제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 『인민일보』는 1967년 인도 서벵골에서 시작된 나살라이트(Naxalites)의 게릴라 투쟁을 ‘봄의 뇌성’이라고 높이 평가하는 등 내란을 부추기고 1978년 이전까지 게릴라 세력을 은밀하게 지원했다. 물론 개혁개방을 시작한 이후 중국과 이들 무장세력의 관계는 단절되었다. 그렇지만 인도 내에서 농촌 게릴라 세력의 자발적인 활동은 계속되었고 21세기 들어 다시 증가하는 추세여서 인도 정부의 커다란 골칫거리가 되었다.¹⁴⁰⁾

140) 농촌에서 반란은 특히 2005~06년에 다시 절정에 이르렀다. 2006년 8월 15일 인도 총

상대 국가의 내부 문제에 대한 노골적인 개입은 양국 관계가 정상화됨에 따라 중단되었으나 이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 확산은 경제발전이라는 핵심적 국가목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양국 정부는 이 문제들이 중·인관계를 해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03년 양국 정상회담에서 티베트와 시킴 문제에 대해 상대국의 입장을 존중하는 내용이 합의사항에 포함되었다. 중국은 카슈미르 문제를 둘러싼 인도와 파키스탄의 갈등에 대해서도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요인들과 관련해 돌출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도 큰 부작용을 낳지 않고 신속하게 수습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11년 11월에 열릴 예정이었던 국경 문제 논의를 위한 특별 대표회담(SR-level talks)이 달라이라마의 인도 불교행사 참석문제로 취소되었으나, 2012년 1월에 다시 개최되었다.¹⁴¹⁾ 즉 티베트, 카슈미르 등의 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입장 차이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중국과 인도는 이를 상대방에 대한 정치적 압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 보다는 자신이 직면한 문제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하는 데 주력하고 이에 상대국의 협력을 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리 모하메드 싱은 테러리즘과 낙살라이트(Naxalites) 등의 내부 반란세력을 인도의 내부 안전을 위협하는 두 가지 가장 큰 위협으로 지적했다. 이후 인도 정부는 군사 게릴라를 약화시키기 위한 정치, 경제, 군사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했다.

141) 이 회담에서 양국은 ‘중·인 국경문제에 대한 협의와 협력을 위한 작업기제구축에 대한 합의서(Agreement on the Establishment of a Working Mechanism for Consultation and Coordination on India-China Border Affairs)’에 서명했다. 이 합의서에는 LAC 위반이 발생하면 양국 외무장관이 실시간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3) 국제무대에서 공동이익 - 에너지협력, 기후협약, 다자무역협상

국제사회에서 중국과 인도는 개발도상국이라는 위치에서 공동이익을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협력, 기후변화협약, 다자무역협상 등이 이러한 협력이 필요한 대표적 영역이다.

에너지협력은 중국과 인도 모두 에너지수입국이라는 점에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과 인도는 제조업의 성장, 소득증가에 따른 자동차와 냉방기 등에 대한 수요증가로 앞으로 에너지소비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1950년대 중반 이후 줄곧 석유를 자급자족하던 중국은 1993년 석유수입국이 된 이후 2009년 수입의존도가 50%를 넘어섰다. 국내 석유 생산량이 적은 인도의 수입의존도는 중국보다 훨씬 높아서 2010년에 이미 80%에 달했다. 현재 중국은 세계 2위, 인도는 세계 4위의 석유수입국이다(李雪文·馬男迪 2011, p. 3). 2004년 IEA의 예측에 따르면 양국의 석유 수입의존도는 2030년에 각각 70%와 90%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인도의 석유수입 증가는 국제석유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중국과 인도 또한 에너지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국가안전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물론 중국과 인도가 해외에서 에너지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할 가능성도 높다. 그렇지만 이는 양자 모두에게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장기적으로 볼 때 양국은 경쟁보다는 협력하여 공동이익을 증가시키는 것이 더 합리적 선택이다. 이에 따라 2000년대 들어 양국은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해왔고 2005년 공동성명의 9항에 에너지 안전과 절약 영역에서 협력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이후 2006년 12월 인도의 ONGC와 중국의 SINOPEC이 시리아에 투자한 캐나다계 회사의 지분 37%를 공동

으로 매수했고, 이란의 야다바란(Yadvaran) 유전개발에도 각각 28%와 51%의 지분으로 공동 참여하는 등 협력이 진행되었다. 2006년 8월에는 콜롬비아 유전을 각각 50% 지분으로 매수했다(Singh 2010, p. 18). 그러나 양국의 에너지협력은 아직 산발적으로 진행되며 전략적 협력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앞으로는 이러한 상황이 변할 가능성이 있다(Müller-Kraenner, 2008, p. 12). 특히 이란, 러시아, 중앙아시아의 에너지 자원을 중국과 인도로 연결하는 송유관과 가스관을 건설하는 사업이 진전된다면 중·인 에너지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 것이고 이는 양국의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해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이 되었지만 배출감축의무를 질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 요구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을 내세워 거부하고 그 대신 2020년 단위 GDP당 CO₂의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0~45% 감축할 것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책임을 구분하는 이러한 원칙은 인도를 포함한 개발도상국의 지지를 받고 있다. 2008년 코펜하겐 회의에서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 중국 등이 선진국의 발전도상국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요구에 공동으로 대응했고, 이를 계기로 이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에서 이른바 BASIC라고 불리는 공동전선이 구축되었다. 도하 라운드 등 다자 무역협상에서도 중국과 인도는 선진국의 환경, 노동 관련 규범을 강화하려는 시도에 반대하고 미국과 유럽에서 농민들에 대한 보조금을 줄일 것은 요구하는 데 보조를 같이하였다. 이 영역에서는 양국의 현실적 이익이 일치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협력이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4) 대외정책의 유연성 확보

현재 중국과 인도는 모두 미국과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대외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외교적 자산을 미국과의 관계에 투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1972년부터 미국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했으며 1980년대까지 중·미 관계는 계속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했다. 미국과의 관계만 보면 인도보다 한 발 앞서 있었다. 그러나 냉전체제 이후 중·미 사이에는 인권, 타이완 문제 등으로 마찰이 증가했으며, 21세기 들어서 중국의 부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양자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중국이 당장 미국과 대결을 추구하지는 않지만 미국의 패권을 견제할 수 있는 외교적 자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인도의 협력은 중국에 매우 큰 도움이 된다.

물론 인도가 미국과 협력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구상이 뜻대로 실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될 것이다. 심지어는 중국전체가 인도와 미국의 공동목표가 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양국의 핵협력이다. 미국은 인도가 NPT 체제 밖에서 핵실험을 진행했음에도 인도가 핵확산에 협력하는 것을 전제로 민간 핵기술 이전을 허용하고 인도의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인정했다. 이러한 결정의 배후에는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미국의 높은 평가가 자리를 잡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도는 서구식 대의적 민주주의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근거로 내세우고 있고 미국도 이를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있다(Mohan 2007).

그렇지만 인도도 미국과의 협력을 동맹관계로 발전시키는 것에 대해서

는 신중한 태도이다. 동시에 자신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면 미국과 협력하는 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양국 사이에 기후변화협약, 다자무역협상 등 여러 영역에서 이익 충돌이 있다는 현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미국이 9·11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 파키스탄과 협력을 더 강화한 것도 인도의 불만을 초래했다. 무엇보다도 정치대국을 지향하는 인도로서는 독자적인 외교공간의 확보를 필요로 한다.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공식적인 동맹관계에 묶이는 것보다 다양한 외교자산을 갖는 것이 자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다(Mohan 2006). 인도가 러시아, 중국과 삼각협력에 참여한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가능했던 것이다.

나. 중·인 관계의 갈등요인

1) 국경 문제와 민족주의

중국과 인도는 LAC를 기초로 변경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에 합의한 상태이며 다양한 채널의 대화를 통해 국경 문제의 최종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접경 지역에서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에도 많은 진전이 있었다. 그 결과 중·인 국경에서 대규모 군사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다. 그렇지만 이것으로 국경문제가 더 이상 양국 관계의 발전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국경 문제는 여전히 양국의 가장 민감한 갈등요인으로 남아 있다. 현재 양국의 국경문제로 발생하는 갈등에는 다음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미해결의 국경 문제에서 파생되는 정치갈등이다. 인도는 동부 지역에서 LAC의 남쪽 지역에 아루나찰 프라데시(Arunachal Pradesh)라는

행정구역을 설치해 실효적으로 통치하고 있다. 그런데 2006년 이후 중국이 이 지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며 갈등이 커지고 있다. 중국은 이 지역을 장난(藏南, South Tibet)이라 부르며 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주민이 중국을 방문하는 데 비자가 필요 없다는 이유로 비자를 발급하지 않았다.¹⁴²⁾ 최근 입장을 다소 수정해 일반비자가 아니라 비자를 별지로 여권에 부착해주는(stapled visa)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 역시 외교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¹⁴³⁾ 또한 2009년 중국 정부는 인도가 아시아개발은행(ADB)에 차관을 신청한 29억 달러 규모의 사업계획을 아루나찰 프라데시 지역의 홍수관리 및 용수공급 등과 관련한 사업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미국, 일본, 남한 등의 지지로 이 계획은 이사회를 통과했으나 인도는 결국 이 사업을 전체 계획에서 제외했다. 2008년 12월 인도는 외교부 장관이 아루나찰 프라데시 내에서도 인도과 중국 사이에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타왕 지역을 방문하고 2009년 10월에는 총리 만모한 싱이 선거운동을 위해 아루나찰 프라데시 지역을 방문했다. 그리고 2009년 11월에는 달라이라마가 타왕 지역을 방문하여 타왕은 인도의 영토라고 주장해 중국을 자극했다. 특히 중국은 2008년 티베트에서 유혈사태가 발생한 이후 인도의 움직임이 티베트에 대한 영향력을 증가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경계하고 있다. 이

142) 중국의 공식 매체에서 ‘장난(藏南)’이라는 표현은 2005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했고, 이는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Malik 2011, pp. 150~151). 이 시기는 국경문제해결을 위한 특별대표회의가 1단계에서 LAC의 확정을 위한 2단계 회의로 진입한 시기이기도 하다.

143) 중국은 자무-카슈미르 주민에 대해서도 파키스탄과 인도 사이의 분쟁지역이라는 이유로 별도 비자를 발급해왔으나 인도의 강력한 항의로 최근 일반비자를 내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꿨다. 그러나 아루나찰 프라데시 주민에 대해서는 별도 비자를 발급하는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러한 문제들은 양국 관계를 크게 악화시키지 않고 해결되기는 했지만 양국 국민 감정을 악화시키는 등 중·인 관계의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둘째, 일부 지역에서는 LAC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¹⁴⁴⁾ 1962년 국경 전쟁 때 문제가 되었던 동부 구간의 롱주(Longju)와 체동(Che Dong), 그리고 서부 구간의 카라코람패스(Karakoram pass)가 대표적인 지역이다. 이처럼 논란이 되는 지역에서 양국이 자신이 주장하는 LAC까지 순찰활동을 한다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LAC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¹⁴⁵⁾ 이에 따라 최근 인도에서는 2010년 이후 중국의 LAC 침범(intrusion) 사례가 500여 차례에 이른다는 보도가 이어졌고 현재 야당인 BJP도 이를 문제로 삼고 있다(*Economic Times* AUG 21 2012). LAC가 확정되기 이전에는 이러한 마찰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LAC 주변에서의 군사활동과 인프라 건설 등이 상대국의 경계심을 강화하고 있다. 인도는 티베트 지역에 중국이 군사활동을 증강하는 것이 티베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동시에 인도를 겨냥한 것이라는 의심을 하고 있다. 즉 중국이 이 지역에 건설하는 철도 및 도로 시설도 군사적 목적이 있다고 경계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인도가 히말라야 산악 지대에서 군사작전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두 개의 산악사단을 새로 투입한 것과 두 개의 스호이-30MKI 중대를 배치한 것 등에 불만을 표명해왔다. 이처럼 변경 지역에서 중국과 인도의 군비경쟁이 가속화된다면 이는

144) 맥마흔라인이 실측에 기초에서 그려진 것이 아니라 지도 위에 두껍게 그려진 선(약 3km)이고 특히 동부 구간의 서측(부탄, 중국 티베트, 인도의 접경지역)에 이러한 문제가 뚜렷하다(Arpi 2012).

145) 인도 국방장관 안토니는 2012년 9월 의회에서 최근 3년 동안 중국에 의한 LAC에 대한 침범 사례는 없으며 중국군이 LAC를 위반(transgression)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 문제는 핫라인 등의 통로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시 상대방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 즉 중국과 인도가 앞으로 안보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양국 내에서 국경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수록 그 가능성 또한 높아질 것이다. 특히 1962년 전쟁에서 패배한 상처를 가진 인도에 국경문제는 지금도 폭발성이 매우 강한 이슈이며 인도 내에서 중국위협론을 확산시키는 가장 심각한 요인이다. 그런데 최근 중국 내에서도 민족주의가 고조되면서 인도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가 중국 영토를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군사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까지 등장하고 있다(Shen 2011, pp. 53~54). 이러한 여론들이 충돌하면 국경 문제의 최종적 해결을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의 협력도 제약될 것이다.

2) 지정학적 갈등과 제3국 문제

인도와 중국이 고대부터 문화적, 인적 교류가 있었고 특히 인도에서 발원한 불교가 중국에 끼친 영향력은 매우 컸다.¹⁴⁶⁾ 그렇지만 히말라야 산맥으로 가로막힌 조건에 종교적 열정이 없고서는 두 지역 사이의 교류가 쉽지는 않았다. 따라서 불교를 매개로 하는 교류가 약화된 이후에 양자는 지정학적으로 독립된 공간에서 활동했다. 그러나 19세기 이후 양국은 지정학적으로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다. 인도를 통치하던 영국과 남진하던 제정러시아가 티베트를 둘러싸고 세력 경쟁을 벌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146) 아마티아 센(Amartya Sen)은 기원후 첫 번째 밀레니엄 시기에 중국과 인도 사이에 종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된 문화적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새로운 밀레니엄에서는 양국이 이러한 전통을 계승할 필요성을 강조했다(아마티아 센 2005, pp. 180~204).

티베트 지역에 대해 통치권을 주장하던 청조도 이 지역의 복잡한 게임에 개입하게 되었고 이후 새로 건국한 중국과 인도도 이 지역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중국과 인도는 국경을 접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네팔, 부탄, 시킴, 파키스탄 등의 신생 국가들이 중국과 인도 사이에 전개되는 경쟁의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중국과 인도는 상호 불신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과 인도는 이들 국가들이 상대국과 맺는 관계가 자신의 전략적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중 가장 큰 변수는 파키스탄 문제이다. 파키스탄이 1947년 인도로부터 독립한 이후 양국은 세 번의 전쟁을 치렀고 최근까지 파카스탄 내에서 계획되고 조직된 테러가 인도에서 발생하는 등 긴장과 대립이 계속되었다. 특히 카슈미르 지역이 양국 군사충돌의 도화선이 되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모두 카슈미르 지역을 자국의 영토로 주장하는데 현재는 각각 부분적으로 실효적 지배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인도가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카슈미르 지역(자무-카슈미르) 내에는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다수의 주민이 있고 이들은 인도로부터 독립을 요구해왔다. 그리고 파키스탄은 건국 이후 직간접적으로 이들을 지원하면서 양국 사이의 마찰과 충돌이 반복되면서 이는 세 차례의 전쟁으로 이어졌다. 중국은 인도를 견제하기 위해 1964년부터 파키스탄의 입장을 지지하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국가 규모의 차이로 인해 파키스탄은 군사력에서 인도와 격차가 벌어졌다. 1985년 국방지출은 인도가 89억 달러에 달했으나 파키스탄은 29억 6,000만 달러에 불과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파키스탄은 핵무기 개발에 나섰고 인도는 중국이 파키스탄의 핵개발을 지원했다고 판단하였다(Basrur 2010,

p. 13). 이에 따라 인도는 중국과 파키스탄의 협력을 자신의 안보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요인으로 간주해왔다. 최근 중국이 파키스탄과 인도의 영토분쟁에 중립적 태도를 취함에 따라 파카스탄 변수가 중·인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중국과 파키스탄의 군사협력은 여전히 인도의 경계대상이다.

또한 교통통신 수단의 발달로 지리적 위치의 지정학적 의미가 변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중국에 그리 중요하지 않았던 동남아 해역과 인도양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인도 역시 동남아와 동북아와의 관계를 중시하게 시작했다. 이에 따라 인도는 중국의 인도양 주변 국가로의 진출, 중국은 인도의 동남아 국가, 일본, 미국 등과의 관계 강화가 각각 자신의 안보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즉 21세기 들어 양국 사이에는 해양에서의 경쟁이 새로운 갈등요인으로 등장한 것이다. 중국은 중동에서 인도양, 말라카 해협을 거쳐 남중국해에 이르는 해양수송로(sea-lane) 확보를 위해 파키스탄, 미얀마, 방글라데시 등의 국가에 항구건설과 항구 사용권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런데 인도 내에서는 이러한 중국의 행동을 자신에 대한 포위전략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반면 중국은 인도의 ‘동방정책(look east policy)’에 대해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는 1991년 경제적 자유화, 개방 정책과 함께 동남아시아 등 주변 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제시한 전략이었다. 여기에는 중국과 관계를 강화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최근 인도가 중국과 도서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분쟁 중인 베트남, 일본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중국은 이 행위를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에 동조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다.

중국과 인도의 이러한 행위에 상대방에 대한 견제라는 의도가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외교자산을 분산시키고 상대국에 대한 견제와는 상관이 없는 국가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행위에서 크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즉 이들이 상대방에 대한 포위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추구하기보다는 위협을 분산시키는 헤징 전략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 증가하는 것에는 미국 변수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미국은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런데 1990년대 들어 중·미 사이에는 인권 문제, 타이완 문제 등을 둘러싼 갈등이 증가해왔고, 21세기 들어서 중국이 빠르게 부상하면서 중·미 관계는 협력과 경쟁이 착종된 복잡한 양상을 띠기 시작했다. 냉전 이후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서 일관되는 요소는 이 지역에서 미국의 헤게모니와 이익에 도전하는 국가의 등장을 막는 것이었다. 특히 미국은 이라크 전쟁 이후 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인식 아래 2011년부터 ‘아시아로의 축 이동(pivot to Asia)’라는 방침을 내걸고(Clinton 2011) 본격적으로 중국견제에 나서면서 미·중 관계의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인도와 미국이 협력을 강화하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양상은 베트남, 필리핀 등에서도 나타나지만 인도와 미국의 협력은 아시아 전반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물론 인도도 미·중 관계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8년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미국이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과 협력을 강조하는 것에 적지 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른바 G2 질서가 국제사회에서 인

도의 위상을 약화시키고 중국과의 관계에서 인도가 불리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앞으로 ‘중국·인도·미국’의 삼각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것인지가 주목되는데 당분간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와 미국이 협력하는 것이 삼각관계 내에서 더 주요한 측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3) 무역불균형과 경제안전 문제

경제영역은 중·인 관계가 가장 빠르게 진전된 영역이다. 경제교류의 증가는 국가간 협력의 기초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갈등요인이 발생하기도 한다. 중·인 경제교류에서는 무역불균형과 더불어 인도시장에 대한 중국 제조업의 위협 등이 갈등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중국과 인도 사이의 무역불균형은 21세기 들어 본격적으로 확대되었다. 인도의 통계에 따르면 2001~02년에는 10억 달러에 그쳤던 인도의 대중 무역적자는 2011~02년에는 397억 달러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인도 정부는 중국 정부에 이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요구하고 인도 내에서는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인상, 수입금지를 요구하는 보호주의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12년 7월 인도 정부는 발전설비(power equipment)의 수입에 21%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Williams 2012). 그렇지만 중·인 교역 불균형이 인도 경제에 심각한 위협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우선, 인도 무역적자 급증의 주요 원인이 중국에 있지 않다. 인도의 전체 무역적자는 2000년 약 130억 달러에서 2012년 1,849억 달러로 급증했다. 이는 인도 GDP의 9.9%에 달하는 액수인데 이 가운데 중국과의 무역에서 발생하는 적자는 전체 무역적자의 20% 정도이다. 이 시

기 무역적자의 급증은 주로 석유, 가스 등 에너지수입에서 비롯되었고 이 분야에서 발생한 무역적자가 전체 무역적자의 65%에 달한다. 또한, 중국과의 무역적자는 기계설비 등 자본재의 수입 증가에 따른 것인데 이는 인도 정부가 낙후한 사회간접시설을 현대화하려는 노력의 결과이다. 중국은 이러한 장비를 가장 싸게 공급해주는 국가이기 때문에 과도한 수입규제는 인도의 인프라건설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Gupta and Wang 2012). 따라서 인도 정부는 보호주의로 중국과 무역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높지 않고 다만 이 문제를 제기해 인도가 강점을 가진 중국 IT 시장과 의약품시장을 개방시키려고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제조업 발전이 필요한 인도로서는 중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경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도 내에서는 관련 산업에서 보호주의를 요구하는 여론이 강화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특히 중국 정부가 인도의 시장개방 요구에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양국 무역마찰이 정치마찰로 발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중·인 관계의 전망과 삼각협력체제에 미치는 영향

중·인 관계의 미래는 협력요인과 갈등요인 사이의 상호작용에 따라 매우 다양한 양상이 출현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중·인 관계에서 전략적 협력 관계, 우호적 협력 관계, 경쟁적 협력 관계, 전략적 대립 관계 등 네 가지 시나리오 모두 실현 가능성이 있다. 중인관계의 미래가 이 중 어떤 경로로 발전할지는 무엇보다도 국민국가로서의 완전성(integrity)을 위협하는 안보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지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영토

갈등이 그 대표적인 문제이고 파키스탄, 티베트 등을 둘러싼 갈등도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안보문제는 기능주의적 접근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만약 이러한 안보문제를 해결한다면 중인관계가 전략적 협력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반대로 이러한 안보문제가 다시 주요한 갈등요인으로 등장하게 되면 양국 관계는 전략적 대립 관계로 나아갈 수도 있다. 이러한 안보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지만 다른 영역에서의 발전을 완전히 가로막지 않는다면 현재와 같이 협력요인과 갈등요인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는 관계가 계속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협력요인들이 더 주요한 작용을 하면 우호적 협력 관계, 갈등요인들이 더 주요한 작용을 하면 경쟁적 협력 관계가 될 것이다. 본 장에서는 먼저 중인관계 변화의 여러 가능성들을 검토하고 그다음 중인관계가 삼각협력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것이다.

가. 중·인 관계의 전망

1) 전략적 협력 관계

2005년 중국과 인도는 양국 관계를 ‘전략 협력 동반자(China-India strategic and cooperative partnership for peace and prosperity)’로 발전시킨다는 목표를 이미 제시한 바 있다. 이들이 추구하는 전략적 협력 관계는 양국이 상대방의 핵심이익을 존중하고, 교류 협력을 전면적으로 진전시키고, 국제사회의 주요 사안과 관련해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¹⁴⁷⁾ 따라서 전략적 협력 관계는 공동의 적을 상정하고 그에 대응

147) 2005년 4월 11일 발표된 공동선언에서는 이 관계를 “(1) 평화공존 5원칙, 상호존중,

하기 위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동맹 관계와 다르다. 중국과 인도는 각각 독립자주의고, 비동맹외교를 주요 지침으로 삼아온 외교전통이 있으며 동맹 관계가 외교활동의 유연성을 제약해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양국이 동맹 관계로의 발전을 추구할 가능성은 낮다. 즉 현재 양국이 추구하는 전략적 협력 관계에서는 패권 강화나 패권에 대한 도전과 같은 대외적 목표보다는 국가발전에 유리한 국제환경을 조성하고 국가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 내는 것과 같은 대내적 목표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¹⁴⁸⁾

물론 중국과 인도 사이에 전략적 협력 관계가 발전된다면 세계에 대한 영향은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국과 인도는 세계인구의 35% 이상을 차지하는 대국일 뿐만 아니라 지정학적으로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 인도양을 연결하는 지역에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인도의 전략적 협력관계가 발전한다면 적어도 자신의 세력범위 안에서는 지배적 행위자로 등장할 수 있을 것이고 국제사회의 다극화도 더 빠른 속도로 진행

상대방의 관심과 요구에 대한 고려, 평등에 기초하며 (2) 양국 공동의 그리고 평등한 안보, 발전과 번영에 기반을 둔 양국 관계의 전면적이고 광범위한 발전을 위한 우호적 틀(frame-work)을 제공하고, (3) 지구적 차원에서의 도전과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번호는 저자가 추가).”라고 설명하고 있다.

- 148)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는 중국이 주요 대국들과의 관계를 안정화하기 위해 1990년대부터 제기한 개념이다. 냉전체제 이후 개혁개방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주요 대국들과 관계를 안정시키고 협력을 증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중국은 1996년 러시아와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 1997년 미국과 전략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의 선언은 실질적인 내용을 갖춘 경우는 많지 않았고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이후 ‘전략’이라는 수식어가 빠지게 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동의 지향을 밝히는 수사적 성격이 더 강하다. 21세기 들어서 중국은 대국들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 다자협력기구들과도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어오고 있다. 한국과도 2008년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를 선언했다. 중국의 전략 동반자 외교에 대해서는 이경남(2009)을 참고.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중·인 협력이 국제사회에 새로운 질서와 규범의 형성을 촉진할 가능성도 높다. 그렇지만 현재는 양국이 국제질서의 변화를 목표로 하거나 제3국으로부터 제기되는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양국 관계가 전략적 협력 관계로 발전하는 데 관건은 국내의 정치사회적 안정, 경제발전, 주권과 영토의 보호와 같이 양국의 핵심적 국가목표가 양립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

그런데 현재 중국과 인도는 국경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 협력 관계로 발전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존재한다. 1980년대부터 중국과 인도는 LAC를 확정하기 위한 다양한 수준의 협상을 진행해왔고 일부 진전도 있었다. 가장 중요한 진전은 국경 문제와 관련된 협의가 제도화됨에 따라 국경 문제로 갈등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되고 LAC 주변 지역에서의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다. 문제는 영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잠정적 관리선인 LAC도 일부 지역에서는 확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영토 문제의 속성을 고려할 때 문제를 해결하려면 양국 모두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과거 마오쩌둥이나 네루와 같이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전쟁을 치렀던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 중국과 인도가 이 문제의 해결을 주도할 수 있는 지도력을 갖출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중국에서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과 같은 카리스마적 지도자는 정치적 목표의 달성을 위해 민족주의를 활용하기도 했지만 아래로부터의 민족주의는 비교적 효과적으로 통제했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 중국공산당은 점차 국내의 민족주의를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Fewsmith

and Rosen 2001). 인도도 독립 과정에서 힌두주의자들의 민족주의적 경향이 강화되었다(이옥순 2007, pp. 184~192; 아마티아 센 2005, pp. 62~106). 인도는 의회민주주의를 실시하기 때문에 민족주의가 정책결정에 중국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쳤다. 1962년의 국경전쟁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도 인도 내의 민족주의는 네루가 중국과 협상하여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제약한 바 있으며(談玉妮 2006, p. 38; 杰倫·蘭密施 2006, p. 78), 이러한 상황은 지금도 큰 변화가 없다. 오히려 국경전쟁에서 패배한 기억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민족주의적 정서의 영향력이 더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파키스탄이나 티베트 문제가 양국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되고 있지만 이 문제들이 다시 중·인 관계의 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이러한 가능성이 남아 있는 한 상호불신도 완전히 해소되기 어렵다. 즉 중국과 인도 사이에 경제적, 문화적 교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전략적 협력관계를 뒷받침하거나 그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양국 관계가 전략적 협력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영토 문제 등과 관련된 안보 문제들이 우호적이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하고 이와 함께 양국 사이의 민간교류나 국제사회에서의 협력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훨씬 더 발전될 필요가 있다(吳永年 2010, pp. 231~232). 이렇게 볼 때 앞으로 상당 기간 중·인 관계가 명실상부한 전략적 협력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다.

2) 전략적 대립 관계

전략적 대립은 영토분쟁 등의 안보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전면에 부상하고 상대국을 자신의 안보를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하게 된 상황에서 상대국에 대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군비증강, 동맹구축 등의 방식으로 내부 자원과 외부 자원을 적극적으로 동원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1962년 국경전쟁 이후의 양국 관계를 전략적 대립 관계로 규정할 수 있다. 당시 전쟁에서 패배한 인도는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했고, 소련과 협력을 강화하며 중국에 대해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려고 시도했다. 중국도 티베트 지역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 파키스탄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했다.

지금도 양국 사이에는 객관적으로 전략적 갈등요인이 존재하며 중단기적으로 볼 때 다음 두 가지 요인이 전략적 대립이라는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다. 첫째는 LCA 지역에서 군사충돌의 발생이다. 특히 군사충돌이 티베트 지역과 아루나찰 프라데시 지역으로 확장된다면 양국은 국가자원은 이 전쟁에서 승리를 위해 총동원될 수밖에 없고, 전쟁의 결과와 관계없이 대립 관계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다. 2006년 이후 양국 사이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예상하는 주장들이 끊이지 않았다. 물론 양국 정부는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다만 전환기에 처한 양국 내부에서 정치적 위기가 출현한다면 이것이 중국과 인도의 군사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둘째, 중국과 인도가 상대국가와 제3국 사이의 갈등과 충돌에 끌려들어가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인도와 파키스탄의 갈등이 고조되고 중국이 파키스탄을 지원하거나 중국과 미국 사이의 갈등에 인도가 미국을 지원하게 되

면 중국과 인도의 전략적 대립을 피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전략적 대립은 과거의 경험이 잘 보여주는 것처럼 양국 모두에 막대한 비용을 요구한다. 과거 전략적 대립시기 중국과 인도는 다음과 같은 비용을 치른 바 있다.

첫째, 과도한 군비지출로 인해 국내의 경제, 사회적 발전에 큰 제약이 가해졌다. 국가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기회비용을 지불한 셈이다. 이 시기 중국과 인도의 경제사회적 발전이 발전국가는 물론이고 개발도상국에 비해서도 크게 뒤처지면서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위신이 추락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¹⁴⁹⁾

둘째, 전략적 대립 관계는 국내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양국의 외교적 활동공간도 크게 축소시켰다. 중국과 인도와 같은 대국이 자신의 안보를 다른 국가들과의 동맹관계에 의존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양국은 국제사회에서 각자의 국가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상대방의 협력이 필요한 영역과 사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회를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차단되었다.

셋째, 전략적 대립 관계가 상대방의 위협을 방지한다는 효과 이외에 기

149) 중국에서는 마오쩌둥이 사망하기 직전인 1976년 4월 천안문 광장에서 같은 해 1월에 사망한 저우언라이를 추도하고 문화대혁명을 주도한 이룬바 4인방 세력을 비판하던 군중을 무력으로 진압함으로써 정치적 위기를 맞이했다. 같은 해 9월 마오쩌둥이 사망하고 그 직후 4인방이 체포되면서 개혁개방으로 나아가는 정치적 전기가 만들어졌다. 인도에서도 인디라 간디는 경제침체와 자신의 아들의 정치개입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높아지자 1975년 긴급조치를 선포하고 야당과 언론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1977년 정권의 신임을 묻는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민주주의가 회복되었다.

회비용을 만회할 수 있는 편익이 전혀 없었다. 예를 들어 양국의 분쟁 대상이 되는 지역은 인구가 거의 살지 않거나 외진 지역으로 이 지역의 확보가 전략적 의미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떤 큰 이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를 위해 막대한 국가자원을 낭비하는 것을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기는 어렵다. 동부변경지역의 경우는 오히려 중국의 서남부, 인도의 동북부, 그리고 메콩강 유역의 다른 동남아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국과 인도 내에서도 낙후된 이 지역의 발전에 더 유리하다(杰倫·蘭密施 2006, pp. 118~121).

현재 양국은 전략적 대립에 따른 비용이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고 또 자신들이 추구하는 국가전략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양국 정부는 전략적 갈등요인과 상호불신이 양국 관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양국 관계에 많은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양국이 전략적 대립 관계로 회귀할 가능성 또한 낮다.

3) 우호적 협력 관계

국경 문제 등의 안보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양국 관계에 경쟁 혹은 갈등적 측면을 제거하기 어렵다. 문제는 양국 관계에서 갈등요인과 협력요인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이다. 1990년대 양국 관계가 본격적으로 정상화된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기본적으로 협력요인의 작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안보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는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양국의 교류협력이 다방면에서 확대되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국 관계는 우호적 협력 관계로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가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중국과 인도가 국내의 정치·사회적 안정과 경제발전을 위해 지나친 갈등을 피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전환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국과 인도는 국경 문제 등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안보 문제들을 둘러싼 갈등이 다른 영역의 협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에 합의할 수 있었고 이것이 지금까지 양국 관계 발전의 가장 중요한 인식의 기초가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중국과 인도의 국가발전목표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협력을 통해 공동이익을 확대시키고 이것이 다시 양국의 우호 관계의 기초를 강화하는 선순환 구도로 나아갈 수도 있다.

물론 중·인 경제협력이 양국의 경제성장에 직접 기여한 바는 그리 크지 않으며 또한 주로 무역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양국의 협력수준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지만 세계경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양국이 안정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할 때 양국에 경제성장의 기회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기 때문에 우호적 협력이라는 방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최근 미국과 유럽 경제가 중국과 인도의 경제성장을 위한 동력을 제공해주기 어렵게 되고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양국의 경제협력이 갖는 정치적, 경제적 의미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앞으로 양국의 경제협력이 무역을 넘어서 상호투자 확대, 에너지협력으로 진전될 수 있는지가 우호적 협력 관계의 강화에 관건이다.

국경 문제의 갈등 때문에 중국과 인도의 안보협력이 전면적으로 진전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경제·사회적 교류가 확대되는 가운데 양국의 신뢰가 증진된다면 다자논의기구 등의 우회적 통로를 경유하여 안

보협력이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중·인·러 삼각협력 체제가 이와 관련된 대표적 사례이다. 그밖에도 양국이 같이 참여하는 다자협력기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SCO(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동아시아정상회의 등이 그것이다. 최근 중국과 인도가 모두 다자협력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이러한 기구들의 역할이 더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¹⁵⁰⁾ 앞으로 이러한 공간에서의 협력은 중국과 인도의 전략적 불신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즉 경제협력의 지속적인 확대와 질적인 발전, 국제무대에서의 공동이익 추구, 다자안보협력에의 참여 등이 우호적 협력 관계를 지속시킬 수 있는 주된 동력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협력은 모두 점진적인 방식으로 발전될 것이기 때문에 당장 영토분쟁의 해결에 기여하는 등 양국 관계에 극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4) 경쟁적 협력 관계

현재 중·인 관계의 발전추세는 우호적 협력 관계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양국 사이의 경제, 문화, 사회적 협력이 단절되지는 않지만 여러 이유에서 기인하는 전략적 불신이 양국 협력이 더 높은 수준으로

150) SCO의 결성과 발전이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중국은 과거 다자안보협력이 주권을 제약하는 점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으나 냉전해체 이후 안보 딜레마(security dilemma)가 출현하는 것을 방지하고 주변 국가들과 신뢰에 기초한 협력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다자안보협력이 유용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SCO의 조직과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인도는 현재 파키스탄, 몽골, 아프가니스탄, 이란 등과 함께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하며 회원국 자격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Seeing larger role for SCO(2012), India pitches for full membership”, *Indian Express* (June 7) <http://www.indianexpress.com/news/seeing-larger-role-for-sco-india-pitches-for-full-membership/958982>).

진전되는 것을 제약하는 경쟁적 협력 관계라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 최근에도 중인관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인도 내에서는 중인관계를 우호적 협력 관계로 보기보다는 경쟁적 협력 관계로 보는 주장들이 적지 않다(Dubey 2012, Chapter 8). 최근 중국에서도 이러한 여론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정서는 당장 정책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중인관계에서 무시할 수 없는 변수이다.

이러한 문제를 잘 보여준 사례가 1998년 인도의 핵실험이다. 당시 인도 정부는 핵무기 개발의 이유로 중국의 위협을 들어 중국을 자극하였다. 인도가 표면적으로 중국의 위협을 핵개발의 이유로 들었지만 이는 미국 등의 반발을 약화시키기 위한 명분에 지나지 않았다는 평가도 있다. 이보다는 외부적으로 냉전체제 해체 이후 소련의 핵무기에 의존할 수 없게 되고, 내부적으로는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핵무기 보유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넓어진 것이 인도 핵개발의 본질적인 원인이라는 것이다(Tellis, 2006, pp. 102~121). 그렇지만 이러한 평가와는 달리 당시 인도에 핵실험을 필요하게 만든 안보위협이 존재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당시 중국과 파키스탄의 핵협력이 인도의 안보에 실질적 위협이 되었다는 것이다.¹⁵¹⁾ 어떤 분석이 더 객관적인가라는 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이러한 논리가 지금도 인도 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발휘하고 있다. 그리고 인도에서 이러한 논리의 확산은 다시 중국 내에서 인도에 대한 전략적 불신을 고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양국 사이에 전략적 불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상대국이 자신의 주변 국가들과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을 자신에 대한 포위전략으로

151) 이와 관련된 논쟁은 Jones and Ganguly(2000)를 참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도 양국 관계에서 경쟁적 측면을 강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은 인도가 미국과 관계를 강화하고, 베트남, 일본 등의 동아시아 국가와도 관계를 강화하는 것을 자신에 대한 포위망 구축의 일환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인도 또한 중국이 파키스탄, 미얀마 등 자신의 주변 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하는 것을 자신에 대한 포위망 구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전략적 불신이 존재하는 한 양국 사이에 정치적 대립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이것이 다른 영역의 협력을 제약하는 상황이 출현할 수도 있다.

현재 양국 정부는 이러한 전략적 불신이 양국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제3국이라는 변수, 특히 미국이라는 변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따라서 전략적 불신이 양국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존재한다. 중·미 관계가 대립적인 방향으로 발전할수록 인도와 미국 관계, 그리고 인도가 미국의 동맹국들 즉 일본과 호주와 맺는 협력 관계가 중국 자신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될 것이다. 또한 파키스탄 문제도 양국 사이의 경쟁적 측면을 강화시킬 수 있다.

나. 중·인 관계의 삼각협력체제에 대한 영향

중·인 관계와 삼각협력체제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삼각협력체제가 중·인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 삼각협력체제가 다자협력체제로 제도화되고 이에 참여하는 국가들에 안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면 삼각협력체제가 양자 관계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¹⁵²⁾ 그러나 지금의 삼각협력체제는 전략적 문제들에 대한 논의 테이블에 머무르고 있다. 냉전질서가 해체된 이후에 출현한 미

국 주도의 단극질서 속에서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삼국의 전략적 의도가 이들 사이에 여러 갈등요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삼각협력체제를 모색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런데 삼각협력체제는 아직 대화통로의 기능을 넘어 실질적 협력을 확대하는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지금까지는 다자협상보다는 양자 관계가 중·인·러의 상호작용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중·인 관계는 삼각협력체제에서 가장 약한 고리로 삼각협력체제의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양자 관계라는 점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중국과 인도가 경쟁적 협력관계가 된다면 삼각협력체제의 발전은 순조롭게 진행되기 어렵다.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경제적 교류도 활발하지 않은 러시아와 인도 사이의 협력이나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만으로는 삼각협력체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때에는 삼국에 삼각협력체제가 지금처럼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자산 중의 하나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증인관계나 삼각협력체제가 빠르게 발전하는 것은 외부에서 새로운 동력이 제공되었을 경우이다. 가장 유력한 요인은 삼국 협력이 시작된 요인이기도 했던 미국의 위협이다. 즉 미국의 일방주의나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단극체제에서 오는 위협이 증가한다면 삼각협력체제가 안보협력을 매개로 빠르게 발전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의 일방주의

152) 다자협력은 안보영역에서는 안보 딜레마에서 벗어나 국내의 경제사회발전에 자원을 집중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경제영역에서는 교통, 자원, 에너지협력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국가간 이해관계의 조정이 쉽지 않고, 또한 안보협력과 기능주의적 협력 사이의 관계도 매우 복잡해 성공적인 다자협력의 사례는 아직 많지 않다.

가 가장 강했던 부시 행정부 시기에도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문제로 미국의 국력이 약화되는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가능성은 현실성이 낮다. 또한 중동, 남아시아,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에너지협력도 삼각협력체제의 발전을 위한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아직은 아이디어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단기적으로는 중요한 변수가 되기 어렵다.

반면 중인관계가 우호적 협력관계로 발전된다면 삼각협력체제가 안정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삼각협력체제는 협력의 영역(경제, 사회, 문화, 정치 등)이나 수준(정부, 민간 등) 모두 비교적 성공적인 다자협력체제와 비교할 때 격차가 크다. 그런데 양국의 인구규모나 향후 성장잠재력을 고려하면 중·인 협력이 이러한 협력을 위한 주요한 동력을 제공해줄 수 있다.¹⁵³⁾

중·인 협력은 삼각협력체제 내에서 교통협력을 활성화시키는 데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삼국 중에 중국만이 유일하게 다른 두 국가들과 육로

표 4-2. 러시아·중국·인도의 인구 및 경제 규모

중국	인구규모(백만 명)	경제(10억 달러)	영토(만 km ²)
중국	1,343	7,181	960
인도	1,205	1,798	329
러시아	143	1,821	1,710

주: 인구와 영토는 2012년 기준, 경제는 2011년 기준임.

자료: CIA, The World Factbook,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rs.html>.

153) 현재 러시아의 경제규모가 인도의 경제규모보다 크지만 2017년을 전후로 인도가 러시아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O'Neill and Stupnytska 2009, p. 23).

를 통한 교통과 협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 즉, 인도와 러시아는 지리적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는 철도와 도로망이 상대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다. 반면 중국과 인도는 국경분쟁과 지리적 요인으로 인해 교통 네트워크가 발달되어 있지 않아 국경 이동이 활발하기 어렵다. 중·인 협력을 통해 이러한 문제가 극복된다면 삼국의 교통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역시 삼각협력체제가 실질적인 협력을 촉진하는 다자협력으로 발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안보협력이라는 면에서는 여전히 많은 제약이 있다. 사실 삼국은 안보 협력을 강화할 객관적인 필요성이 그리 많지 않다.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안보위협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인, 중·러 사이에 전략적 불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인 사이가 우호적 협력 관계로 발전한다면 삼각협력체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실질적인 내용을 갖추어가는 중요한 동력을 제공할 수 있지만, 안보협력기구로 발전하기까지는 아직 극복해야 할 장벽이 높다. 다만 삼각협력체제가 경제, 사회, 문화적인 면에서는 지역협력을 위한 새로운 동력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4. 한국에 주는 시사점 및 소결

중국과 인도의 관계는 전략적 협력 관계로 진전되기도 어렵지만 전략적 대립 관계로 돌아가기도 어렵다. 양국의 경쟁이 현재보다 강화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경제, 사회적 협력이 단절되는 상황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이다. 만약 중·인 관계가 경쟁적 협력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중·인 협력이나 삼각협력체제가 특별히 중요한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중국과 인도의 경쟁 등이 남아시아와 동아시아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인지를 주의 깊게 관찰하며 대응해가면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와 같이 전략적 갈등요인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경제, 사회, 문화적 협력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통해 삼각협력체제도 전략적 대화를 위한 통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삼국의 다양한 협력을 촉진하는 기구로 발전된다면 이는 한국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외교적으로는 중·인 관계와 삼각협력체제의 발전이 국제질서의 다원화 추세를 가속화시키고, 한미동맹을 축으로 해왔던 한국 외교에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 큰 도전이다. 삼각협력과 아세안 등을 통한 다자협력의 진전은 최근 전략적 가치(새로운 시장, 풍부한 자원, 중동과 동북아시아를 연결하는 해양수송로 등)가 높아지는 남아시아와 동아시아에서 한국이 외교적 입지를 확보하기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여기에는 한미동맹이라는 외교적 자산이 별다른 기여를 하기 어렵다. 오히려 인도, 한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등을 묶어 대중국 포위망을 구축하려는 미국의 의도에 편승한다는 인상을 주게 되면 한·중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지역의 동학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경험도 일천하다. 현재 한국이 이 지역에서 중·인 협력과 삼각협력체제의 진전이 촉발하는 새로운 동학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중·인 협력과 삼각협력체제의 발전이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중국의 부상을 평화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협력공간을 제공

하기 때문이다. 인도나 러시아 모두 중국의 부상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일정한 경계심을 갖고 있다. 따라서 중·인 협력과 삼각협력체제는 중국의 패권 추구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해주기보다는 이를 제약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는 한국에도 중국의 부상에 따르는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을 증가시킨다. 즉 한국이 인도 혹은 삼각협력체제와 협력을 증진하여 중국의 부상이 한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남아시아, 동아시아, 동북아시아를 연계하는 다자협력 공간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한국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인도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한중관계에 심각한 불안요인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중국의 부상에 대한 견제는 중국을 배제한 다자협력 이 아니라 중국을 포함하는 다자협력 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중·인 협력과 삼각협력체제의 발전은 이러한 기회를 증가시킬 것이다.

즉 외교적으로는 중·인 협력과 삼각협력체제의 진전에 따르는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삼각협력체제가 SCO, 아세안, 동아시아정상회의와 연계되며 아시아 지역의 다자협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이러한 다자협력에서 한국의 활동공간을 넓혀가기 위한 전략과 실행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경제적으로는 중국 경제와 인도 경제의 부상과 양국의 협력이 세계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새로운 도전이다. 중국 제조업의 인도 투자가 확대되면 인도 제조업의 경쟁력을 빠르게 높일 것이다. 그리고 이는 중국의 도전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한국 제조업의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인 경제협력의 직접적인 결과라고는 할 수 없지만 중국과 인도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한다면 에

표 4-3. 중·인 협력과 삼각협력체제 진전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주요 내용	대응과제
도전	외교	▷ 남아시아와 동아시아에서 다자협력의 진전에 따른 외교입지 약화	▷ 삼각협력체제를 SCO, 아세안, 동아시아정상회의 등과 연계시켜 아시아 다자협력으로 확대
	경제	▷ 중국과 인도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 ▷ 에너지 및 자원 가격 상승	▷ 신흥시장에서 성장가능성이 높은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 동아시아, 중앙아시아 에너지협력 추진 및 참여
기회	외교	▷ 중국의 부상을 평화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협력공간 확대	▷ SCO에 옵서버 자격의 참가 가능성 모색 ▷ 동아시아정상회의의 활성화와 ASEAN+3과 동아시아정상회의의 활성화
	경제	▷ 중국과 인도 시장규모의 확대	▷ 중국시장 및 인도시장 확대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전략 수립

너지 및 천연자원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국제가격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 에너지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로서는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는 변화이다.

그러나 경제적인 면에서는 중·인 협력이나 삼각협력체제가 한국에는 도전보다는 기회적 측면이 더 크다. 한국 제조업은 이미 중국의 도전으로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는 진행된 상태로 인도의 추격에 따른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그리 높지 않다. 중·인 경제협력 등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중국과 인도의 경제성장이 지속된다면 중국과 인도라는 거대시장에서 한국이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시장에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전자제품, 석유화학 제품, 철강 제품 등에서 한국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중국과 인도의 경제성장에 따라 발생하는 에너지 문제는 계속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는 공업화가 지구적 차원으로 확산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이고, 이에 대한 대응도 국제적 차

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한국으로서는 이 과정에서 에너지 수입국들 사이에 악성 경쟁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에너지협력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삼각협력체제나 이와 깊은 연관이 있는 SCO 내에는 주요 에너지공급국과 에너지수입국이 같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에너지협력을 매개로 이들 다자협력기구들과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제5장

중앙아시아와 삼각체제의 관계: SCO를 중심으로

1. 삼각체제·중앙아시아 관계의 역사적 변천
2. 양자 관계의 협력요인과 갈등요인
3. 삼각체제·중앙아시아 협력이 대미관계, 역내 안보 구도에 미친 영향
4. 한국에 주는 시사점 및 소결



1. 삼각체제 · 중앙아시아 관계의 역사적 변천

중앙아시아의 국제관계 경험은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에 유익한 시사점과 교훈을 주고 있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SCO 내에서 진행되는 러시아, 중국, 인도의 삼각체제와 중앙아시아 관계의 역사성과 변천 과정은 어떠한가? 중앙아시아 지역을 주요 지리적 대상으로 하는 SCO는 양자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양자 관계의 협력요소와 갈등요소는 무엇이며 이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양자 관계가 국제질서 형성, 즉, 대미관계, 러·중·인 삼각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또한 이러한 양자 관계의 경험이 동아시아와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이러한 의문을 중심으로 설명해보고자 한다.

가. 러시아, 중국, 인도, 중앙아시아의 역사성

역사적으로 중앙아시아의 지정, 지경학적 가치는 유라시아 대륙의 세력판도를 결정하는 지리, 군사, 경제적 핵심 이해 지역이었다. 2세기경 인도를 지배하면서 번성했던 쿠산 왕조도 중앙아시아를 기반으로 힘을 축적할 수 있었고, 당나라를 비롯한 중국의 고대국가들도 서역(현재 중앙아시아)을 정벌하거나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유라시아 대륙의 강자가 될 수 있었다. 몽골제국 또한 광대한 유라시아 대륙을 평정하기 위해 중앙아시아를 핵심 거점으로 삼았으며,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실크로드를 유라시아 대륙의 교역은 물론 문명과 인적 교류의 혈관 역할을 하였다. 19세기 대영제국은 중앙아시아에서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에 사활을 걸었으며, 영국과 경쟁에서 승리한 러시아는 중앙아시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함

으로써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 냉전시기 소연방이 미국과 함께 세계를 양분하며 제국의 힘을 유라시아 대륙 전체에 투사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중앙아시아를 지배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따라서 소연방 붕괴 이후 중앙아시아가 떨어져 나간 러시아가 정치 경제적으로 국력을 회복한다 하더라도 냉전시기 소련과 같은 세계적인 강대국 지위로 복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지역 강국에 머물 수밖에 없을 것이다.¹⁵⁴⁾ 중앙아시아가 없는 러시아는 이빨 빠진 호랑이에 비견될 수 있으며, 러시아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외정책의 가장 큰 역량을 쏟아오고 있다.¹⁵⁵⁾ 현재 푸틴대통령이 최우선 대외정책으로 추진하는 ‘유라시아연합’¹⁵⁶⁾ 방안 역시 중앙아시아를 정치 경제적으로 재결합하려는 전략적 필요성에서 출발하였다.

탈냉전기에 러시아에서 이탈한 중앙아시아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등의 참여한 전략적 이익이 중첩되는 민감한 지역으로 재조명을 받고 있다.¹⁵⁷⁾ 탈냉전기 신질서 형성과정에서 중앙아시아가 세력경쟁의 주요 무대로 재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구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는 자본주의로의 체제 전환을 감행했지만 미국과 나토는 러시아의 전통적인 이해 지역이

154) 박상남(2010). 『현대 중앙아시아』. 한신대학교 출판부, p. 143.

155) Sebastien Peyrouse(2011), pp. 1-34.

156) 제성훈(2012), p. 12~13.

157) 매킨더(Halford Mackinder)는 중앙아시아를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이면서 역사의 흐름을 좌우하는 지리적인 축으로 인식하면서 유라시아 대륙의 ‘심장부(heartland)’라고 지칭했다. 미국 전 국무장관 브레진스키(Zbigniew Brzezinski) 역시 중앙아시아를 유라시아 대륙이라는 거대한 체스판에서 인종분쟁과 강대국 사이의 경쟁이 지속되는 ‘유라시아의 발칸’이라고 불렀다. Brzezinski, Zbigniew(1998). *The Grand Chessboard. USA: Sam In Publishing*, 김명섭 옮김, 『거대한 체스판 21세기 미국의 세계전략과 유라시아』, p. 165.

었던 동유럽, 우크라이나, 조지아, 중앙아시아 등 동진(東進)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면서 러시아를 자극해왔다. 특히 중앙아시아는 러시아, 미국, 중국, EU, 인도의 안보와 경제적 이해가 충돌하는 지역인 동시에 터키, 이란 등 중동 국가들의 영역확장을 위한 경쟁무대가 되고 있다. 냉전시기 서로 단절하고 대립했던 국가들이 21세기에 접어들어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다양한 차원에서 협력과 경쟁을 동시에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¹⁵⁸⁾ 전통적으로 유라시아 대륙의 인적, 물적 교류의 연결고리이자 교차로였던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상하이 협력기구(SCO)를 비롯한 수많은 다자협력기구들이 형성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이런 과정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 EU, 인도 등은 치열하게 이해를 추구하는 경쟁을 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아시아를 둘러싼 국제관계는 러시아, 중국, 인도의 삼각체제 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 전체의 국제질서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더욱이 전 세계적인 자원전쟁이 본격화되면서 1990년대 이후 메이저 석유회사들의 거대 자본이 중앙아시아로 유입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적으로 낙후되었던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은 신흥부국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나. 삼각체제와 중앙아시아 관계의 제도적 장치로서 SCO

1989년 5월 중·소 관계 정상화 이후 양국은 오랜 갈등요소인 중소국경분쟁 해결을 모색하게 된다. 1996년 4월 국경문제 협의체를 모태로 평화적으로 국경을 합의하여 확정하고 당사국들(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158) Ezeli Azarkan(2009), pp. 1-21.

타지키스탄, 러시아, 중국)의 신뢰구축을 도모할 수 있는 협의체로 ‘상하이-5’를 출범시켰다.¹⁵⁹⁾ 냉전시기부터 국경분쟁 해결을 위해 소련과 중국은 협의를 진행하였지만 1969년 우수리 강 유역의 섬을 둘러싼 무력충돌로 갈등은 첨예화된다. 고르바초프 등장 이후 중소화해 무드를 타고 대부분의 국경문제가 해결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우수리 강 유역문제 등에 완전하게 합의를 이룬 것은 2008년에 이르러서야 가능했다. 따라서 냉전시기 국경 문제를 둘러싼 중·소의 긴장과 대치를 경험한 구 소연방 국가들은 구소련 해체와 체제이행이라는 혼란과 위기국면에서 중국의 영토적 팽창 가능성을 경계하였다. 러시아를 비롯한 구 소연방 소속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우려¹⁶⁰⁾가 바로 ‘상하이-5’ 탄생의 배경이 되었다. 이후 2000년 중국의 장쩌민 주석은 상하이-5를 회원국들의 포괄적인 다자협력체로 격상시킬 것을 제안하였고, 2001년 6월 상하이에서 개최된 정상회의에서 우즈베키스탄이 회원국으로 추가됨과 동시에 ‘상하이-5’를 발전적으로 격상시키면서 현재의 다자협력기구인 ‘상하이협력기구(SCO)’가 탄생하게 된다.

SCO는 매년 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극단주의, 반테러, 분리주의에 공동 대응은 물론 경제·사회·과학·기술 등 포괄적인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나가는 다자기구로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주요 회의로는 정상회의, 정부수반회의, 외무장관회의, 각 부처 장관급 회의 등이 있으며, 2004년 1월 베이징에 사무국을 설치하여 상설기구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SCO는 대테러 센터(RATS: Regional Anti-terrorist Structure)를 2004년 1월

159) “Russia and Central Asia”(http://www.bits.de/NRANEU/CentralAsia.html(검색일 2012년 8월 20일).

160) Sebastien Peyrouse(2011)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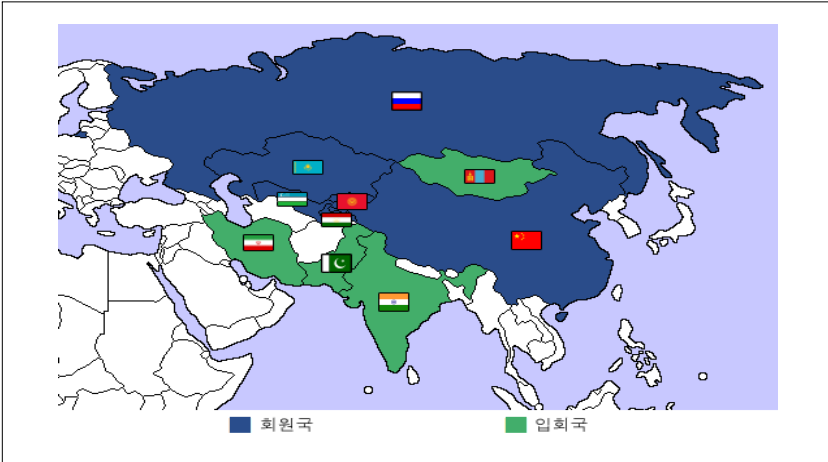
부터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에 설치 운영하고 있다.

주요 활동은 초기 회원국들의 국경지대 군비통제에서부터 시작하여 현재 안보, 경제, 교통, 문화, 구난, 법집행 등 광범위한 분야로 확대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안보와 경제협력이 SCO의 최우선 협력 분야이다. 안보 협력으로는 테러리즘, 분열주의, 극단주의 진압이 중점 사항이며, 지역 정세 협의, 핵무기 비확산, 중앙아시아 지역 안전보장, 국제 분쟁 중재 등도 주요 안보 협력 내용이다. 경제협력으로는 지역 경험확대를 위한 무역·투자 환경개선, 에너지, 상품·서비스·자본·기술 이전 장벽 철폐 추진, 역내 공동시장 설립, 자유무역지대(FTA) 설치 등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와 중국은 이러한 표면적인 목적 외에도 SCO를 미국과 나토를 견제하기 위한 중·러 연대의 제도적 틀로 활용해왔다. 이는 급작스러운 소련 붕괴 이후 미국과 나토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세계질서 재편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난 러시아와 중국의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였다. 러시아와 중국이 이처럼 전략적으로 연대하자 서방 일각에서 SCO가 냉전 시기 바르샤바 조약기구와 같이 미국과 나토에 대항하는 군사기구로 발전할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계속 제기되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 역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원만한 대미 관계가 필요하고, SCO 역시 양국의 협력과 경쟁의 산물이기에 이 기구가 미국과 나토에 대항하는 단일한 군사기구화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SCO는 소련 붕괴 이후 대외정책에 대한 경험이 전무했던 이들 신생국들에 독자적인 대외정책을 전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SCO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중국과 러시아 두 강대국을 상

그림 5-1. 상하이 협력기구(SCO) 회원국 및 옵서버 현황¹⁶¹⁾



대로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한 다양한 외교적 옵션을 구사해볼 수 있는 대외정책의 실험무대였다. 또한 SCO는 러시아 고유의 세력권이었던 중앙아시아에 중국이 자연스럽게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냉전시절부터 다자관계 경험이 없었던 중국은 SCO 내에서 가장 실속을 차린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7세기 서역정벌의 좌절 이후 접근이 봉쇄되었던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은 가장 성공적인 대외관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¹⁶²⁾ 현재 SCO의 기본적인 지리적 대상지역인 중앙

161)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6개국이 회원국이 고 인도, 이란, 파키스탄, 몽골 4개국이 옵서버로 참여하는 SCO는 유라시아 대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포괄적 다자기구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여섯 개 회원국의 면적을 합하면 유라시아 대륙의 60%를 차지하며 인구는 약 15억 명에 이른다. 여기에 옵서버 국가들인 인도, 이란, 파키스탄, 몽골 등을 합치면 약 30억 인구를 포괄하는 기구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박상남(2010), p. 147.

162) 자세한 내용은 김재관(2010), 『탈 냉전기 중국의 중앙아시아 외교 전략에 대한 검토 : 상하이 협력기구를 중심으로』, 『현대 사회과학 연구』, pp. 34-52 참고.

아시아에서 중국의 입지는 러시아에 비견될 만큼 강화되었으며, 경제적 차원에서는 오히려 러시아의 지위를 위협하고 있다.¹⁶³⁾ 2005년 옵서버 자격으로 SCO에 발을 들여놓은 인도는 후발주자지만 역사, 문화, 인종적으로 중앙아시아와 유구한 연대를 가지고 있다. 특히 2000년 이후 지속되는 경제성장에 따라 강대국화 정책을 서두르고 있는 인도는 중앙아시아와 재결합하기 위해 중장기적 차원의 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인도의 SCO 진출은 인도를 이용하여 중국의 과도한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려는 러시아의 전략과 맞물리면서 순조롭게 존재감을 증대시키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SCO는 중앙아시아에서 러·중 또는 삼각체제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협력과 경쟁의 결과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많은 협력요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원국들 사이에 갈등요소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SCO가 많은 잠재력이 있음에도 미래 전망에 많은 난관을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로 지적되었다. 2012년 6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12차 SCO 정상회의에서 중국·러시아 양국은 미국에 대한 견제를 통해 SCO를 다극체제의 중심기구로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번 회의에서 SCO는 관련 국가들의 수를 확대¹⁶⁴⁾하여 외연을 넓히

163) 중국은 SCO를 경제공동체로 발전을 유도하여 경제적 서역정벌의 발판으로 삼고자 한다. 2012년 SCO 정상회의에서도 중국의 이러한 의도는 여실히 드러났는데, 중국은 SCO 은행 창설에 즈음해 은행 본부를 베이징에 두고 은행장을 중국인으로 하며 기준 통화를 위안화로 하자고 제안했다가 회원국들의 반발을 샀다. 또 SCO 역내를 자유 통상지역으로 만들자는 의견도 피력했으나 다른 회원국들이 경제 잠재력 격차를 이유로 이를 반대하기도 했다. 중앙아시아 회원국들은 중국의 값싼 물건이 대량 유입되면서 국내 산업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3489>(검색일-2012-10-23).

164) 이로써 중국·러시아·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우즈베키스탄 여섯 개 회원국과 인도·파키스탄·이란·몽골의 기존 옵서버 국가에 아프간이 새로이 합류했고, 벨라루스와 스리랑카에 이어 터키가 대화 파트너(Dialogue Partners)로 영입됨

는 동시에 시리아와 이란 문제 등 국제현안에 대해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한편,¹⁶⁵⁾ 협력의 수준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중국과 러시아 양국은 안보적으로 민감한 지역인 중앙아시아에서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을 적극적으로 끌어안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중국은 아프가니스탄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2012년 한해에만 약 2400만 달러의 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러시아 역시 관련국들과 TAPI(투르크메니스탄·아프간·파키스탄·인도) 가스관 건설에 합의함으로써 중앙아시아 에너지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는 한편, 인도의 중앙아시아 연결정책을 간접 지원했다.

이로써 SCO는 지역안보협력 강화, 경제적 통합을 위한 기반조성, 국제기구로서의 위상을 강화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의 상이한 전략적 이해, 중앙아시아 약소국들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상호 불신, 복잡한 지역문제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과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함으로써 여전히 갈등적 요소를 안고 가게 되었다. SCO의 방향설정에도 대해서도 러시아는 나토에 비견되는 군사, 안보적 협력체로 발전하

으로써 관련 국가는 총 14개국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SCO는 역내 에너지 안전 확보, 운송 인프라 개발, 국제 운송통로 확보 등 SCO 경제 프로젝트 실현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갔다. 또 SCO 발전기금과 은행 창설 문제를 조기에 매듭짓기로 합의했다. 미국의 게나디 추프린 박사는 “SCO는 아프간을 읍서버로 받아들이고, 이슬람 세계의 강국이자 나토 회원국인 터키를 대화 파트너로 수용함으로써 한층 더 권위 있는 지역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지적하면서 SCO가 ‘미래의 국제기구’에 한발 다가섰다고 평가했다. 한편 정치학자 스타니스라프 타라스프는 SCO의 확장을 ‘다극적 세계의 새로운 중심이 생길 전조’라고 분석했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3489>(검색일 2012년 10월 23일)

165) 시리아 선언을 놓고도 회원국들 간의 합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러시아와 중국의 입장과는 달리 미국과 정면대결을 원하지 않는 중앙아시아 약소국들은 반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는 것에 비중을 두고 있는 반면, 중국은 경제공동체로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¹⁶⁶⁾ 회원국 확대 문제에서도 인도를 가입시켜 중국을 견제하려는 러시아와 이를 저지하려는 중국의 이해가 충돌하는 점도 중요한 걸림돌이다.¹⁶⁷⁾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사항은 미국이 SCO에 가입을 원하는가의 여부인데, 이와 관련하여 루카셰비치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도 SCO 활동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이러한 관심은 SCO의 영향력이 지역차원을 벗어나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급함으로써 적어도 미국이 러시아에 SCO 가입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타진하고 있음을 암시했다.¹⁶⁸⁾ 그동안 미국의 SCO 가입 여부는 미국·중국·러시아의 세계전략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SCO의 위상제고라는 측면에서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사이기도 했다. 따라서 향후 미국의 대SCO 정책 역시 국제관계의 향방을 가늠하는 주요 관찰 요소이다.

2. 양자 관계의 협력요인과 갈등요인

외교, 안보, 경제적 차원에서 러·중·인 삼각체제와 중앙아시아 국가

166) Sebastien Peyrouse(2011) 참고.

167) 인도, 파키스탄, 이란 등이 회원국 지위 부여에 대해 여러 해 동안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이 충돌하여 왔는데, 인도와 파키스탄은 양국의 긴장관계를 근거로, 이란은 유엔의 제재국가라는 점에서 회원국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중국 측의 공식 입장이다. 그러나 중국은 인도·파키스탄의 갈등관계를 문제 삼아 라이벌 국가인 인도의 가입을 반대했고, 러시아는 중국과 우호적 관계인 파키스탄의 가입을 반대하여 중국을 견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http://korean.ruvr.ru/2011/06/15/51731915.html>(검색일 2012년 10월 26일).

168) http://rus-moscow.mofat.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2259&seqno=831100&c=&t=&pagenum=1&tableName=TYPE_LEGATION&pc=&dc=&wc=&lu=&vu=&iu=&du= (검색일 2012년 10월 23일).

들은 SCO 내에서 공동의 목표를 공유한 협력 관계이자 상충되는 이해를 둘러싼 경쟁 관계이기도 하다. 특히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중장기적인 전략적 목표는 서로 충돌하는 가운데 양국의 이익은 SCO 안에서 불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¹⁶⁹⁾

중앙아시아를 둘러싼 이러한 국제정치는 케네스 윌츠의 ‘체계이론(Systemic Theories)’을 통해 더욱 진전된 설명이 가능하다.¹⁷⁰⁾ ‘체계이론’은 국제체계가 개별국가의 행동 또는 국제관계의 변화를 초래한다고 규정한다. 예를 들어 국제체계는 무정부적 구조와 극성의 구조를 통해서 단위국가들의 행동을 결정하는데, 양극적 구조를 가진 국제체계에서 개별 국가들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은 일정한 규칙성을 지니지만 다극적 구조를 가진 국제체계에서 이러한 규칙성은 달라진다는 것이다. 즉 양극체계와는 달리 다극체제 아래서는 안보적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한 단위국가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동맹을 통해 세력균형을 유지하기 때문에, 공동의 이익을 위한 단일한 통합과 협력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개별국가들의 상호작용 역시 일정한 규칙성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체계이론’적 관점에서 삼각체제와 중앙아시아 양자 관계에서 나타나는 협력요소와 갈등요소를 살펴보면 보다 다각적인 설명이 가능하다.

먼저 SCO 내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삼각체제가 갖는 공동의 이해와 목표에 따른 협력 요소는 국경의 긴장완화와 안정적 관리, 극단주의, 분리주의, 테러, 마약과 불법무기거래에 대한 공동 대응, 경제협력과 에너

169) 문수인(2010), 『상하이 협력기구(SCO)를 통하여 본 러시아, 중국관계: 러시아의 우려와 대응』, 『사회과학논 옴김』, 13집, pp. 2~33 참고.

170) 케네스 윌츠 지음. 박건영 옮김(2000), pp. 97~126.

지자원의 개발과 이용 등을 들 수 있다. 러·중 연대 차원에서는 SCO가 미국의 일방주의를 견제함으로써 러시아와 중국의 국제적 지위를 유지 또는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적 도구로 기능하였다. 특히 러시아의 고유영역이자 중국의 최후방 역할을 했던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과 나토의 세력 확장을 저지해야 한다는 절박한 요구가 SCO를 통한 중·러 연대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배경이 되었다. 특히 중앙아시아는 삼각체제를 연결하는 지리적 통로인 동시에 러시아·중국·인도가 자국의 경제·안보의 영향력을 유럽과 중동, CIS 등 여타 지역으로 확장해나가는 실크로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의 입장에서도 삼각체제는 러시아의 과도한 영향권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다양한 외교 전략 구상을 가능하게 하는 대외환경을 조성해주었다. 아울러 삼각체제는 러·중·인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통해 중앙아시아가 특정 강대국에 편중된 안보환경 또는 세력권에 편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함으로서 중앙아시아 신생국들의 자율성과 역할을 증대하는 기능을 하였다.¹⁷¹⁾ 또한 삼각체제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천연자원과 상품을 수출할 수 있는 거대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 요소는 삼각체제와 중앙아시아가 SCO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관계를 증진시켜 나가는 주요 동인이었다.

주요 갈등요인으로는 먼저 중앙아시아의 주도권을 둘러싼 러시아와 중국의 경쟁관계를 들 수 있다. 미국의 일방주의와 일극체제 추구에 대한 반작용으로 결속된 러·중 관계는 중국의 지속적인 세력 확장이 러시아의 경계심을 유발하면서 점차 갈등이 가시화되고 있다. 중앙아시아에서

171) Ezeli Azarkan(2009), pp. 1-21 참고.

안보, 경제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러시아 입장에서 중국의 경제적 팽창은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중·러 관계의 이러한 이중성은 삼각체제뿐만 아니라 SCO의 미래 향방을 가늠하는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¹⁷²⁾

러시아는 중국의 도전에 대한 대응으로 인도와 몽골 등을 SCO에 흡수시켜 자격으로 합류시켜 중국의 영향력을 희석시키고, 지역적으로 중앙아시아에 집중된 관심을 보다 넓은 지역으로 분산시키려 한다.¹⁷³⁾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인도의 SCO 결합은 미국과 나토를 견제하는 성격을 지님과 동시에 구 소연방 영토는 물론 유라시아 대륙에서 점증하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러시아와 인도의 전략적 이해가 자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중국이 배제된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¹⁷⁴⁾ ‘유라시안 경제공동체(EurAsEC: Eurasian Economic Community)’¹⁷⁵⁾를 통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결속력을 강화하

172)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SCO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이해는 일치하지 않는데, 중국의 팽창하는 경제, 통상적 영향력에 러시아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는 SCO를 군사공동체로 발전시켜 전략적 차원에서 나토와 미국에 대항하고, 경제공동체는 구 소련권 국가들이 중심이 된 별도의 기구를 창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러시아는 이미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를 잇는 3국 관세동맹(단일 경제공동체, CES)을 출범시킨 바 있다. 이는 중국의 경제적 잠식에 대해 구소련권 국가들의 경제공동체인 ‘유라시아 연합(EAU)’을 주창하는 푸틴의 정책적 지향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173) 문수연(2010) 참고.

174) CSTO는 1992년 창설되어 1994년부터 공식 활동에 들어간 러시아 주도의 CIS 내 집단안보협력기구로서 9·11 테러 사태 이후인 2002년 10월 기구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면서 CSTO로 개칭되었다. CSTO에는 러시아,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여섯 나라가 참가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 조지아는 1999년 탈퇴하였으며 우즈베키스탄은 2012년 다시 탈퇴하였다.

175) 2000년 ‘유라시안 경제공동체’로 개명된 EurAsEC에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벨라루스 등 5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EurAsEC 창설 목적은 완전한 관

고 있다. 특히 CSTO 일곱 회원국 정상들은 2009년 2월 모스크바에서 ‘집단 신속 대응군’ 창설에 합의했다. CSTO 신속 대응군은 역내 군사위협, 국제테러, 조직범죄, 마약 밀거래, 비상사태 등에 공동 대응과 독립국가연합(CIS) 내 분쟁 지역에 공동 부대를 파견할 계획을 표방하였다.

한편 CSTO 신속 대응군의 창설목표가 구소련 영토 내에서 미국과 나토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분히 중국을 의식한 행보이기도 하다. EurAsEC 역시 SCO의 경제통합과 자유무역지대화를 통해 범중화경제권에 편입하려는 중국의 의도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경제, 안보적 팽창에 대한 뿌리 깊은 경계심은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공통 인식이다. 중국에 대한 경계심은 소연방 시절 형성된 중국에 대한 인식의 연장선상에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중국의 신장, 위구르, 티베트 강제병합에서 기인한다. 범중앙아시아 지역으로 분류되는 신장 위구르 지역뿐만 아니라 티베트까지 병합한 중국의 팽창주의를 지켜본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등 구소련권 국가들이 SCO 내에서 중국이 배제된 다자기구를 통해 경제, 안보적 구상을 모색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지도 모른다.

이밖에 중앙아시아 지역의 민족갈등과 수자원 문제, 에너지 자원을 둘러싼 분쟁 역시 중앙아시아 국가 내부, 또는 삼각체제를 이루는 러·중·

세동맹의 구축과 EU와 유사한 공동 경제공간을 창설이다. EurAsEC는 유사한 경제협력을 지향하는 중앙아시아협력기구(CACO)가 해체된 이후 역할이 강화되는 추세다. 아르메니아, 몰도바, 우크라이나는 옵서버로 참여하고 있다. 경제회복을 바탕으로 러시아가 EurAsEC를 통한 유라시아 지역의 경제통합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Sebastien Peyrouse(2011) 참고.

인 삼국의 주요 갈등요소로 볼 수 있다.

가.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관계

러시아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전략의 핵심은 정치, 안보,¹⁷⁶⁾ 경제적으로 중앙아시아를 자국의 세력권에 존속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러시아는 SCO와 러·중·인 삼각체제를 통해 미국과 서구의 중앙아시아 진출을 억제하고 자국의 정치, 안보적 힘이 우월적으로 투사되는 구도와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하려 한다. 그러나 러시아의 일관된 노력과 정책자원 투자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통합 노력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¹⁷⁷⁾ 우즈베키스탄이 집단안보조약(CSTO)에서 탈퇴를 반복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다극체제 아래서 자국의 안보와 독립유지, 경제적 실리추구를 위해 등거리 외교로 대응하면서 러시아와 거리를 두려고 하였다. 푸틴 집권 이후 중앙아시아에 대한 러시아의 개입 수준은 중앙아시아를 포함한 근외정책¹⁷⁸⁾이 러시아 국가전략에서 얼마나 중요한

176) Постсоветская Центральная Азия. Потери и обретения. М(1998) 참고.

177) 러시아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정책 전개과정은 다음과 같이 크게 여섯 단계로 나누어볼 수 있다.

1단계(1992~95): 서구화 정책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제한적 역할을 하던 시기

2단계(1996~98): 프리마코프 등장 이후 다극체제 구축과 중앙아시아로 회귀를 모색하던 시기

3단계(1999~2001): 푸틴의 등장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상호관계 구축을 위해 역동적인 외교정책을 펼치던 시기

4단계(2001): 9.11 이후 미군의 중앙아시아 진출로 역내 ‘세력전이’가 이루어지던 시기

5단계(2002~04): 미군 주둔 장기화를 인정하고 양보와 축소라는 전략적 선택과 대외 정책의 새로운 모델 구축을 모색하는 시기

6단계(2005~현재): 푸틴 2기와 메드베데프 집권기, 중앙아시아를 러시아 주도 안보, 경제적 공동체로 통합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 전개.

178) 여기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고재남(2005); 백준기(2005), pp. 171~188; 백준기(2007),

목표인지에 대한 분명한 선언과 함께 점차 상승해왔다.¹⁷⁹⁾ 그러나 러시아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정책과 목표는 여전히 진행형이며, 중앙아시아 약소국들 역시 개별국가의 대외적 목표와 지향점에 따라 러시아·중앙아시아 관계는 달라질 것이다. 러시아·중앙아시아 양자 관계에는 간극이 존재하며 사안에 따라 차별성이 강화되는 측면도 있다. 특히 양자 관계의 간극을 형성하는 협력요소와 갈등요소는 중앙아시아 국제관계를 지배하는 다극체제에서 사안에 따라 더욱 극대화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약소국들의 등거리 외교를 포함한 불규칙한 행동 역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간극에 주목하는 것은 러시아의 전략적 의도 또는 통합노력과는 상관없이 점차 중앙아시아 신생국들의 국가성이 성숙되고, 대외정책의 자율성이 확대되어갈수록 이들 국가들이 러시아를 거부하거나 중국이나 미국 등과 전략적 동맹을 형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이러한 중앙아시아의 상황변화는 국제질서에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아시아에 대한 러시아의 적극적이고 부드러운 접근에도 불구하고 중앙아시아 약소국들은 러시아 대외정책이 이 지역에서 갖는 전략과 목

pp. 103~137; 신범식(2006); 신범식(2009), pp. 347~381 참고.

179) 러시아의 적극적인 개입의지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안보, 경제적 지원과 투자 확대에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에만 하더라도 타지키스탄에 15억 달러 이상의 군사기술과 신형무기를 제공하기로 합의했으며, 키르기스스탄과는 러시아 군사기지 사용을 15년 연장하면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Зачем Россия поставляет оружие Таджикистану и Киргизии” (http://rus.ruvr.ru/2012_11_14/Zachem-Rossija-postavljaet-oruzhie-Tadzhikistanu-i-Kirgizii/), (검색일 2012년 10월 17일); “Top Kyrgyz Official Says Russian Military Base Granted 15-Year Extension”(<http://www.rferl.org/content/kyrgyzstan-gives-russian-base-extension/24678971.html>) (검색일 2012년 10월 11일).

표에 대해 외면하면서 러시아의 통합노력이 강해질수록 반작용의 방향으로 행동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아시아 약소국들에 러시아는 멀어져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가까워져도 안 되는 존재이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전반적인 대러시아 친화성을 구분해보면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와 연계(engagement) 강도가 높고, 타지키스탄은 의존(dependency), 우즈베키스탄은 균형(balancing), 키르기스스탄은 편승(bandwagon), 투르크메니스탄은 선별적 연계(selective engagement)로 표현될 수 있다.¹⁸⁰⁾

한편 러시아가 자국의 고유 영역이었던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중국, 인도를 끌어들이는 것도 삼각체제를 통해 미국의 일방주의를 견제하고 자국의 급격한 국제적 지도력과 지위 하락을 극복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독립 초기 탈러시아 경향¹⁸¹⁾을 보였던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상호 동등하고 수평적인 쌍무관계 증진으로 다독이면서 점차 자국의 영향권으로 재결합시키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이들 국가의 경계심을 완화시켜왔다.¹⁸²⁾ 2000년대 푸틴 집권기 이후 러시아는 SCO와 CIS 정상회담 등을 통해 군사, 경제적으로 미국과 서방의 중앙아시아 진출을 견제하고 자국의 우월적 지위를 회복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¹⁸³⁾ 이러한 여세를 몰아 최근 러시아는 대규모 경제지원을 앞세워 키

180) Freire, Maria Raquel(2009), pp. 125-149.

181) Shelia(2002).

182) Marlène Laruelle(2009),
(<http://www.ceps.eu/book/russia-central-asia-old-history-new-challenges>)(검색일 2012년 8월 20일).

183) “Russian Policy in Central Asia: Supporting, Balancing, Coercing, or Imposing?”, 2009, *Aslan Perspective*, Vol. 33, No. 2, pp. 125-149 참고.

르기스스탄에 미 공군기지 폐쇄를 요구함으로써 이 지역에서 미국을 완전히 배제시키려 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과 키르기스스탄의 기지사용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14년 이후에 미군은 철수해야 하는 상황이다.¹⁸⁴⁾ 아울러 집단안보조약(CSTO)¹⁸⁵⁾ 회원국들이 신속 대응군 창설을 합의하고 ‘가스 수출국 포럼(GECF)’¹⁸⁶⁾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urAsEC)’를 통해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안보, 경제적으로 러시아 중심으로 재결속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제정러시아와 소연방을 거치면서 약 200년 동안 형성된 러시아·중앙아시아의 역사·문화·언어, 정서적 자산과 구축된 인맥은 독립 이후에도 여타 국가가 근접할 수 없는 자산이 되고 있다.¹⁸⁷⁾ 이러한 역사적 유대감은 중앙아시아 신생국들이 주변 강대국 중 러시아를 가장 가까운 우방으로 인식하게 하고 있다. 아울러 중앙아시아 신생국들이 독립 과정에서 러시아와 어떠한 물리적 충돌도 없었던 점도 이러한 정서적 유대감이 지속될 수 있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군사·안보, 외교적 측면에서 중앙아시아는 러시아에 매우 중요한 가

184) 비쉬켈 교외에 위치한 마나스 기지는 나토군의 아프가니스탄 군사작전을 위한 주요 수송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마나스 공군 기지의 계속적인 사용을 희망하고 있으나 러시아의 경제지원을 앞세운 압력을 받고 있는 키르기스스탄은 계약연장에 부정적이다. 현재 마나스 기지는 재급유기 전대와 함께 1,500명의 미군 관계자가 근무 중이다. (http://www.rferl.org/content/us_defense_secretary_panetta_visits_kyrgyzstan/24513900.html) (검색일 2012년 9월 25일).

185) 현재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타지키스탄으로 구성되어 있다. 집단 안보 조약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는 Современная политическая и история России. хроника и аналитика(1985~1998) Т.1. М. 1999, 181) 참고.

186) 2001년 5월 가스 수출국들의 장관급 대표들이 이란의 테헤란에 모여 상호 가스 생산·수출 정책조율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가스수출국포럼(GECF, Gas Exporting Countries)을 발족시킴(<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85762&mobile&categoryId=3421>) (검색일 2012년 7월 27일).

187) 이문영(2003), pp. 215~238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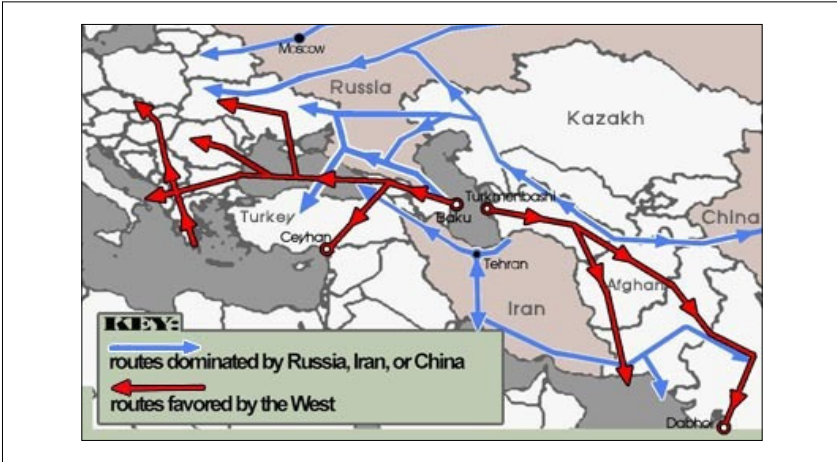
치를 지닌다. 체첸의 분리독립 운동과 이슬람 원리주의 확산을 막기 위한 군사·안보·지리적으로 중앙아시아는 러시아에 중요하다. 아울러 소연방 시절부터 중앙아시아 지역에 거주하는 러시아계 민족들을 보호¹⁸⁸⁾하는 것도 러시아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정책의 중요 목표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풍부한 에너지 자원과 관련된 막대한 경제적 이권에 대한 지배력 유지도 러시아의 대중중앙아시아 정책의 핵심 중에 하나이다. 이를 위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에너지 부분에 대한 협력체제를 제도화하려 한다. 에너지자원 수출에서 얻는 재원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물론 러시아 국가경제에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이야말로 양 진영의 이해관계를 중장기적으로 보다 긴밀히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차원에서 러시아는 에너지의 전략 자원화로 냉전 붕괴 이후 상실해왔던 국제적인 영향력 회복을 도모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에너지자원의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러시아의 노력은 에너지자원 수송을 위한 파이프라인 건설 정책을 통해서도 가시화되고 있다. 러시아는 네트워크 국가 전략차원에서 에너지자원을 대외적 영향력의 원천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러시아 국영기업의 에너지수송 네트워크에 대한 통제와 그 신축사업이 지니는 전략적 의도 및 효과를 규명함으로써 러시아의 석유, 가스 파이프라인의 네트워크 특징을 러시아의 서(西)향성, 중(中)향성, 동(東)향성이라는 세 지전략적 지향성의 관점에서 설명하면서 그 속에서 중앙아시아가 지니는 함의를 분석하였다. 해외 연구들 역시

188) 2008년 조지아를 침공한 러시아군의 주요 명분도 바로 조지아 영토 내의 남오세티아 지역에 거주하는 러시아계 주민들에 대한 보호였다.

그림 5-2. 중앙아시아를 둘러싼 러시아와 서구의 에너지 수송로 건설 경쟁 현황¹⁸⁹⁾



주: 푸른색은 러시아가 추구하는 파이프라인 루트이며, 붉은색은 서구에서 추진하는 루트이다.

유라시아 주요 강대국들의 지정, 지경학적 거대 게임의 대상지역으로 중앙아시아 국제관계를 조명한 분석들이 주류를 이루었다.¹⁹⁰⁾ 러시아는 가스관을 통해 투르크멘 가스 생산량 중 상당량을 카스피 해 연안을 거쳐 자국으로 끌어올 계획이다.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서 생산되는 가스도 카스피 해 연안 가스관을 통해 러시아로 수출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러시아의 노력은 미국과 유럽연합이 추진하는 카스피 해 횡단 가스관 건설 사업을 무력화시키고 중앙아시아 에너지자원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러시아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¹⁹¹⁾을

189) 박상남(2010), 『현대 중앙아시아』, p. 156.

190) 여기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Kubicek, Paul(2004), pp. 207-217; 신범식(2009), pp. 347~381 참고.

191)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대외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의 불규칙한 의

비롯한 중앙아시아 약소국들은 러시아와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 사안에 따라 국가적 이해(자국의 안보, 정권안정, 경제적 실리)에 보다 유리한 방향에서 중층적 외교 행보를 실행하고 있다. 이러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행보는 러시아의 바람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다극체제라는 국제체계의 구조적 특성이 주는 영향으로 보인다. 즉, 다극체제라는 국제적 구조 아래서 안보적 불안감과 경계심을 해소하기 위한 약소국의 대응으로 설명할 수 있다. 안보와 정권안정 그리고 경제적 실리는 중앙아시아 약소국들이 역외 상위행위자들의 행위와 의도를 점검하고 평가를 내릴 때 유일한 판단 기준이며, 그 기준에 따라 러시아에 대한 태도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¹⁹²⁾

경제협력이란 측면에서도 중앙아시아 약소국들의 중층적 행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대외경제협력과 새로운 공동체 형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시나리오를 동시에 모색하고 있다. (1) CIS 회원국과 협력 강화, 특히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 (2) 터키 등 이슬람국가들과 협력 강화, (3) 미국과의 협력 강화, (4) EU와의 협력 강화, (5) 아시아 국가들(중국, 인도, 일본, 한국 등)과의 협력 강화이다. 다섯 가지 시나리오는 상호간 마찰 혹은 경쟁이나 협력 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 경제협력에서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교역과 협력의 대상을 다원화함으로써 편중된 의존이 가져올 위험을 경계하고 있다.

러시아가 그동안 공을 들여온 CIS의 통합운동은 쌍무간·다자간 협력 형태의 통합과 대통합 그리고 친러시아적 성향의 CIS 통합운동과 반러시

교노선의 배경에 대해서는 강봉구(2007), pp. 47~75; 이홍섭(2007). pp. 87~107 참고.
192) Shaikhutdinov, Marat E(2007), pp. 45-58.

아적 혹은 친서방적 경향의 통합 움직임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최근 CIS 대통합의 중요성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는데 이는 역내 외적으로 다양한 상호 견제와 불신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 대신에 쌍무 혹은 다자간 협정을 통해 부문별, 이해관계별, 특정지역·국가별 소통합을 모색하고 있다. 예를 들면 친러시아 성향의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EC), 친 서방 지향적인(GUAM) 등의 형성 움직임이다. 그 이외에도 1995년에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1999년 가입) 등으로 형성된 ‘중앙아시아경제협력기구(ECO)’ 등이 있다. 러시아 주도로 2003년 가을 알타 회의에서 CIS에서 비중이 가장 큰 4개국(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이 ‘통합경제공간(UES)’ 창설에 합의했다. 이 기구의 목적은 관세·비관세 철폐, 공동화폐 도입,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의 조세, 재정정책, WTO 가입의 공동 접근 모색 등이다. 특히 이 기구에 대해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이 기구가 활성화되면 CIS 통합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기타 중앙아시아 CIS 회원국들도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는 그동안 서방세력에 내주었던 중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의 복원을 위해 이 지역으로의 투자와 교역을 활성화하고 있다. 푸틴은 2007년 5월 12일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대통령,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함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만나 3국을 연결하는 총 연장 2,000km의 가스관 건설을 2012년까지 완공하기로 합의하면서 러시아를 우회하는 중앙아시아 가스관의 독자적 건설을 추진해온 미국과 유럽의 전략에 제동을 건 바 있다.¹⁹³⁾ 그러나 전반적으로 러시아 중심의 경제공동체 건설은

193) 한중만(2007), pp. 187~190.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으며 오히려 양자 관계의 협력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자국 경제가 러시아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됨으로써 구 소연방 시절로 회귀할 것이라는 뿌리 깊은 불신과 더불어 보다 다차원적인 경제 협력 관계구축이 자국의 안보와 경제발전에 유리하다는 중앙아시아 약소국들의 전략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나. 중국과 중앙아시아 관계

탈냉전기 소연방 국가들의 분리독립 과정에서 중국은 중앙아시아에 대해 소극적 관찰자 입장을 견지해왔으나, 1990년대 말부터 서서히 적극적인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중앙아시아는 중국이 당면한 아래와 같은 국가적 과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¹⁹⁴⁾

첫째, 신장과 위구르 지역의 분리 독립 운동¹⁹⁵⁾을 차단하기 위해 중앙아시아 SCO 국가들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둘째, 낙후된 서부 내륙지방의 개발을 위해서는 유럽과 중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역로인 중앙아시아로의 안정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이런 필요성 때문에 중국은 중앙아시아 지역을 관통하는 실크로드 복원사업에 적극적이다. 현재 중국은 대규모 물류망 건설, 다양한 투자와 지원 등을

194) 박상남(2005) 참고.

195) 이슬람 원리주의와 연결된 분리주의는 러시아나 중앙아시아 국가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중국 내에서 5대 민족 중의 하나이며 회족(回族)이라고 불리는 약 4,500만의 무슬림(穆斯林)이 주로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에 집중 거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족, 만주족, 몽골족이 거주하는 지역에도 적지 않은 회교도가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중국 내 회족 사회에서 이슬람 원리주의가 득세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장 위구르 분리 독립 운동이 격화된다는 가정은 대만, 티베트 문제와 함께 중국 붕괴를 가져오는 내부적 요인이 될 것이다.

앞세워 중앙아시아를 중화경제권의 배후 지역으로 육성하려 하고 있다.

셋째, 9·11 이후 미군이 중앙아시아에 주둔하며 대두된 잠재적 안보 위협에 대처하는 문제다. 미군의 중앙아시아 주둔이 중국에는 안전한 후방지역의 상실을 의미한다. 안보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안보협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국가적 목표는 러시아의 미국 견제전략에 호응하면서 중·러 연대 또는 중·인·러 삼각체제를 견인하는 주요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넷째, 개혁개방 이후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에너지 수요증가¹⁹⁶⁾는 에너지 수급과 에너지 안보문제를 중국 정부의 최대 현안으로 만들었다. 따라서 중국은 SCO를 통해 중앙아시아 에너지자원에 안정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러시아는 중·러 연대 또는 러·중·인 삼각체제의 유지를 위해 이를 묵인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중앙아시아 에너지자원의 최대 수요처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의 중앙아시아 정책의 전개과정은 제1단계, 선린우호관계 건설 시기(1991년 12월~1997년 9월), 제2단계 에너지·경제무역·안보 협력강화 시기(1997년 9월~2001년 6월), 제3단계 SCO 틀 내 쌍무적·다자적 협력 강화 시기(2001년 6월에서 현재까지)로 구분할 수 있다.¹⁹⁷⁾

제1단계에서 중국의 중앙아시아 정책의 주요 목표는 정치와 안보 영역에 집중되어 주로 쌍무적인 차원의 선린우호 관계를 확립하는 데 있었다.

196) 2004년 중국의 석유 소비량은 2억 8,000만 톤에 달하고 이 중 약 40%를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반영하여 중국은 1997년 당면한 에너지 문제의 심각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고 미국이 9·11 이후 중앙아시아와 중동에서 취한 일련의 외교·군사적 대응을 보면서 중국은 본격적으로 에너지 문제를 국가안보 이익의 개념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197) 김재관(2010), pp. 34~52 참고.

하지만 여전히 중앙아시아 지역은 중국 외교정책에서 우선순위에 들지 못했으며, 그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은 문제와 연관되어 있었다.

첫째, 당시 중국 외교의 중심은 갈등으로 치닫던 미·중 관계를 조정하고 안정화하는 데 있었다. 구체적으로 대만 독립 세력들이 국시인 ‘하나의 중국’을 분열시키려는 경향을 억제하는 것이 당시 중국 외교의 최우선적 임무가 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독립국가연합 지역 내에서 중국은 러시아와 선린우호관계 확립을 한층 더 중시하면서 심지어 광범위한 국제적 문제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셋째, 중국 기업 입장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은 혼란과 경제·사회적 불안정으로 투자 매력이 없는 곳으로 인식되어 있었다.¹⁹⁸⁾

제2단계는 중국의 중앙아시아 정책이 정치관계 발전을 바탕으로 에너지·경제·안보 분야로 협력의 범위를 확장해나가는 시기이다. 에너지·경제·안보 영역에서의 협력 강화는 한편으로 쌍무적 차원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중·리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심화됨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상하이 5개국’ 틀 내의 협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당시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가 간의 관계 양상은 쌍방의 공동이익에 달려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 정도 러시아 요인에도 크게 영향을 받았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한편으로 중국을 활용하여 러시아를 억제하면서 동시에 중국의 세력 범위에 편입되는 것을 경계하였다.¹⁹⁹⁾

제3단계는 SCO의 성립을 계기로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가가 우호협력

198) 鄭羽(2007), p. 54 재인용.

199) 위의 책, p. 61.

관계에서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는 시기였다. 그러나 이 시기 발생한 9·11 테러는 중앙아시아를 둘러싼 국제정치 환경에 심대한 영향을 초래했다. 이러한 대외적 환경 변화에 따라 중국의 중앙아시아 전략은 재조정될 수밖에 없었다.

9·11 이후 미군과 나토군의 중앙아시아 주둔은 미국의 군사·외교적 전략 공간을 중앙아시아로까지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중앙아시아 국가들 역시 미국의 진출로 야기된 다극체제 속에서 강대국을 상대로 등거리 실용외교를 전개하여 보다 많은 경제원조와 정치적 지지를 획득하고자 노력하였다.²⁰⁰⁾ 이러한 상황 전개 속에서 중국과 관계발전에 대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열망과 기대는 상대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보다 넓게 보면 당시 중국 경제가 현재와 같이 강력한 흡입력을 발휘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을 비롯한 서구에 대한 협력에 더 큰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미국과 반테러 협력을 강화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중국과의 안보협력은 감소되었으며 이는 SCO의 안보, 경제적 역할을 약화시켰다. 특히 2001년 말 미군 주둔에 대한 합의과정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중국과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음으로써 중국·중앙아시아 양자 관계는 물론 SCO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중국은 큰 의문을 갖게 되었다.²⁰¹⁾

이러한 상황전개에 따라 중국의 중앙아시아 정책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조정되었다. 첫째 중앙아시아 국가와 선린우호 관계를 공고히 하면서 중앙아시아 지역 내 모종의 외부세력이 개입한 반중국 정권의 출현을

200) 趙華勝(2008), pp. 352~357 재인용.

201) 鄭羽(2007), pp. 62~63.

억제하는 것, 둘째, 지속적으로 3대 위협세력(민족분열주의, 종교극단주의, 국제테러리즘)의 척결을 강화함으로써 신장(新疆)과 중앙아시아 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 셋째, 에너지와 경제무역 분야의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공동발전을 촉진하는 것, 넷째, 평등한 협상방식을 통해 타지키스탄과 국경문제를 해결하여 우호적인 정치적 조건을 창출하는 것, 다섯째,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강화하여 국제사회의 번영과 평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동노력을 증대시키는 것, 여섯째, 중앙아시아 정권들의 안정을 지지함으로써 역내 정치적 혼란을 방지하는 것, 일곱째,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공동으로 SCO의 협력 범위와 기능을 더욱 확대하는 것, 여덟째, 인적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는 것 등이다.²⁰²⁾ 이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에게 중국에 대한 뿌리 깊은 경계와 의구심을 완화시키고 평화로운 협력 파트너로서 다양한 범위의 협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감으로써 중국의 존재감을 점진적으로 강화시키려는 보다 세밀하고 진전된 전략이었다.

경제적 차원에서 중국의 중앙아시아 정책의 주요 목표는 단기적으로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SCO를 자유무역지대로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다양한 차원에서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성장하는 경제력에 걸맞게 중앙아시아 투자를 증대해나가고 있다. 현재 중국은 SCO 내에서 러시아와 미국을 자극할 수 있는 군사 안보적 개입을 배제하면서 자국의 경제적 힘을 유라시아 대륙의 중앙부와 유럽, 중동으로 조용히 확장²⁰³⁾시켜나가는데 SCO라는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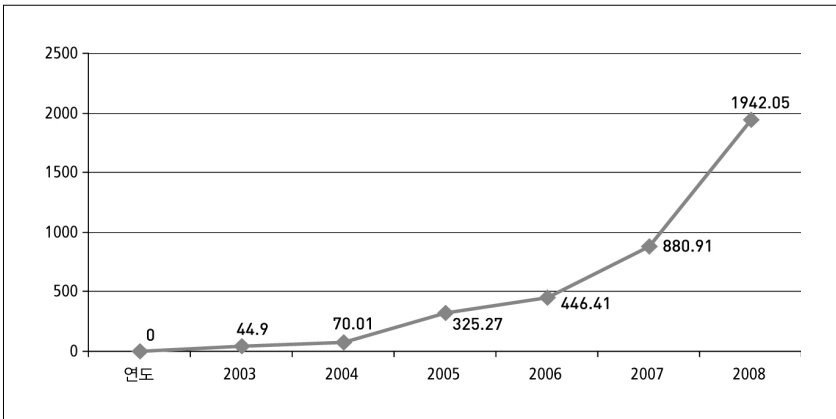
202) 위의 책, p. 63.

203) Ашимбаев М.С. и Лаумулин М.Т.(2002), “Центральноазиатская страте

도적 틀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안보적 측면에서 보면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의 주도적인 지위를 인정하면서 자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해나가는 전략이다. 따라서 향후 중국은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중화경제권의 영향력을 조용히 SCO에 확장할 수 있는 통상정책을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SCO 정책은 정부 주도의 중장기 전략수립과 강력한 추진, 러·중 연대 또는 러·중·인 삼각체제를 활용한 러시아의 협조와 묵인을 확보하면서 중앙아시아 국가 내부문제 간섭 배제, 다자 및 양자 관계를 상호 연계 활용하여 실리적인 이해를 추구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은 SCO 국가들과 꾸준한 정상외교를 통한 신뢰 구축²⁰⁴⁾과 자국에 우호적인 인맥 육성을 통해 구소련 시절부터 유래된

그림 5-3. 2003~08년 중국의 대중양아시아 직접 투자(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商務部·國家統計局·外彙管理局(2009); 재인용, 김재관·주장환(2009).

гия России”, *Центральная Азия до и после 11 сентября : геополитика и безопасность*, Алматы, сс. 75-96.

204) 강준영(2003), p. 341.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적개심과 경계심을 점차적으로 완화시키면서 이 지역에서 자국의 지위를 강화해나가는 데 성공하고 있다.

다. 인도와 중앙아시아 관계

인도와 중앙아시아의 교류는 고대부터 다양한 차원의 접촉을 통해 문화적 친밀감을 축적해왔다. 양 지역은 오랫동안 교통, 무역, 종교, 문화적으로 서로 긴밀하게 상호 소통해왔으며, 교류가 정점에 달했을 때 경제적으로도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다. 우선 남아시아 반도는 남쪽의 바닷길이 상용화되기 전까지 북쪽 루트를 중심으로 육로 무역을 실시해왔다. 남아시아의 북쪽에는 바로 오늘날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이 위치한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유럽, 중동, 중국과 무역을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땅이었다. 한편, 중국과 인도라는 두 거대 문명의 교차로에 위치하면서 풍부한 문화유산을 흡수했고, 동시에 중동과 유럽의 길목에 위치한 중앙아시아는 소비에트의 통치가 시작된 19세기 말까지 유라시아 대륙의 활발한 교역과 문화 교류의 중심지였다.

그러나 수세기 동안 활발하게 지속된 경제, 종교, 문화, 예술, 인적 교류는 영국의 인도 통치와 소비에트의 중앙아시아 진출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의 독립 인정 그리고 아프가니스탄과 대영제국 사이의 듀랜드 라인(Durand Line)의 성립,²⁰⁵⁾ 러시아 제국의 중앙아시아 병합으로 양 지역의 관계는 과거와는 달리 냉랭하게 변하였다. 우선 중앙

205) 19세기 말 인도를 통치하던 영국은 파슈툰족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아프간과 인도 사이의 파슈툰 거주지역에 듀랜드라인(Durand Line)을 설정했고, 이 경계선이 아프간과 파키스탄의 국경선이 됐다.

아시아는 러시아로의 합병 이후 북쪽과 연계를 강화하였다. 한편 대영제국이 진출한 인도는 인도 남부 도시들이 바닷길 개척을 위해 개방되면서 남쪽으로 기수를 틀었다. 그러자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 교류의 상징이었던 비단길은 쇠퇴하였고, 양 지역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표류하기 시작했다. 양 지역에서 소통되었던 페르시아어는 더 이상 주류 언어로서의 지위를 잃고, 인도에는 영어가 중앙아시아에는 러시아어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수천 년간 지속된 양 지역 교류가 19세기 말에 이르러 현격히 줄어들게 된 것이다. 그러나 소비에트 시기에 인도 문학이나 예술 등 한정된 분야에서 중앙아시아 지역과 최소한의 교류를 유지한 국가 중에 하나였다.

공식적으로 인도·중앙아시아 외교 관계는 소련의 붕괴와 함께 재개되었지만 본격적인 교류가 시작된 것은 2003년 인도 총리의 타지키스탄 방문과 2005년 인도 국영석유회사의 카자흐스탄 유전사업 투자가 진행된 이후라고 볼 수 있다. 이후 수차례 양 지역 정상들이 오고가면서 인도의 구체적인 중앙아시아 정책이 수립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²⁰⁶⁾

오랜 기간 수면상태에 있던 인도 경제가 2000년대 들어서면서 7~9%대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²⁰⁷⁾ 이러한 인도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에너지자원에 대한 엄청난 수요증가로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담보할 안정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불안정한 역내 안보문제를

206) 이지은(2012).

207) 인도경제는 2004~07년 연평균 9.5%의 급격한 고성장을 보이고 있으나 실업률 감소는 미미한 편이다.

(<http://www.lgeri.com/economy/overseas/article.asp?grouping=01010200&seq=614>)
(접속일 2012년 11월 9일).

해결이 급선무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두 가지 문제, 즉 에너지자원 공급처 확보와 전통적 비전통적 안보위협 해결은 인도 대외정책의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중앙아시아를 기본적인 지리적 대상으로 하는 SCO는 이러한 인도에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다자협력체로 부상하였다. 그동안 냉전시기는 소련 영토였고 탈냉전기에는 지리적(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을 통과해야 하는) 조건 때문에 접근이 불가능했던 중앙아시아 지역과 연계와 협력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인도의 중앙아시아 진출은 SCO 체제 내에서 러·중·인 삼각체제 또는 전통적 우호 관계인 러시아와 인도의 지원을 받으면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러·인 관계는 냉전 시기부터 두터운 우호 관계를 형성해왔다. 최근 들어 인도가 미국과 관계를 적극 개선하고 있지만 인도의 대외정책에서 러시아는 여전히 중요한 우방으로 남아 있으며, 이러한 양국의 전통은 러·중·인 삼각체제 형성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인도의 중앙아시아 접근 정책은 핵심협 성공과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더욱 적극성을 띤 이후 유라시아의 요충지에서 자국의 존재감을 강화하기 위한 장기적 전략이 내재되어 있다.

인도의 중앙아시아 접근 정책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정치, 안보, 경제, 문화적 연결이라는 접근 방식을 통해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신뢰할 수 있는 협력 파트너이자 다극체제를 구성하는 주요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것이다. 인도의 중앙아시아 접근정책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선제적·적극적·주도적인 정책으로 전환하고, 둘째, 정상 간 대화 채널을 강화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부문으로 교류를 확대하며, 셋째, SCO 등 역내 다자기구들을 활용하여 러시아와 중국 등과 다자구도를 형성하고 존재감을 강화하는 것이다.

안보적 차원에서 보면 인도와 중앙아시아는 지리적으로 극단주의 무장 세력의 주요 활동지역인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을 사이에 두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와 중국과 마찬가지로 인도 역시 극단주의와 분리주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공조가 필수적이다.²⁰⁸⁾ 중앙아시아 국가들 역시 안보적 차원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물론 인도와 협력하여 보다 다양한 외교적 옵션과 안보적 안전망을 가지려 한다. 이러한 안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도는 SCO,²⁰⁹⁾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²¹⁰⁾ 등과 같은 국제기구를 활용하여 다자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인도는 러·중 연대와 미국 어느 쪽과도 안보적 협력이 가능한 위치에 있다. 이러한 인도의 특별한 지위는 러시아, 중국, 미국 등 전통적 강대국들의 세력경쟁구도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외교, 안보적 옵션을 원하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새로운 출구가 되고 있다.

인도는 러시아나 중국에 비해 뒤늦게 중앙아시아에 진출했지만 빠른

208) 인도의 국방백서는 중앙아시아를 중동과 남아시아로 접근할 수 있는 지리적 조건과 아직도 개발 여지가 많은 석유, 가스 자원과 광물자원을 보유한 지역으로 인도가 관리해야 할 핵심지역으로 지목하였다. Mohammad Samir Hussain, "Security Challenges in Central Asia and India's Role" (<http://www.usak.org.tr/EN/makale.asp?id=2405>) (접속일 2012년 9월 20일).

209) 인도는 SCO의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어 영향력 확대에 제한이 따른다. 따라서 인도가 중심적 역할을 하는 지역협력체인 남아시아연합(SAARC)을 통해 대중아시아 정책을 전개하는 것을 구상중이다. Nirmala Joshi(2005), p. 105.

210) SAARC는 1985년 방글라데시·부탄·인도·몰디브·네팔·파키스탄·스리랑카 등 7개국 정상들이 모여 창립한 기구이다. 남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경제발전과 복지, 생활여건 증진을 위한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문제에 공동 대응하고 교육, 과학기술, 스포츠, 관광 등 다양한 민간차원의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1995년에는 회원국들 간 관세 인ша조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네이버 백과사전. (검색일 2012년 9월 17일).

시간 내에 자신의 존재감을 강화하고 있다. 고대로부터 인도는 중앙아시아와 역사, 문화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도 양자 협력의 자산이 되고 있다. 인도는 이러한 성과와 자산을 바탕으로 SCO내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미묘한 경쟁관계는 물론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러·중 연대와의 관계에서 완충지대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소련 붕괴 이후 인도는 새롭게 재편된 국제질서에 대한 두려움과 과거 냉전시기 안락함에 대한 향수 사이에서 방황하며 상황에 따라 극도의 가변적이고 불확실한 대외정책을 전개했다. 그러나 인도는 1998년 핵실험 성공으로 국제무대에 당당히 복귀하는 계기를 마련했고, 이후 인도의 대외정책 기조는 적극적 실리 추구하고 함께 동방정책, 서방정책, 북방정책 등 지역별 맞춤형 지역화(regionalization) 전략으로 구체화된다. 특히 북방정책을 구체화한 ‘중앙아시아 연결 정책’은 미·중·러 등 주요 강국의 이해와 경쟁이 심화되는 유라시아 대륙의 요충지에 인도의 존재감을 강화함으로써 21세기 신흥강국으로서 위상을 제고하려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인도에 중앙아시아가 갖는 전략적 가치는 크게 두 가지인데, 먼저 2000년대 이후 가파른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막대한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공급이며, 두 번째는 전통과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을 통한 역내 안보문제 해결이다. 특히 인도는 중앙아시아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지리적으로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을 통과해야 하는데, 양국 모두 인도와 중앙아시아 안보를 위협하는 이슬람 무장세력과 분리주의 집단의 근거지로 지목되었다. ‘연결 정책’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정치·안보·경제·문화적 연결이라는 접근 방식을 채택하여 장기적으로 인도가 이들 국가들에 러시아·미국·중국 외에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강대국으로 부

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결 정책’의 주요 특징을 요약하면 첫째, 인도의 중앙아시아 정책이 기존의 소극적 대응수준에서 벗어나 주도적이며 사전 대비적 정책으로 전환하고, 둘째, 정상급 대화를 지속하는 한편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 교류(Track 1.5, 2 수준)를 확대하여 인도·중앙아시아 관계의 저변을 강화하고자 한다. 셋째, 상하이 협력기구(SCO),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등과 같이 영향력 있는 지역기구, 체제를 활용하여 역내 문제에 대해 다자적인 접근을 모색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인도의 중앙아시아 정책은 유라시아 중앙부에 강대국으로서 자국의 위상정립이라는 장기적인 전략 아래 단기적이고 구체적 방안으로 풍부한 에너지 자원에 대해 접근하며 다자적 틀을 통해 역내 안보위협해결을 위한 인도와 중앙아시아의 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이다.²¹¹⁾

그림 5-4. Proposed TAPI Gas Pipeline



자료: Canadian Centre for Policy Alternatives,²¹²⁾

211) 이지은(2012) 참고.

인도는 에너지자원의 수급차원에서 중앙아시아에 석유, 천연가스, 전력 분야에 활발한 진출과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중앙아시아 에너지자원을 인도로 끌어오기 위한 TAPI 파이프라인²¹³⁾ 수송로 건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인도는 중앙아시아 진출의 중요한 계기를 맞이하고 있다.²¹⁴⁾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입장에서도 인도는 석유와 천연가스, 광물 자원은 물론 중앙아시아산 공산품을 수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거대 시장이다. 따라서 인도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지나친 경제적 의존도를 완화시키고 시장을 보다 다원화할 수 있는 대안적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인도와 중앙아시아의 관계 증진은 적지 않은 제한요소들이 존재한다. 중국과 파키스탄이 인도의 중앙아시아 진출을 경계하고 있고, 좀처럼 안정되지 못한 아프가니스탄 상황도 걸림돌이다. 인도 역시 경쟁 관계인 중국이 중앙아시아에서 급격하게 세력을 확장하는 것을 불안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중앙아시아 지역이 중화경제권에 흡수되어 간다면 인도와 중앙아시아의 관계발전은 많은 한계에 직면할 것이다.²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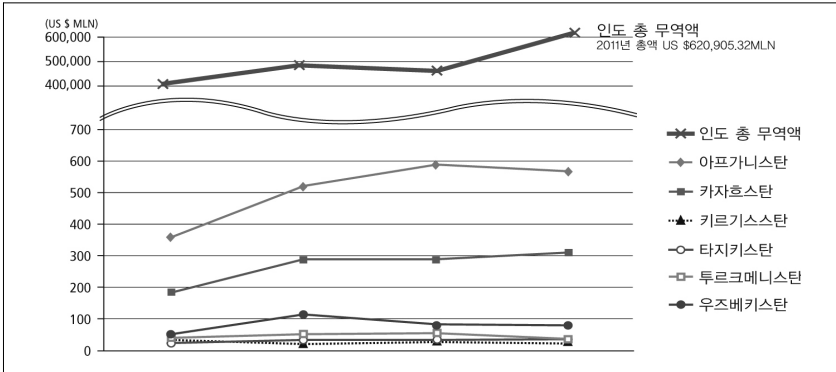
212) “Afghanistan, the TAPI Pipeline, and Energy Geopolitics”,
 (http://www.ensec.org/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233:afghanistan-the-tapi-pipeline-and-energy-geopolitics&catid=103:energysecurityissuecontent&Itemid=358) (검색일 2012년 11월 7일).

213) TAPI(Turkmenistan-Afghanistan-Pakistan-India) 중앙아시아의 투르크메니스탄-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인도를 잇는 에너지 수송관.

214)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2012년 중국에서 개최된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서 러시아는 관련국들과 TAPI 건설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중앙아시아 에너지의 인도 수출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다.

215) Gulshan Sachdeva(2006).

그림 5-5. 인도 · 중앙아시아 간 무역 규모



자료: Department of Commerce,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Government of India, <http://commerce.nic.in/eidb/iecntq.asp>, (검색일 2012년 8월 11일).

그러나 최근 인도와 파키스탄의 관계가 개선되고 아프가니스탄 역시 점차 안정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어 인도와 중앙아시아 관계발전은 더욱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3. 삼각체제 · 중앙아시아 협력이 대미관계, 역내 안보 구도에 미친 영향

살펴본 바와 같이 적지 않은 갈등요인에도 불구하고 SCO를 통한 삼각체제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상호작용과 협력은 아시아는 물론 유라시아 대륙차원에서 삼각체제와 SCO의 위상과 지위를 격상시켰다. 뿐만 아니라 2000년대 부시 집권 이후 더욱 강화되었던 미국의 일방주의와 동진 정책을 차단하면서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는 우월적 지위유지’, ‘중국은 실리 속의 조용한 세력 확장’, ‘인도는 단기간 효율적 진출과 존재감 부

각'이라는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에 미국은 부시 정부가 중앙아시아에서 지속적인 정치, 군사, 경제적 개입²¹⁶⁾을 진행해왔음에도

216) 큰 틀에서 보면,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지정학적 위치, 즉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이슬람 국가들로 통하는 전략적 위치와 카스피 해의 풍부한 천연자원에 대한 안정적인 접근이라는 핵심목표에 있다.

이는 미국의 중앙아시아 외교정책이 러시아와 중국을 동시에 통제 또는 위협할 수 있는 지정학적 거점 확보와 경제적 이익추구라는 전략적, 실용주의적 토대 위에서 설정되었음을 말해준다.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이해관계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워싱턴에서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중앙아시아에서 미국의 거점을 구축하고 확장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지위를 유지하는 데 필수조건이라고 판단하였다.

둘째, 미국이 카스피 지역 천연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획득은 중동에 치우친 석유 공급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고, 미래에 있을지도 모르는 중동의 반미 산유국들의 위협으로부터 에너지 안보를 지킬 수 있는 대체유전과 수송로 확보라는 의미를 가진다.

셋째, 미국은 중앙아시아 신생국들의 정치 경제적 독립성과 자생적 발전을 유도하고 보호함으로써 세계적, 지역적 차원의 문제에서 미국과 경쟁적이거나 적대적인 중국과 이란 같은 국가들을 견제할 수 있다.

넷째, 미국은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함으로써 러시아나 중국이 미국을 제외하고 이 지역을 독점하는 상황을 방지하려 한다.

다섯째, 미국은 중앙아시아에 군사기지를 구축함으로써 이란, 이라크와 같은 '문제국가'들과 이슬람 원리주의에 군사적 압력을 가하는 동시에 중앙아시아 동맹국들을 지키고자 한다.

여섯째, 미국은 중앙아시아에서 유럽이나 미국의 새로운 상품시장을 이 지역을 통해 개척하는 데 관심을 갖는다.

일곱째, 미국에서 유라시아 대륙의 전략적인 교통망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북유럽·인도, 서유럽·중국·일본을 잇는 도로나 새로운 실크로드, 가스관이나 송유관 등은 유라시아 대륙의 물류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여덟번째, 미국 정책의 가장 중요한 주안점으로 이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더 나아가 모스크바가 독점적 지배권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또한 '거대한 지정학 게임'에서 중국이나 이란 같은 게이머들을 제거하고 미국이 중앙아시아에 대해 독점적인 정치,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려는 야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미국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중앙아시아에 대해 직접적으로 정치, 군사, 경제적 개입과 통제를 시도하고 있다.

미국은 2001년 말 탈레반에 대한 군사행동을 마무리하고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국제적 통제 시스템과 과도기 정부 수립을 주도했다. 또한 워싱턴은 중앙아시아에서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자신의 군사기지를 건설했다. 이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중앙아시아에 군사·정치적 영향력을 확고히 함은 물론 주변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한 것이다. 박상남(2004), 『미국의 선택과 중앙아시아』 『국제지역 정보』 11월호, pp. 38~39.

불구하고 미국의 입지는 상대적으로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의 무력함이 확인 된 그루지야 전쟁²¹⁷⁾이후 군사, 안보적 차원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러시아의 입지는 강화된 반면 미국의 지위는 약화 되는 현상이 확인해졌다.

미국의 대중양아시아 전략의 두 가지 목표를 러시아, 중국, 이란, 아프가니스탄, 중동 등으로 통하는 전략적 위치 확보와 카스피 해의 천연자원에 대한 안정적인 접근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미국의 대중양아시아 정책이 러시아와 중국을 동시에 통제 또는 억제할 수 있는 지정학적 거점 확보와 경제적 이익추구라는 전략적·실용주의적 토대 위에서 설정되었음을 말해준다. 즉, 유라시아 대륙의 영향력 유지를 위한 중국과 러시아 견제, 이란 통제, 아프가니스탄과 인도양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안보 벨트 구축을 위한 군사적 거점 확보, 중동의 불안정과 중국·인도의 산업화에 따른 급속한 에너지자원 수요증가가 가져올 에너지 안보차원에서 중앙아시아는 중요한 대안지역으로 부각되었던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에너지 분야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해왔으며, 카스피 해 에너지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한 수송망 확충에도 심혈을 기울여왔다.²¹⁸⁾

미국은 이러한 전략적 목표달성을 위해 2001년 말 탈레반에 대한 군사

217) 2008년 8월 7일, 조지아군이 조지아로부터 분리독립을 원하는 남오세티야의 수도인 츠한발리에 진군하여 군사작전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에 러시아는 8월 8일 러시아 국적의 민간인 보호를 명분으로 전면적인 군사개입을 감행하여 조지아군을 공격하였다. 8월 12일, 유럽연합 의장국인 프랑스의 중재가 있었고, 조지아의 미하일 사카슈빌리 대통령은 자국의 독립국가연합 탈퇴를 선언하였다. 러시아는 8월 16일 평화협정안에 서명하였다.

(<http://ko.wikipedia.org/wiki>) (검색일 2012년 9월 28일).

218) Ezeli Azarkan(2009), pp. 1-21.

행동 이후 아프가니스탄에 과도정부를 수립했으며, 키르기스스탄과 아제르바이잔에 미군 주둔을 장기화하고 있다. 미국이 중앙아시아에 군사기지를 유지하려는 주된 이유는 첫째, 유라시아 전략 거점 중 하나인 파키스탄에 정치 불안이 발생하거나 인도·파키스탄 분쟁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는 근접거리에 군사력을 주둔시키기 위함이고, 둘째는 이란의 핵개발을 적극적으로 억제하며, 셋째는 카스피 해 석유자원에 대한 안정적인 접근과 통제권을 확보하고, 넷째로 러시아의 독점적 지위를 약화시키는 동시에 중국의 영토, 특히 핵실험과 미사일 기지가 있는 신장 지역을 겨냥하여 중국의 팽창정책을 차단하려는 목적에 기초하였다. 즉, 미국이 내세우는 중앙아시아의 정치적 안정과 민주화, 경제적 번영을 위한 미군 주둔이라는 표면적인 명분 이면에는 자국 중심의 일극체제 구축을 위한 전략이 내재되어 있었다.²¹⁹⁾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일방주의는 역설적으로 SCO를 통한 러·중 연대와 삼각체제를 출현시키는 배경이 되었다. SCO와 삼각체제를 통해 러시아는 소련 붕괴 이후 급격히 약화되었던 자국의 우월적 지위를 상당부분 회복해갔고, 중국은 불모지였던 중앙아시아에서 빠른 속도로 역할을 증대했으며, 오랜 기간 중앙아시아와 재결합을 갈망하던 인도는 안정적 진출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특히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해 극에 달했던 러시아의 불만은 2008년 조지아에 대한 러시아군의 무력개입으로 분출되었다. 조지아 전쟁은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가 행한 최초의 전면적인 외부 군사행동이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러시아군의 신속하고 과감한 무력개입과는 달리

219) 박상남(2010), p. 158.

미국과 나토의 대응은 무력했으며, 이는 이 지역에서 군사적 지리적 힘의 우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대내외에 확인시켰다. 또한 조지아 전쟁은 SCO 또는 삼각체제 차원이 아닌 러시아 단독으로 감행한 군사행동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확고한 군사, 안보적 의지와 힘을 보여줌으로써 중앙아시아, SCO, 삼각체제 내에서 러시아의 우월적 지위를 확고히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또 다른 차원에서 조지아 전쟁은 냉전 붕괴 이후 유지되었던 미국의 일극체제가 끝나가고 있음을 예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9·11 이후 진행된 테러와의 전쟁으로 최고조에 달했던 중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세력 확장은 현재 후퇴하였다.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이러한 힘의 변화가 가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SCO를 기반으로 한 삼각체제 또는 중·러 연대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앙아시아 신생국들의 입장에서 미국은 여전히 중요한 역외세력이며 세계 전역에 힘을 투사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다. 또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독립유지, 외교, 안보적 자율성 확대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미국의 역할은 중요하다. 중앙아시아를 둘러싼 러시아와 중국의 과도한 경쟁과 팽창주의를 견제하기 위해서도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유지가 필요하다.²²⁰⁾ 따라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SCO 내에서 진행되는 삼각체제 또는 러·중 연대와의 관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국과도 협력을 유지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지향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20) Ezeli Azarkan, pp. 1-21 참고.

4. 한국에 주는 시사점 및 소결

본 연구는 중앙아시아와 삼각체제의 관계를 이 지역 대표적 다자기구인 SCO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중앙아시아는 유라시아 대륙의 세력판도를 좌우하는 핵심 이해지역이었다. 러시아, 중국, 인도는 이러한 중앙아시아와 고대로부터 밀접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었다. 2세기에 쿠산 왕조가 인도, 중앙아시아, 남아시아를 지배하며 번성할 수 있었던 것도 중앙아시아를 장악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중국 역시 유라시아 대륙 서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서역은 꼭 정복해야 할 지역이었다. 러시아는 19세기 대영제국과 경쟁에서 승리한 후 중앙아시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함으로써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 냉전시기 소연방이 미국과 함께 세계를 양분하며 제국의 힘을 유라시아 대륙 전체에 투사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중앙아시아를 지배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탈냉전기, 소련의 붕괴와 함께 힘의 공백지대가 된 중앙아시아 지역은 다시 유라시아 대륙 세력경쟁의 무대가 되었다. 종교적 극단주의, 분리주의, 테러리즘의 위협증대와 9·11 이후 역사상 처음으로 미군이 중앙아시아에 주둔하게 되자 급격한 지위하락을 경험한 러시아의 위기감과 중앙아시아를 안전한 후방지대로 간주하던 중국의 불안감이 상호 호응하면서 SCO가 성립되었다. 독립유지와 국경안정을 위해 안보 우산이 절실했던 중앙아시아 신생국들의 입장에서도 SCO는 인접 강국들과 대등한 관계에서 상호협력을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 틀로서 작동하였다. 현재 SCO는 안보와 경제협력을 핵심으로 교통, 문화, 구난, 법집행 등 광범위한 분야로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더 나아가 SCO는 미국과 나토의 확장을

저지하려는 중·러 연대, 또는 삼각체제의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이는 급작스러운 소련 붕괴 이후 미국과 나토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세계 질서 재편에 대한 러·중 또는 삼각체제의 반발이 가져온 결과물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SCO는 전통적으로 러시아 세력권이었던 중앙아시아에 중국이 자연스럽게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냉전시기부터 다자 관계의 경험이 없었던 중국은 SCO 내에서 가장 실리를 챙긴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중국은 7세기 서역정벌의 좌절 이후 접근이 봉쇄되었던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성공적인 대외관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²²¹⁾ 현재 SCO의 지리적 대상 지역인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의 입지는 러시아와 경쟁할 만큼 강화되었으며, 경제적 차원에서는 오히려 러시아의 지위를 위협하고 있다. 인도는 후발주자로서 SCO의 옵서버 지위에 머물고 있으나 역사, 문화, 인종적으로 중앙아시아와 유구한 연대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특히 2000년 이후 지속되는 경제성장에 따라 강대국화 정책을 서두르고 있는 인도는 중앙아시아와 재결합하기 위해 중장기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인도의 SCO 진출은 중국의 과도한 영향력 확대를 인도를 이용해 견제하려는 러시아의 전략과 맞물리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후발주자임에도 중앙아시아에서 존재감을 증대시키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SCO는 중앙아시아에서 러·중 또는 삼각체제국가의 협력과 경쟁의 결과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외교, 안보, 경제적 차원에서 러·중·인 삼각체제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SCO 내에서 공동의 목표를 공유한 협력관계이자 상충되는 이해를 둘러싼 경쟁관계이기도 하다. 양자 관계의 협력요소와 갈등요소를 살펴보

221) 자세한 내용은 김재관(2010a), pp, 34~52 참고.

면 이러한 성격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먼저 SCO 내에서 중앙아시아·삼각체제 관계에서 협력요소는 국경의 긴장완화와 안정적 관리, 극단주의·분리주의·테러·마약과 불법무기 거래에 대한 공동 대응, 경제협력과 에너지자원의 개발과 이용 등을 들 수 있다. 러·중 연대 또는 삼각체제 차원에서 보면 미국의 일방주의를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도구로 SCO가 활용되었다. 특히 중앙아시아에서 미국과 나토의 세력 확장을 저지해야 한다는 중국과 러시아의 위기감이 SCO를 통한 양국의 연대를 급속하게 강화시켰다. 중앙아시아는 삼각체제를 연결하는 지리적 통로인 동시에 러시아·중국·인도가 자국의 경제안보적 영향력을 유럽과 중동, 아시아 지역으로 확장해나갈 수 있는 21세기 실크로드로서 의미를 지닌다.

삼각체제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입장에서도 러시아의 과도한 영향권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다양한 외교적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대외환경을 조성해주었다. 아울러 삼각체제는 러·중·인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통해 중앙아시아가 특정 강대국의 정치, 경제, 안보적 세력권에 편중되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삼각체제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천연자원과 상품을 수출할 수 있는 거대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다.

반면 갈등요인으로는 먼저 중앙아시아와 SCO 내에서 러·중의 미묘한 경쟁관계를 들 수 있다. 러시아는 자국이 주도하는 안보, 경제적 공동체를 통해 중앙아시아에서 우월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입장에서 중국의 급속한 영향력 증대는 심각한 도전이 될 수 있다. 중·러 관계의 이러한 이중성은 삼각체제뿐만이 아니라, SCO의 미래 향방을 가늠하는 가장 큰 변수이다. 러시아는 삼각체제 내에서 점증하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카드로 인도를 활용하고 있다. 러시아가 중국의 반대에도 인도를 SCO의 옵서버로 가입시킨 것도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비롯한다. 러시아의 입장에서 볼 때 인도는 삼각체제를 이용하여 미국과 나토는 물론 중국까지 견제할 수 있는 다목적 카드로서 절묘한 위치에 있다. 이밖에도 러시아는 중국이 배제된 CSTO, EurAsEC을 통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결속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CSTO 신속 대응군 창설은 극단주의와 테러 집단의 안보 위협에 대한 회원국들의 공동 대응이라는 대외적 명분 외에도 구소련 영토 내에서 점증하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EurAsEC 역시 SCO를 통한 경제통합, 자유무역지대화를 성공시켜 중앙아시아를 범중화경제권에 편입하려는 중국의 의도를 의식한 러시아의 방어적 행보로 분석된다.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에 대해 품는 경계심은 소연방 시절 형성된 중국에 대한 인식의 연장선이기도 하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범중앙아시아 지역으로 분류되는 신장과 위구르 지역은 물론 티베트까지 병합했던 중국의 팽창주의에 대한 역사적 경험과 의구심에서 유래한다. 따라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등 구소련권 국가들이 SCO 내에서 중국과 협력하면서도 동시에 중국이 배제된 다자기구를 통한 경제, 안보적 결속을 모색하는 것도 중국에 대한 경계심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여러 갈등요인에도 불구하고 SCO를 통한 삼각체제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협력은 아시아는 물론 유라시아 대륙차원에서 삼각체제와 SCO의 위상을 격상시켰다. 뿐만 아니라 2000년대 부시 집권 이후 더욱 강화되었던 미국의 일방주의와 동진정책을 차단하면서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는 우월적 지위유지’, ‘중국은 실리 속의 점진적 세력 확

장’, ‘인도는 단기간 효율적 진출과 존재감 부각’이라는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 중앙아시아에서 지속적으로 정치, 군사, 경제적 개입을 시도했던 미국은 상대적으로 지위 약화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무력함이 확인된 2008년 조지아 전쟁 이후 군사, 안보적 차원에서 러시아의 입지는 강화된 반면 미국의 지위는 후퇴하는 현상이 확인해졌다. 또한 조지아 전쟁은 SCO 또는 삼각체제차원이 아닌 러시아 단독으로 감행한 군사행동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확고한 군사, 안보적 의지와 힘을 보여줌으로써 중앙아시아·SCO·삼각체제 내에서 러시아의 확고한 의지를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냉전 붕괴 이후 지속된 미국의 일방적 우위가 중앙아시아에서는 별다른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이유로는 바로 SCO를 기반으로 한 중·러 연대 또는 삼각체제가 자리하고 있다. 한편 중앙아시아 신생국의 입장에서 미국은 여전히 중요한 역외세력이며 세계 전역에 힘을 투사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다. 또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독립유지, 외교, 안보적 자율성 확대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미국의 역할은 중요하다. 중앙아시아를 둘러싼 러시아와 중국의 과도한 경쟁과 팽창주의를 견제하기 위해서도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유지는 필요하다. 따라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SCO 내에서 진행되는 삼각체제 또는 러·중 연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미국과 협력을 유지하려 한다.

SCO 내에서 삼각체제와의 협력은 대외정책에 대한 경험이 전무했던 중앙아시아 신생국들이 독자적으로 대외정책을 수립, 실험할 수 있는 기회였다. SCO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중국, 러시아, 인도 등 강대국을 상대로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하기 위한 다양한 외교적 옵션을 구사해볼 수 있는 실험무대였으며, 특정한 강대국의 영향력이 과도해지는 것을 방지하

는 세력균형의 역할도 담당하였다. 또한 상호 대등한 수평적 관계에서 삼각체제와의 다자협력은 신생국들이 보다 안정된 대외환경 속에서 국가건설과정과 체제이행을 수행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따라서 SCO 내에서 삼각체제와의 관계는 신생국들에 대해 독립국가로서의 위상 정립, 주권 존중, 공동안보, 외교적 자율성 확대, 경제성장, 역내분쟁 또는 갈등의 조정 등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SCO 내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삼각체제의 관계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먼저 주변 강대국이 참여하는 다자협력체는 약소국가들에 군사, 안보적 불확실성을 현저히 감소시킨다는 점이다. 중앙아시아의 경험은 강대국과 약소국가 관계에서는 물론이고 역내 약소국가 간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갈등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데도 긍정적 효과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SCO의 활동이 본격화되었던 2000년 이후 회원국들 사이의 영토분쟁이나 충돌이 억제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색갈혁명, 안디잔 사태 등의 정치변동이 있었으나, 이는 개별 국가의 국내정치차원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지 국가 사이의 갈등은 아니었다. 이는 6자회담, 남북한 긴장완화, 동아시아 영토분쟁, 역사문제 등 다양한 갈등요소에 직면한 동아시아와 한국에 매우 유용한 시사점을 준다. 또한 상호 평등과 호혜라는 다자협력의 원칙은 강대국과 대등한 협상에 참여함으로써 외교적, 전략적 선택공간을 확대하여 약소국가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안이다. 강대국을 상대로 굴욕외교 논란에 자주 휩싸이는 한국의 외교적 자율성과 독자성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중앙아시아의 경험이 주는 교훈은 유용하다. 뿐만 아니라 공동안보차원에서 주변 강대국과 연대는 군비경쟁과 대립을 억제할 수 있는 대

안이 될 수 있다. 삼각체제 국가들뿐만 아니라 역내 경쟁국인 카자흐와 우즈베크이 군비확장을 통한 패권추구에 나서지 못하는 것도 삼각체제와 결합된 다자협력체(SCO)의 순기능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중앙아시아의 경험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군비경쟁을 억제하고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방안 모색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뿐만 아니라 시장확대 또는 시장통합이라는 차원에서 삼각체제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협력은 매우 유용한 시사점을 준다. 삼각체제와 유기적인 결합은 중앙아시아 국가들로 하여금 거대 시장에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치, 경제, 제도적 기반이 되었다. 현재 삼각체제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가장 큰 에너지 수출 시장이며, 아울러 향후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역점을 두고 있는 제조업 육성이 성공하면 거대한 수출시장으로 부상할 것이다. 또한 러시아, 중국, 인도를 연결하는 삼각지대에 위치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지리적 위치는 석유, 가스 수송 파이프라인은 물론 철도와 도로 등 육로물류와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삼각체제 국가들을 이어주는 중개지로서의 가치를 부여받게 될 것이다. 이는 동아시아에서 남·북·리에 철도와 파이프라인이 연결되면 유라시아 내륙물류의 출발점이자 목적지로서 비중이 높아질 한반도의 지리, 경제적 조건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사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제6장 결론



2012년은 아태 지역의 새로운 권력재편과 대외정책의 향배를 둘러싸고 보낸 뜨거운 한 해였다. 결국 2012년 11월 되어서 6자회담 주요 파트너인 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 신정부의 핵심 진용이 갖춰졌고, 12월에는 나머지 두 국가인 한국과 일본도 권력교체를 위한 선거를 치렀다. 결국 2013년이 되면 6자회담국은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대외정책을 둘러싸고 각축전을 벌이게 될 것이다. 선거를 앞둔 이런 민감한 시기에 북한이 2012년 12월 12일에 장거리 로켓(은하 3호)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뿐만 아니라 핵보유국의 위상마저 가지게 됨으로써 동북아 지역 정세를 한층 더 위태롭게 하고 있다. 이에 6자회담국은 분주하게 대처방안과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 한·미·일 삼국은 유엔 안보리 제재 등의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북한의 주요 지지국인 중국은 북한의 발사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대북제재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였고, 한반도 안정과 평화유지의 틀 내에서 신중히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런 급박한 정세 변화 속에서도 한국의 차기 행정부는 중견국가로서 단지 북한문제에만 매달릴 수 없으며, 아시아 지역 외교에 큰 관심과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주지하다시피 아시아 지역의 역내 국가들은 갈등과 협력이 상충하는 과정에서 국가이익에 따라 합종연횡을 거듭하고 있다.

이미 21세기 아시아 지역은 급속한 신흥 경제성장의 무대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갈등의 진원지로 떠올랐다. 중동과 서남 아시아 지역은 물론이고 중앙아시아,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우리와 관련해서 보면, 북한의 핵개발 및 장거리 로켓 개발 등으로 안보위협이 가중되고 있는 데다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영토분쟁(중·일, 한·일, 러·일, 베트남, 필리핀을 포함한 남중국해 지역의 영토분쟁 등), 중국의 부상

에 따른 미·중 패권경쟁의 가열 등으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갈등과 협력이 공존하는 아시아 지역의 역내 국가들 간의 합종연횡도 글로벌 질서의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기에 주목을 받기에 충분하다. 중국이 G-2 국가로 부상함으로써 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이 크게 신장되었고, 그에 따른 ‘매력외교’를 펼치고 있다. 가령 다자협력레짐에서 중국은 아세안과의 FTA 체제(CAFTA)와 SCO를 이미 가동하고 있으며, 아세안+3(한중일) FTA마저 추진하려고 분투하고 있다. 양자협력레짐에서도 중국은 중·러, 중·인, 한·중 간에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음으로써 중국의 영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적 지위와 영향력은 전례 없이 약화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 가운데서 SCO와 중·러·인 전략적 삼각협력체제(RIC)의 부상과 이에 맞선 미·일·호 삼각동맹과 한·미·일 삼각협력도 아시아 지역에서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기에, 구조현실주의적 맥락에서 보았을 때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

중국의 부상에 따른 세력전이를 견제해야 하는 미국은 급기야 2011년에 접어들면서 이른바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전 전략(Pivot to Asia)’으로 대외정책을 전환했다. 이 정책에서 주목할 만한 여섯 가지 핵심 행동노선으로 첫째, 양자 안보동맹을 강화하는 것, 둘째, 중국을 포함한 부상하는 강대국들과 관계를 심화시키는 것, 셋째, 지역 다자제도들에 관여(개입)정책을 추진하는 것, 넷째, 무역 및 투자를 확대하는 것, 미군 주둔을 광범위하게 유지하는 것, 민주주의와 인권을 신장시키는 것 등이다.²²²⁾

222) HILLARY CLINTON(2011), http://www.foreignpolicy.com/articles/2011/10/11/americas_pacific_century.

특히 안보와 관련하여 미국과 양자 동맹을 맺고 있는 일본, 한국, 호주, 필리핀, 태국 등 5대 동맹국이야말로 미국의 아·태 지역 전략의 중심축 전환에서 보루가 되는 핵심국가들이다. 이 가운데서도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미·일·호 삼각군사동맹과 한·미·일 삼각군사협력체제의 강화와 같은 두 개의 삼각 안보협력은 중국과 러시아가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간주하는 상황을 초래하였고, 결국 이는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 딜레마를 가중시키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고 신냉전 구도를 강화시키는 조치라고 보인다. 따라서 RIC 체제, SCO 체제, 심지어 BRICs야말로 미국의 입장에서 대단히 경계할 만한 다자협력레짐이 아닐 수 없다.

21세기 중견국가인 한국 역시 그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아시아 지역에서 이런 신냉전 구도에 대해 평화와 안정 및 공동번영의 촉진자이자 갈등의 조정자로서 역할이 요구된다. 따라서 아시아 지역의 협력과 갈등 구조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철저한 인식과 대응전략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아시아 지역의 신흥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러·인 삼국의 양자 및 삼자협력체제(RIC)에 대해 그 협력요인과 갈등요인은 물론이고 그 각각의 위상과 역할 및 영향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미 상수화되어버린 미국요인(American factor)의 압력 속에서 어떻게 양자협력(중·러, 러·인, 중·인 협력)이 중·러·인 전략적 삼각협력체제(RIC as a strategic triangle)를 형성하고 촉진시키면서 안정적으로 꾸러나갈 수 있을 것인가가 주요한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이미 본문에서 보았다시피 RIC 체제 형성과정에서 중·러·인 삼국은 각각의 양자 관계에서 협력과 갈등 요인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갈등을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 전략적 삼각체제로서

러·인·중(RIC) 체제의 형성에서 중·러 관계가 ‘강한 고리’, 중·인 관계를 ‘약한 고리’라 표현한다면, 러·인 관계는 ‘고리의 시작점’이자 ‘안정적인 고리’라 할 수 있다. 이들 양자 관계의 갈등과 협력 요인들을 도표화해 구성해본다면 [표 6-1]과 같다.

다음으로 본 글은 RIC 체제의 성격과 관련하여 몇 가지 특성으로 집약할 수 있다. 한편으로 프리마코프가 주도했던 ‘강대국 균형(great power balancing)’ 체제, 즉 러·인·중의 전략적 삼각제휴를 통해 미국을 견제 혹은 ‘균형(balancing)’을 잡으려고 시도하는 체제로 볼 수도 있다.²²³⁾ 다른 한편으로 RIC 체제는 ‘양탕트(entente)’ 체제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표 6-1. RIC 체제 내 협력요인과 갈등요인의 분류

	협력요인	갈등요인	양자관계의 성격	삼각체제에 미치는 영향
중·러 관계	경제협력, 군사안보협력	미국의 개입과 G2 체제형성, 중국의 부상과 중국위협론, SCO와 중앙아시아 역내 주도권 경쟁	전면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가장 강력하고도 중요한 행위자
러·인 관계	군사 및 과학기술협력의 경제안보적 요인, 지역분쟁 및 영토분쟁에 대한 체제통합적 요인	미국요인, 중국요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안정자, 촉진자
중·인 관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외부환경의 조성, 내부의 정치적 안정, 국제무역에서 공동이익(에너지 협력, 기후협약, 다자무역협상 등), 대외정책의 유연성 확보	국경문제와 민족주의, 지정학적 갈등과 제3국 문제, 무역불균형과 경제안전문제, 서남아시아 세력권 설정문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가장 취약한 고리이자 행위자
중앙아·삼각체제	국경의 긴장완화와 안정적 관리, '3대 약 체결' 마약과 불법무기 거래에 대한 공동 대응, 경제협력과 에너지자원의 개발과 이용 등	중앙아시아의 주도권을 둘러싼 중·러의 경쟁, 중앙아시아 지역의 민족갈등, 수자원 문제, 에너지·자원을 둘러싼 분쟁	다자간 협력 관계(SCO)	완충지대, 협력과 갈등의 전초기지

223) Andrei P. Tsygankov(2010), pp. 7-9.

로버트 칸(Robert Kann)의 지적처럼 ‘앙탕트’ 체제는 견고한 군사동맹체제가 아니라 ‘유연성’을 특징으로 하며, ‘유사동맹(quasi-alliance)’의 성격을 띠면서 군사협력도 배제하지 않는 체제이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RIC이 열린 전략적 협력을 바탕으로 향후 유사시 군사적 협의를 포함한 개념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인 평가와 전망도 가능하지만 지나친 기대일 수도 있다. 즉 RIC 체제는 일종의 불안정한 삼각협력체제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RIC 체제 내부에 협력요인 못지 않게 갈등요인들도 상존하기 때문이며, 더욱더 심각한 교란요인은 바로 미국의 개입 때문이다. 다시 말해 무엇보다도 RIC 체제 형성과정에서 미국요인이 중요한 변수이다. 미국은 중국, 러시아, 인도와 각각 쌍무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양자 협력을 유지하면서 RIC 체제를 견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략적 실용주의를 견지하는 삼국은 이익균형을 노린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동시에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RIC 체제 내 공고한 협력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삼국체제 형성에서 가장 결정적인 외부 변수는 결국 미국요인이다. 이처럼 미국의 개입은 한편으로 RIC 체제의 확대발전에 교란요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촉진요인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영향력 있는 삼국인 RIC 체제의 각 국은 공통적으로 미국의 일방주의와 패권주의, 역내 미국의 영향력 증대에 반대하면서 국제관계의 민주화와 다극화를 지향하는 한에서, 미국의 개입은 동시에 RIC 체제 형성의 촉진요인이기도 하다. 게다가 오바마 정부가 ‘아시아 중심전략’으로 정책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RIC 체제 형성에서 미국요인이야말로 삼국협력의 확대강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요인’ 역시 미국요인보다 덜 하지만 삼국협력에서 중요한 변수이다. 여기서 중국요인을 좀 더 집약해서 언급하면 첫째, 중국의 부상과 중국위협론, 둘째, SCO와 중앙아시아 역내 주도권 다툼, 셋째, 영토분쟁에서 중국의 패권주의화 추세 등이다. 전반적으로 중·러, 중·인, 러·인 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협력과 경쟁이 공존하는 측면이 있다. 각각의 양자 관계는 전략적 실용주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갈등요인보다 협력요인이 더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구동존이(求同存异)’의 접근방식으로 가능한 한 갈등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요인 외에도 ‘전략적 실용주의’ 외교를 펼치는 ‘인도요인’ 역시 RIC 체제 형성에서 중요한 변수이다. 주지하다시피 미국이 2005년에 인도를 아시아의 나토로 격상시키려고 인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관계강화를 시도해오고 있다. 특히 군사 분야에서 미·인 협력은 RIC 체제의 강화에 중대한 장애요인이 아닐 수 없다. 보다 구체적으로 인도가 미·일·호 삼국과 더불어 4개국 합동군사훈련을 정례화한 점은 RIC 삼국협력에서 우려할 만한 사안이다. 이처럼 RIC 체제 내 인도는 아직 SCO 정식회원국이 아닌데다 미국의 분리지배전략과 개입전략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파키스탄을 지지하는 중국의 전략적 모호성이 존재하에 ‘전략적 실용주의’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균형 외교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은 RIC 앞길에 암운을 드리우는 꼴이다. 그러나 최근 인도 정부가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중지되었던 중·인 합동군사훈련을 2012년에 재개하기로 합의한 것을 보면 아시아 지역에서 중·인 관계와 나아가 RIC 체제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

된다. 역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점차 약화되는 조짐도 보여준 셈이다.

RIC 체제 건설에 가장 큰 이해상관자는 러시아다. 때문에 러시아는 RIC 체제를 가장 먼저 제창했고, 그동안 이 전략적 삼각틀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러시아는 중국이나 인도에 비해 RIC 체제 건설에 가장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반적으로 볼 때, RIC이란 전략적 삼각협력체 수립에서 중·러 협력이야말로 양자 협력 가운데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고리이다. 이 두 국가가 주도하는 양자 및 다자 협력레짐인 RIC, SCO, BRICs 체제는 향후 국제질서에 변화를 몰고올 수 있는 주요한 틀이다. 여기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자국이 가진 비교우위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때, 불안정한 전략적 삼각체제(RIC)의 내실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중·러 양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재관여 정책과 재균형 정책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RIC 체제의 발전을 위해 서로 갈등요인을 최소화하고 협력요인을 극대화하느냐가 관건이다. 특히 최근의 동아시아 영토분쟁에서 보듯 ‘위세적인 중국(assertive China)’의 대외정책은 주변 국가 뿐만 아니라 미국의 우려 또한 증폭시키고 있다. 영토분쟁을 매개로 한 아·태 지역 갈등의 분출은 RIC 체제 구축을 한층 어렵게 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중국의 대외정책이 보다 ‘평화발전’과 ‘조화세계론’에 기반하여 윈윈의 상생 정책으로 이어져 주변국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향으로 선회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갈등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SCO를 통한 삼각체

제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은 아시아는 물론 유라시아 대륙차원에서
 서도 RIC 삼각체제와 SCO의 위상을 격상시켰다. 뿐만 아니라 2000년대
 부시 집권 이후 더욱 강화되었던 미국의 일방주의와 동진정책을 차단하
 면서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는 우월적 지위유지’, ‘중국은 실리 속의 점
 진적 세력 확장’, ‘인도는 단기간 효율적 진출과 존재감 부각’이라는 성과
 를 얻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 중앙아시아에서 정치, 군사, 경제적 개
 입을 계속 시도했던 미국은 상대적으로 지위약화를 경험하고 있다. 향후
 2014년 미국과 나토의 아프간과 중앙아시아에서의 철수는 중국과 러시아
 로 하여금 중앙아시아는 물론 남아시아 및 서남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
 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고 역으로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약화는 불가피하다고 보인다.

끝으로 이번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성공에서 목도하는 바처럼 한반
 도 주변 외교 환경뿐만 아니라 아·태 지역의 안보환경이 그리 녹록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북한의 핵개발이나 장거리 로켓 도발은 물론
 이고 아태 지역에서 신냉전 구도의 출현으로 갈등 현안이 여전히 해소되
 지 않고 분출되고 있기에 더욱더 한국 차기 행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명실상부한 G 20 회원국인 중견국가로서의 한국은 전략적 실용주의 외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한반도 주변의 신냉전구도를 완화하기 위해 한·
 미 동맹을 더욱더 강화하기보다 개선하는 방향으로 틀을 잡고, 미·일과
 중·러 사이에서, RIC 체제와 미·일·호 대립구도 사이에서 평화와 공
 동번영의 촉진자 혹은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남북
 관계의 개선과 협력증대가 급선무요 제1차 과제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국문자료]

- 강봉구. 2007. 『우즈베키스탄 대외정책의 노선 전환: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슬라브학보』, 제22권 1호, pp. 47~75.
- 강준영. 2003. 『중국 제4세대 지도부 출범과 중국외교노선의 지속과 변천』. 『중국연구』, 32권.
- 고재남. 2005. 『트랜스 카프카즈-중앙아시아의 ‘신 거대 게임’과 러시아의 대응』. 외교안보연구원.
- 김재관. 2010a. 『탈냉전기 중국의 중앙아시아 외교 전략에 대한 검토: 상하이 협력기구를 중심으로』. 『현대 사회과학 연구』.
- _____. 2010b. 『갈등과 협력의 G-2체제에 대한 분석과 전망』. 『안보학술논집』, 제21집 1호, 12월. 국방대학교.
- 김재관 · 주장환. 2010. 『중국의 중앙아시아 지배전략과 정책에 대한 연구』.
- 김현기. 2012. 『미일방위협력 15년만의 개정, 어떤 내용 담나』. 『중앙일보』. (10월 18일)
- 박건영. 2008. 『이명박 정부의 대미정책과 대안』. 『국가전략』, 제14권 4호.
- 박민희. 2011. 『중 전문가들 “북-중 우호조약, 중요한 가치”』. 『한겨레신문』. (7월 11일)
- 박병광. 2007. 『21세기 중인관계의 발전』. 『한국국제정치학회』, 47(1).
- 박상남. 2005. 『중국의 서부전략과 중앙아시아』. 『국제지역연구』, Vol. 8, No. 4.
- _____. 2010. 『현대 중앙아시아』. 한신대학교 출판부.
- 박상남 · 강명구. 2007. 『주요국의 대중아시아 통상전략 및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박현. 2012. 『오바마, 미얀마 방문...아시아로 중심 축이동 큰 걸음』. 『한겨레 신문』. (11월 18일)
- 백준기. 2005. 『푸틴정부의 외교정책 수정의 ‘수준(levels)’과 ‘경로(courses)’ : 동북아시아에서의 전략적 옵션』. 『동북아논총』, 제37집, pp. 171~188.

- _____. 2007. 「푸틴정부의 네트워크외교와 유라시안리즘의 수정: 러·중·인 삼각 모델을 중심으로」. 『아세아 연구』, 제50권 4호(통권 130호).
- _____. 2009. 「러시아의 중국정책의 재정립과 이행기적 특성: 과정과 요인」. 『중소 연구』, 제33권 제3호.
- _____. 2011. 「러시아의 중국정책: 동맹 또는 라이벌?」. 코리아컨센서스 유라시아 연구회. 『중국과 러시아의 현재: 체제전환, 대외정책, 엘리트 비교연구』. 한울 아카데미.
- _____. 2012. 「‘민주적 평화협조체제(Concert)’와 ‘비핵시대(NWFZ) 평화의 호’의 이론적 검토와 제안: ‘G2’, ‘평화’, 그리고 안보레짐」. 『동북아 연구』, 가을호.
- 샤시 타루르. 2009. 『네루평전』. 탐구사.
- 서진영. 2006. 『21세기 중국의 외교정책』. 폴리테이아.
- 신범식. 2006. 「유라시아 지정학적 세력관계와 신거대게임」. 『21세기유라시아도전과 국제관계』. 한울.
- _____. 2009. 「러시아 네트워크 국가전략: 푸틴시기 에너지 수송망 구축사업을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7집 3호, pp. 347~381.
- 쑨거. 2010. 「동아시아 시각의 인식론적 의의」. 『동아시아, 인식지평과 실천공간』. 고려대학교 아연 출판부.
- 아마티아 센(Amartya Sen). 2005. 『아마티아 센, 살아 있는 인도(The Argumentative India)』. 청림.
- 이문영. 2003. 「러시아의 대 중앙아시아 관계의 역사와 전망」. 『평화연구』, 제11권 제2호, pp. 215~238.
- 이옥순. 2007. 『인도현대사』. 창비.
- 이지은. 2012. 「탈(脫)냉전기 인도의 “중앙아시아 연결 정책(Connect Central Asia Policy)”」. 2012년 중앙아시아 경제학회 발제문.
- 이재영 외. 2012. 「최근 러·중 경제협력 강화: 특징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 경제 제12-14호.
- _____. 2010. 「한러 극동지역 경제협력 20년: 새로운 비전과 실현방안」. KIEP.
- 이정남. 2009. 「중국의 전략적 동반자 외교에 대한 이해와 한중관계」. 『평화연구』,

17(2).

- 이홍섭. 2007. 「카자흐스탄의 대외정책: ‘전방위 외교정책’의 모색」. 『슬라브연구』, 제23권 2호, pp. 87~107.
- 장학만. 2012. 「러시아 잠수함 기술도 추월... 무기 강국된 중국」. 『한국일보』. (2월 21일)
- 정은숙. 2008. 「상해협력기구(SCO)와 미국: 상호인식과 관계전망」. 『세종정책연구』, 제4권 2호.
- _____. 2007. 「중러 군사협력: 현황, 동인, 한계」. 『세종정책연구』, 제3권 2호.
- 존 M. 톰슨 지음. 김남섭 옮김. 2004. 『20세기 러시아 현대사』. 사회평론.
- 주재우. 2011. 「중국과 러시아 관계: 역사적 교훈의 순환과 실천의 반복」. 『중국과 러시아의 현재』. 한울아카데미.
- 지일우. 「러·중·인 삼각체제 가시화되나」. 『연합뉴스』. (3월 31일)
- 제성훈. 2012. 「3기 푸틴정부, 유라시아 연합 주목해야」. 『통일한국』. pp. 12~13.
- 천평권(陳峰君). 2012. 「일본 극우세력에 대한 한·중러 공동대응」. 『내일신문』. (10월 4일)
- _____. 「일본 극우 문제, 한중이 협력해서 풀자」. 『내일신문』. (11월 8일)
- 최우선. 2011. 「중국의 지역접근저지 능력 증강과 미국의 대응」. 『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안보연구원.
- 해리 하딩 지음. 안인해 옮김. 1995. 『중국과 미국』. 나남출판사.
- 케네스 윌츠 지음. 박건영 옮김. 2000. 『국제정치이론』. 사회평론.
- 한종만. 2007. 「CIS 중앙아시아 5개국의 경제현황과 경제전망」. pp. 187~190.

[중문자료]

- 丛鹏·张颖. 2011. 『战略视角下的中俄关系』. 北京: 时事出版社.
- 关贵海 主编. 2009. 『中俄关系的历史与现实』. 北京: 社会科学出版社.
- 黄华. 2007. 『親歷與見聞-黃華回憶錄』. 世界知識出版社.
- 杰倫·蘭密施(Jairam Ramesh). 『理解CHINDIA:關於中國與印度的思考(Making Sense of Chindia)』. 寧夏人民出版社.

- 李雪文·馬男迪. 2011. 「中國原油進口依存度」. 『CCED 工作論文系列』, No.20110304.
- 談玉妮(Ravni Thakur). 2006. 「中文版序」, 杰倫·蘭密施(Jairam Ramesh), 『理解CHINDIA: 關於中國與印度的思考(Making Sense of Chindia)』. 寧夏人民出版社.
- 吳永年. 2010. 『變化中的印度-21世紀印度國家新論』. 人民出版社.
- 赵华胜. 2008. 『中国的中亚外交』. 北京: 時事出版社.
- _____. 2012. 『上海合作组织: 评析和展望』. 北京: 時事出版社.
- 鄭羽. 2007. 『中俄美在中亞: 合作與競爭』. 北京: 社會科學出版社.
- 戴秉國. 2010. 「中國國務委員戴秉國: 堅持走和平發展道路」, 『人民日報』. (12月 6日)

[영문자료]

- Adomeit, Hannes. 1995. "Russian as a 'Great Power' in World Affairs Images and Reality." *International Affairs*(London), Vol. 71, No. 1, Jan.
- Bakshi, Jyotsna. 1999. *Russia and India: From Ideology to Geopolitics, 1947-1998*. Delhi: Dev Publication.
- Basrur, Rajesh M. 2010. "India-Pakistan Relations: Between War and Peace." Sumit Ganguly ed. *India's Foreign Policy*. New Delhi: Oxford University Press.
- Bazhanov, Eugene and Bazhanov, Natasha. 1993. "Russia and Asia: From Hiatus to Resurrection." *Asian Survey*, Vol. 33, No. 1, Jan.
- Blank, Stephen. 2005. *Primakov's Russia/India/China Triangle Nears Realization*. The James Town Foundation. (April 22)
- Blank, Stephen. 2011. "Challenges to Russia in Central Asia." *American Foreign Policy Interests*, Vol. 33, Issue 5, pp. 208-221.
- Boquerat, Gilles. 2004. "The Asian Triangle or the Squaring of the Circle." Gilles Boquerat&Frederic Grare eds. *India, China, Russia: Intricacies of an Asian Triangle*. Singapore: India Research Press.
- Buszynski, Leszek. 1992. "Russia and The Asia-Pacific Region." *Pacific Affairs*,

Vol. 65, No. 4, Winter 1992~1993.

- Carlson, Brian. 2009. "The limits of Sino-Russian Strategic Partnership in Central Asia." Silkroad Studies Report.
- Cliff, Roger Mark Bures, Michael S. Chase, Derek Eaton, Kevin L. Pollpeter. 2007. "Entering the Dragon's Lair: Chinese Antiaccess Strategies and Their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Rand Corporation.
- Clinton, Hillary. 2011. "America's Pacific Century." *Foreign Policy*. (November)
- Chernov, O. 2004. "At the Heart of New Eurasian Expanse." *International Affairs: A Russian Journal of World Politics, Diplomac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special issue on Russia and Central Asia.
- Cronin, Patric M. Daniel M. Kliman and Abraham M. Denmark. 2010. Renewal: Revitalizing the U.S.-Japan Alliance, October. CNAS(Center for New America Security).
- Curtis, Lisa and Tkciik, John J. 2006. "China and India: Thawing Relations Unlikely to Lead to Strategic Partnership." WEBMEMO #1272. (December 4)
- Denmark, Abraham M. and Zachary M. Hosford. 2010. Securing South Korea: A Strategic Alliance for the 21st Century, December. CNAS(Center for New America Security).
- Dubey, Muchkund. 2012. *India's Foreign Policy: Coping with the Changing World*. Pearson Education.
- Ezeli Azarkan. 2009. "The Relations between Central Asian States and United States, China and Russian within the Framework of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Alternatives: Turkish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 8, No. 3.
- Fewsmith, Joseph, and Stanley Rosen. 2001. "The Domestic Context of Chinese Foreign Policy: Does "Public Opinion" Matter?" David M. Lampton ed. *The Making of Foreign and Security Policy in the Era of Reform*.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 Freire, Maria Raquel. 2009. "Russian Policy in Central Asia: Supporting, Balancing, Coercing, or Imposing?" *Asian Perspective*, Vol. 33, No. 2, pp. 125-149.
- Glaser, Bonnie S. 2012. "Pivot to Asia: Prepare for Unintended Consequences." *Global Forecast*.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 Garver, John W. 2010. "Evolution of India's China Policy." Sumit Ganguly ed. *India's Foreign Policy*. New Delhi: Oxford University Press.
- Gulshan Sachdeva. 2006. "India's Attitude towards China's Growing Influence in Central Asia." *China and Eurasia Forum Quarterly*, Vol. 4, No. 3. Central Asia-Caucasus Institute Silk Road Studies Program.
- Heungkyu Kim. 2010. "From a Buffer Zone to a Strategic Burden: Evolving Sino-North Korea Relations during Hu Jintao Era."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22, No. 1. (March)
- Hongwei, Wang. 2011. *A Critical Review of the Contemporary Sino-Indian Relations*. China Tietology Publishing House.
-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 2004. *World Energy Outlook 2004*. Paris: IEA.
- Imam, Zafa & Romanovsky, N. V. 2002. "Eltsyn Years in Russia, 1990-1999: Political History of mid-20th Century Russia." USSR. New Delhi: Samskriti Publications.
- IMF. 2002. *World Economy Outlook Database*. (April)
- John R. Faust, Judith F. Kornberg. 2000. *China in World Politics*, Boulder; Lynne Rienner Publishers, 1995, pp. 4-5. Subhash Kapila, *India-Russia Strategic Cooperation: Time to Move Away*, South Asia Analysis Group Papers No. 144.
- Jones, Rodney W. and Sumit Ganguly. 2000. "Debating New Delhi's Nuclear Decision." *International Security*, 24(4).
- Jun, Zhao. 2011. "Security Problems in Central Asia and Possibilities of Increased Cooperation Between China, Russia, and India." *Far Eastern Affairs*, Vol.

39, Issue 1, pp. 44-48.

Kann, Robert A. 1976. "Alliance Versus Ententes." *World Politics*, Vol. 28, No. 4.

Kim, Heungkyu. 2010. "From a Buffer Zone to a Strategic Burden: Evolving Sino-North Korea Relations during Hu Jintao Era."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22, No. 1. (March)

Kissinger. 1957. *Nuclear Weapons and Foreign policy*. New York: Harper.

Kissinger, Henry. 2011. "On China." New York: The Penguin Press.

Kodikara, Shelton U. 1995. "South Asian Security Dilemmas in Post-Cold War World." Stephen P. Cohen ed. *South Asia After the Cold War: International Perspectives*. ACDIS Papers.

Kronstadt, K. Alan. 2006. "India-U.S. Relations." CRS Issue Brief for Congress. (April 4)

_____. 2010. "India-U.S. Relation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 (October 27)

Kubicek, Paul. 2004. "Russian Energy Policy in the Caspian Basin." *World Affairs*, Vol. 166, No. 4, pp. 207-217.

Lieberthal, Kenneth and Wang Jisi. 2012. "Addressing U.S.-China Strategic Distrust." John L. Thornton China Center Monograph Series, No. 4. Brooking Institute. (March)

Lo, Bobo. 2008. *Axis of Convenience: Moscow, Beijing, and the New Geopolitics*.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e Press.

Lukin, A. 2011. "Central Asia and Afghanistan in Russia's Strategy." *International Affairs: A Russian Journal of World Politics, Diplomacy & International Relations*, Vol. 57, Issue 5, pp. 57-63.

MacFarquhar, Robert. 1997. *The Origins of the Cultural Revolution*, Vol. 3.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MacHaffie, James. 2010. "China's Role in Central Asia: Security Implications for Russia and the United States." *Comparative Strategy*, Vol. 29, Issue 4, pp.

368-380.

- Mahapatra, Debidatta Aurobinda. 2006. *India-Russia Partnership: Kashmir, Chechnya and Issues of Convergence*. New Delhi: New Century Publications.
- Malik, Mohan. 2011. *China and India: Great Power Rivals*. Boulder: FirstForuPress.
- Maxwell, Neville. 2000. *India's China War*. Random House.
- Medeiros, Evan & Roser Cliff, Keith Crane and James Mulvenon. 2005. *A New Direction for China's Defense Industry*. Rand Corporation. (December)
- Michael G. Mullen. 2011. *The National Militar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Redefining America's Military Leadership*. Washington. D.C.
- Mohan, C. Raja. 2006. "India's New Foreign Policy Strategy." Draft paper presented at a Seminar in Beijing by China Reform and the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May 26.
- _____. 2007. "Balancing Interests and Values: India's Struggle with Democracy Promotion."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30, No. 3.
- Moshes, Arkady&Nojonen, Matti eds. 2011. *Russia-China relations: Current state, alternative futures, and implications for the West*. FIIA REPORT 30.
- Müller-Kraenner, S. 2008. *China's and India's Emerging Energy Foreign Policy*. Bonn: DIE.
- Nadkarni, Vidya. 2010. "Strategic Partnerships in Asia: Balancing without Alliances." London & New York: Routledge.
- Nicole, Jackson. 2010. "The Role of External Factors in Advancing Non-liberal Democratic Forms of Political Rule: A Case Study of Russia's Influence on Central Asian Regimes." *Contemporary Politics*, Vol. 16, Issue 1, pp. 101-108.
- Nirmala Joshi. 2005. "India and Central Asia: Bilateral Dimensions." V. Nagendra Rao and Mohammad Monir Alam eds. *Central Asia: Present Challenges and Future Prospects*, p. 105. New Delhi: Knowledge World.

-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USA). 2009.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Power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_____. 2010.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Power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U.S. Department of Defense.
- Olcott, Martha Brill. 2005. *Central Asia' Second Chance*.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 O'Neill Jim and Anna Stupnytska. 2009. "The Long-Term Outlook for the BRICs and N-11 Post Crisis." *Global Economy Paper*, No. 192. (December. 4)
- Reiter, Erich, and Hazdra, Peter eds. 2004. *The Impact of Asian Powers on Global Developments*. Heidelberg: Physica-Verlag.
- Rogov, Sergei. 1989. *Is a New Model of Soviet-American Relation Possible?* Moscow: Novosti.
- Roy Allison. 2004. "Strategic Reassertion in Russia's Central Asia Policy." *International Affairs*, Vol. 80, No. 2, pp. 278-292.
- Roy, Olivier. 2003. *The New Central Asia: Geopolitics and the Birth of Nations*. New York University Press.
- Sebastien Peyrouse. 2011. "Russia-Central Asia: advances and shortcomings of the military partnership." Stephen Blank ed. *Central Asian Security Trends: views from Europe and Russia*. Strategic Studies Institute.
- Shaikhutdinov, Marat E. 2007. "Central Asia: Developing the Region in the Vortex of the Geopolitical and Geoeconomic Antagonisms of the World Powers." *American Foreign Policy Interests*, Vol. 29, No. 1, pp. 45-58.
- Shearman, Peter. 1987. "Gorbachev and the Third World. An Era of Reform?" *Third World Quarterly*, Vol. 9, No. 4.
- Shen, Simon. 2011. "Exploring the Neglected Constraints on Chindia: Analyzing the Online Chinese Perception of India and Its Interaction with China's Indian Policy." *The China Quarterly*, No. 207. (September)
- Singh, Anita I. 1994. "India's Relations with Russia and Central Asia."

- International Affairs*, Vol. 71, No. 4, Winter. London.
- Singh, Bhupendra Kumar. 2010. "Energy Security and India-China Cooperation."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Energy Security*, First Quarter.
- Singh, Darshan. 1986. *Soviet Foreign Policy Document 1985*. New Delhi: Sterling.
- Shambaugh, David. 2002. *Modernizing China's Military: Progress, Problem, and Prospect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hirk, S. L. 2004. "One-Sided Rivalry: China's Perceptions and Policies toward India." F. R. Frankle and H. Harding eds. *The India-China Relationship: What the United States Needs to Know*.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Snyder, Glenn H. 1997. *Alliance Politics*.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 Tellis, Ashley J. 2006. "The Evolution of U.S.-Indian Ties." *International Security*, Vol. 30, No. 4.
- Thakur, Ramesh and Thayer, Carlyle ed. 1993. *Reshaping Regional Relations: Asia Pacific and the Former Soviet Union*. Boulder: Westview Press.
- Walt, Stephen M. 1987. *The Origins of Alliances*.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 Waltz, Kenneth N. 2002. "Structural Realism after the Cold War." G. John Ikenberry ed. *American Unrivaled: The Future of the Balance of Power*. XX.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Wang, Jisi. 2011. "China's Search for a Grand Strategy." *Foreign Affairs*, Mar/Apr, Vol. 90, Issue 2, pp. 68-79.
- Wilkins, Thomas S. 2008. "Russo-Chinese Strategic Partnership: A New Form of Security Cooperation?" *Contemporary Security Policy*, 29-2.
- Wolf, Charles *et al.* 2011. *China and India, 2025: A comparative Assessment*. RAND.
- _____. 2006. "India's Naxalites: A Spectre Haunting India." *The Economist*, Aug 17th.
- Wolfers, Arnold. 1968. "Alliances." David L. Shils 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Social Sciences. New York: Macmillan.

[논문 자료]

Современная политическая история России. хроника и аналитика (1985~1998), Т.1. М. 1999, 181.

[온라인 자료]

가스수출국포럼(GECF, Gas Exporting Countries)을 발족시킴.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85762&mobile&categoryId=3421>(검색일: 2012. 7. 27).

루카셰비치 외교부 대변인 정례 브리핑 요지.

http://rus-moscow.mofat.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2259&seqno=831100&c=&t=&pagenum=1&tableName=TYPE_LEGATION&pc=&dc=&wc=&lu=&vu=&iu=&du.

『중국과 러시아, 사실은 동상이몽』. 2012. 6. 28. 『시사인』, 249호.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3489>(검색일: 2012. 10. 23).

유철중. 2011. 3. 9 「러시아 무기 수출 미국 이어 부동의 2위」.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030993108>(검색일: 2012. 11. 10)

이병진. 2012. 「미국의 전략실패 그리고 좌절」, 2012년 10월 11일.

http://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10790&ion=sc2&ion2=(검색일: 2012. 11. 10)

商務部·國家統計局·外彙管理局. 2009. 『2008年度中國對外直接投資統計公報』.

<http://www.lgeri.com/economy/overseas/article.asp?grouping=01010200&seq=614>(검색일: 2012. 11. 9).

Arpi, Claude. 2012. “Why the Henderson-Brooks report has never been

- released!-II.” *Homeland Security*, Vol. 27(2).
<http://www.indiandefencereview.com/news/why-the-henderson-brooks-report-has-never-been-released-ii/2>(검색일: 2012. 9. 10).
- “Afghanistan, the TAPI Pipeline, and Energy Geopolitics.”
http://www.ensec.org/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233:afghanistan-the-tapi-pipeline-and-energy-geopolitics&catid=103:energysecurityissuecontent&Itemid=358(검색일: 2012. 11. 7)
- Gupta, Anil K. and Haiyan Wang. 2012. “India’s Misguided China Anxiety.”
Bloomberg Businessweek. (March 21)
<http://www.businessweek.com/articles/2012-03-21/indias-misguided-china-anxiety>
- Kundu, Nivedita Das. “Russia-India-China: Prospects for Trilateral Cooperation.”
http://www.helsinki.fi/aleksanteri/english/publications/contents/ap_3-2004.pdf
(검색일: 2012. 11. 25)
- Mohammad Samir Hussain. “Security Challenges in Central Asia and India’s Role.” <http://www.usak.org.tr/EN/makale.asp?id=2405>(검색일: 2012. 9. 20)
- Panda, Jagannath P. 2012. “The import of Russia-India-China: still a valid entity?”
April 16, 2012.
http://indrus.in/articles/2012/04/16/the_import_of_russia-india-china_still_a_valid_entity_15484.html(검색일: 2012. 11. 12)
- Russia and Central Asia. <http://www.bits.de/NRANEU/CentralAsia.html>(검색일: 2012. 8. 20)
- Shrivastav, Sanjeev Kumar. 2012. “US-India strategic partnership set to grow in second Obama administration.” (November 14).
<http://blogs.reuters.com/india-expertzone/2012/11/14/us-india-strategic-partnership-set-to-grow-in-second-obama-administration>(검색일: 2012. 11. 12)
- Weitz, Richard. 2012. “China-Russia's Anti-NATO?” (July 4).
<http://thediplomat.com/2012/07/04/is-the-shanghai-cooperation-org-stuck-in-ne>

utral/(검색일: 2012. 11. 12)

Williams, Matthias. 2012. "India, China press each other for market access."
Reuters Aug 27, 2012.

<http://in.reuters.com/article/2012/08/27/india-china-trade-idINDEE87Q0BU20120827>

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http://www.mid.ru/bdomp/ns-osndoc.nsf/e2f289bea62097f9c325787a0034c255/d48737161a0bc944c32574870048d8f7>(검색일: 2012. 10. 15).

ЦАСТ 센터. 2012. "러시아는 무기수출 계속 향상 곧 미국 제쳐." [RIA Novosti],
2012/02/12. <http://umacha.blog.me/10131520383>(검색일: 2012. 11. 10)

Executive Summary

The Strategic Connotation and Implications of the Strategic Triangle of Russia, China and India

Jun Kee BAEK *et al.*

It is noted that the formation of the Strategic Triangle of Russia, China and India i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political events in the rearrangement of world order after the Cold War. After President Yeltsin defined the situation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as a 'cold peace' and proposed the idea of strategic co-operation among the three nations in 1993, the initiative was taken in 1996 by Yevgeny Primakov, then Russian foreign minister, who supported the idea of 'eurasianism.'

Since 2006, after their declaration of the Year of Russia, Year of China and Year of India, the three nations have endeavored not only to enhance political-economic cooperation but also to build common values by taking a cultural approach. The Strategic Triangle of Russia, China and India, which can be interpreted as an 'Entente Cordiale,' can be defined as a 'political alliance' or 'quasi-alliance' closer to a network alliance rather than a military alliance.

This paper is composed of three main parts. First, this paper outlines a brief history of Sino-Russian relations which has demonstrated dual aspects of conflict and cooperation since the Cold War era. Secondly, it gives special focus to several cooperative and competing factors that exercised great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of relations between China and Russia in the post-Cold War era. Third, considering that American forces have played an overwhelming role in maintaining US hegemony in the Asia-Pacific, it examines how the

RIC regime as a burgeoning strategic triangle might go on to establish a multi-polar system for power balancing, under closer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Russia.

Regarding factors of cooperation between the two nations, we can summarize some factors briefly. These include: settlement of the Sino-Russian border dispute, exclusion of the 'three evils',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military cooperation such as holding joint military exercises, arms imports from Russia, and mutual exchange of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RMA), etc. As part of a search for a multi-polar system to counter US hegemony, this would involve reinforcing a multilateral or regional cooperation system including SCO, RIC, BRICs, Six party talks, etc. On the other hand, there are also some conflicts which not only prevented the two nations from establishing full-fledged ties, but actually pose a greater long-term threat to each other. There are still some factors hindering the development of closer relations between the two nations and enhancing their mutual confidence, such as engagement of the US in Asia, emergence of a G-2 system, the 'China threat' derived from the Rise of China, and competition for SCO leadership.

Although Sino-Russian relations has recently been defined as a 'comprehensive strategic cooperative relationship' which has characteristics of coexistence simultaneous with those for cooperation and conflict, what is certain is that they are the most important stakeholders as well as core actors among SCO members in the course of establishing RIC as a strategic triangle.

From a viewpoint of strategic pragmatism, because cooperative factors are more influential than factors for competition in Sino-Russian relations, it is anticipated that these two nations could maximize mutual interest by not only minimizing influence of competition, but engage in diplomacy for selective cooperation based on 'seeking common ground while reserving differences (literally chinese expression is qitongcunyin).'

After all, given that the US made a decision to promote re-engagement and re-balancing in the Asia-Pacific through the new policy of 'Pivot to Asia' in 2011, it would be critical for China and Russia to effectively deal with conflict factors in order to establish and develop a firm RIC triad in the future.

The relations between Russia and India embodies factors for cooperation and conflict at the same time. The cooperative factors are in economics and security - more specifically, in military, science and technology. There are even cooperative factors in regional conflicts and territorial disputes. The fact that India imports 60% of the Army's military hardware, 70% of its naval vessels and 80% of aircrafts for the Indian Air Force from Russia clearly illustrates the level of the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the two nations.

Russia and India share common interests in the issue of regional conflicts and territorial disputes. For Russia, the handling of issues related to the Chechen secession and regional conflicts in Central Asia are critical for the maintenance of national/territorial integration and stabilization of the post-Soviet space. To India, a territorial disputes with Pakistan such as Kashmir and the Islamic secessionist movements stand out as recognized risk factors.

On the other hand, there are conflict factors between Russia and India like those involving the US and China. Russia does not necessarily oppose the reinforcement of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US and India; however, it would be unbearable for Russia if the strategic interests which Russia has historically possessed in Asia were damaged as a consequence. It is possible that the enhancement of military collaboration between the US and India can cause the strategic erosion for Russia in Asia, such as in Central Asia, in the long term perspective.

The most important issues in the conflict factors between India and China are territorial disputes, energy and resources, settlement of the sphere of influence in South Asia, and the 'asymmetric perception' on strategic values between

two nations. Sino-Indian relations were switched to a cooperative one with Russia as the strategic adhesive, and the conflict factors between China and India, for example, territorial disputes, have been institutionally resolved. However, if elements of the Sino-Indian conflicts are not structurally resolved, it is possible that cleavages in Russo-Indian relations will come to the surface.

While the Russo-Chinese relations is a 'strong link' and Sino-Indian relation is the 'weak link' in terms of the formation of the Strategic Triangle of Russia, China and India; the Russo-Indian relations can be deemed an 'initial point' of the link. At the time of the formation of the Strategic Triangle, Russo-Indian relations were not deemed as vital in comparison to Sino-Russian relations; however, it would have been difficult to form the Strategic Triangle if the strategic relations between Russia and India had not been restored and strengthened.

The Russo-Indian relations which complements the Sino-Indian relations in the formation of the Strategic Triangle functions serves as a 'facilitating' factor in the structural evolution of the Triangle. Russia and India agreed to the formation of a multipolar system as all three countries opposed the unipolar global order, as Russia pursues the restoration of its status as a great power and defence of the sphere of its influence, while India also wishes to be a global power in the region and world. As long as the US strengthens its Asian policy such as the 'Asia shift' or 'pivot to Asia', and intensifies the strategic encirclement of China, China will continue to strengthen strategic links with Russia and India.

It is clear that the strategic link with India make Russia a stronger global actor. At the same time, India can strengthen its position on global issues by establishing a strategic connection with Russia. In this regard, India is able to resolve security concerns over China and contain the emergence of China as the sole hegemon in Asia.

The competition and conflict between the two groups, the Continental Triangle of Russia, China and India (which includes a Russo-Indian connection); and the Maritime Triple Alliance of the US, Japan and Australia led by the US, can lead South Korea into a strategic dilemma. The Strategic Triangle is related to the Lesser Northern Triangle of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which is based on the treaty of amity and friendship. For South Korea which is linked to the Maritime Triple Alliance through the Korea-US mutual defense agreement, it is desirable to avoid entrapment in the conflict structure and minimize the 'alliance dilemma', and to establish a peace regime in the region.

In order to establish the East Asia peace regime, the Helsinki Process is regarded as one of the most convincing alternative models. Given that the Helsinki Process aims to institutionalize security and peace in Europe by recognition of the status quo of borders and territories, it is clear that the East Asian version of the Helsinki Process should start from the resolution of territorial disputes and the recognition of status quo of borders. Russia, China and India are deeply involved in territorial disputes in Asia as parties of interest. Considering the situation that the US uses military 'exercises' to impact territorial disputes in East Asia, it is possible that the Strategic Triangle of Russia, China and India will also become actively involved in the territorial disputes in the region and influence issues such as Dokdo.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India is the weakest link in the "China-India-Russia triangular cooperation regime". The India-Russia relation has been the facilitator in this triangular regime, and the China-Russia relation has served as the driving force. But because of mutual strategic distrust, China and India could not overcome the conflicts in various spheres and this has created a 'drag' in terms of the development of the triangular cooperation regime.

The 1962 war between China and India was a turning point in contemporary China-India relations and had a deep and negative impact on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especially on India's China policy. Though China-India relations have improved substantially since Rajiv Gandhi's visit to Beijing in 1988, and also the agreement to establish a strategic and cooperative partnership for peace and prosperity in 2005, distrust and conflict have not gone away. On the other hand, it means that improvements in China-India relations could take the triangular cooperation regime to a new level.

At present, there are both of positive and negative factors in China-India relations. The positive factors are (1) China and India desire a peaceful security environment to concentrate on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instead (2) two states need the other's collaboration in resolving domestic political problems such as Tibet for China and Kashmir for India, (3) as developing countries, they share a common interest in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negotiations and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4) they provide diversity as a diplomatic asset that ensures flexibility and autonomy in foreign relations. The negative factors are (1) unsettled territorial disputes and the rise of nationalism which hinder (the) two countries from resolving the said dispute (2) competition for dominance in Asia where the spheres of influence of two countries overlap (3) economic conflicts caused by the trade deficit of India in bilateral trade.

Considering these factors, we can lay out four different scenarios for this bilateral relationship for the middle term: strategic cooperation, cooperative relations, competitive relations and strategic rivalry. Because of geopolitical competition and territorial disputes, we cannot expect the advent of strategic cooperation in the near future. Yet considering the huge political and economic costs, it is difficult for two countries to go back to confrontation reminiscent of the Cold War. The most likely possibility is a combination of competition and cooperation. If the positive factors play a leading role in the bilateral relationship and two countries succeed in separating the cooperative elements from strategic conflicts like territorial disputes, the two sides could continue to devel-

op a cooperative relationship. If the negative factors play a leading role but the two sides do manage to avoid military conflict, a competitive relationship will emerge instead.

In the latter instance, a triangular cooperation regime cannot develop smoothly. But in the former instance, it could be transformed into a meaningful multilateral cooperation forum with robust civilian exchanges and impact on the international order (due to China and India's rapid growth and huge potential). In that case, it could offer both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to Korea. The main challenges include further multi-polarization of world politics which demand increased flexibility in Korean foreign policy, and the threat of increased economic competitiveness of China and India could pose to the Korean economy, especially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But there could also be opportunities such as the increased chances of controlling China's rise through multilateral cooperation and a new large market which China and India's economic growth could provide to Korea.

Despite the existence of conflict factors, the Triangle System led by Russia-China-India in cooperation with Central Asian states within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hereafter, SCO) has raised the status of the SCO and the triangle system itself both in Asia and the Eurasian Continent.

Furthermore such condition has also resulted in Russia maintaining an position of superiority, with China extending its influence in a practical and gradual way, and India making rapid and efficient advances within a short period and displaying itself under the sun; all the while checking increases in American unilateralism initiated by the Bush administration in 2000. On the contrary, US has seen its position erode although it is constantly engaged in Asia politically, militarily and economically. Ever since the 2008 Georgia War has exposed US inability in that area, it is likely to say that Russia's status became stronger while US influence was slightly reduced. The Georgian War also proved the

viability of the Russian military and its firm political will, while demonstrating Russian power to countries of Central Asia, the SCO, and the triangle. One of the key reasons that the US was not able to extend its influence in Central Asia is, more likely than not, the existence of the triangle system based on the SCO. Of course, Central Asian states regard US as a main outside player in the region and as the only country capable of projecting power all over the world. The Central Asian states recognize the importance of America's global role in maintaining their independence, diplomacy, expansion of security autonomy and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Furthermore, these states have to maintain friendly relations with the US which can hold the fierce Sino-Russian competition/expansionism with respect to Central Asia. However, the Central Asian states will try to cooperate with the US in a manner that does not impact the triangle system and Russia-China alliance.

The cooperation with the triangle system within the SCO has provided Central Asian states with a chance to establish their own foreign policies and test them. The SCO could provide institutional leverage where those states could promote various diplomatic options against China, Russia and India in order to achieve their interests and also a balance the power dynamic so that no one power attains too much influence. The triangle system, in the context of mutually horizontal relations and multilateral cooperation, has been a platform for newly independent states to proceed with state-building and system transition in a stable manner. Therefore, we can conclude that the relations to the triangle system within the SCO has been somewhat beneficial for Central Asian states, in terms of enhancing their status as sovereign states, securing respect for their sovereignty and common security, extension of diplomatic autonomy, economic development, and mediation of regional conflicts and disputes. The relation between Central Asian States and the triangle system within the SCO has implications for Korea as follows: first, the multilateral

organization where powerful states participate could lead to remarkable reduction in the level of uncertainty in terms of security for weak states. The experience of Central Asia clearly shows that conflicts and disputes among the region's small countries and also between the major powers and small states could be efficiently mediated and managed. For instance, since 2000 when the SCO has been fully activated, conflicts over territory among member states have been brought under control. The region's history contain its share of upheavals and events such as the Andijan uprising, but they are unlikely to characterize events at the international level. Therefore, it offers a useful reference for Korea, who has its own issues and conflicts such as six-party talks, relaxation of tension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erritorial conflicts in East Asia, disputes regarding history and so on.

KIEP 전략지역심층연구 발간자료 목록

■ 2012년

- 12-01 한·인도 제약산업 비교분석을 통한 협력과 경쟁 전략 / 이 용 · 송영철
- 12-02 신정부 출범 이후 미얀마 개혁·개방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과 시사점 / 오윤아 · 정재완 · 박나리
- 12-03 미얀마 외교정책의 변화와 주요국과의 관계 / 장준영
- 12-04 자바 경제회랑에 대한 한·인니 산업협력방안 / 강인수 · 송유철 · 이호생 · 한홍렬
- 12-05 라오스의 인적자원개발 분야 ODA 현황과 한국의 지원전략 / 이요한
- 12-06 몽골의 투자환경과 한국기업의 진출 확대방안 / 이재영 · 제성훈 · 김홍진 · 간투무르 몽크나산
- 12-07 중앙아시아 에너지 수출국 국부펀드의 특징과 시사점: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을 중심으로 / 조영관
- 12-08 카자흐스탄의 산업다변화 정책과 녹색성장 협력방안 연구 / 주진홍
- 12-09 CAREC(Central Asia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의 현황과 한국의 협력방안 / 조영관 · 성원용 · 이상준 · 주진홍
- 12-10 러시아·중국·인도 삼각협력체제의 전략적 함의와 시사점 / 백준기 · 김재관 · 이남주 · 박상남
- 12-11 남아공의 토지문제 연구 / 장용규 · 설병수 · 황규득 · 강경화 · 베텔
- 12-12 동부아프리카 2개국(에티오피아, 케냐)의 사회경제개발 역량강화를 위한 협력방안 연구 / 이진상 · 변 용
- 12-13 에티오피아의 중소기업 발전과제와 한국의 개발협력방안 / 광성일 · 전해린 · 백석훈
- 12-14 브라질 북동부지역의 투자환경과 한국의 진출 확대방안 / 권기수 · 박미숙 · 이시은
- 12-15 중남미 엘리트 집단 특성에 관한 연구 / 김기현 · 박운주 · 김영철 · 이상현

- 12-16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구조와 위험요인 / 이권형 · 손성현
- 12-17 이란의 정치·권력구조와 주요 정파별 경제정책 / 이권형 · 박재은 · 박현도
- 12-18 싱가포르의 주요 산업: MICE, 의료관광을 중심으로 / 이재호 · 박나리
- 12-19 조지아의 주요 산업: 교통인프라, 정보통신 산업을 중심으로 / 강부균 · 민지영
- 12-20 멕시코의 주요 산업: 석유화학,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 김진오 · 이시은
- 12-21 요르단의 주요 산업: 전력, 의료 산업을 중심으로 / 윤서영 · 박재은
- 12-22 모잠비크의 주요 산업: 전력산업, 농업을 중심으로 / 전혜린
- 12-23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
인도, 동남아시아
- 12-24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I
중앙아시아
- 12-25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II
러시아, 몽골
- 12-26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V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 2011년

- 11-1 인도 경제개혁 20년의 평가와 전망 / 김찬완 · 손승호 · 임정성
- 11-2 남아시아 3개국 투자매력도 분석과 진출방안 / 이순철 · 이영일
- 11-3 한·인도 양국에서의 국가 이미지 / 조충제 · 은기수 · 박 건 · 장원봉 · 유성용 · 정혜원
- 11-4 한·인도 그린에너지산업 협력방안 / 김현제 · 조상민 · 박찬국
- 11-5 한·인도 금융산업 협력 확대방안: 은행, 증권, 보험 / 이 용 · 최호상 · 정무섭 · 서대교
- 11-6 ASEAN의 의사결정 구조와 방식 / 강대창 · 박나리 · 유현석 · 김형중 · 이동윤

- 11-7 동남아시아의 최근 정치·외교에 대한 전략적 평가: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중심으로 / 조홍국·윤진표·이한우·최경희·김동엽
- 11-8 메콩지역 개발 전략: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 김태윤·김홍구·조영희·이요한·신민금
- 11-9 동남아시아 이슬람 경제의 이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 강대창·박나리·김형준·홍석준·원순구·손승호
- 11-10 미얀마의 사회경제개발과 한국의 개발협력 구상 / 이호생·강인수·송유철·한홍렬
- 11-11 미얀마 사회문화·정치와 발전잠재력 / 오윤아·장준영·최재현·우꼬래·강대창·김유미·박나리
- 11-12 포스트소비에트 20년 중앙아시아의 미래: 통합 가능성과 균열 요인 연구 / 이재영·김석환·정세진·박정호·박병인·나희승
- 11-13 한·중앙아시아 인적지원의 교류현황과 활성화 방안 / 윤성학·김영진·김일검·김안국·홍미희·성동기·이시영
- 11-14 중앙아시아 외국인투자의 특징과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 / 조영관·주진홍·강명구·김영식·오영일·이상준
- 11-15 몽골 광물자원 개발 현황과 한국의 진출방안 / 이재영·이평래·윤익중·이시영·S. Avirmed
- 11-16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
인도
- 11-17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I
동남아시아 1
- 11-18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II
동남아시아 2
- 11-19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V
중앙아시아 1
- 11-20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V
중앙아시아 2
- 11-21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VI
몽골, 터키

■ 2010년

- 10-1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투자매력도 분석과 한국의 진출방안 /
조영관 · 강명구 · 김계환 · 김한철 · 성원용 · 이시영
- 10-2 중앙아시아 에너지 플랜트시장 전망과 한국의 참여방안에 관한 연구 /
윤성학 · 문창권 · 변현섭 · 이성훈 · 장세진 · 주진홍 · 최 호
- 10-3 우즈베키스탄 지배집단과 권력 엘리트 연구 /
이재영 · 김석환 · 박상남 · 손영훈
- 10-4 중앙아시아에서 한국의 국가적 이미지 /
윤성학 · 은기수 · 박수미 · 박 건 · 장원봉
- 10-5 한국형 개발경험전수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연구: 기존 사례
분석 및 우즈베키스탄에의 적용 / 강인수 · 송유철 · 이호생 · 한홍렬
- 10-6 중앙아시아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
중앙아시아: 정치 · 문화
- 10-7 중앙아시아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I
중앙아시아: 경제 · 자원 · 과학

백준기

모스크바대학교 정치학 박사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
(現, E-mail: misha99@hs.ac.kr)

저서 및 논문

『아시아의 발칸, 만주와 서구열강의 제국주의 정책』(공저, 2007)
『중국과 러시아의 현재』(공저, 2011) 외

김재관

베이징대학교 정치학 박사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現 E-mail: jkkim543@jnu.ac.kr)

저서 및 논문

『중국과 러시아의 현재』(공저, 2011)
『민주주의와 중국』(공저, 2012) 외

이남주

베이징대학교 정치학박사
성공회대학교 중어중국학과 교수
(現, E-mail: lee87@skhu.ac.kr)

저서 및 논문

『동아시아의 지역질서: 제국을 넘어 공동체로』(공저, 2005)
『중국 시민사회의 형성과 특징』(2007) 외

박상남

모스크바대학교 정치학 박사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
(現, E-mail: allo96@yahoo.co.kr)

저서 및 논문

『푸틴의 러시아』(공저, 2007)
『현대 중앙아시아』(2010) 외

전략지역심층연구 12-10
연구보고서 12-33

러시아·중국·인도 삼각협력체제의 전략적 함의와 시사점

2012년 12월 26일 인쇄
2012년 12월 31일 발행

발행인 채욱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246

전화: 02-3460-1142 FAX: 02-3460-1144

인쇄 서울기획문화사 전화 02-2272-1533

등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ISBN 978-89-322-1416-0 94320 정가 10,000원
978-89-322-1072-8 (세트)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있는 專門家, 企業 및 一般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 및 세미나자료 등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30만원	20만원	10만원
A	(계간) Journal of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8만원		4만원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풀 회원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 (수시접수)
 137-747 서초구 양재대로 24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식정보실 출판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2) 3460-1179 FAX: 02) 3460-1144
 E-mail: sklee@kiep.go.kr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EI) 발간자료 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 동안 가격인상에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회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E-mail :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 (해당난에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기관회원 <input type="checkbox"/>	S 발간물일체	A 계간지
개인회원 <input type="checkbox"/>		
연구자회원 <input type="checkbox"/>		

* 회원번호

* 갱신통보사항

(*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



The Strategic Connotation and Implications of the Strategic Triangle of Russia, China and India

Jun Kee Baek *et al.*

21세기 아시아 지역은 급속한 신형 경제성장의 무대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갈등의 진원지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영토분쟁뿐 아니라, 미·중 간의 전략 및 군사경쟁이 가열되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복귀를 공식화하면서 이러한 경쟁과 갈등이 장기 지속형을 띠고 있다. 미국은 기존의 쌍무동맹을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전환하여 호주를 포함한 '해양 대삼각동맹'과 연계하는 트랜스퍼시픽 동맹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중국은 러시아와 군사 및 전략적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면서 이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륙아시아를 중심으로 구성 중인 러·중·인 삼각협력체제와 더불어 미·일·호주의 해양삼각동맹체제라는 두 개의 경쟁적인 '대삼각체제(Grand Triangle)'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형성되고 있는 현재 이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대안과 기본개념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 본 연구의 과제이다.